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9. 10.

2019. 10.

www.moef.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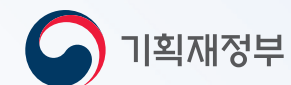
www.kipf.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9. 10.

기 획 재 정 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 간 사

2019년 10월 현재 339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기, 가스, 도로·공항·항만, 금융, 의료·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관련 공적 검사, R&D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생활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약 40만 7천여명으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2013년 수준과 비교해 보면, 공공기관 총 정원은 2013년 보다 무려 1.4배나 증가했고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은 1.1%에서 1.5%로 증가하는 등 고용 부문에서 공공기관 비중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큰 편입니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639조원으로 국가예산의 약 1.5배이고, GDP 대비 33.8%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2018년 공공기관의 예산은 2007년보다 약 345.3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 비중 또한 27.0%에서 33.8%로 증가하여 공공기관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당히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는 동시에, 생명·안전·윤리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꾸준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채용,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증가하는 검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 www.alio.go.kr)」을 기반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 7.)」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민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은 2019년까지 공공기관 통합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 알리오시스템을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마당을 신설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할 나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현황편람』은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본 책자를 통해 공공기관 일반현황과 최근 시행된 주요 공공기관 관리정책을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다양한 경영정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주요 경영정보(인력·손익·재무현황, 보수수준 및 외부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에 의한 공공기관 모니터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일반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 현황 편람을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를 통하여 일반국민의 공공기관 주요정보로의 접근용이성과 경영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다 제고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확대시켜 향후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실행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공공기관 현황편람

목 차

I.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7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17
가. 공공기관의 지정	17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18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21
2. 2019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2
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22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29
II.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35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35
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강화	35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41
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46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47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	47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5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69
가. 20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69
나.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및 개통	80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83
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83
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87
 Ⅲ. 2019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01
1. 일반현황	103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103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07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117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119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	122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33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	149
2. 인력현황	166
가. 임직원 수 현황	166
나. 신규채용 현황	175
다.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황	181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184
3. 재무현황	186
가. 총평	186
나. 부채 현황	189
다. 자산 현황	199

4. 손익현황	203
5. 보수수준	209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209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	213
다. 복리후생비 수준	220
6. 외부 평가결과	226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226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61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286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302
참고문헌	319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327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333
〈부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387
〈부록 4〉 2019년 기금 현황	392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399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402
〈부록 7〉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439
〈부록 8〉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	442

표 차례

<표 I -1> 공공기관 유형 분류	21
<표 I -2> 2019년 공공기관(339개, 2019. 1월 기준)	24
<표 I -3> 2019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9. 1월 기준)	27
<표 I -4>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69개)	28
<표 I -5>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9. 1월 기준)	30
<표 I -6>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9. 1월 기준)	31
<표 I -7> 2019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32
<표 II-1>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37
<표 II-2> 채용 관련 비위대상자 현황	38
<표 II-3> 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42
<표 II-4> 2단계 정규직 전환실적(2019. 1. 31 기준)	43
<표 II-5>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 현황(2018. 12. 31. 기준)	44
<표 II-6> 만족도 항목별 응답결과	45
<표 II-7> 2018년도 및 2019년도 항목별 편성지침 주요내용	51
<표 II-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56
<표 II-9>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57
<표 II-1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59
<표 II-11>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60
<표 II-1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62
<표 II-13>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62
<표 II-14>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63
<표 II-15>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63
<표 II-1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18~2022년) ...	65

<표 II-17> 2019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74
<표 II-18> 기관별 중점과제 수	79
<표 II-19>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알리오시스템 비교	81
<표 II-20> 실생활 상 공공기관 혁신포털 활용 예시	83
<표 II-21> 주무부처 주관 안전점검 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	85
<표 II-22> 고용노동부 주관 불시점검 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	85
<표 II-23> 4대 추진전략 및 14대 중점 추진과제	87
<표 II-24> 공공기관 작업장의 변화	87
<표 II-25> 대상별 안전교육 내용	91
<표 II-26> 안전관리 중점기관(97개)	92
<표 II-27>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19년 기준)	94
<표 II-28> 기관장 책임확보 방안	96
<표 II-29> 안전 조직 강화 및 인력확충 사항(56개 기관)	97
<표 II-30> 분야별·유형별 안전 예산(2018년 기준)	97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9. 1월 기준)	103
<표 III-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19. 1월 기준)	105
<표 III-3> 2019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106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5개 기관)	109
<표 III-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110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112
<표 III-7>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	113
<표 III-8>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116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6개 기관)	118
<표 III-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120
<표 III-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9. 9월 기준)	123
<표 III-12> 2019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124
<표 III-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125
<표 III-14>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28
<표 III-15>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매각 현황(2019. 7. 2. 기준)	129
<표 III-16> 2018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131

<표 III-17>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135
<표 III-1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9년 기준)	137
<표 III-19>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138
<표 III-20>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143
<표 III-21>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144
<표 III-2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중	148
<표 III-23> 상장 공공기관 개요	150
<표 III-24>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151
<표 III-25>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152
<표 III-26>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6~2018년)	154
<표 III-27>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6~2018년)	157
<표 III-2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6~2018년)	159
<표 III-29>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6~2018년)	161
<표 III-3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167
<표 III-3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169
<표 III-3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170
<표 III-33> 2018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172
<표 III-34> 2018년 인력 감원 기관	174
<표 III-35>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175
<표 III-36>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176
<표 III-37>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177
<표 III-38> 2018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178
<표 III-39> 2018년 신규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8년 기준)	179
<표 III-40>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181
<표 III-4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182
<표 III-42> 청년 신규고용 현황	183
<표 III-43>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184
<표 III-4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185
<표 III-4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185
<표 III-4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186
<표 III-47>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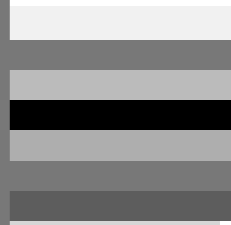
<표 III-48>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190
<표 III-49>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197
<표 III-50> 2018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198
<표 III-5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199
<표 III-5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202
<표 III-53> 2018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203
<표 III-54>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204
<표 III-55> 2018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206
<표 III-56> 38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208
<표 III-57>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210
<표 III-5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214
<표 III-59>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220
<표 III-60>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224
<표 III-61>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225
<표 III-62> 2018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128개)	230
<표 III-63>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233
<표 III-64>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234
<표 III-65> 전년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239
<표 III-66> 전년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240
<표 III-67>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241
<표 III-68>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 (상대평가)	242
<표 III-69>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246
<표 III-70>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	247
<표 III-71>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248
<표 III-72>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250
<표 III-73>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251
<표 III-74>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255
<표 III-75>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	256
<표 III-76> 2018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259

<표 III-77>	2018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260
<표 III-78>	공운법 제13조	261
<표 III-79>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263
<표 III-80>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264
<표 III-81>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267
<표 III-82>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19. 1월 기준)	268
<표 III-83>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271
<표 III-84>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275
<표 III-85>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277
<표 III-86>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277
<표 III-87>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278
<표 III-88>	2018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281
<표 III-89>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282
<표 III-90>	2018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283
<표 III-91>	2018년도 신규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291
<표 III-92>	2018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292
<표 III-93>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295
<표 III-94>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96
<표 III-95>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개선 수준	298
<표 III-96>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299
<표 III-97>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9. 9월 기준)	305
<표 III-98>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9. 9월 기준)	305
<표 III-99>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306
<표 III-100>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308
<표 III-101>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3~2018년)	310
<표 III-102>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313
<표 III-103>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314
<표 III-10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	316
<표 III-105>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317

그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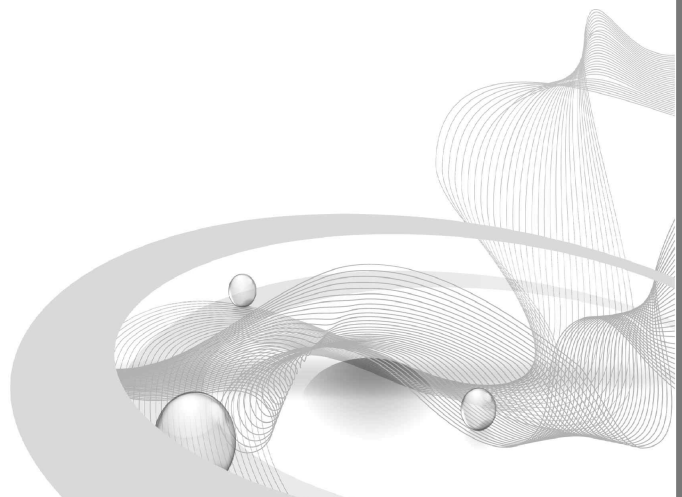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9년)	23
<그림 II-1> 정규직 전환 추이	44
<그림 II-2> 고용형태별 전환 현황	44
<그림 II-3>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60
<그림 II-4> 전년대비 부채규모 및 비율 전망치 비교	61
<그림 II-5> 2018년 및 2019년 혁신과제 비교	71
<그림 II-6> 혁신포털 주요 구성내용	82
<그림 III-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107
<그림 III-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141
<그림 III-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142
<그림 III-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143
<그림 III-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147
<그림 III-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비교	149
<그림 III-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156
<그림 III-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 순이익 변동 현황	156
<그림 III-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167
<그림 III-10>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	181
<그림 III-1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188
<그림 III-12>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188
<그림 III-13>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191
<그림 III-14>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191
<그림 III-15>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192
<그림 III-16>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93
<그림 III-1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194

<그림 III-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194
<그림 III-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195
<그림 III-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196
<그림 III-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200
<그림 III-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201
<그림 III-2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205
<그림 III-24>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211
<그림 III-25>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212
<그림 III-26>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216
<그림 III-27>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217
<그림 III-28>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217
<그림 III-29>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218
<그림 III-30>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219
<그림 III-31>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219
<그림 III-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222
<그림 III-33>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223
<그림 III-3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224
<그림 III-35>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226
<그림 III-36> 전년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236
<그림 III-37> 최근 3년 평균 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	236
<그림 III-38>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238
<그림 III-39>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상대평가) ·	238
<그림 III-40>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절대평가) ·	250
<그림 III-41>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절대평가)	252
<그림 III-42>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253
<그림 III-4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안(2018년)	265
<그림 III-44>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275
<그림 III-45>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289
<그림 III-46> 2018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296
<그림 III-47>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별점(2014~2018년)	311
<그림 III-48>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8년)	311
<그림 III-49>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315
<그림 III-50>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315



I.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2. 2019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제도

가. 공공기관의 지정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개별기관의 설립근거 및 설립주체, 개별 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형태와 규모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및 <별표1>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요건별 산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 공운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1회 이상)한 기관
 - 제2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지원액¹⁾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
 - 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1) 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

- 제5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제6호에 의한 공공기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그러나 공운법 제1항 각호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관리의 대상이 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통적으로 동법 제11조의 경영공시, 제12조의 통합공시, 제13조의 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조사, 제14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그리고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 등의 적용대상이 됨.
 - 이 외에도 공운법 보칙 제53조에서 제53조의3에 이르는 규정과 별칙 조항(제55조 및 제56조)을 적용받음.
 -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은 공운법에 따른 공통된 관리·감독대상이 되지 않고 소관 주무부처의 재량적 관리 대상이 됨.

나.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공운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됨.
- 여기서,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목적은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 중요도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수준을 설계하기 위함임.
 -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공운법상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짐.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기한 공통사항²⁾ 이외에도 이사회, 임원 임명 및 구성, 예산회계, 경영감독 등 공운법 제16조에서 제52조의6에 이르는 규정과 보칙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됨.
- 공공기관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중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고 나머지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유형에 대한 구분기준 및 방식은 공운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및 <별표2>에서 명문화 되어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자체 수입액 비중, 자산규모, 기금관리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부유형을 구분함.
 - 공기업: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으로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을 세분함.
 -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세분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공공기관 중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함.
 - 직원정원이 50인 미만인 공공기관
 -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는 2018년 3월 공운법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을 연구 개발 목적의 기관으로 세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운법 조항은 제11조~제15조, 보칙 제53조~제53조3 및 별칙 제55조 및 제56조임.

- 공운법 개정 전까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준만 공운법에 명문화 되어 있었음.
- 공운법 제5조 제4항³⁾의 개정을 통해 기타공공기관의 세부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최초로 마련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있음.
 - 제1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제2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제3호: 그 밖의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관
- 제3호에 의한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설립근거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고유업무와 실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업무의 비중(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분류함.
- 기획재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세부유형 구분(연구개발목적기관)은 최초 시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개정함.⁴⁾
 - 제6조 제5항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기능조정 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 시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관련내용을 추가함.
 - 제10조 제2항을 신설하여 경영혁신 진단 시에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평가 및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19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에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종전까지는 제22조 제3항에서 직무능력 중심 공정채용의 구현을 위해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채용면접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실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공운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및 「공공기관 혁신지침」, 2019. 1. 참고

- 공공기관 혁신지침에서는 제24조를 통해 비정규직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침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목적기관에서 연수를 위해 운영 중인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정규직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해외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무기관의 장과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을 협의하여 별도의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7항을 신설함.

〈표 I-1〉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구분	지정요건
①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②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등)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③ 기타공공기관	직원정원 50인 미만인 공공기관과 이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주: 연구개발 목적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분류 근거는 공운법 제5조 제4항 개정을 통해 마련(2018. 3. 27. 개정법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공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의 지정 절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함.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지정 함.
 -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해제 또는 유형구분 변경지정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침.

2. 2019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⁵⁾

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구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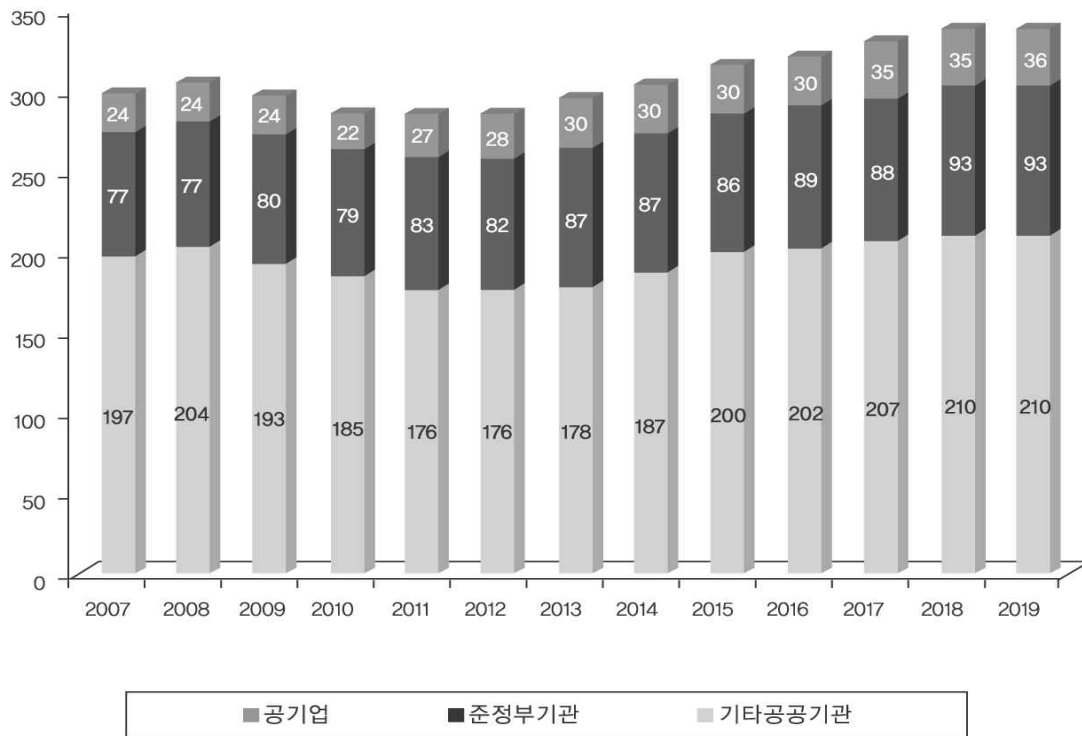
- 2019년 1월 총 339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운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2019년 공공기관의 수(339개)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최초로 지정된 2007년의 298개보다 41개 기관이 증가한 것임.
 - 2007년 최초 지정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공공기관 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1>과 같음.
 - 2019년 공공기관 수는 2018년(338개, 12월 기준)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2018년 공공기관(338개) 중 6개 기관이 2019년에 지정 해제되고 7개 기관⁶⁾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 수가 전년대비 1개 증가함.
 - 2019년 1월 현재 공공기관(339개)은 <표 I-2>와 같음.

5)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를 참고하여 작성

6) <표 I-2> 참고

〈그림 I-1〉 공공기관 지정추이(2007~2019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8.10. 및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를 참고하여 작성

〈표 I-2〉 2019년 공공기관(339개, 2019. 1월 기준)

유형구분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6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형구분	기관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u>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u>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u>창업진흥원</u>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210개)	(기재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10개)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화부)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u>한국문화예술위원회</u> (농식품부)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u>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u>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u>한국세라믹기술원</u> (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작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u>국가생명윤리정책원</u> ,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u>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u> (환경부) (주)위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u>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u>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u>새만금개발공사</u> , <u>한국해의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u>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u>한국해양진흥공사</u>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형구분	기관명
기타공공기관 (210개)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주: 1. 밑줄 표시된 기관(10개)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 지정된 기관임

2. 이텔릭 표시된 기관(7개)은 2019년 1월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 2019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분포(<표 I-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은 총 36개 기관으로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 16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20개 기관임.
- 준정부기관은 총 93개 기관으로 이 중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14개 기관이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9개 기관임.
- 기타공공기관은 210개 기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61.9%를 차지함.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은 69개로 전체 공공기관 중 20.3%를 차지함.

〈표 I-3〉 2019년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 현황(2019.1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3개)		기타공공기관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339개	16개 (4.7%)	20개 (5.9%)	14개 (4.1%)	79개 (23.3%)	210개 (61.9%)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 2018년 3월 개정된 공운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는 기타공공기관 중 69개 기관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하여 지정함.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63.8%인 44개 기관이 정부출연기관법과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이외 25개 기관은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호에 따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이 중 9개 기관⁷⁾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정한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함.
-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표 I-4>와 같음.

〈표 I-4〉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69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속기관 (20개)	부처 직할 연구원 등 기타기관 (25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7)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나. 전년대비 주요 변동내역

- 2018년 말 공공기관과 2019년 1월 기준 공공기관을 비교하면, 2019년 1월 기준 공공기관의 수는 339개로 2018년 12월 기준의 공공기관 수(338개)보다 1개 증가함.
- 유형별로 기관수 및 기관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8년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인천항만공사가 2019년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수가 2018년 15개에서 2019년 16개로 1개 증가함.
 - 인천항만공사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비율이 85%를 초과함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요건이 충족되어 유형이 변경됨.
 -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주식회사 에스알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관수가 2018년과 동일한 20개임.
 - 주식회사 에스알은 2018년에 최초 지정임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19년에는 법적 요건대로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수가 2018년 16개에서 2019년 14개로 2개 기관 감소함.
 -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종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4개 기관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종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던 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관수가 2018년 77개에서 2019년 79개로 2개 증가함.
 - 2018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창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법적 요건대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함.
 -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은 공운법 제5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호를 충족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수 변동은 없으나 지정해제, 신규지정 및 유형변경 된 기관을 모두 포함함.
 -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기관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함.
 -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3개 기관은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크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함.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모회사(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의 단순업무(항만경비보안)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지정 실익이 크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함.
 - 2019년 신규 지정된 7개 기관이 모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 현황 및 변동내역은 <표 I-5> 및 <표 I-6>과 같음.

〈표 I-5〉 공공기관 유형별 기관수 변동(2019. 1월 기준)

(단위: 개)

유형구분	2018년말 (A)	2019년 (B)	증감 (B-A)	(전년대비 변동내역)		
				신규	해제	유형변경
① 공기업	35	36	+1	-	-	+1
시장형	15	16	+1	-	-	+1
준시장형	20	20	-	-	-	-
② 준정부기관	93	93	-	-	-	-
기금관리형	16	14	△2	-	-	△2
위탁집행형	77	79	+2	-	-	+2
③ 기타공공기관	210	210	-	+7	△6	△1
계	338	339	+1	+7	△6	-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표 I-6〉 2019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 내역(2019. 1월 기준)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비고
신규 지정 (7개)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 공공기관	-
	복지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환경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해제 (6개)	해수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지정해제	기관폐지, 소규모기관, 단순업무위탁 자회사 등을 사유로 지정해제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고용부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문체부	(재)정동극장		
	법무부	IOM 이민정책연구원		
	과기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유형 변경 (10개)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2018) 준시장형 공기업
	국토부	주식회사 에스알	준시장형 공기업	(2018) 기타공공기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8) 기타공공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2018)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업부	한국세라믹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0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타 공공기관	(2018)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기부	창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8)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 2019년 신규로 공공기관에 지정된 7개 기관은 <표 I-7>과 같음.

- 2019년 신규 지정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7년 하반기 또는 2018년 중 신설 출범한 기관임.
- 나머지 2개 기관은 2017년 이전 출범한 기관이나 2019년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됨.
-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함.

<표 I-7> 2019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단위: 명,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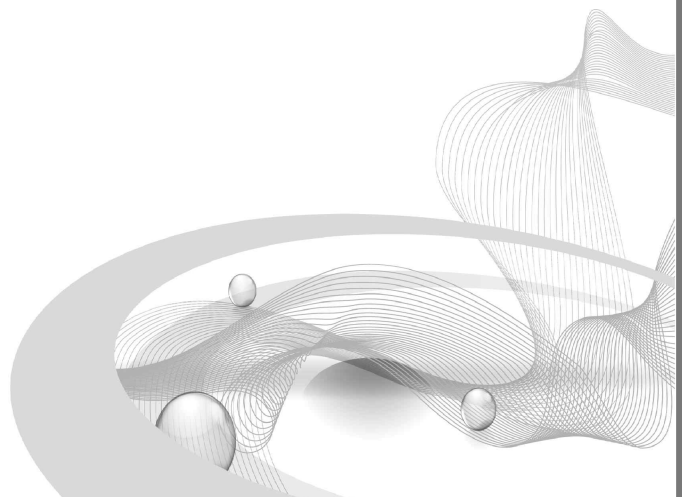
주무 부처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설립 시기	설립근거	기관규모('18년말)	
					직원 정원	자산
해수부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 공공기관	'18.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99	2,715,960
복지부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17. 6월	민법 제32조	62	7,444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2. 1월	민법 제32조	50	648
농림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11. 2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66	88,438
환경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17.12월	민법 제32조	130	3,008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		'18. 6월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	49	189,746
	새만금개발공사		'18.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77	1,140,737

주: '직원정원'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된 2018년말 기준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정원 불포함)을 기재한 것으로 2019년 9월 현재 정규직 정원과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의 기관별 공시정보(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Ⅱ.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공공기관 관리정책 주요 동향

1. 공공기관 인력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공정채용 강화⁸⁾

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 2017년 정부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2019. 2. 20.)를 실시함.
- 이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2018. 11. 2.)하고 약 3개월(2018. 11. 6.~2019. 1. 31.)에 걸쳐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운법상 지정된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소관)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행정안전부 소관)과 공직유관단체(국민권익위원회 소관)를 모두 포함하며 전체 1,453개 기관임.
- (조사 대상기관) 공공기관이 333개, 지방공공기관이 634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38개 등 총 1,205개 기관이 조사를 수검함.
 - 1,453개 기관 중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수검한 248개 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 (조사 대상범위) 2017년 점검 후 발생한 신규채용 건(2017. 10.~2018. 10.)과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 건(2014. 1.~2018. 10.)이 조사 대상범위에 포함됨.
 - 2017년 10월 이전의 신규채용도 비위 제보, 언론 의혹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함.

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2. 27. 및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보도자료, 2019. 2. 20. 참고

- (조사방식) 1차로 감독기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2018. 11. 6.~12. 26.)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018. 12. 17.~2019. 1. 18.)를 실시함.
-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로 총 182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과 관련된 36건은 수사 의뢰를 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또는 반복되는 과실 및 착오 등에 기인한 146건은 징계를 요구함.
 - 채용비리 적발 건을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84건, 지방 공공기관이 62건,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36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채용비리 유형별로 적발 건을 살펴보면, 신규채용이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 요구 128건)이고 정규직 전환 분야가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임.
 -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로는 서류전형 시 부당 점수부여·자격미달자 자격승인(55건), 이해관계자 면접참여·불공정 면접(31건), 합격자 결정 중대 오류(38건), 기타 중대한 절차 위반(34건) 등이 적발됨.
 -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로는 전환기준·절차 위반(8건), 전환평가 없는 임의 전환(7건), 전환대상자 선정 위반(3건), 기타(6건)이 적발됨.
 - 전체 채용비리 중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는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15건이 적발되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1건이 적발됨.
 -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 16건 중 수사의뢰 대상이 10건이고 징계요구 대상이 6건임.
 -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84건의 채용비리 중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77건이고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가 7건임.
 - 신규채용 관련 77건 중 16건이 수사의뢰 대상이고 나머지 61건이 징계요구 대상임.
 - 정규직 전환 관련 7건은 수사의뢰 대상이 3건이고 징계요구 대상이 4건임.
 - 16개 공공기관에서 수사의뢰 대상 채용비리(19건)가 적발되었고 50개 기관이 징계요구 대상 채용비리(65건)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전체 채용비리(84건) 중 친인척 관련 채용비리는 11건으로 이 중 5건이 수사의뢰 대상이고 6건은 징계요구 대상임.
- 그밖에 규정 미비와 경미한 실수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총 2,452건이 적발됨.
 - 채용규정 불명확, 규정 적용상 단순 오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절, 공고기간 미준수, 시험위원 보안각서 미징구 등이 이에 해당함.

- 업무부주의 사안 중 규정미비 사안은 해당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경미한 실수 등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조치가 이루어짐.
- 업무부주의 사안으로 적발된 건 중 805건이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건임.

〈표 II-1〉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단위: 개소, 건)

구 분	대상 기관수	조사 기관수	적발 기관수	지적 사항	채용비리			업무 부주의		
					소계	수사 의뢰	징계	소계	주의 경고	개선 기타 등
공공기관	338	333	280	889	84	19	65	805	420	385
지방공공기관	847	634	458	1,145	62	9	53	1,083	560	523
기타공직유관단체	268	238	172	600	36	8	28	564	180	384
합계	1,453	1,205	910	2,634	182	36	146	2,452	1,160	1,292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보도자료, 2019. 2. 20.

2) 전수조사 후속조치

-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및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조사결과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
- 채용비리 연루자는 전체 315명으로 이 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288명임.
 - 수사의뢰 대상인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징계(문책)대상 4명은 기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수사의뢰·징계대상인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연루자는 총 178명으로, 현재 임직원인 162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
- 수사의뢰 관련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부정합격자는 12명(현직 8명, 퇴직 4명)임.
 - 향후 검·경 수사에서 부정청탁 존재여부·금품수수 등 확인 후 최종적으로 부정합격자가 확정될 예정임.

-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하면 즉시 퇴출 대상이 되며,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 반면,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채용비리 피해자는 55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이 중 공공기관 피해자는 41명으로 집계됨.
- 각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⁹⁾하여 특정 가능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함.

〈표 II-2〉 채용 관련 비위대상자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지적 건수	대상자						
			현직			퇴직			합계
임원	직원	합계	임원	직원	합계				
공공기관	수사	19	1	28	29	6	4	10	39
	징계	65	0	133	133	0	6	6	139
	합계	84	1	161	162	6	10	16	178
전체 (중앙·지방, 기타단체)	수사	36	3	54	57	12	5	17	74
	징계	146	4	227	231	2	8	10	241
	합계	182	7	281	288	14	13	27	315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보도자료, 2019. 2. 20.

3)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

□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과 관련된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관행이나 일부 기관의 형식적인 제도 운영 등이 계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통해 봐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준정부기관

9)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보도자료, 2019. 2. 20.에 따르면, 피해자 특정 가능 시에는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특정 불가 시에는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도록 함

「경영지침」 개정을 추진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등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함.

-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엄정한 채용 기준과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을 집중 관리하기로 함.
 - 부당지시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고, 별도 채용세칙을 마련하도록 함.
- 특혜 차단을 위해 이해충돌 제도를 보완하고 친인척 등의 부당채용을 방지하고자 함.
 - 친인척 취업특혜 제공을 금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친인척 채용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부는 동일·유사 채용비리 행위에 대해 기관별로 징계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온정적 징계 사례 등이 국회·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토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이하 '경영지침')」 개정을 통해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은 승진을 제한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의 '감사·인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도록 함(경영지침 제22조 제2항, 제26조 제7항, 제29조 제3항).
-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시 승진제한 기간¹⁰⁾을 연장(+3개월)하는 한편, 일정 기간¹¹⁾ 인사·감사 보직을 제한하고, 포상 등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을 제한함.

□ 일회성 적발이나 사후 처벌로는 체계적·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함.

- 매년 공공기관의 직전년도 모든 채용(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을 전수조사하고 적발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제도개선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 특히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후속조치 이행이 미흡한 채용비리 취약기관에

10)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1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준용하여,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대해서는 추진단에서 감독부처 등과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또한 채용비리에 대한 자체 적발 노력, 제도개선 이행 등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노력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여 기관·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임.
- 비리 발생 시 불이익을 주는 실적 평가(경영평가, 청렴도평가)와 더불어 기관의 채용비리 방지 노력도 평가할(정부혁신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예정임.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도입을 비롯해 기관별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채용 세칙을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절차점검위원회의 사전검증을 의무화 함으로써 사전통제를 강화하기로 함(경영지침 제16조 제3항 및 제8항).
-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의 선정 및 일정기간 이상 또는 전형단계별 동일위원의 선정을 금지함.
 - 면접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1/2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자·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선전되지 못하도록 규정함.
 - 외부위원 선정 시, 2회 연속 또는 동일 채용 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동일인의 선정을 금지함.
- 공공기관별로 채용절차·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세칙을 마련하도록 하여 기관장 등의 불필요한 재량을 축소함.
 - 특히, 기관장 등의 결정에 따라 채용 시마다 대상·절차·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없도록 함.
- 특별채용(제한경쟁시험방식 채용)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채용계획을 주무부처에 보고·협의하도록 함(경영지침 제16조 제9항).
 - 채용과정에서 협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였고, 단 연내에 여러 차례 동일한 직급·직렬과 절차·기준에 따라 채용 하는 경우 일괄하여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또한 최종 합격자 발표 전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외부위원이 참여 하는 채용절차점검위원회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함(경영지침 제16조 제10항).
- 채용 수탁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또한 개선하기로 함.

- 채용전형 외부 위탁 시 업력·규모·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대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부실이행을 이유로 향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됨¹²⁾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함 (경영지침 제23조 제3항, 제4항).
- 공공기관은 잡알리오(job.alio.go.kr), 지방공공기관은 클린아이잡플러스(job.cleaneye.go.kr)에 채용정보를 등재하고,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직접 워크넷(work.go.kr)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제공하도록 함.
-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의 민간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및 가족의 채용을 제한함.
- 친인척 부당 채용 시 공공·민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인원)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 기관 담당자의 정책이행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의 취지·내용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함.

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¹³⁾

-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양극화 및 사회통합 저해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됨.
-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공공부문도 최대의 사용자로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

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6호 다목에 따라 계약상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3개월간 공공입찰 참여제한

13)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보도자료, 2017. 10. 25.

-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¹⁴⁾을 발표하고, 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잠정전환규모를 파악하였음.
 -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총인원은 2017년 6월말 기준 217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만 6천명에 달함.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총계는 15만 2천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2%를 차지함.

〈표 II-3〉 부문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총괄표

(단위: 천명, %)

구분	총인원	비정규직			
		총계		기간제	파견용역
합계	2,170	416	(19.2)	246	170
중앙부처	514	37	(7.1)	21	16
자치단체	429	84	(19.6)	71	13
공공기관	474	152	(32.0)	47	105
지방공기업	75	18	(24.1)	11	7
교육기관	678	125	(18.5)	96	29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보도자료, 2017. 10. 25.

2) 추진실적 및 성과¹⁵⁾

-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정규직 전환은 2019년 1월말 현재 17만 7천명이 전환 결정되었고, 13만 4천명이 전환 완료됨.¹⁶⁾
-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인 20만 5천명¹⁷⁾의 86.3%에 해당됨.

14)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의결됨

15)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개선되고 만족도 올라가」, 보도자료, 2019. 5. 16. 참고

16)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임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2단계의 정규직 전환도 차질없이 추진되어 2019년 1월말 현재 3,401명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 중 1,864명의 전환이 완료됨.
-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결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2019년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실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임.

〈표 II-4〉 2단계 정규직 전환실적(2019. 1.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기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비정규직 규모	전환결정 인원
계	15,966	3,401	11,385	2,814	4,581	587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14,516	3,231	10,282	2,686	4,234	545
공공기관 자회사	1,138	117	841	90	297	27
지방공기업 자회사	312	53	262	38	50	15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보도자료, 2019. 2. 27.

□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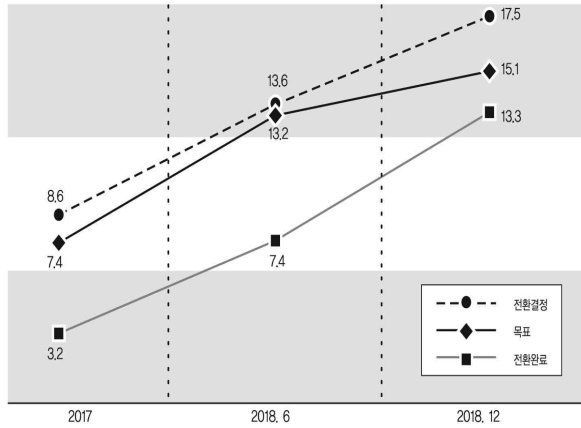
-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되었고, 전환 결정된 7만명 중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6만 6천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94.2%임.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은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¹⁷⁾ 69.2%)되고 있으며, 전환 결정된 10만 5천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 7천명으로 전환 결정 인원의 64.3%임.
- 다만, 자치단체 부문에서 기관단위 전환결정 비율(37.6%)이 다른 부문에 비해 다소 낮으나,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용역에서 전환결정이 집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17) 기관별 계획 17만 5천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

18) 파견·용역의 부문별 기관단위 전환 결정율은 중앙부처 97.6%, 교육기관 91.5%, 지방공기업 82.9%, 공공기관 74.7%, 자치단체 37.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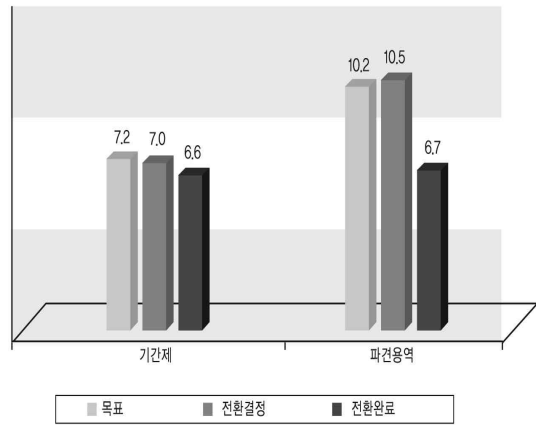
〈그림 II-1〉 정규직 전환 추이

(단위: 만명)



〈그림 II-2〉 고용형태별 전환 현황

(단위: 만명)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규직 전환으로 처우개선되고 만족도 올라가」, 보도자료, 2019. 5. 16.

〈표 II-5〉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결정 및 전환 현황(2018. 12. 31.기준)

(단위: 개소, 명)

구분	기 관			인 원				
	대상 기관	전환결정 기관		전환계획 인원	전환결정 인원 (계획대비)		전환완료 인원 (결정대비)	
파견 용역	289	216	(74.7%)	69,876	62,855	(90.0%)	30,610	(48.7%)
기간제	325	322	(99.1%)	26,154	25,550	(97.7%)	24,174	(94.6%)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천명」, 보도자료, 2019. 1. 25.

□ 2018년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은 경쟁채용과 전환채용으로 구분됨.

○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84.3%이고, 경쟁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임.

- 정규직 전환대상의 다수가 청소·경비 등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이고, 해당 직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전환채용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5.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현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직을 비롯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 가능토록 제시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1,815명과 정규직 전환 기관 430개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 조사’ 결과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동자 대상 조사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의 임금 수준은 평균 2,783만 원으로 전환 이전의 평균 2,393만 원보다 391만원(16.3%)이 상승하였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월 급여(수당 포함)는 기간제의 경우 평균 16.9%, 파견·용역은 평균 15.6% 오른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52.8%), 복지 포인트(62.0%), 급식비(43.4%)가 반영됐다고 응답한 비중이 절반 정도에 이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만족도를 크게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이 5점 만점에 평균 3.93점으로 나와 정규직 전환자들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고용안정 측면의 만족도가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89%가 긍정적(매우 그렇다~그렇다)으로 답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정책 취지가 상당 부분 실현된 것으로 보임.
 - ‘전반적인 처우 개선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응답자(매우 그렇다~그렇다)가 63.4%인 반면, 만족도는 3.6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II-6〉 만족도 항목별 응답결과

구분	전반적 처우 개선	고용안정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업무 권한 및 책임증가	업무 의욕 증가	업무 만족도 증가	소속감 증가
매우 그렇다	21.0%	47.5%	39.7%	22.3%	24.6%	22.0%	30.6%
그렇다	42.4%	41.5%	42.4%	45.9%	48.0%	41.9%	46.4%
보통	23.9%	8.9%	12.5%	23.0%	19.8%	26.3%	16.5%
아니다	8.4%	1.4%	4.0%	6.0%	5.6%	7.3%	4.2%
전혀 아니다	4.3%	0.7%	1.4%	2.4%	2.1%	2.6%	2.3%
평균	3.67점	4.34점	4.15점	3.79점	3.87점	3.73점	3.99점

주: 5점 척도로 산출(매우 그렇다(5점) ~ 전혀 아니다(1점)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개선되고 만족도 올라가」, 보도자료, 2019. 5. 16.

다.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¹⁹⁾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를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장중심 공공일자리 확충(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2017.10월) 등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임.
 - 고용여건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

- 범정부 차원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되,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1%), 공공기관 투자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 공공부문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함.
 - 이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 3천명은 착실하게 추진하고, 추가로 2천명 이상을 더 채용하기로 하였음.
 - 2019년 1월말 기준, 약 2천명의 신규채용을 완료하였고 3월부터 채용절차를 본격 진행할 계획임.

- 공공기관이 안전·환경·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 증원을 통해 필수인력을 확충하기로 함.
 -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하기로 함.
 - 기관별 안전조직 진단 등을 통해 안전업무 적정 소요인력을 파악하고, 현장인력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임.
 - 2인 1조 근무조 편성 등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임.
 - 신규 예산사업 반영(국회),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인력충원 소요가 발생한 여타 분야에 대한 추가 증원도 검토함.
 -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인력을 우선적으로 2019년 3월까지 확충하기로 함.

19) 기획재정부,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 2019.2.13. 참고

- 또한 청년들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도 전년대비(2018년) 2천명 증가한 1만 8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기관별 대상 직무분야를 폭넓게 발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임.

2. 공공기관 재무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²⁰⁾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운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과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시달하고 있음.²¹⁾
- 예산편성지침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며²²⁾, 차년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확정되어 시달됨.
- 예산집행지침은 기획재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한 일반지침과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등을 내용으로 함.
-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모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함.
 - 기타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른 지침 적용대상은 아니나 예산편성지침과 집행지침에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음.

1)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 주요 내용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경상경비 동결 및 업무

20)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보도자료, 2017. 12. 8. 및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보도자료, 2018. 12. 12.와 공공기관에 시달한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8. 1. 12. 및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9. 1. 30. 참고

21) “공운법 제50조(경영지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주요 항목으로는 인건비, 경비(경상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사업비, 자금 및 기타 예산, 예비비 등이 포함

추진비 절감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함.

□ 먼저,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도록 함.
-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함.
- 정규직 전환자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함.
- 정현원차 축소, 교대제변경,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실시 등 기관 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도록 함.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함.
- 기관의 핵심투자사업 및 조달·위탁사업 등을 통해 협력·위탁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2019년도에도 전년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먼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취약계층 지원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여야 함.
 - 또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고졸·지역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기관간 협업 및 투자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일자리 로드맵에 따른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야 함.
 -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전환자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정현원차 축소, 교대제 변경,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실시 등 기관여건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임금피크제)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성장에 기여하여야 함.
 -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합리화를 노사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재무건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민간경합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복리후생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는 등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다각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에 따른 절감재원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투자확대 및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자체자금 외에 민간과의 합작투자 등 민간 투자 자금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매년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함께 사업비, 인건비, 경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편성지침을 공공기관에 시달하고 있으며,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된 항목별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표 II-7>과 같음.
- 주요 항목별 편성지침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공공기관 관련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항목별 예산편성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임.

〈표 II-7〉 2018년도 및 2019년도 항목별 편성지침 주요내용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비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재무건전성이 지속 개선되도록 노력 - 국내·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기존 해외사업 대상에서 국내사업을 포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 공공기관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경영목표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노력 - 해외사업은 수익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 경쟁력 및 내부역량을 확보하며,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를 적극 추진
인건비	'18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적용 유지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4.1%(+1.5%p)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3.6%(+1.0%p) -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1.6%(△1.0%p)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개선 소요는 정부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최소 처우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차별시정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 급식비(월13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 최저임금 보전	'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1.8% 이내에서 증액 편성 -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적용 유지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 3.3%(+1.5%p) - 산업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 2.8%(+1.0%p) - 산업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 0.8%(△1.0%p) - 공공기관의 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독려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경비	- 경상경비는 '17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 -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부진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삭감(△0.5%p~△1%p) - 업무추진비는 '17년 예산보다 10% 감액 편성	-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1% 증액 -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부진기관은 경상경비 예산 삭감 (△0.5%p~△1%p) - 업무추진비는 '18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 편성
기타	-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기존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안('98.7.21)'의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 -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퇴직위로금 편성 가능	-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7.12.8. 및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수정)」, 2018.12.27.을 참고하여 작성

2) 2018년도 및 2019년도 예산집행지침 주요 내용

□ 2018년도 예산집행지침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기여를 강조하고 있음.

-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및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인건비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규정함.
-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전환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편성된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²³⁾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단계적·점진적 원칙에 따라 차별을 시정하도록 함.
 - 또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토록 규정함.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하도급 대금지급 시 원칙적으로 조달청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 회의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용차량의 구매·임차시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²⁴⁾을 준용하는 등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도 2018년의 기본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예산집행을 강조하고 있음.

□ 먼저 각 공공기관은 대내외 경기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야 함.

- 특히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 관리함.
-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하도록 함.

23) 처우개선 소요액에는 급식비(월13만원), 복지포인트(연40만원), 명절상여금(연8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4) 해당 규정은 차량용도,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최단운행연한, 최단주행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계약 등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고, 일자리사업의 공모기간을 단축(30일 이내)하는 등의 조기 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인건비를 조기 집행함.
 - 예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하도록 함.
 - 국내 경기부양과 무관한 외자구매 사업 등 외화관련 사업은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집행함.
 -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함.
 - 예산 조기집행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을 적용함.
 -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원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하도록 함.
- 각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 물품·용역 구매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비품구입·용역계약 등 예산 집행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가격인하, 옥외가격표시제 등)로부터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을 유도하여야 함.
 - 물품·용역 구매시 가격 인상·급등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함.
- 각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에 따른 방만경영 개선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개선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그 밖에도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민·근로자 안전 확보를 강조한 예산편성지침을 고려하여, 각 공공기관 및 기관장은 직접고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라 편성된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1조(일자리 창출 노력 및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각 기관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개개인의 업무역량 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및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운법 제50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공포하며, 동 행동강령과 연계된 기관 내부 인사·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함.
- 복무규정 등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향응, 횡령·배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복무규정 등에 위반하여 수사·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감사관련 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처분 요구나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에는 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면직 제한자에 대하여는 청렴의무 위반에 상응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함으로써,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하고,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각 공공기관은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함.
 -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하고, 외부 회계감사, 경영공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함.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하여 정상적 경비가 최대한 절감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²⁵⁾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가재정 부담으로의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었음.
 - 이에 정부는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2년부터 중장기(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국가재정법」 제9조의2).
 - 공공기관은 향후 5년간의 경영목표 및 투자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에는 전년 계획(2017~2021년) 대비 변동 사항, 재무관리 방안 등 평가·분석 포함됨.

25) 기획재정부의 「'12~'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2. 9. 26., 「'14~'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15~'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16~'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및 「'17~'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등 참고

〈표 II-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및 제출 근거법령

[공운법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 규정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운법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수준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재무건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재무현황과 5년간의 재무관리 방안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공기관 재무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시각의 체계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또한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공기업 신용평가 시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2012년 39개 기관이 최초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8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음.
 - 법률상 작성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해당하는 기관은 <표 II-9>와 같음.
 - 이에 따른 작성대상 기관수는 2013년 41개, 2014년 40개, 2015년 39개, 2016년 39개, 2017년 38개, 2018년 39개로 전년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함.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되면서 작성대상 기관에 포함되었으나 자산규모 축소로 인해 2017년에 제외됨.
 - 대한석탄공사는 2013년부터 작성대상에 포함되었고,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14년부터 대상으로 포함됨.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부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되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에서도 제외됨.
 - (주)강원랜드는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부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함.

〈표 II-9〉 연도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구분	2014(40개)	2015(39개)	2016(39개)	2017(38개)	2018(39개)
공 기 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	-	-	-	(주)강원랜드
준 정 부 기 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구 분	2014(40개)	2015(39개)	2016(39개)	2017(38개)	2018(39개)
준 정 부 기 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거래소	-	-	-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등을 참고하여 작성

2)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²⁶⁾

- ☐ 그간 기획재정부는 부채감축계획(2014~2017년), 공사채 총량제(2014~2017년) 등 부채 감축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제고해 옴.
 - 개선된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관리 하고자 함.
- ☐ 재무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일률적 부채감축’에서 기관별 재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함.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은 책임경영에 기반한 자율적 재무관리를 지원하고, 부채감축계획 종료(2017년) 이후에도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26) 「'18~'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기본 전제 중 경제성장률, 환율 등 거시지표는 '19년 예산안 및 '18~'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일치 시키고 에너지(가스·전기 등) 매출액 전망은 장기수급계획 활용하였으며, 분야별 정부 상위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 자본잠식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효율화,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을 계속하여 선제적으로 재무 리스크를 관리할 것임.
-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을 위한 적절한 투자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 임대주택, 신재생 에너지 등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소요를 반영하도록 함.
 - 다만, 투자 확대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투자 이행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할 계획임.
-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2018~2022년간 39개 중장기 재무관리대상의 공공기관의 자산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SOC 분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기반시설 관련 자산이 56.9조원 증가함.
 - 한국전력 그룹사를 중심으로 발전소·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따라 에너지 분야 기관의 자산이 34조원 증가함.

〈표 II-10〉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자산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17년 (실적)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증감 (B-A)
· 자산 (39개)	754.3	769.4	792.6	821.6	851.7	885.1	115.7
- SOC(10개)	321.9	327.4	338.6	352.5	367.1	384.3	56.9
- 에너지(12개)	249.1	255.3	263.2	273.9	281.9	289.3	34.0
- 금융(12개)	161.2	163.0	164.5	167.0	172.9	180.1	17.1
- 기타(5개)	22.1	23.7	26.3	28.2	29.8	31.4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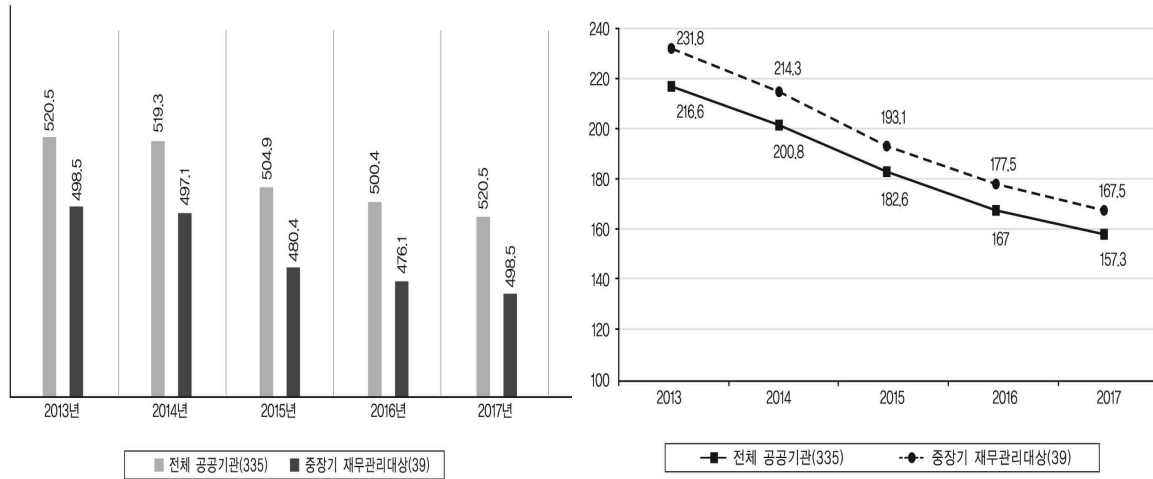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8.31.

- 전체 공공기관(335개)²⁷⁾의 부채에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기관(39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 수준임.
 - 2018~2022년간 부채규모는 58.2조원(2018년 480.8조원 → 2022년 539.0조원)으로 증가하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1%p 하락함(2018년 167% → 2022년 156%).

27) 2018년 기준 알리오시스템 공시대상 338개 중 은행3사(산은·수은·기은)는 제외함

〈그림 II-3〉 공공기관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11〉 총 부채 및 부채비율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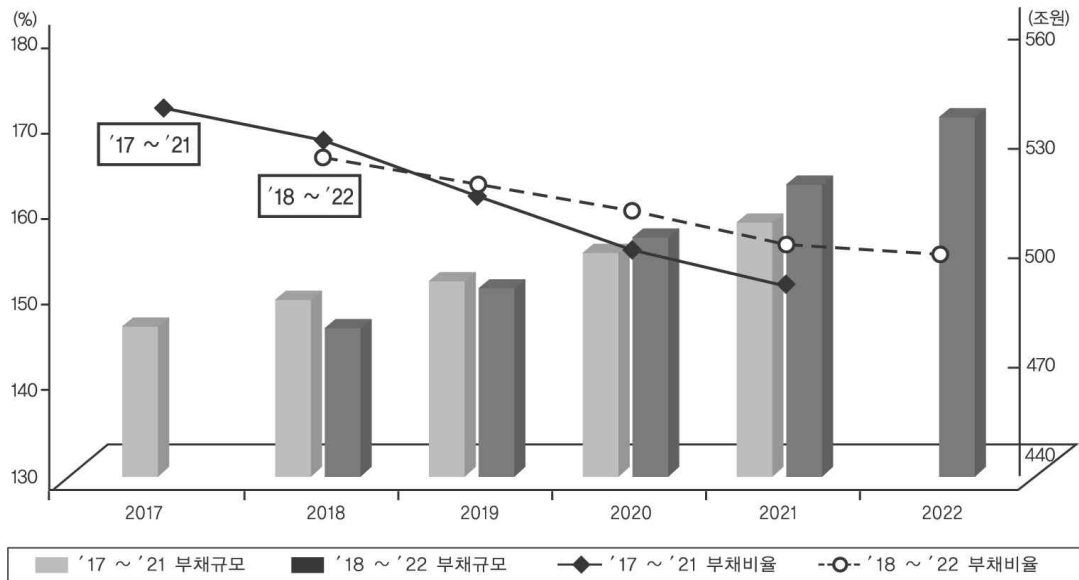
구 분	'17년 (실적)	'18년 (A)	'19년	'20년	' 21년	'22년 (B)	증감 (B-A)
부채비율(%)	167	167	163	160	157	156	△11
부채규모(조원)	472.3	480.8	491.8	506.2	520.6	539.0	58.2
자본(조원)	282.0	288.6	300.8	315.5	331.1	346.1	57.5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지난해(2017~2021년) 계획대비 올해(2018~2022년) 계획의 부채규모 및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음.

○ 지난해(2017~2021년) 계획 대비 2017년 실적 및 2018년 전망치는 개선되었으나, 2019년 이후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계획(2017~2021년) 대비 부채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4〉 전년대비 부채규모 및 비율 전망치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8.31.

- 분야별 부채·부채비율 전망을 살펴보면, SOC·금융 부문은 2018~2022년간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부문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SOC) 부채비율은 2018년(191%)부터 감소세를 보여, 2022년에는 18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부채규모는 2018~2022년간 다소 증가(+33.1조원)하여 2022년 248.2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채비율은 연료비 증가 등으로 2018년 220%에서 2022년 235%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부채규모는 신규 발전소 건설수요 등으로 점차 증가(+27.6조원)하여 2022년에는 203.1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 (금융) 부채비율은 2018년 93%에서 2022년 7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부채규모도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한 채권 상환으로 2018년 78.4조원에서 2022년 73.8조원 수준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12〉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부채비율 전망

(단위: 조원)

분야	'17년 (실적)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증감 (B-A)
전체(39개)	472.3 167%	480.8 167%	491.8 163%	506.2 160%	520.6 157%	539.0 156%	58.2 △11%p
- SOC(10개)	215.8 203%	215.1 191%	220.0 185%	228.1 183%	237.2 183%	248.2 182%	33.1 △9%p
- 에너지(12개)	166.0 200%	175.5 220%	182.0 224%	190.0 227%	196.3 229%	203.1 235%	27.6 15%p
- 금융(12개)	79.6 97%	78.4 93%	76.9 88%	74.6 81%	73.5 74%	73.8 70%	△4.6 △23%p
- 기타(5개)	10.9 98%	11.8 99%	12.9 97%	13.5 90%	13.6 84%	13.9 79%	2.1 △20%p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2018~2019년에는 48%, 2020~2022년에는 47%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39개 기관의 총부채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도 전년도 계획과 동일하게 77% 수준으로 전망됨.

〈표 II-13〉 금융부채 전망치 비교

(단위: 조원)

구 분	'17년 (실적)	'18년 (A)	'19년	'20년	'21년	'22년 (B)
금융부채	366.5	371.4	378.1	388.2	399.2	413.6
(총자산 대비)	49%	48%	48%	47%	47%	47%
(총부채 대비)	78%	77%	77%	77%	77%	77%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0.7조원으로 전년대비 6.2조원 감소하나, 2019~2022년의 당기순이익은 연 6.2조~8.8조원 수준으로 전망됨.
- 2018년 당기순이익 감소는 주요 에너지 공기업²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²⁹⁾의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서 기인함.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18년 1.3배에서 2022년 2.3배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은 <표 II-15>와 같음.

<표 II-14> 당기순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전망

(단위: 조원)

구분	'17년 (실적)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당기순이익	6.9	0.7	6.2	8.0	8.8	8.6
영업이익(A)	17.5	9.7	13.8	17.2	18.2	17.6
이자비용(B)	6.9	7.6	7.6	7.6	7.5	7.6
이자보상배율(A/B)	2.5	1.3	1.8	2.3	2.4	2.3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표 II-15> 기관별 주요 재무지표 전망

(단위: 배, %, 억원)

기관명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18년	'22년	'18년	'22년	'18년	'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3.7	4.3	286%	262%	19,009.8	11,148.9
한국도로공사	1.2	1.2	81%	87%	1,422.0	1,904.0
한국철도시설공단	1.0	1.2	무자본	특수법인	476.0	1,599.0
한국수자원공사	1.7	2.5	183%	160%	1,545.8	2,638.2
한국철도공사	영업손실	0.0	233%	217%	△1,039.4	△3,598.6
인천국제공항공사	17.7	25.8	46%	54%	9,984.7	9,331.3
부산항만공사	2.5	4.6	52%	58%	635.7	1,615.3
인천항만공사	1.8	2.6	44%	49%	225.8	1,001.3
한국공항공사	이자비용 없음		10%	13%	1,798.5	2,332.8

2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

29)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63% 수준에서 2022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감소

기관명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18년	'22년	'18년	'22년	'18년	'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8.4	이자비용없음	91%	139%	1,026.7	216.1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0.1	101%	136%	△4,480.5	66.4
한국수력원자력	영업손실	0.7	132%	153%	△12,058.0	△1,708.1
한국중부발전	1.1	1.8	188%	186%	492.2	1,926.3
한국서부발전	1.1	3.1	162%	178%	173.3	3,574.8
한국동서발전	1.4	2.4	99%	146%	283.8	2,574.3
한국남부발전	1.2	2.5	143%	146%	227.0	2,507.1
한국남동발전	1.3	1.9	111%	162%	207.3	4,409.1
한국가스공사	1.4	1.7	352%	274%	2,753.4	4,580.3
한국석유공사	1.0	2.1	1282%	692%	△11,501.7	2,514.9
한국지역난방공사	1.7	3.2	198%	209%	288.6	8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7,471.2	△1,708.6
대한석탄공사	영업손실		자본잠식		△919.9	△1,247.4
예금보험공사	3.2	8.6	무자본	특수법인	15,850.4	19,090.7
한국장학재단	0.4	0.5	1,434%	1,082%	73.7	478.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회계기준 적용		586%	576%	국가회계기준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이자비용 원가화		439%	215%	△419.3	11,505.1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업손실		41%	69%	△26,332.5	△1,936.0
공무원연금공단	국가회계기준 적용		61%	52%	국가회계기준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3.9	4.5	44%	41%	3,493.1	3,847.1
신용보증기금	국가회계기준 적용		55%	86%	국가회계기준 적용	
한국무역보험공사	국가회계기준 적용		244%	141%	국가회계기준 적용	
한국자산관리공사	3.8	1.8	150%	209%	440.1	429.3
기술보증기금	국가회계기준 적용		66%	78%	국가회계기준 적용	
국민체육진흥공단	885.6	997.4	49%	37%	△95.0	56.8
주택도시보증공사	85.3	85.4	31%	34%	3,473.5	3,900.6
사학연금공단	국가회계기준 적용		4%	3%	국가회계기준 적용	
한국마사회	이자비용 없음		4%	4%	1,735	1,16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자비용 없음		101%	100%	36.1	38.4
(주)강원랜드	이자비용 없음		19%	17%	3,589.2	3,988.2

주: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 0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채비율 산출이 불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표 II-1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2018~2022년)

(단위: 조원)

구분	기관명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39개 기관 전체	자산	769.4	792.1	821.1	851.1	884.5
		부채	480.8	491.6	505.9	520.3	539.0
		부채비율	167%	164%	161%	157%	156%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산	172.8	178.0	187.0	197.2	207.8
		부채	128.1	130.4	136.2	143.2	150.4
		부채비율	286%	274%	268%	265%	262%
2	한국도로공사	자산	63.0	65.5	68.5	71.7	74.7
		부채	28.2	29.3	31.0	32.9	34.7
		부채비율	81%	81%	82%	85%	87%
3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	19.0	19.3	19.7	19.9	20.2
		부채	20.8	21.1	21.4	21.5	21.6
		부채비율	109%	109%	109%	108%	107%
4	한국수자원공사	자산	22.0	23.3	24.7	25.9	26.9
		부채	14.2	14.9	15.7	16.3	16.5
		부채비율	183%	178%	175%	169%	160%
5	한국철도공사	자산	22.1	22.4	21.0	19.1	19.4
		부채	15.4	15.1	14.1	12.7	13.3
		부채비율	233%	206%	205%	198%	217%
6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산	12.5	13.2	13.9	15.1	16.6
		부채	3.9	4.1	4.3	4.9	5.8
		부채비율	46%	46%	44%	48%	54%
7	부산항만공사	자산	5.9	6.1	6.4	6.6	6.8
		부채	2.0	2.1	2.3	2.4	2.5
		부채비율	52%	53%	57%	58%	58%
8	인천항만공사	자산	3.1	3.4	3.4	3.5	3.6
		부채	1.0	1.3	1.0	1.1	1.2
		부채비율	44%	58%	44%	48%	49%
9	한국공항공사	자산	4.7	4.9	5.0	5.1	5.5
		부채	0.4	0.4	0.5	0.5	0.6
		부채비율	10%	10%	10%	10%	13%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산	2.3	2.4	2.8	2.9	2.8
		부채	1.1	1.2	1.7	1.7	1.6
		부채비율	91%	100%	146%	149%	139%
11	한국전력공사	자산	110.2	114.0	120.5	126.0	130.8
		부채	55.4	59.2	64.9	70.4	75.3
		부채비율	101%	108%	117%	127%	136%
12	한국수력원자력	자산	56.5	58.3	60.2	60.8	61.6
		부채	32.2	33.9	35.5	36.2	37.2
		부채비율	132%	139%	143%	147%	153%

구분	기관명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3	한국중부발전	자산	10.9	11.4	12.0	12.1	12.4
		부채	7.1	7.5	8.0	7.9	8.1
		부채비율	188%	193%	198%	190%	186%
14	한국서부발전	자산	10.3	10.8	11.6	12.3	12.8
		부채	6.4	6.8	7.5	8.0	8.2
		부채비율	162%	172%	179%	184%	178%
15	한국동서발전	자산	9.2	9.8	11.0	12.3	13.0
		부채	4.6	5.1	6.0	7.1	7.7
		부채비율	99%	107%	120%	139%	146%
16	한국남부발전	자산	10.3	10.8	11.2	11.4	11.6
		부채	6.1	6.5	6.7	6.9	6.9
		부채비율	143%	151%	152%	152%	146%
17	한국남동발전	자산	10.5	12.1	13.3	14.2	15.0
		부채	5.5	7.0	7.8	8.5	9.3
		부채비율	111%	137%	141%	146%	162%
18	한국가스공사	자산	37.8	37.3	37.3	37.6	36.8
		부채	29.4	28.6	28.1	28.0	26.9
		부채비율	352%	326%	307%	293%	274%
19	한국석유공사	자산	18.7	18.8	18.9	18.7	18.6
		부채	17.3	17.2	16.8	16.5	16.3
		부채비율	1282%	1085%	793%	749%	692%
20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	5.9	6.0	6.2	6.4	6.8
		부채	3.9	4.0	4.1	4.3	4.6
		부채비율	198%	199%	198%	197%	209%
21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산	3.6	3.2	2.3	0.7	0.7
		부채	5.6	5.1	4.3	2.3	2.5
		부채비율	자본잠식				
22	대한석탄공사	자산	0.8	0.8	0.8	0.7	0.7
		부채	1.8	1.9	2.0	2.0	2.1
		부채비율	자본잠식				
23	예금보험공사	자산	18.6	18.5	18.9	21.3	24.9
		부채	18.2	14.7	11.2	8.6	7.9
24	한국장학재단	자산	12.5	12.5	12.4	12.4	12.4
		부채	11.7	11.6	11.5	11.4	11.4
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산	17.6	18.0	18.2	18.3	18.3
		부채	15.0	15.2	15.5	15.6	15.6
26	한국농어촌공사	자산	11.3	13.2	14.4	15.3	16.2
		부채	9.2	10.3	10.7	10.9	11.1
		부채비율	439%	358%	287%	245%	215%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산	34.0	31.9	31.0	31.3	32.0
		부채	9.9	10.7	11.5	12.2	13.1
		부채비율	41%	51%	59%	64%	69%

구분	기관명	항목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8	공무원연금공단	자산	17.9	17.6	17.8	18.1	18.5
		부채	6.8	6.4	6.3	6.3	6.3
		부채비율	61%	57%	55%	53%	52%
29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산	14.4	16.1	17.4	18.6	20.0
		부채	4.4	5.1	5.3	5.5	5.8
		부채비율	44%	47%	44%	42%	41%
30	신용보증기금	자산	9.0	8.6	7.9	7.3	6.8
		부채	3.2	3.2	3.1	3.1	3.1
		부채비율	55%	61%	64%	74%	86%
31	한국무역보험공사	자산	4.2	4.3	4.6	4.9	5.4
		부채	3.0	3.1	3.1	3.1	3.1
		부채비율	244%	241%	210%	173%	141%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	4.4	5.0	5.4	6.0	6.1
		부채	2.7	3.2	3.5	4.0	4.1
		부채비율	150%	173%	188%	210%	209%
33	기술보증기금	자산	3.0	2.9	2.7	2.6	2.5
		부채	1.2	1.2	1.2	1.1	1.1
		부채비율	66%	73%	77%	77%	78%
34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산	5.2	5.7	6.1	6.5	7.0
		부채	1.7	1.7	1.8	1.8	1.9
		부채비율	49%	44%	41%	39%	37%
35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	7.0	7.3	7.3	7.3	7.4
		부채	1.7	1.8	1.8	1.8	1.9
		부채비율	31%	32%	32%	33%	34%
3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자산	20.5	21.8	23.2	24.5	25.7
		부채	0.8	0.8	0.8	0.7	0.6
		부채비율	4%	4%	3%	3%	3%
37	한국마사회	자산	2.6	2.7	2.7	2.7	2.8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4%	4%	4%	4%	4%
3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산	0.1	0.1	0.1	0.1	0.1
		부채	0.1	0.1	0.1	0.1	0.1
		부채비율	101%	101%	100%	100%	100%
39	(주)강원랜드	자산	4.4	4.6	4.8	5.1	5.3
		부채	0.7	0.7	0.7	0.7	0.8
		부채비율	19%	18%	18%	17%	17%

주: 1. 자본금 및 기본재산이 0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예금보험공사는 부채비율 산출이 불가능

2. 한국장학재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 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관련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임.
 -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목표 부채비율(계량) 달성 여부,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비계량) 등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함.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 절차 개선 및 사회적 가치반영 등 공공기관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적시 투자를 지원할 것임.
 - 정부는 공공기관 출자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힘.

3) 공공기관 출자관리³⁰⁾

- 공공기관은 민간협업·위험분산 등을 위해 출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자회사는 주로 에너지 및 SOC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그동안 정부는 무분별한 출자를 방지하고 출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선진화 계획(2009년), 부채감축 계획(2013년)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제고 및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위해 출자 지분을 정리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 시 주무부처 및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공운법 제51조의 2)를 명문화하고, 경영평가 및 공시 등을 통해 공공기관 출자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 출자회사 관리·정리 등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진단의 부재로 출자회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일부 출자회사들의 경우 적자 또는 자본잠식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는 자율·책임경영의 원칙하에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자가진단 및 자율적인 출자회사 관리를 유도하기로 함.

30)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12. 14. 참고

-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공공기관 자체 출자회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자 시 통일된 내부 타당성 검토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출자회사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자율진단 하는 것임.
- 출자회사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자회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사업부서와 전담부서간 출자회사 관리 이원화를 통해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출자 검토 시 공공성·재무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되, 공공기관 자체 타당성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각 지표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도록 함.
- 공공기관이 보유한 출자회사를 대상으로 출자회사의 설립목적 및 공공기관의 주요(고유)사업 수행 여부에 따라 사업성 또는 비사업성 출자회사로 구분하도록 하고, 출자회사 성과의 적정성, 재무건전성, 환류의 적정성, 모회사와의 교류 적정성 등을 진단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매각 또는 청산, 전문기관의 심층진단, 경영개선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부서는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진단 결과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 부서는 이행계획의 실효성, 이행실적 등 점검하며,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에 진단 결과·이행계획·실적을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3.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정책 주요 동향³¹⁾

가. 20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1) 공공기관 혁신 추진경과

- 기획재정부는 「2018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18. 6.)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혁신을 지원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음.
-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함.(2018. 7월)

31) 기획재정부의 「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2019. 6. 4.,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11. 28.,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www.alioplus.go.kr) 개통」, 보도자료, 2018. 11. 28. 등 참고

- 2018년 혁신·협업·시민참여 13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함.(2019. 상반기)
- 2018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혁신 노력 및 성과를 점검함.(~2019. 6월)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혁신 사례들이 발굴되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이 정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은 다소 미흡하며, 최근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한 기관 운영의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혁신 추진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채용비리 등도 신뢰 저하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당면과제인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함.

2) 2019년 공공기관 혁신방향

- 2019년 공공기관 혁신의 가장 큰 방향은 ①기존의 혁신 목표는 유지하면서, 성과 창출·확산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 ②혁신성장, 공정경제, 적극행정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임.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가 목표이며, 혁신의 지향점을 국민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것임.
- 추진방향은 ①사회적 가치를 기관운영의 핵심가치로 하여 ②혁신적 포용국가를 선도하고, 나아가 ③신뢰받는 공공기관을 실현하는 것임.
 - 2018년 추진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토대로 2019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공공기관이 선도할 계획임.
- 특히 2018년 7대 주요과제에 포용성 강화, 경제활력 제고, 적극행정 확산 등 최근 주요 정책을 반영하여 3대 기본방향, 8대 주요 혁신과제를 선정함.

〈그림 II-5〉 2018년 및 2019년 혁신과제 비교

〈'18년 혁신과제〉		〈'19년 혁신과제〉	
목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 과제	① 공공성 강화	⇒	①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①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② 대국민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②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② 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		②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③ 소득주도·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③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④ 혁신성장 뒷받침		④ 혁신성장 지원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⑤ 공정경제 기반 구축
	③ 국민 신뢰 회복		③ 국민 신뢰 제고
	⑥ 윤리경영 강화		⑥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영 혁신
	⑦ 국민의 참여·협력 확대		⑦ 투명·윤리경영 강화
			⑧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자료: 기획재정부, 「'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4.

3) 2019년 분야별 추진과제

- 공공기관은 2019년 혁신방향을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혁신계획을 자율적·창의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먼저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운영'을 위하여 고유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야 함.
 - (과제 1: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기관별 고유 목적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함.
 - 설립목적, 국정과제 등을 고려하여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함.
 -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기관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
 - 협력업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민간 부문 확산에도 노력함.

- (과제 2: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활용하여 선제적·예방적 서비스³²⁾를 제공함.
 - 현장중심의 문제해결형 조직운영³³⁾으로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함.
- 두 번째로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를 위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를 선도하고, 혁신성장 지원 및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함.
 - (과제 3: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일자리 창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질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함.
 - 고유 업무영역 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정·현원차 관리, 일하는 방식 개선³⁴⁾ 등을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함.
 - 고졸·지역인재·장애인 등 취업애로 계층의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체험형 인턴을 확대 운영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기관이 일자리 질 개선을 선도함.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중심의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구직자-협력업체간 일자리 매칭 지원³⁵⁾ 등 민간고용을 확대 지원함.
 - 협력업체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³⁶⁾을 지원함.
 - (과제 4: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정보·기술·시설·인력 등 공공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초기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함.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분야와 중소·벤처기업 기술·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의 구매조건부 공동 R&D, 상용화前 혁신기술·제품 도입³⁷⁾ 등 공공기관의 혁신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함.

32) (예시) 지능형검침망을 활용하여 독거·치매 어르신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한국전력공사)

33) (예시) 국민생활과 밀접한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현장밀착형’ 임시조직 활용 등

34) 교대제 변경 및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탄력정원제 등 제도를 기관 특성에 맞게 활용

35) 협력업체와 합동채용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인턴의 지역내 우수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36) (예시)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하여 해외 현지화사업 추진 → 3개국 5개 사업 진출 및 190억원 규모의 후속수출 진행중('18년말 기준)(한국수자원공사)

37) (예시) 기술마켓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제안·검증·상용화 지원(SOC 기관)

- 유휴 공간을 창업·벤처기업의 사업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³⁸⁾하고, 혁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사내 벤처를 발굴 및 육성함.³⁹⁾
- (과제 5: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과 상생협력, 불공정 약관 및 특약 등 점검·정비,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통해 공정경제 기반을 구축함.
 - 사업수행·물품구매시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강화⁴⁰⁾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협력업체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 약관 및 특약 등을 점검·정비함.
 - 자회사·출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일방적 계약 불이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함.
 - 소비자 권익 보호, 적정대가 지급 등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에서 모범 거래모델을 마련함.
-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동을 혁신하고, 투명·윤리경영을 강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감.
- (과제 6: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동 혁신)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기관별 방안 수립하고 시행함.⁴¹⁾
 - 근무혁신을 통해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 정착을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함.
 - 비핵심적 업무·부실사업 효율화 등 상시·자율적 기능조정을 추진함.
- (과제 7: 투명·윤리경영 강화) 채용·입찰비리, 갑질 등 각종 부패 근절을 위해 규정 강화, 내부감사 확대,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함.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함.
 -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성별·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과제 8: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기관운영 전반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사업계획 수립·집행·점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

38) (예시) 고속도로 휴게소를 야간에는 '청년창업 심야카페'로 운영하여 청년 스타트업 지원(한국도로공사)

39) 정부는 사내벤처팀 운영 시 별도정원 인정 등 신축적 정원관리 지원

40) (예시) 상생결체 시스템 및 하도급지킴이 등 적극 도입 및 활용률 제고

41)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추진방안(2019. 3. 14.)」 등을 참고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세부방안 마련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청사, 주차장, 연수원,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H/W)을 개방⁴²⁾하고, 공공기관 행사, 정책제안 등 국민 참여를 위한 정보(S/W)를 제공⁴³⁾하는 등 기관이 보유한 시설·정보를 적극 활용함.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소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4) 2019년 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 공공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2019년 혁신계획' 및 '2019~2023년 중기혁신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 수립한 혁신계획 및 중기혁신방향은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혁신계획 수립 대상기관은 2019년 339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33개)과 연구개발 목적기관(69개)을 제외⁴⁴⁾한 237개 기관임.

〈표 II-17〉 2019년 혁신계획 수립 대상 및 제외 대상 공공기관

유형	기관명	비고
공기업 (36개)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점과제 3개

42) (예시) 강릉 산불 사고 이재민들에게 공공기관의 강원도 소재 연수원 개방

43) 기관 홈페이지·알리오플러스에 정시성 있는 정보 등록

44) 제외 기관은 주무부처 주관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혁신계획 수립·점검

유형	기관명	비고
대규모 준정부기관 (51개)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고용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중점과제 3개
소규모 준정부기관 (42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중점과제 2개

유형	기관명	비고
소규모 준정부기관 (42개)	(환경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중점과제 2개
5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108개)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의전당,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중점과제 1개

유형	기관명	비고
50인 이상 기타 공공기관 (108개)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위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해수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중점과제 1개
연구개발 목적기관 (69개)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복지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유형	기관명	비고
연구개발 목적기관 (69개)	(해수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50인 미만 기타 공공기관 (33개)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해수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국토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재)한식진흥원 (복지부) 한국한의학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문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중기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산학협회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주: 50인미만 기타공공기관 분류는 2019년 1분기 정규직(무기계약직 제외)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4.

- ☐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모든 대상기관은 8대 과제를 포괄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되, 세부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창의적으로 개발함.
 - 혁신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각 기관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여야 함.

〈표 II-18〉 기관별 중점과제 수

(단위: 개)

구분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	소규모 준정부기관	5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중점과제 수	3개	2개	1개

주: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구분기준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명시된 강소형 분류 기준을 준용

- 위탁집행형: 직원 정원 300인 미만, 기금관리형: 자산 1조원 & 직원 정원 300인 미만

자료: 기획재정부, 「'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4.

- 공공기관은 대내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향식 혁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관별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하여 외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직원 토론, 혁신동아리 등을 통해 다양한 내부 혁신요구를 수렴하여야 함.
 - 공기업 및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시민참여혁신단을 필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그 외 기관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함.
 -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구성·규모 등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시민참여혁신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고객,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외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경영진·실무자 등 내부역량을 집중하여 기관운영 전반을 혁신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혁신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
 - 기관별 혁신책임관 및 혁신부서를 지정·운영하고, 실무자·경영진 대상 혁신 교육, 직급·업무별 학습그룹 등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활성화하며, 기관별 성과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함.
 - 기관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실무자간 혁신활동 공유, 혁신 콘테스트·실패 박람회⁴⁵⁾ 공동 개최 등을 통한 상호학습을 강화함.
 - 지자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을 활성화 함.

5) 2019년 공공기관 혁신 점검 및 지원

- 주무부처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별 계획과 성과 등을 점검하고 평가함.⁴⁶⁾

45) 실패사례를 적극 소개하여 실패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재도전이 일상화되는 문화 정착

46) 공기업·준정부기관 연 1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혁신계획 및 성과 등 추진실적 평가

- 혁신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국민의 참여 정도, 중점 추진과제의 성과 등을 「혁신노력 및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혁신계획 주요과제 추진실적은 현행 평가지표와 연계하여 평가함.⁴⁷⁾
- 협업·혁신·시민참여 우수기관은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관별 혁신계획은 2019년 6월말까지 수립하며, 시민참여혁신단 의견 반영, 주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19년 7월말까지 보완할 수 있음.
- 혁신 우수사례집 발간과 2019년 수립된 혁신계획의 혁신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2020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임.

나.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 및 개통

- 기획재정부는 현행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⁴⁸⁾: www.alioplus.go.kr)을 2019년 3월 28일에 개통 하였음.
- 알리오플러스는 공공기관과 국민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공공기관별로 산재된 서비스 및 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함.
- 기존 알리오시스템은 국회, 언론, 연구자 등 전문가가 주요 이용자인 반면, 알리오 플러스는 일반국민이 주요 이용자가 됨.

47) '과제3.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는 '일자리 창출' 지표와 연계

48) 혁신포털의 이름 「알리오플러스」는 '19. 1월 국민 공모(약 3,000명 참여)로 선정되었음

〈표 II-19〉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알리오시스템 비교

구분	공공기관 혁신포털 (알리오플러스)	알리오시스템
① 주요 이용자층	일반국민, 공공기관	국회, 언론, 공공기관, 연구자 등
② 정보의 성격	국민 편의·활용 가능 정보	경영상 정보 (채용, 인력, 입찰, 재무 등)
③ 데이터 정의	데이터 속성에 따른 자율적 입력, 비정형 데이터	정보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위해 공통매뉴얼 의존, 정형 데이터
④ 정보 제공 방향	쌍방향	단방향
⑤ 시스템 기반	G-클라우드	자체 서버
⑥ 핵심 가치	사회적가치, 참여, 혁신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정확성, 책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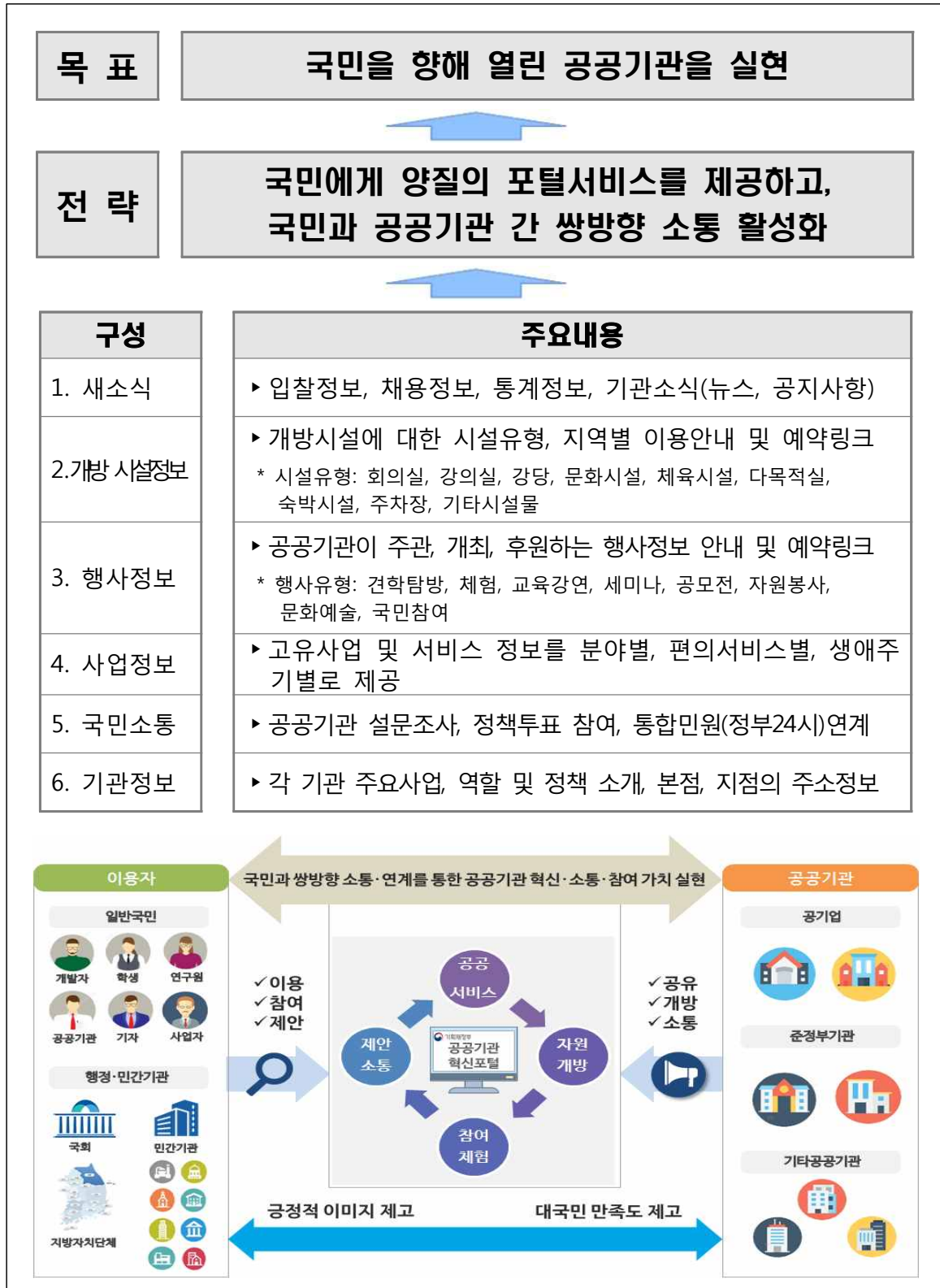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www.alioplus.go.kr) 개통」, 보도자료, 2018. 11. 28.

- 알리오플러스는 33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민의 여가생활, 기업활동 등 실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알리오플러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및 사업정보 이외에 개방시설 정보, 국민참여 행사정보, 국민소통, 새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설정보) 회의실, 체육시설 등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정보를 9개 유형별⁴⁹⁾로 분류하여 제공함.
 - (국민참여 행사정보) 교육·세미나 등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를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8개 유형⁵⁰⁾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함.
 - (국민소통) 설문조사, 제안, 만족도조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도록 함.
 - (새소식)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입찰정보, 채용정보, 기관소식, 통계정보 등 새로운 소식을 제공함.

49) 회의실, 강의실, 강당, 문화시설, 체육시설, 다목적실, 숙박시설, 주차장, 기타시설물

50) 견학탐방, 체험, 교육강연, 세미나, 공모전, 자원봉사, 문화예술, 국민참여

〈그림 II-6〉 혁신포털 주요 구성내용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www.alioplus.go.kr) 개통」, 보도자료, 2018. 11. 28.

□ 알리오플러스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알리오플러스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표 II-20>과 같음.

〈표 II-20〉 실생활 상 공공기관 혁신포털 활용 예시

구분	예시
사업 정보	· 전기차를 구매한 A씨가 자신의 거주지 인근 충전소 시설을 확인(전기차 충전) ·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 인재 추천 및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실시(동행면접 중장년인재) · 복용중인 약품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싶은 B씨(의약품정보)
행사 정보	· 모처럼 주말을 맞아 가족과 추억을 쌓고 싶은 C씨가 불꽃쇼를 관람 예정(불꽃쇼 하이원) · 근로자 가요제 - 음악 취미활동하는 E씨,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행사정보(가요제)
시설 정보	· 야구에 관심 많은 E씨가 동호회와 함께 야구 경기를 위해 거주지 인근 야구장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야구) · 실내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F씨(골프, 실내골프)
기타 정보	· 채용정보 : 새소식- 채용소식란에 확인하고 싶은 공공기관 채용정보 확인 · 입찰정보 : 새소식- 입찰소식란에 최신 등록된 공공기관 입찰정보 확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www.alioplus.go.kr) 개통」, 보도자료, 2018. 11. 28.

4. 공공기관 안전관리정책 주요 동향

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⁵¹⁾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공공기관의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생김.

○ 특히,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의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가 증대함.

51)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도자료, 2019. 3. 19. 참고

- 공공기관 경영에서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이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경영방식, 작업현장, 원·하청 구조, 안전의식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시급해짐.
-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생명과 안전이 제1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2019년 1~3월, 정부합동 TF(국조실 주관, 8개부처)⁵²⁾를 구성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함.
 - 약 3개월에 걸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TF를 운영(2019. 1. 4.~3. 14)하는 한편 주무부처 주관으로 26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함.
 - 주무부처 주관으로 산재위험이 높은 26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외부전문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시민단체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732개 작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함(2019. 1. 7.~2. 15).
 - 점검결과 작업장별 위험요소 4.6건(총 3,346건)을 확인하였고, 2,244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1,102건)는 개선 조치를 추진함.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위험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작업장 11개소, 발주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2019. 1. 14.~1. 29).
 - 작업장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12.7건(총 266건)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시정명령 230건, 사법조치 68건, 과태료 3.2억원 등)를 행함.
 - 그밖에도 전문가 의견수렴⁵³⁾ 및 현장방문⁵⁴⁾(2019. 1. 22.~2. 26)을 실시하였음.

52) 국무조정실 주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

53) 학계 시민단체·노동계 등 9회

54) 한국철도시설공단, 당진화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표 II-21〉 주무부처 주관 안전점검 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

분야	대상기관	작업장	조치결과
국토 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6개)	총 212개	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자재 낙하 위험 등 917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전5사, 한전KPS,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10개)	총 141개	개구부 덮개 미설치, 컨베이어벨트 협착위험 등 1,157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환경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개)	총 339개	토사 붕괴 위험, 밀폐공간 출입안전조치 미흡 등 1,103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농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가축방역지원본부 (3개)	총 28개	전기기계 미접지, 도로 사면보강 구간 파손, 안전통로 미확보 등 99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항만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4개)	총 12개	부두 출입통제 등 관리 미흡, 신호수 미배치 등 70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도자료, 2019. 3. 19.

〈표 II-22〉 고용노동부 주관 불시점검 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

구분	내용
위반사항	개구부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비(9건), 위험설비 안전검사 기준 미준수(19건),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49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미수행(35건) 등
조치사항	시정명령(230건), 과태료(3.2억원), 부분작업중지(4개소), 사용중지(5대), 사법조치(68건)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도자료, 2019. 3. 19.

2) 중점 추진사항

- 안전점검결과,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는 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338개 공공기관⁵⁵⁾ 중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38개임.
 - 특히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대 기관⁵⁶⁾에서 산재 사망의 79.9%(238명)가 발생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임.
- 안전점검 및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결과, 현재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는 ① 효율성 위주의 경영방식, ②작업 현장의 위험 방치, ③원·하청 구조에 따른 안전 책임의 사각지대 존재, ④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됨.
 - 먼저 체계적인 안전계획의 부재, 시설·전담인력 등 안전투자 미흡, 내·외부 참여 시스템 미작동, 성과위주의 경영평가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작업현장에 있어서도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제도가 미흡하며, 위험환경이 방치되는 등으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이 원청으로서의 책임이 미흡할 뿐더러 공공입찰 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비 편성이 부족함.
 - 인프라 측면에서도 경영진부터 현장 인력까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고,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미흡하였으며, 공공기관 안전관련 규정·통계 등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사람 존중의 가치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안전 우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60%) 감축을 목표로, 4대 전략 및 1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함.
 -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작업장이 <표 II-24>와 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55) 2018년 공공기관 기준

56)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명) : 한국토지주택공사(46), 한국도로공사(43), 한국전력공사(43), 한국철도시설공단(27), 한국철도공사(23), 한국수자원공사(16), 한국농어촌공사(16), 한국수력원자력(9), 대한석탄공사(8), 한국서부발전(7)

〈표 II-23〉 4대 추진전략 및 14대 중점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 추진과제
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① (계획)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 ② (집행) 안전투자 대폭 확대 ③ (통제)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④ (평가) 안전중심 경영평가 실시
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황	① (진단) 위험요소 진단체계 정비 ② (방식) 사고예방형 작업방식 도입 ③ (환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① (도급) 원청의 책임 강화 ② (발주)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③ (관리) 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 ④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① (인식) 안전 우선 인식·문화 확산 ② (점검)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③ (이행) 실행 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도자료, 2019. 3. 19.

〈표 II-24〉 공공기관 작업장의 변화

	현재(As Is)	변화(To Be)
기관경영	수익 우선	안전 우선
작업현장	보이는 위험만 처리	잠재된 위험도 발굴
협력구조	위험을 전가	안전을 책임
안전인프라	민간에 뒤쳐짐	민간을 선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도자료, 2019. 3. 19.

나.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⁵⁷⁾

1) 추진배경

- ☐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잇단 대형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짐.

57) 기획재정부, 「주요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보도자료, 2018. 12. 18. 및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 3. 28. 참고

-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제53회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 시설⁵⁸⁾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함.
 -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하기로 함.
 - 또한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비롯한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함.
- 정부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회의(2018. 12. 21.)를 가진 후 공공기관의 노후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긴급 실시함(2018. 12~2019. 5).
- 전체 점검대상(101개 기관, 22만 3천개소) 중 취약시설(7만 3천개소)⁵⁹⁾에 대한 점검은 2019년 1월 중 완료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예방(2,369건), 보수·보강(1,422건), 점검계획 수립(2,808건) 등의 조치(6,599건)를 취함.
 - 나머지 시설(17만개소)은 국가안전대진단(2019. 2. 18~4. 19)과 연계하여 2019년 5월말 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 기획재정부는 2019년 3월 1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9년 3월 28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함.

58)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을 의미하며, 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이 해당됨

59) 발전소, 공항, 송전선로, 건설현장 중 노후화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시설·현장

2)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에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것으로, 국민·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본 방향은 크게 안전관리 강화와 관리체계 개편으로 정해짐.
 - 공공기관은 안전 중심 경영원칙 확립하는 한편, 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는 안전 경영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경영평가, 임원의 책임, 계약, 공시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인력 및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전체 공공기관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와 안전 관리중점기관 추진과제로 나누어서 추진됨.

□ 먼저 전체 공공기관은 안전 중심의 경영 체계를 수립해야 함.

- 공공기관은 기관 경영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 근로자의 하청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금년도 활동계획, 안전조직 구성 등이 포함된 '안전기본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⁶⁰⁾ 수립해야 함.
 - 주무부처는 안전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획재정부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 안전에 관한 직무, 사고 조사 및 대책,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수립·운영하고, 안전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특히 작업장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함.

□ 전체 공공기관은 작업장·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작업장·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무부처에 점검결과·개선 계획을 보고하는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여야 함.

60) 신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2019년에는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함

-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 출입 전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미준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기관별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시설·설비 안전성 개선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위험 시설·설비 등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⁶¹⁾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야 함.
 - 도급·발주 계약조건에 도급·발주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점검을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가 부실한 경우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전체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직무에 6개월 미만 근속한 신입 직원은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하기로 함.
 - 폭염 등 이상기후 시에는 현장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휴식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때 발주자(원청 포함)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도록 함.
 - 현재 발전5사에 적용하고 있는 작업중지 요청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할 예정임.
 - 또 현장밀착형 안전 강화 조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의 내부 제안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안전교육, 홍보, 기술개발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경영진, 현장관리자, 안전담당자, 현장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표 II-25>), 기본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4·4·4 안전점검의 날」을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례화하기로 함.
 - IoT,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용을 확대하기로 함.

61)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위험성 결정 → 자발적 예방조치

〈표 II-25〉 대상별 안전교육 내용

구분	교육내용
경영진	·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사망사고 발생시)
관리자	· 안전관리역량 강화교육
안전담당자	· 현장 실무 교육(2년마다 실시)
현장근로자	· 재해특성별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 건설공사 → 떨어짐 예방, 하수관로개·보수 → 질식 예방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 3. 28.

□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공공기관 중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중요 시설물을 운영하는 기관임(<표 II-26>).
 -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기준⁶²⁾에 따라 선별하여 지정하며, 2019년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97개임.
- 안전관련 업무 전담 조직을 기관장(또는 부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원급의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안전 분야 전공자 및 경력자를 채용하고, 일정기간동안 순환보직을 제한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함.
-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운영하고, 사업장 안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함.
- 또한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안전관리계획·활동 등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안전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⁶³⁾ 인증을 추진함.
- 매년 기관별 산재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함.

62)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기준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산업재해 현황,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한 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 관리주체
5. 기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63) ‘계획수립-실행-점검-개선’ 과정을 통해 지속적 안전보건 개선을 지원하는 시스템임

〈표 II-26〉 안전관리 중점기관(97개)

유형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중복제외)	97개	33개	40개	24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32개	<24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대한석탄공사,	<7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수산자원공단	<1개> 국방과학연구소
제5조 제1항 제3호	34개	<1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15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유형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5조 제1항 제4호	48개	<23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1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13개>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립암센터,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기초과학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제5조 제1항 제5호	28개	<7개> 한국광물자원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21개>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주: 유형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3.28.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 중심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기로 함.
-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을 최대 2점(2018년)에서 최대 6점(2019년)으로 상향하고, 해당지표에 적부평가방식⁶⁴⁾을 도입함(<표 II-27>).
 - 주요사업 부문 중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 평가 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감안하여 평가에 반영함.
 - 안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기관별 안전지표(2~4점)도 별도로 신설함.
 - 또한 안전투자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고, 안전투자로 인한 부채는 평가 시에 제외하기로 함.
 - '안전점검 자문단' 구성하는 등 경영평가단에 안전 분야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영평가 시 안전전문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 위험성평가·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기로 함.

<표 II-27> 「안전 및 환경」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내용(2019년 기준)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안전 및 환경	<환경보전>	
	지표정의	환경보전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1점
	세부평가 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0.2~0.4) * 환경부, 산업부 평가결과 반영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0.2~0.4) * 환경부 평가결과 반영 ③ 기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환경보전 노력 및 성과(0.5)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정의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적용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비계량 4점
	세부평가 내용	① 재난관리시스템(예방·대응·복구) 구축·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안전점검·진단 및 재난대비계획 수립·이행 실적, 관계자 교육, 안전관련 투자, 관련 예산·조직·인력 현황 등 **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행안부) ②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재난·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등

64)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사고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안전관리지침 등 안전법령 및 지침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여 만점 또는 0점으로 평가하되, 재해·사고 발생 또는 안전법령 위반 시에는 일부 감점할 예정임

평가 지표	세부 평가내용	
안전 및 환경	세부평가 내용	③ 산업재해 등 근로자(간접고용, 하청업체 근로자 포함) 피해 방지 및 사업장(발주현장 포함)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예방 및 임신부·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 ④ 국가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 시설물 관리 및 건설과정에서의 안전확보 노력과 성과 * (예)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에서의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 결과보고서(고용부) 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 정보보호 피해건수,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국정원) 결과 등 ※ 위 평가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만점 부여 (2)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재해 발생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0점 부여 * 중대재해 :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고 ** 안전법령 위반 :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등 안전법령상의 의무 위반 (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4. p. 16

□ 중대사고 발생에 귀책사유⁶⁵⁾가 있는 기관장 및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공운법 제35조에 따라 해임·해임건의를 추진하는 등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함.

○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중대사고에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과 관련 임원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임건의·요구를 할 수 있음.

65) 기관장·임원으로서 지켜야할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중과실로 불이행하거나 해태하고 이것이 중대사고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표 II-28〉 기관장 책임확보 방안

구분	법적 근거	주체	요건	절차	책임 확보
임원의 직무 불이행·해태에 따른 해임·해임건의	공운법 제35조	주무 기관의 장	① 중대사고 발생 ② 법령 위반(안전 지침 포함) ③ 고의·중과실로 안전 직무를 해태 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④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없음	해임, 해임건의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해임건의	공운법 제48조	기획재정부 장관	① 종합등급 E ② 종합등급 2연속 D ③ 종합등급 D & 임원의 직무 불이행·해태	경영평가 → 공운위 의결	해임건의

주: 임원의 직무불이행·해태에 따른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 시에는 공운위 의결이 필요함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 3. 28.

□ 기획재정부는 안전 인력 확충 및 투자·예산 확대를 지원할 예정임.

- 공공기관 정원 협의 시 시설안전 및 재난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함.
 - 2019년 상반기 중,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및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과 관련된 1,400여명을 증원함.
 - 안전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과 관련된 사항과 유관 공공기관 수는 <표 II-29>와 같음.
- 안전 관련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2019년도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안전관리 중점기관(97개)이 제출한 2018년 안전예산 집행실적은 13.7조원으로 집계됨(<표 II-30>).
 - 안전 예산을 적극 확대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⁶⁶⁾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⁶⁷⁾하도록 함.

66)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기 반영함(2018. 12월)

67) 2019년 작성·제출하는 '2019~2023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함(2019. 8월)

〈표 II-29〉 안전 조직 강화 및 인력확충 사항(56개 기관)

구분	해당 기관수	해당내용 예시
안전 전담·총괄부서 신설	20개 기관	남동발전 안전감찰부 신설,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상시점검단 신설 등
기존 안전 전담·총괄부서 강화	25개 기관	승강기안전공단 사고조사부 증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안전센터 증원 등
현장 안전부서 신설	9개 기관	서부발전 발전소별 안전관리부 신설, 한국전력 지사별 안전재난부 신설 등
현장인력 증원 (2인 1조 포함)	21개 기관	LH 현장감독원 증원, 지역난방 열수송관, 가스안전공사 고위험검사 2인 1조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 3. 28.

〈표 II-30〉 분야별·유형별 안전 예산(2018년 기준)

구분	내용
분야별	에너지(7.3조원), SOC(5.1조원), 농림수산(0.9조원) 등
유형별	공기업(33개, 10.8조원), 준정부기관(40개, 2.8조원), 기타공공기관(24개, 0.1조원)
내역별	안전관련 사업비(9.6조원), 시스템 비용(1.6조원), 인건비(1.1조원), 물품구입(0.6조원), 외주비용(0.4조원), 안전R&D(0.2조원) 등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 3. 28.

□ 또한 계약예규 및 국가계약법 등 개정을 통해 공공계약 제도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함.

○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함.(2019년 6월)

-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기로 함.

○ 낙찰자 선정 시 재해율·재해예방활동 등 안전 평가를 의무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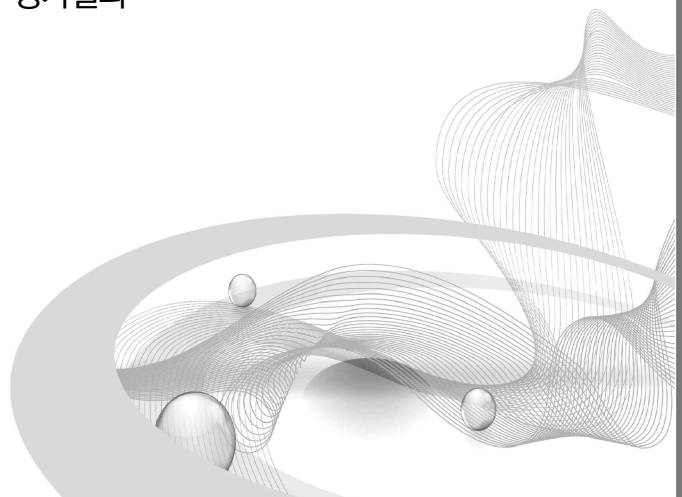
- 300억 이상 공사에만 적용한 안전관리 평가를 3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에도 신설하고, 고난이도 공사계약에는 시공과정의 안전관리계획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역량 평가제를 도입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미흡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입찰시 감점하기로 함.

-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하여 계약 체결 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
 -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함.
 -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 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함.
- 기획재정부는 2019년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령·지침을 제·개정하고, 안전관리 이행점검 등을 통한 공공기관에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책무 및 이행 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안전관리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항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여 개정함.
 - 산업재해, 안전사고 통계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공기관 경영공시 지침」을 개정하고, 안전 업무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 시 안전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약예규 등을 개정함.
- 임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관련 임원을 중심으로 안전지침, 평가 등을 안내하는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2019. 4. 17.)을 개최하고, 안전관리 지침이 현장에서 운영되도록 현장인력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2019. 4.)를 개최함.

Ⅲ 2019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1. 일반현황
2.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손익현황
5. 보수수준
6. 외부 평가결과





2019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

- 이번 장에서는 201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과 외부평가결과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주요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2019년도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는 339개 공공기관(2019년 1월 기준)과 23개 부설기관이 2019년 4월말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정기 공시한 경영정보⁶⁸⁾⁶⁹⁾을 기준으로 작성함.
- 또한 2018년도 경영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청렴도 측정결과 등 외부평가결과는 주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함.
- 이외에도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 등이 분석에 활용됨.
- 일반현황은 관계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2019년 1월 시점의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 공공기관 설립형태,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부설기관 현황,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⁷⁰⁾,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⁷¹⁾, 상장 공공기관 현황⁷²⁾ 등을 정리함.
- 인력, 손익 및 재무현황은 2019년 4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내용과 알리오시스템의 주요통계 및 기관별 통합공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외부평가결과는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리고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과 주요 특징을 정리함.

68)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69) 2019년 1월 지정된 339개 공공기관 및 그 부설기관(23개)은 공운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2019년 4월말까지 2018년 말 기준의 경영정보를 정기공시 하여야 함

70)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혁신도시 홈페이지(Innocity, <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 홈페이지 참고

71)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 참고

72)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8) 참고

- 먼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실시되고 있는 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주요 결과를 정리함.⁷³⁾
 -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를 의미함.
 -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⁷⁴⁾와 관련 보도자료⁷⁵⁾를 참고하여 주요 특징 등을 분석함.⁷⁶⁾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조사 중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또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임.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청렴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년대비 특징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⁷⁷⁾
-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는 공운법에 따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경영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결과를 정리함.
 -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전년도 통합공시에 대한 정확성과 충분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결과를 발표⁷⁸⁾하고 있으며, 발표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점검 결과, 벌점현황, 전년대비 개선 수준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73) 외부평가결과 중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참고

74) 매년 1분기 정기공시(매년 4월말) 시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을 통해 공개되는 전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

75)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참고

76) 주무부처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무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알리오시스템에 해당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77)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중 「청렴조사평가」 부분에 공개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2018.3.,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12.,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자료, 2018. 12. 20. 및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보도자료, 2018. 12. 20.을 활용하여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자료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

78)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 공시기간 대폭 증가」, 보도자료, 2019. 3. 28. 및 「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3. 28.를 활용하여 작성

1. 일반현황

가.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⁷⁹⁾

- 공운법에 따라 201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9개 기관⁸⁰⁾의 주무부처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35개 정부 부처가 산하에 공공기관을 보유하고 있음.
- 35개 부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공공기관 수가 가장 많고 인사혁신처,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는 산하 공공기관이 1개임.
 - 35개 부처 중 23개 부처가 산하에 10개 미만의 공공기관이 있음.
 -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수 및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음.

<표 III-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분포(2019. 1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계 (339개)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기획재정부	4	0	1	0	1	2
교육부	22	0	0	1	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0	0	0	10	35
외교부	3	0	0	0	1	2
통일부	2	0	0	0	0	2
법무부	3	0	0	0	0	3
국방부	3	0	0	0	0	3
행정안전부	3	0	0	0	1	2
문화체육관광부	32	0	1	2	4	25
농림축산식품부	11	0	1	0	5	5
산업통상자원부	41	12	5	2	12	10
보건복지부	25	0	0	1	8	16
환경부	11	0	1	0	4	6
고용노동부	11	0	0	1	4	6
여성가족부	5	0	0	0	2	3
국토교통부	25	2	7	0	6	10

79)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유형별 분포 현황)은 <부록 1> 참고

80) 2019년 1월 공공기관 지정 이후 연중 지정해제, 유형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아 2019년 9월 현재 공공기관 수는 1월 지정된 기관수(339개)와 동일

구 분	계 (339개)	시장형 공기업 (16개)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개)	기타 공공기관 (210개)
해양수산부	16	2	3	0	4	7
중소벤처기업부	12	0	0	2	3	7
국무조정실	24	0	0	0	0	24
방송통신위원회	2	0	1	0	1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0	0	0	3
금융위원회	8	0	0	4	0	4
공정거래위원회	2	0	0	0	1	1
국가보훈처	3	0	0	0	2	1
인사혁신처	1	0	0	1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0	0	1	3
관세청	1	0	0	0	0	1
방위사업청	2	0	0	0	0	2
경찰청	1	0	0	0	1	0
소방청	1	0	0	0	1	0
문화재청	1	0	0	0	0	1
산림청	3	0	0	0	2	1
농촌진흥청	1	0	0	0	1	0
특허청	5	0	0	0	1	4
기상청	3	0	0	0	1	2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를 참고하여 작성

□ 산하 공공기관이 30개 이상인 정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임.

○ 3개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수는 118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34.8%를 차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은 분야 특성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0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35개 기관)만 분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중 26개 기관이 2019년 최초 도입된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분류됨.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41개 기관이며 전체 공공기관 유형에 기관이 골고루 분포해 있음.

- 전체 공기업 중 16개 기관이 에너지 분야 기관으로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관에 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부처 중 공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처임.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32개이며 이 중 2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임.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고 (재)정동극장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됨.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수는 2018년 4개에서 2019년 2개로 감소하고 기타공공기관의 수는 2018년 24개에서 25개로 1개 증가함.
- 2019년 공공기관 지정부터 기타공공기관 중 별도 분류하기 시작한 연구개발목적 기관(69개)의 주무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보유한 정부 부처는 14개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회 포함) 설립근거법령의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6개로 이 중 20개 기관이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국무조정실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은 24개 기관으로 모두 정부출연기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부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음.

<표 Ⅲ-2> 주무부처별 연구개발목적기관 분포(2019. 1월 기준)

(단위: 개)

주무부처	기관수	주무부처	기관수
교육부	1	해양수산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	중소벤처기업부	1
국방부	1	국무조정실	24
문화체육관광부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산업통상자원부	2	방위사업청	2
보건복지부	3	특허청	1
환경부	1	기상청	1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대비 2019년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9개 부처에서 산하 공공기관 수 변화가 발생함.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신규 공공기관 지정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소관 기관수가 1~2개 수준으로 증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인해 전년대비 소관 공공기관 수가 1개씩 감소함.
 - 해양수산부의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나 주식회사 부산항 보안공사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가 지정해제 되어 전년대비 소관 공공기관 수가 1개 감소함.
- 2018년 대비 소관 공공기관에 변화가 있던 부처와 부처별 변동내역을 정리하면, <표 III-3>과 같음.

〈표 III-3〉 2019년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수 변동 내역

구 분	기관수		전년대비 변동내역	
	'18	'19	제외(지정해제)	추가(신규지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6	45 (△1)	별정우체국 연금관리공단	
법무부	4	3 (△1)	IOM이민정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33	32 (△1)	(재)정동극장	
농림축산식품부	10	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보건복지부	23	25 (+2)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환경부	10	11 (+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노동부	12	11 (△1)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국토교통부	23	25 (+2)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해양수산부	17	16 (△1)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를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설립형태

1)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설립형태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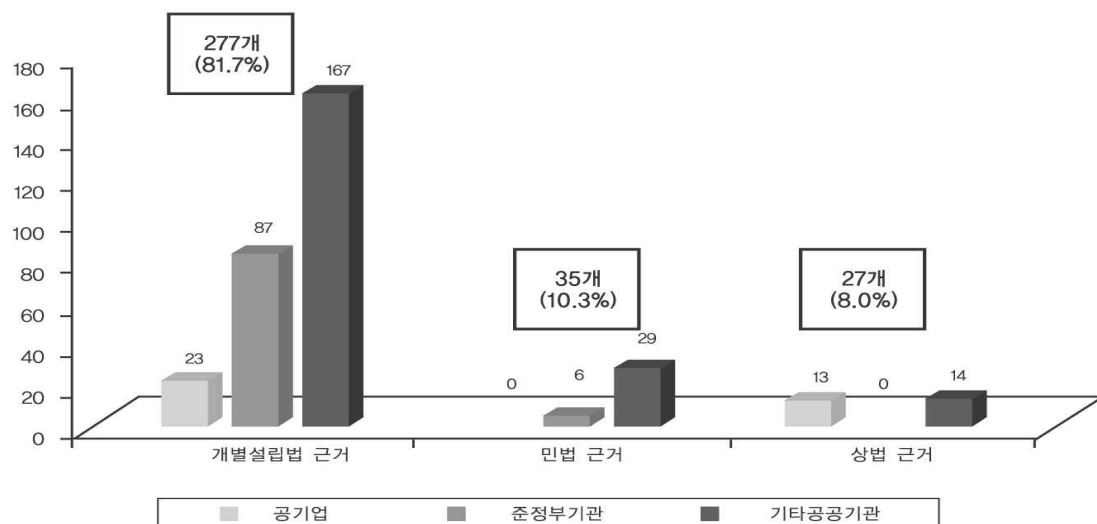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기관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⁸²⁾

□ 공공기관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그림 Ⅲ-1>과 같음.

- 339개 공공기관의 81.7%인 277개 기관이 개별설립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전체의 20% 미만임.
- 공기업은 개별 설립근거법령 또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 반면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없으며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준정부기관(87개, 93.5%)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 기타공공기관은 대부분의 기관(167개, 79.5%)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됨.

<그림 Ⅲ-1> 공공기관 설립형태 분포(설립근거법령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81) 기관별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82)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없이 상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만을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분류

-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277개(81.7%)로 법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법률상 명문화된 기관 설립근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통상적으로 특수법인(特許法人)으로 일컬으며⁸³⁾ 법령상 기관 설립근거는 특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정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문에 근거하는 경우로 구분됨.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이 전자에 해당함.
 - 다른 법률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으로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1조에 각각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대표적임.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창업진흥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관계법령에 기관 설립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기관임.
 -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2019. 4. 23.)을 통해 동법 제39조에 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 12. 11.)을 통해 동법 제8조에 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함.
 - 2019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7개) 중 4개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한국해양진흥공사⁸⁴⁾를 제외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3개 기관은 관계법령에 설립근거 조항을 둔 기관임.⁸⁵⁾
-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은 35개 기관(10.3%, <표 III-4>)임.

83) 개별 법률에 설립근거는 있으나 법조문상 기관명이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예: 한국벤처투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8에 따라 '전담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해당 조문은 전담회사 설립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별 설립근거법령으로 보기 힘들)

84)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

85)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해외건설촉진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

- 공기업 중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6개 준정부기관과 27개 기타공공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임.
- 전체 공공기관 중 사단법인 형태는 2개 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인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가 이에 해당함.
- 2019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7개) 중 3개 기관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이 이에 해당함.

〈표 III-4〉 민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35개 기관)

구 분	기관명	
재단법인 (33개)	준정부기관 (6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 공공기관 (27개)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노사발전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학중앙연구원, <u>국가생명윤리정책원</u> , 재단법인 <u>한국공공조직은행</u> , <u>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u>
사단법인 (2개)	기타 공공기관 (2개)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주: 밑줄 친 기관(3개)은 2019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 공공기관 설립형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이나 민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27개 기관(8.0%, <표 III-5>)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은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간 부문의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준정부기관 중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없음.

-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은 13개 공기업과 14개 기타공공기관임.
 - 2018년 기타공공기관이었던 주식회사 에스알이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어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기업 수가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남.
 - 2019년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고 주식회사 에스알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 수가 17개에서 14개로 감소함.
- (주)강원랜드⁸⁶⁾, (주)한국건설관리공사⁸⁷⁾, 88관광개발(주)⁸⁸⁾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24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로 모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Ⅲ-5〉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27개 기관)

구 분	기관명
공기업 (13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주식회사 에스알, (주)강원랜드
기타공공기관 (14개)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주: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3개)은 이탤릭으로 처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른 설립형태 구분

- ☐ 공공기관의 설립형태는 설립재원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기관과 이외 기관으로 구분됨.
 - 자본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으로부터 납입 받은 자금으로 구성함.

86) (주)강원랜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株式이 36.3%(2018년 12월 기준)이나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로 구분하지 않음

87) (주)한국건설관리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므로 특정 기관의 자회사로 구분하지 않음

88) 88관광개발(주)는 국가보훈처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정부출자기관임

- 일부 기관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주식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함.
- 자본금 출처가 아닌 다른 재원조달 방식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민간 등의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을 구성하여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기관을 설립하는 경우⁸⁹⁾가 있음.
- 외부기관의 출처를 통해 설립된 공공기관(<표 III-6>)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개 기관임.
 - 64개 기관 중 공기업은 33개, 준정부기관은 7개, 기타공공기관은 24개 기관임.
 - 전체 공기업 36개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33개 공기업은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2019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관임.
 - 64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설립근거법령 또는 기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있음.⁹⁰⁾
 - 기관은 설립근거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만큼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출자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
 - 주식을 발행하는 46개 기관 중 상장기관은 8개 기관임.
 -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이상 공기업),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89)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기관 설립 시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함

90)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18개 공공기관의 출자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출자증권 또는 출자증서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음

〈표 III-6〉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64개 기관)

구 분	주식 발행 기관(46개)	출자증권(증서) 교부 기관(18개)
공기업 (33개)	~~(주)강원랜드~~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전KDN(주), ~~한전KPS(주)~~ (22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개)
준정부기관 (7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개)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
기타공공기관 (24개)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22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개)

주: 1. 밑줄 친 기관은 2019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2. 상장 공공기관(8개)은 이탤릭으로 표시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출자 주체는 정부, 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이외 민간 등 기타로 구분할 수 있음(<표 III-7>).

○ 정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은 14개 기관임.

-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준정부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기타공공기관 중 88관광개발(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 4개 기관이 이에 해당함.
- 전체 지분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지분이 30% 이상인 기관은 34개 기관으로 이 중 26개 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에 해당함.
 -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보유지분이 30~50% 미만이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자회사로 분류함.
 - 공공기관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가 아닌 기관은 (주)강원랜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이상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이상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 등 8개 기관임.
- 한국예탁결제원은 2015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임.

〈표 Ⅲ-7〉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 현황

(단위: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	36.3	9.5	54.2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7.3	12.7	-	-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	-	-	-
인천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80.7	19.3	-	-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6.1	20.5	7.9	45.5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	-	-	-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장형 공기업	99.9	0.1	-	-
한국남동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국남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국동서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국서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국석유공사	시장형 공기업	100.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8.2	40.1	-	41.7
한국중부발전(주)	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34.6	30.1	10.4	25.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100.0	-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준시장형 공기업	-	51.0	-	49.0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	-	-	-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71.2	28.8	-	-
울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7.3	12.7	-	-
주식회사에스알	준시장형 공기업	-	1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8.2	-	-	31.8
한국감정원	준시장형 공기업	49.4	30.6	-	20.0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6.3	13.7	-	0.0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	-	-	-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92.8	7.1	0.1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	67.8	-	32.2
한국조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	-	-	-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0.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5.5	14.5	-	-
한전KDN	준시장형 공기업	-	100.0	-	-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	61.5	-	38.5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6.8	34.0	-	9.2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66.4	-	-	33.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	-	-	-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5.2	44.5	-	0.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	-	-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00.0	-	-	-
한국전력거래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100.0	-	-
(주)공영홈쇼핑	기타공공기관	-	50.0	-	50.0
(주)위터웨이플러스	기타공공기관	-	100.0	-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	100.0	-	-
88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100.0	-	-	-
새만금개발공사	기타공공기관	100.0	-	-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	12.2	-	87.8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	100.0	-	-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공공기관	-	100.0	-	-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50.9	11.0	-	38.1
코레일관광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60.8	-	39.2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	99.0	-	1.0
코레일로지스(주)	기타공공기관	-	97.3	-	2.7
코레일유통(주)	기타공공기관	-	100.0	-	-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출자 주체별 보유지분율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타
코레일테크(주)	기타공공기관	-	98.0	-	2.0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0	-	-
한국벤처투자	기타공공기관	-	100.0	-	-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100.0	-	-	-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66.3	23.9	-	9.9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	-	-	100.0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	100.0	-	-
한국투자공사	기타공공기관	100.0	-	-	-
한국해양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52.2	9.2	-	38.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기타공공기관	-	84.1	-	15.9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기타공공기관	-	100.0	-	-

주: 출자 주체는 중앙정부(정부), 공공기관(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기타(민간, 우리사주, 외국인투자자 등 포함)로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을 설립근거법령 기준으로 구분해보면(<표 III-8>),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27개)과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37개)으로 구분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은 7개 기관으로 모두 개별 설립근거법령이 있는 기관임.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기업(33개) 중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은 20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⁹¹⁾인 공기업은 13개 기관으로 이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에 해당함.
-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24개) 중 10개 기관이 개별 설립근거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타공공기관은 14개 기관으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88관광개발(주)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회사에 해당함.

91) 상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주식을 발행하는 기관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분류함

〈표 Ⅲ-8〉 출자 방식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구분(설립근거법령 기준)

구 분	공기업 (33개)	준정부기관 (7개)	기타공공기관 (24개)
개별 설립 법령 근거 (37개)	(주식 발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	(주식 발행) 한국관광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	(주식 발행) 새만금개발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8)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1)	(출자증권·증서 교부) 대한무역투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5)	(출자증권·증서 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상법 근거 (27개)	(주식 발행) (주)강원랜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13)	-	(주식 발행)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주),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14)

주: 밑줄 친 기관(3개)은 2019년 신규 지정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 정관을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

- 2019년 1월 기준 339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자회사는 26개 기관이며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0개 기관임(<표 III-9>).
 - 공공기관 자회사란 공운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중 모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회사인 기관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였거나, 모기관의 소유지분이 50%미만이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임원임면권 등 실질지배력을 가진 공공기관을 의미함.
 - (주)강원랜드와 (주)한국건설관리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이 30~50% 사이이나 실질적 지배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관은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 2019년에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2018년 대비 공공기관 자회사는 28개에서 26개로, 자회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12개에서 10개로 감소함.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모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업무를 단순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회사⁹²⁾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실익이 크지 않아 지정 해제됨.
 - 자회사를 보유한 10개 기관의 공공기관 유형을 살펴보면, 5개 기관이 공기업 유형이고 준정부기관 유형이 3개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2개 기관임.
 - 5개 공기업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⁹³⁾
 - 공공기관인 자회사가 있는 10개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을 제외한 7개 기관은 공공기관인 자회사를 1개씩 보유하고 있음.
- 26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 유형임.
 -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기업은 12개이고 준정부기관은 1개 기관(한국전력거래소)임.
 - 공기업 유형에 속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중 9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이고 나머지 3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임.

92)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와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는 「항만공사법」 제42조(사업의 위탁등)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각각 부산항과 인천항 내 항만의 경비·보안 및 여객터미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93) 자회사를 보유한 에너지 분야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이며 SOC 분야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임

〈표 III-9〉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26개 기관)

모기업		공공기관 자회사인 기관(26개)	
기관명	유형	기관수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1개	▪ (시장형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 (기타공공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개	▪ (준시장형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6개	▪ (준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 (기타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위터웨이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개	▪ (기타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주)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 (준시장형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2개	▪ (기타공공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공공기관	1개	▪ (기타공공기관)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 1. 공공기관 자회사 중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국한하여 자료 작성

2. 주식회사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가 보유한 지분은 41%로 50% 미만이나 한국철도공사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자회사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3. 투자 및 출자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

- 2019년 1월 현재 339개 공공기관 중 19개 기관이 23개 부설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이었던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은 2019년 1월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으로 변경됨.
 - 정부는 2018년 8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1부처 1기관’ 원칙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에 산재한 연구관리 기능을 정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연구관리 기능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이었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변경함.⁹⁴⁾
 - 알리오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한 19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에 해당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 19개 공공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과학기술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각 1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임.
 - 한국과학기술원은 산하에 3개의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기관은 산하에 각 2개의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부설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알리오시스템에 부설기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음.
 - 공공기관 부설기관 현황⁹⁵⁾을 요약하면, <표 III-10>과 같음.

94) 한국연구재단은 종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사업·기능, 인력, 자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95)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정리

〈표 III-10〉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 현황(23개 기관)

부설기관명	주무부처	모기관인 공공기관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타공공기관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재료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식품연구원	기타공공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서울요양원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수산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조정실	국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공공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 일반현황」의 기관별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부설기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함.

- 부설기관을 설치한 19개 공공기관 중 16개 기관이 연구기관에 해당함.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개 기관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5개 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임.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임.
 -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5개 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임.⁹⁶⁾
- 연구기관이 아닌 기관은 3개 기관으로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고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분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부설기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본원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⁹⁷⁾

- 23개 부설기관 중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은 8개 기관임.
 - 나노종합기술원·한국과학영재학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원), 서울요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기관) 등이 이에 해당함.
- 부설기관(분원)의 설치에 대한 사항(예: 부설기관 부지·건물의 확보, 인력·예산 운영 등 사업추진계획 등)은 상급기관인 본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통상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관에서는 본원의 소재지 관련 조항이나 부설기관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을 통해 부설기관(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96)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4개 기관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도 해당

97) 부설기관의 설립근거는 <부록 2> 참고

- 공공기관의 부설기관(분원)은 독립된 법인 형태는 아니나 본원(또는 상급기관)과 분리되어 별도의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예산·회계 및 인력·조직(인사) 관리상 독립성을 보장받음.
- 부설기관은 일반적으로 본원 정관과 별도로 부설기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예컨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정관 제27조의3 제2항에서 분당병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설기관의 장과 임원은 본원 정관 및 직제 규정상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
 - 23개 공공기관 부설기관 중 부설기관의 장 및 임원이 본원의 임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1개 기관 뿐임.⁹⁸⁾

마.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및 지방이전 현황⁹⁹⁾

1) 공공기관 지역별 분포 현황

- 2019년 9월 현재 339개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포(<표 III-11>)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 117개(34.5%) 공공기관이 소재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율을 보임.
- 공공기관 분포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34.5%), 대전(10.3%), 경기(7.7%), 부산(6.2%), 세종(5.9%) 순이며 5개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중 64.6%를 차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광주,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다른 유형에 비해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19.4%)이 낮아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편중 현상이 다소 해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98)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5조(임원) 제1항 제3호에서 부설기관 소속 대표 3인(부설기관장 포함)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임원이 됨을 규정하고 있음

99)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기타공공기관은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에 소재한 기관이 전체의 50%를 차지함.
- 준정부기관은 수도권 지역 소재 기관 비중이 33.3%임.

〈표 Ⅲ-11〉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2019. 9월 기준)

(단위: 개,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17 (34.5)	21 (6.2)	15 (4.4)	6 (1.8)	4 (1.2)	35 (10.3)	10 (2.9)	20 (5.9)	26 (7.7)	13 (3.8)	12 (3.5)	7 (2.1)	10 (2.9)	14 (4.1)	11 (3.2)	13 (3.8)	5 (1.5)
· 공기업 (36개)	5 (13.9)	3 (8.3)	2 (5.6)	2 (5.6)	0 (0.0)	4 (11.1)	3 (8.3)	0 (0.0)	2 (5.6)	3 (8.3)	0 (0.0)	2 (5.6)	0 (0.0)	4 (11.1)	3 (8.3)	2 (5.6)	1 (2.8)
· 준정부기관 (93개)	24 (25.8)	6 (6.5)	6 (6.5)	1 (1.1)	1 (1.1)	7 (7.5)	4 (4.3)	3 (3.2)	7 (7.5)	7 (7.5)	7 (7.5)	2 (2.2)	4 (4.3)	8 (8.6)	2 (2.2)	3 (3.2)	1 (1.1)
· 기타공공기관 (210개)	88 (41.9)	12 (5.7)	7 (3.3)	3 (1.4)	3 (1.4)	24 (11.4)	3 (1.4)	17 (8.1)	17 (8.1)	3 (1.4)	5 (2.4)	3 (1.4)	6 (2.9)	2 (1.0)	6 (2.9)	8 (3.8)	3 (1.4)

주: 1. ()는 각 지역별 공공기관 비중

2. 공공기관별 상세 소재지(본사 기준)는 <부록 2>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1월 신규로 지정된 7개 기관은 서울, 부산, 경기 및 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기관이 수도권(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음.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에 신설 출범한 기관으로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산 혁신도시에 위치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식품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북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임.
 -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 신설 출범한 기관으로 새만금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함.
 - 2019년 신규 지정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표 Ⅲ-12>와 같음.

〈표 III-12〉 2019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소재지

구 분	기관수	기관명
서 울	3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부 산	1개	한국해양진흥공사
경 기	1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 북	2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새만금개발공사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을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지역별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함.

- 부산 혁신도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 금융산업 분야, 영화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대구 혁신도시는 산업진흥 분야, 교육·학술진흥 분야, 가스산업 분야의 공공기관이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됨.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산업 유관 공공기관과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복지 및 산업안전 등 분야의 공공기관은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함.
- 강원 혁신도시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광업진흥 및 관광 분야 공공기관과 건강생명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기로 함.
- 충북 혁신도시는 정보통신 분야 공공기관과 인력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유관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전북 혁신도시는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과 국민연금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됨.
- 경북 혁신도시로는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기로 함.

- 경남 혁신도시로는 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진흥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산업기술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키로 함.
 -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등이 이전대상으로 선정됨.
 - 세종특별시로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됨.
- 정부부처(소속조직 포함)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이전대상 기관은 153개 기관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108개 기관임.¹⁰⁰⁾

〈표 Ⅲ-13〉 지역별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

(단위: 개)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대상 공공기관수	108	18	47	43
· 부산	11	한국남동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대구	9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 광주/전남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0) 당초 이전대상 기관(정부 소속기관 포함)은 154개로 이 중 공공기관은 109개였으나 이 중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9년 공공기관 기준 108개 기관이 이전대상임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울산	7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 강원	10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 충북	10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충남	2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	-
· 전북	6	-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경북	8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경남	10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¹⁰¹⁾ 한국시설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주)
· 제주	3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구 분	합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세종	19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 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토연구원

주: 1.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유형이 변경된 3개 기관(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변경된 유형을 기준으로 자료 작성
 2. 2018. 10월~2019. 9월 사이 지방 이전을 완료한 기관(2개)은 이탤릭 처리
 3. 2019. 9월 현재 지방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기관(1개)은 밑줄 처리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9월 현재 지방이전 대상인 108개 공공기관 중 107개 기관(99.1%)이 지방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¹⁰²⁾
- 2018년 10월에서 2019년 9월 사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광주/전남)과 한국에너지공단(울산)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준정부기관)은 당초에는 2017년 말까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1월 이전을 완료함.
 - 한국에너지공단(준정부기관)은 2019년 2월에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준정부기관도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이전을 완료함.
 - 2019년 9월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모든 이전 대상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기타공공기관)은 2019년 12월 이전 예정임.

101) 2016년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신설 출범함

102)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은 <부록 3> 참고

〈표 III-14〉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단위: 개, %)

구 분	합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 대상	이전 완료
이전대상 공공기관	108	107 (99.1)	18	18 (100)	47	47 (100)	43	42 (97.7)
· 부산	11	11 (100)	2	2 (100)	3	3 (100)	6	6 (100)
· 대구	9	9 (100)	2	2 (100)	6	6 (100)	1	1 (100)
· 광주/전남	13	13 (100)	3	3 (100)	8	8 (100)	2	2 (100)
· 울산	7	7 (100)	2	2 (100)	4	4 (100)	1	1 (100)
· 세종	19	19 (100)	-	-	3	3 (100)	16	16 (100)
· 강원	10	10 (100)	2	2 (100)	7	7 (100)	1	1 (100)
· 충북	10	9 (90.0)	-	-	6	6 (100)	4	3 (75.0)
· 충남	2	2 (100)	2	2 (100)	-	-	-	-
· 전북	6	6 (100)	-	-	4	4 (100)	2	2 (100)
· 경북	8	8 (100)	3	3 (100)	2	2 (100)	3	3 (100)
· 경남	10	10 (100)	2	2 (100)	4	4 (100)	4	4 (100)
· 제주	3	3 (100)	-	-	1	1 (100)	2	2 (100)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http://innocity.molit.go.kr/v2/>) 및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3)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미매각 종전 부동산 현황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¹⁰³⁾ 중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은 10건으로 <표 III-15>와 같음.

○ 2018년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미매각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미매각 종전 부동산은 11건에서 10건으로 감소함.

103) 종전 부동산이란 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함

- 매매각 부동산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공기업 2개, 준정부기관 5개 및 기타공공기관 3개 기관임.
- 매매각 부동산 10건 중 서울 소재 부동산이 5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이 5건임.
- 국토교통부는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등 홍보와 더불어 매매각 부동산의 매각 장애요인 개선, 매각방식 다양화, 부동산별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¹⁰⁴⁾

〈표 Ⅲ-15〉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매각 현황(2019. 7. 2. 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소재지	이전지	면적(㎡)		매각 예정액
				부지	건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안양	광주/ 전남	376	1,413	48
한국광해관리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종로	강원	3,464	20,856	1,650
한국교육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서초	충북	60,037	12,353	68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전남	4,063	13,562	703
한국산업단지공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구로	대구	7,396	27,494	975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고양	부산	6,928	22,976	517
한국인터넷진흥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서초	광주/ 전남	243	3,692	125
한국전력기술(주)	공기업 (준시장형)	용인	경북	8,924	45,180	602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성남	경남	37,998	72,011	4,25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안산	부산	92,938	30,169	1,090

주: 매각예정액은 매각 대상인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균)평가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주인 찾는다」, 보도자료, 2019. 7. 2.

104)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주인 찾는다」, 보도자료, 2019. 7. 2.

4)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 활동

-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발전 기여 사업의 참여를 유도해 옴.¹⁰⁵⁾
 - 지역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건립,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추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매년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함.
 - 또한 2017년 12월말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관할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이전 공공기관은 동법 제29조의3에 따라 매년 지역산업 및 인재 육성, 지역인재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 공헌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로 2018년 목표치인 18%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¹⁰⁶⁾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108개)¹⁰⁷⁾ 중 59개 기관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고용 대상기관으로 2018년 1,423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함.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49개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대상이 없는 사유를 살펴보면,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36개 기관은 5명 이하 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등이 주된 사유임.

105)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이전공공기관 함께 뚝다」, 보도자료, 2019. 4. 5.

106) 국토교통부, 「'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9. 7. 2.

10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2019. 7. 2.)」)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109개로 발표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여기서는 공운법상 공공기관인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을 재구성함

-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표 III-16>)을 살펴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함.
- 반면에, 충남(21.9%), 충북(21.2%), 광주·전남(21.1%), 경남(20.2%), 전북(19.5%), 제주(19.4%) 등 6개 지역은 평균을 하회함.
- 세종은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연구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무 채용 대상이 없음.

〈표 III-16〉 2018년 이전 지역별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적

(단위: 명, %)

구분	합계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대상인원	6,076	511	511.75	1,698	491.5	0	497	151	146	610	613	816	31
채용인원	1,423	164	141.5	359	116.8	0	144.5	32	32	119	144	164.5	6
채용률	23.4	32.1	27.7	21.1	23.8	-	29.1	21.2	21.9	19.5	23.5	20.2	19.4

주: 지역인재의무화 채용인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예외를 제외한 인원 중 최종학력이 이전 지역 고등·대학교인 신규채용 인원임

자료: 국토교통부, 「'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9. 7. 2.

□ 혁신도시법 제29조의3에 근거하여 수립된 이전 공공기관별 2019년도 지역발전계획은 지역 산업 및 지역 인재 육성, 주민지원을 위한 지역 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분야에서의 지역발전 기여 사업을 담고 있으며,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사업을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¹⁰⁸⁾

- 부산 혁신도시는 금융·해양 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지역발전 기여사업이 시행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부산 청년일자리 해커톤 대회 수상 팀에 공사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부산증권박물관 개관을 추진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대와 해양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료전지 설치 및 열효율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역사물인터넷(IoT)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구축 등을 통해 융합의료 사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참여함.

108)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이전공공기관 함께 뚝다」, 보도자료, 2019. 4. 5.

-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력 분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스마트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됨.
 -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70개의 에너지밸리 연관기업 유치와 함께 에너지 새싹기업 발굴·육성에 나서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력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학점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함.
- 울산 혁신도시는 에너지 분야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국동서발전(주)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에너지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석유공사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나서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단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개방하기로 함.
- 강원 혁신도시는 관광지로서의 이점을 이용하여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이야깃거리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융복합 관광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치악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함.
- 충북 혁신도시는 교육 분야 공공기관이 다수 이전해 있는 지역으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 내 서전고등학교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영에 대해 자문에 나서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아동을 초청하여 가스안전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함.
- 전북 혁신도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지역 대학과 식품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학연협동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북 혁신도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주민 문화·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미사용 상태에 있던 수영장 기능을 복원하여 개방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역 중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증 교육 및 학교버스 졸음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함.
- 경남 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의 문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혁신도시와 구도심간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에 착수하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연관기업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세라믹 유관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 보육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함.
- 제주 혁신도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45개국 외교관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바.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¹⁰⁹⁾

1) 공공기관 관리 기금 개요

- 정부는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국한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기금이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을 의미함.
 -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음.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용형태에 따라 사회보험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 계정성 기금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¹¹⁰⁾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거나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직접 설치하여 운용하기도 함.
 - 정부가 직접 설치한 기금 중 일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등 정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도 함.
 - 예를 들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하고 동법 제102조 제6항¹¹¹⁾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2019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동법 <별표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부록 4>와 같음.
 -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이 신설된 이래 2019년 현재 까지 신규로 설치된 기금은 없음.
 - 67개 기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6개, 금융성 기금이 8개, 사업성 기금이 48개, 계정성 기금이 5개임.
 - 67개 기금의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속 조직이나 소관 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23개로 67개 기금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109)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 참고

110) 기획재정부, 『2019 나라살림 개요』, 2019. 1. p. 283

111)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이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임.
-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¹¹²⁾으로 농협중앙회가 기금의 주체임.
-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기금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8개¹¹³⁾이며 위탁관리기관은 한국은행, 농협경제지주¹¹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¹¹⁵⁾ 등 4개 기관이 있음.

□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운용하거나 정부가 설치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금은 총 35개(<표 III-17>)로 전체 기금(67개) 중 52.2%를 차지함.¹¹⁶⁾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사회보험성 기금은 3개, 금융성 기금은 6개, 사업성 기금은 26개임.¹¹⁷⁾
 - 금융성 기금(6개)은 모두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음.
- 관리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용하는 기금은 16개이고,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하는 기금은 19개¹¹⁸⁾임.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은 16개 정부 부처 소관으로 부처별로는 1~5개 이내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표 III-18>).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기금 수가 5개로 정부 부처 중 설치 기금 수가 가장 많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각 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11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제1항에 근거

11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이상 한국은행 위탁관리), 농어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이상 농협경제지주 위탁관리), 수산발전기금(수협중앙회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손해보험협회 위탁관리)

114) 「농협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기관임

115)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에 근거하여 손해보험회사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손해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설립된 민간기관임

116)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기금 현황 및 기금별 개요는 <부록 5>과 <부록 6> 참고

117)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 중 계정성 기금은 없음

118)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 중이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기금을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이 중 14개 기관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함.
- 이외 공기업이 2개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이 7개 기관임.
-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6개 기관은 관리 기금이 2개이고 나머지 24개 기관¹¹⁹⁾은 각 1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음.

〈표 Ⅲ-17〉 공공기관 관리 기금 현황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관리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기금	위탁관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무역보험기금	직접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제교류기금	직접관리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타공공기관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관리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9)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과 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원자력기금 중 연구개발계정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 관리하고, 안전규제계정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 관리함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유형
사업성 기금 (26개)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관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기타공공기관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관리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기타공공기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통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학진흥기금	직접관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위탁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언론진흥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영화발전기금	직접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타공공기관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 유통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관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관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주택도시기금	위탁관리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관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관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되며 이 중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18〉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분포(2019년 기준)

주무부처	소관 기금	
	개수	기금명
문화체육관광부	5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산업통상자원부	4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관리),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기획재정부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금융위원회	3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교육부	2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외교부	2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고용노동부	1	근로복지진흥기금
국토교통부	1	주택도시기금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기금
통일부	1	남북협력기금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발전기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기금
16개 부처	35개 기금	

주: 원자력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16개 부처의 소관 기금 수는 35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III-19>와 같음.

<표 III-19>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7 (실적)	'18 (실적)	'19 (계획)	'17말 (누계)	'18말 (누계)	'19계획 (당년)	'19계획 (누계)
2019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6,294,276	5,770,314	6,331,783	16,255,843	17,168,801	1,040,202	18,209,00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2,830,291	2,966,412	2,927,466	9,242,632	9,734,924	546,135	10,281,059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206,308	218,045	212,478	93,274	103,523	△2,260	101,263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1,221,290	1,350,128	1,191,652	5,271,788	5,655,446	410,809	6,066,25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12,740	90,137	121,104	184,089	185,077	16,352	201,429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1,540,338	1,658,310	1,525,234	5,549,151	5,944,046	424,901	6,368,947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29,354	30,670	25,924	19,722	16,761	△825	15,936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29,247	31,900	39,799	12,292	14,766	△191	14,575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6,048	7,027	5,814	7,416	7,754	405	8,159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3,128	81,187	69,970	49,794	45,914	1,747	47,661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69,809	58,989	36,451	△15,643	△33,632	14,589	△19,043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48,719	40,244	66,483	64,860	72,705	8,257	80,962
	금융성 기금 소계			266,305	250,017	244,441	138,441	124,268	23,982	148,250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1,466	1,751	1,652	932	298	83	381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20,035	19,796	23,493	16,127	19,812	5,350	25,162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2,689	13,619	15,111	10,479	14,568	△1,241	13,327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323	2,079	1,763	1,828	1,925	43	1,968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7 (실적)	'18 (실적)	'19 (계획)	'17말 (누계)	'18말 (누계)	'19계획 (당년)	'19계획 (누계)
사업성 기금 (26개)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	한국국제협력단	927	827	859	458	449	62	511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공단	2,873	3,083	3,593	3,650	3,842	130	3,972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은행	11,967	6,411	14,903	31,460	29,606	1,327	30,9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113	23,852	24,025	39,743	39,279	△810	38,46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965	1,782	4,095	1,425	1,676	941	2,617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공사	33,495	38,680	31,375	80,080	86,031	4,645	90,676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은행	8,584	9,224	13,674	50,027	54,845	9,812	64,657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321	3,152	4,685	546	920	924	1,84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5,381	41,787	50,973	62,060	67,745	6,184	73,929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507	11,874	12,579	2,329	5,541	△820	4,721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진흥재단	4,123	5,319	5,294	13,843	15,291	1,907	17,198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59	1,749	1,505	356	827	△207	62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9,133	29,878	29,019	114	2,003	-	2,003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진흥재단	265	251	270	48	36	27	63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위원회	3,116	2,933	2,650	3,499	3,539	△171	3,368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335	3,887	4,274	649	1,256	447	1,70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620	6,608	7,117	11,536	12,368	624	12,992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		기금 운용			기금 조성			
		관리 방식	공공기관명	'17 (실적)	'18 (실적)	'19 (계획)	'17말 (누계)	'18말 (누계)	'19계획 (당년)	'19계획 (누계)
사업성 기금 (26개)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35,879	33,275	38,168	45,164	50,964	8,251	59,215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7,899	12,128	13,066	3,528	7,084	△1,949	5,135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665,294	694,532	773,938	3,000,262	3,082,033	66,463	3,148,496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98,978	89,510	79,623	174,883	164,653	△4,774	159,879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01	98	87	14	19	4	23
	사업성 기금 소계			1,023,648	1,058,085	1,157,791	3,555,040	3,666,610	97,252	3,763,862

주: 1. 기금운용은 기금수입 중 수납순액을 의미

2. 기금조성은 총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순조성액을 의미

3.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최근 3년간 운용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2>와 같음.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금 전체(67개 기금)와 상이한 추이를 보임.

- 전체 기금은 2018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9년에는 2017년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운용 규모가 증가함.

- 반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은 2018년까지 운용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함.

○ 기금 유형별 운용 규모 추이는 유형별로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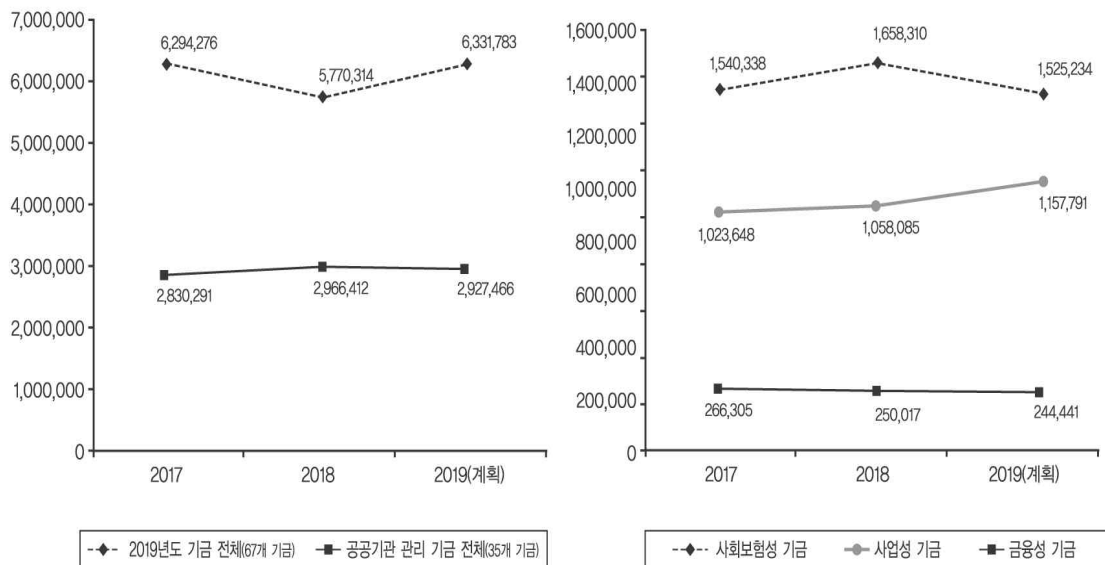
- 사회보험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영향으로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11.8조원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13.3조원이 감소하여 2017년 운용 규모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금융성 기금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감소하는 모습이나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감소세가 2019년에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임.

- 사업성 기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이 위탁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위탁 관리하는 농어업재해재 보험기금은 2018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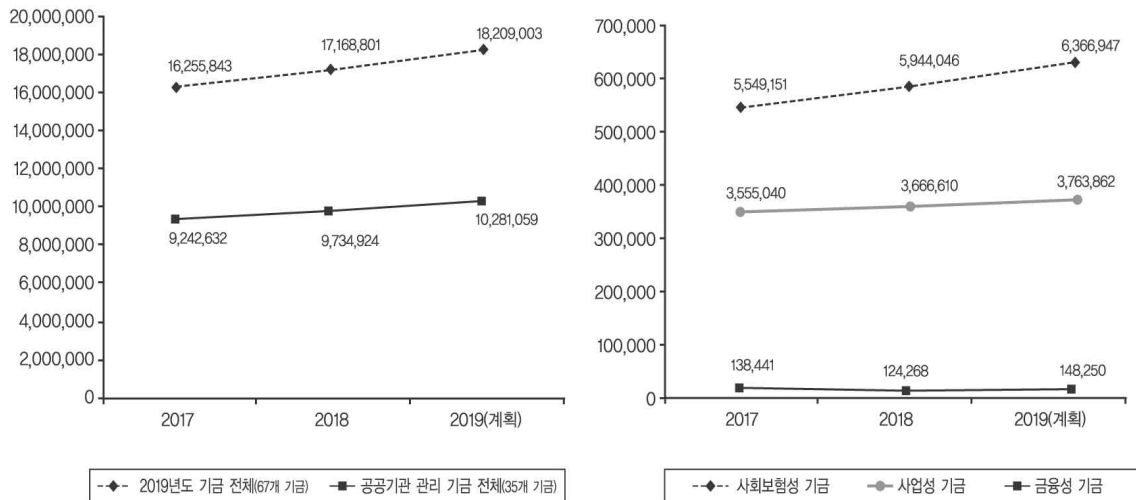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음.

- 기금 조성 규모는 전체 기금과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금 유형별 조성 규모 추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조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과 2019년 증가세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금융성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8년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 다시 2017년 조성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규모가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조성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전체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 회계연도별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표 III-20>)과 같음.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67개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에 증가(45.0% → 51.4%)하였으나 2019년 계획상 규모는 2017년 비중 수준으로 하락(51.4% → 46.2%)하는 모습임.
- 전체 기금 조성 규모에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기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운용 및 조성에 있어 기금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최근 3개년 모두 50% 이상을 차지하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성 기금은 40% 내외를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은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 하여 3개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 대비 기금 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 운영 규모와 기금 조성 규모의 비중 추이가 다른 모습을 보임.
 - 기금 운용 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 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은 2018년 소폭 상승(1.5%p)했다가 2019년에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3.8%p)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업성 기금은 2018년 비중이

소폭 감소($\Delta 0.5\%p$)했다가 2019년에 크게 증가($3.8\%p$)하는 모습임.

- 기금 조성 규모 측면에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기금 유형별 비중 추이를 살펴 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고 사업성 기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인 반면 금융성 기금은 2018년 감소했다 2019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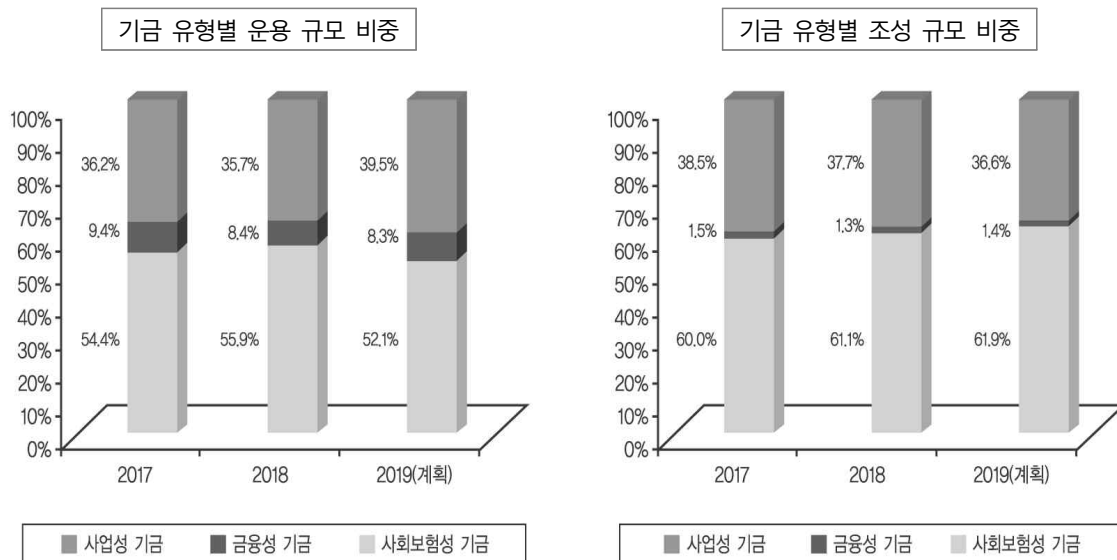
〈표 Ⅲ-20〉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기금 운용 및 조성 규모)

(단위: %)

구 분	기금 운용			기금 조성			
	'17 (실적)	'18 (실적)	'19 (계획)	'17말 (누계)	'18말 (누계)	'19계획 (당년)	'19계획 (누계)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45.0	51.4	46.2	56.9	56.7	52.5	56.5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54.4	55.9	52.1	60.0	61.1	77.8	61.9
▪ 금융성 기금	9.4	8.4	8.3	1.5	1.3	4.4	1.4
▪ 사업성 기금	36.2	35.7	39.5	38.5	37.7	17.8	36.6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운용 및 조성 규모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3)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규모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5개 기금의 자산규모와 2018년 결산 기준 자산 구성항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21>과 같음.

<표 Ⅲ-21>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7말 (실적)	'18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2019년도 기금 전체(67개 기금)				17,381,480	18,059,614	11,054,266	6,192,468	151,572	661,29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전체(35개 기금)				9,173,082	9,493,222	8,899,345	185,971	96,072	311,819
사회 보험성 기금 (3개)	공무원연금기금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	177,557	182,138	88,267	100	43,709	50,062
	국민연금기금	위탁	국민연금 공단	6,218,444	6,389,118	6,383,028	-	-	6,09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직접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192,103	192,565	159,403	-	2,866	30,296
	사회보험성 기금 소계			6,588,104	6,763,821	6,630,698	100	46,575	86,448
금융성 기금 (6개)	기술보증기금	직접	기술보증 기금	31,458	29,422	22,062	1,950	1,385	4,025
	무역보험기금	직접	한국무역 보험공사	41,647	43,264	34,722	-	1,280	7,262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7,823	8,243	8,158	-	-	85
	신용보증기금	직접	신용보증 기금	81,311	76,792	62,290	-	2,781	11,721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직접	예금보험 공사	63,224	41,485	3,716	-	-	37,769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직접	한국주택 금융공사	68,008	78,248	65,227	5,261	-	7,760
	금융성 기금 소계			293,471	277,454	196,175	7,211	5,446	68,622
사업성 기금 (26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위탁	한국연구 재단	650	284	284	-	-	-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직접	국민체육 진흥공단	24,702	30,793	7,234	4,500	3,436	15,623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	한국자산 관리공사	10,497	14,585	14,585	-	-	-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7말 (실적)	'18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사업성 기금 (26개)	국제교류기금	직접	한국국제 교류재단	1,883	1,997	1,178	700	44	75
	국제질병퇴치기금	위탁	한국국제 협력단	458	464	449	-	-	-
	근로복지진흥기금	직접	근로복지 공단	4,775	4,843	3,582	500	522	239
	남북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31,460	29,606	28,118	-	561	927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40,161	39,704	7,717	-	3,099	28,888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위탁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425	1,676	1,676	-	-	-
	농지관리기금	위탁	한국농어촌 공사	117,061	130,655	79,034	14,616	28,467	8,538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	한국수출입 은행	50,051	54,892	233	-	-	54,659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접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5,181	5,682	1,155	-	4,511	1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위탁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62,060	67,745	24,789	15,000	-	27,956
	방송통신발전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4,866	8,406	6,483	1,000	386	537
	사학진흥기금	직접	한국사학 진흥재단	13,915	15,363	15,183	-	176	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위탁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535	1,039	932	-	-	107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위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50,654	65,101	62,775	-	269	2,057
	언론진흥기금	직접	한국언론 진흥재단	111	96	32	-	45	19
	영화발전기금	직접	영화진흥 위원회	6,485	5,099	3,756	1,140	75	128
	원자력기금 (전체 계정)	위탁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649	1,256	1,256	-	-	-

구 분	기금명	공공기관 관리방식		'17말 (실적)	'18말(실적)				
		방식	공공기관명		합계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사업성 기금 (26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위탁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1,544	11,802	654	-	-	11,148
	전력산업기반기금	위탁	한국전력 공사	45,164	50,964	7,367	41,300	-	2,297
	정보통신진흥기금	위탁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3,776	7,505	7,036	-	-	469
	주택도시기금	위탁	주택도시 보증공사	1,633,460	1,721,227	1,619,435	99,904	-	1,888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직접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69,971	181,145	177,511	-	2,460	1,174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	한국언론 진흥재단	13	18	18	-	-	-
	사업성 기금 소계			2,291,507	2,451,947	2,072,472	178,660	44,051	156,749

- 주: 1.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용자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
 2. 정부내부거래는 타회계 및 타기금 위탁금을 합산한 금액
 3. 기타 자산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
 4. 원자력기금은 한국연구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을 합산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 2017년 대비 2018년 말 기금 자산 규모는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III-5>).

○ 67개 전체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3.9%이고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3.5%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전체 기금 자산의 증가율은 7.5%이고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의 증가율은 10.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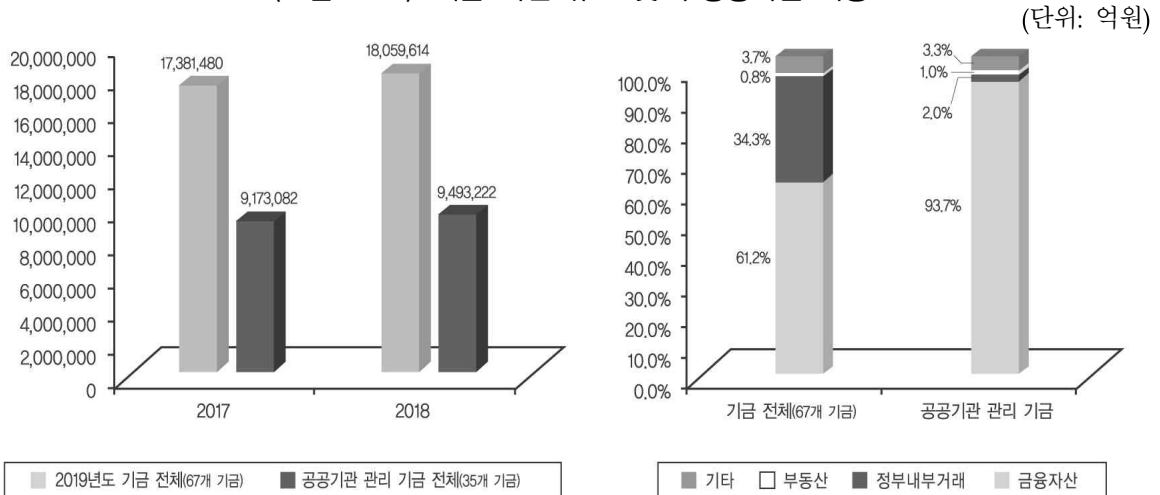
○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금융성 기금은 감소함.

○ 전체 기금과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구성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유사하나 구성항목별로 비중은 큰 차이를 보임.¹²⁰⁾

120) 금융자산은 한은 예치, 예금은행 예치, 비통화 금융기관(채권, 주식 이외), 채권, 주식, 기타 민간용자 등으로 구성됨

- 67개 기금의 자산 중 금융자산이 61.2%, 정부내부거래가 34.3%, 부동산이 0.8%, 기타 항목이 3.7%를 차지함.¹²¹⁾
- 반면, 공공기관 관리 기금은 금융자산이 9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3.3%, 나머지 정부내부거래와 부동산은 각각 2.0%, 1.0%를 차지함.

〈그림 III-5〉 기금 자산 규모 및 구성항목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 2017년 대비 2018년말 공공기관 관리 기금 자산 규모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III-22>).

- 67개 전체 기금의 자산 중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2.8%에서 2018년 52.6%로 감소함.
- 2017년과 2018년 자산 중 각 기금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성 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성 기금이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그림 III-6>).
- 사업성 기금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금융성 기금과 사회보험성 기금은 전년대비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관리 기금을 기금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산 구성내역을 비교해보면, 항목별 비중 분포상 차이를 보임(<표 III-22>).

- 사회보험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98.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1.3%, 부동산이 0.7%를 차지함.

121) 정부내부거래는 타 회계나 타 기금 예탁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 항목은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및 부동산을 제외한 무형자산 등을 합산한 금액임

- 사회보험성 기금은 정부 내부거래가 0%임.
- 금융성 기금은 금융자산이 70.7%를 차지하고 기타 항목이 24.7%를 차지함.
 - 다른 기금 유형은 기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나 금융성 기금은 24.7%로 다소 높은 수준임.
 - 이외 정부내부거래가 2.6%, 부동산이 2.0%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도 금융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84.5%를 차지함.
 - 사업성 기금은 다른 기금 유형에 비해 타 회계나 타 기금의 예탁 등 정부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7.3%)이 다소 높음.
 - 이외 기타 항목이 6.4%, 부동산이 1.8%를 차지함.

〈표 Ⅲ-22〉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자산 규모 비중

(단위: %)

구 분	자산 규모 비중		'18말(실적) 자산 구성항목별 비중			
	'17말 (실적)	'18말 (실적)	금융 자산	정부 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						
▪ 35개 공공기관 관리기금	52.8	52.6	80.5	3.0	63.4	47.2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71.8	71.2	74.5	0.1	48.5	27.7
▪ 금융성 기금	3.2	2.9	2.2	3.9	5.7	22.0
▪ 사업성 기금	25.0	25.8	23.3	96.1	45.9	50.3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						
▪ 사회보험성 기금	-	-	98.0	0.0	0.7	1.3
▪ 금융성 기금	-	-	70.7	2.6	2.0	24.7
▪ 사업성 기금	-	-	84.5	7.3	1.8	6.4

주: 1. '전체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기금 비중'은 67개 기금 대비 35개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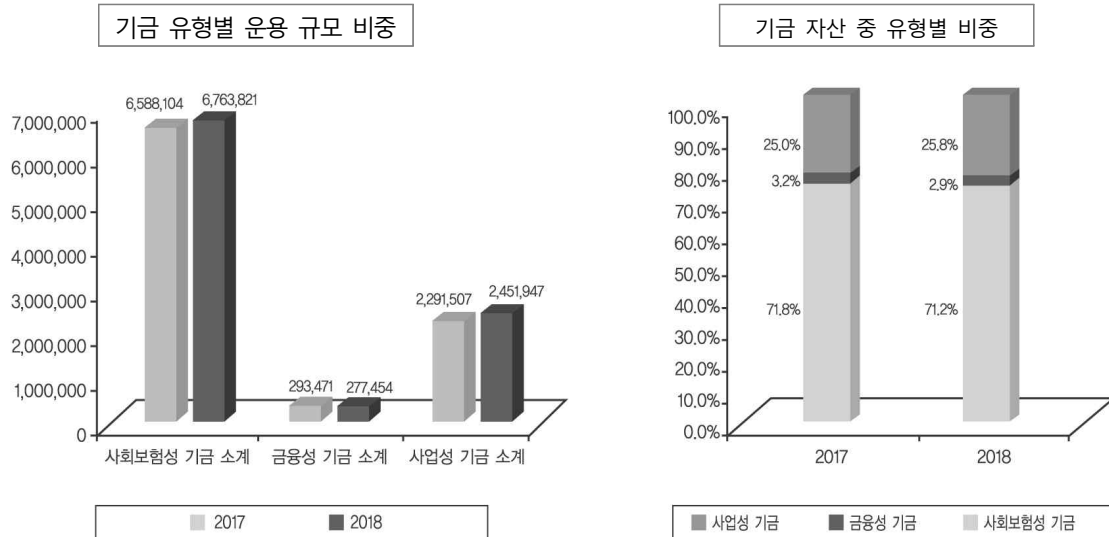
2. '공공기관 관리 기금 중 기금유형별 비중'은 당해연도 자산 규모에서 각 기금유형이 차지하는 비중(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도 자산 내역별 소계에서 각 기금 유형별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3. '공공기관 관리 기금 유형의 자산 내역별 비중'은 2018년 각 유형별 자산규모 중 금융자산, 정부내부거래, 부동산, 기타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6〉 공공기관 관리 기금의 유형별 자산 규모 비교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9 기금현황』, 2019. 3. 19.를 참고하여 작성

사. 상장 공공기관 현황¹²²⁾

- 공공기관 중에는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이 있으며, 그 중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상장된 공공기관은 8개 기관이 있음.
- 상장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공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가 정한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기업의 상장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경영성과 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나,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1조 제1항의 ‘공적법인 등과 지주회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함.
 -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공공법인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은 분산요건, 양도제한 요건만을 적용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상장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7개 기관이 공기업에 해당함.

122)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8) 참고

- 상장 공기업 7개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 주무부처별로 분류해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등 6개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이고 나머지 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개요는 <표 III-23>과 같음.

〈표 III-23〉 상장 공공기관 개요

(단위: 명, 백만원)

기관명	부처	유형	설립연도 (설립근거(법))	상장일	임직원 총계	총자산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2년 (한국전력공사법)	1989.08.10.	22,706	185,249,061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3년 (한국전력공사법)	1999.12.15.	4,121	39,689,691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85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2010.01.29.	2,030	5,657,998
(주)강원랜드	산업통상자원부	시장형 공기업	1998년 (상법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3.09.04.	3,726	4,231,241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75년 (상법 제317조)	2009.12.24.	2,360	771,480
한전KPS(주)	산업통상자원부	준시장형 공기업	1984년 (상법 제317조)	2007.12.24.	6,249	1,280,92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관광부	준시장형 공기업	2005년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9.11.19.	1,875	765,759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타 공공기관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	2003.12.24.	12,871	289,509,449

주: 임직원 총계(상임임원+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정원)와 총자산은 2018년 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및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7개 상장 공공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지분율이 40% 이상을 차지함.

○ (주)강원랜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유 지분이 전체의 36.27%를 차지함.

-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주)강원랜드의 전체 주식 중 36.27%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회사 성격을 지님.
-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9%로 다른 기관에 비해 정부 지분율이 높음.
- 이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등 4개 기관은 정부 지분 없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외국인·기타주주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음.
- 상장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기관의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한전KPS(주)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지분율이 각각 65.77%, 51.00%를 차지함.

〈표 III-24〉 상장 공공기관의 주식 소유 현황

(단위: %)

기관	정부	공공기관		기타	
한국전력공사	18.20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32.90 7.23	외국인 기타	27.07 14.60
한국가스공사	26.15	한국전력공사	20.47	지자체 우리사주조합 외국인 일반 주주 등	7.93 3.32 15.01 27.12
한국지역난방공사	34.55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9.55 10.53	서울시 우리사주조합 일반	10.36 3.72 21.29
(주)강원랜드	-	한국광해관리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자사주 지자체 기타	5.55 5.24 9.50 43.7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65.77 2.07	기타	32.16
한전KPS(주)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51.00 10.50	일반투자자 우리사주조합	38.27 0.2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한국관광공사	51.00	기타주주	49.00
중소기업은행	50.90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8.7 2.3	기타주주	38.1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 중 납입자본금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중소기업은행으로 납입자본금이 약 3조 2,897억원 규모이고, 납입자본금이 가장 작은 상장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약 76억원 규모임.
-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은 납입자본금이 3조원 이상임.
 - 반면에 납입자본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100억원 이하)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와 한전KPS(주)가 있음.

〈표 III-25〉 상장 공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주식의 총수

(단위: 백만원, 주)

기관	납입자본금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	발행한 주식
한국전력공사	3,209,820	1,200,000,000	641,964,077
한국가스공사	461,565	200,000,000	92,313,000
한국지역난방공사	57,894	40,000,000	11,578,744
(주)강원랜드	106,970	1,000,000,000	213,940,500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7,644	300,000,000	38,220,000
한전KPS(주)	9,000	300,000,000	45,000,000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0,928	120,000,000	61,855,670
중소기업은행	3,289,756	2,000,000,000	657,951,135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 배당과 관련하여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받음.
 - 한국가스공사, 한전KPS(주),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순이익 또한 증가함.
 -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부터 2년간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 흑자로 전환되어 현금배당을 실현함.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현금배당을 실현하지 못함.

- 2018년에 현금배당수익률이 상승한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전KPS(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임.
 - 중소기업은행은 현금배당수익률이 2015년부터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전KPS(주)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6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함.
 - 이와 반대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현금배당수익률이 2015년부터 3년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는 현금배당을 시행하지 못함.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현금배당수익률과 주당 순이익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7년에 비해 주당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주당순손실을 기록하였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전년대비 현금배당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주당순이익은 감소함.
 - 한국가스공사는 주당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8년에는 주당순이익이 5,766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정부출자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중소기업은행은 정부 배당금 규모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전년에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했던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정부 배당을 실현하였음.¹²³⁾
 - 중소기업은행의 정부배당금은 2018년 2,067억원에서 2019년 1,872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 배당을 실현하지 못함.
 -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과 2018년에는 정부배당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에는 328억원의 정부 배당을 실현함.

123)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여,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2019. 5. 21.)」 보도자료 참고

〈표 Ⅲ-26〉 상장 공공기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2016~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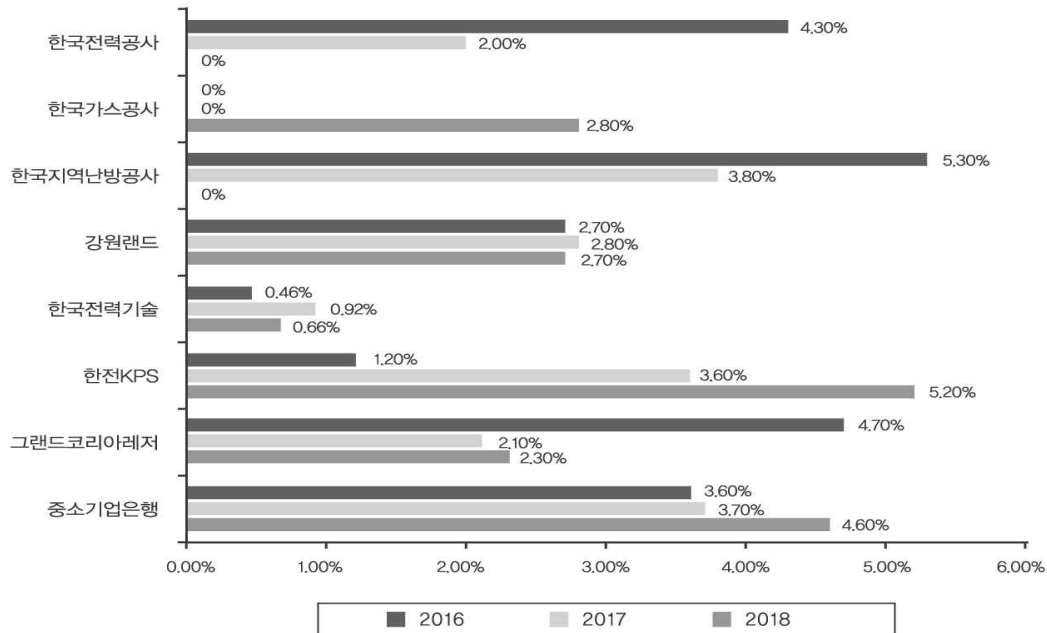
기관	구분	'16	'17	'18
한국전력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048,581	1,298,719	△1,314,567
	주당순이익(원)	10,980	2,023	2,04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271,089	507,152	-
	(연결)현금배당성향(%)	18.00	39.20	-
	현금배당수익률(%)	4.30	2.00	-
	주당현금배당금(원)	1,980	790	-
한국가스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613,005	△1,021,611	526,745
	주당순이익(원)	△7,043	△13,802	5,766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119,187
	(연결)현금배당성향(%)	-	-	22.63
	현금배당수익률(%)	-	-	2.80
	주당현금배당금(원)	-	-	1,360
한국 지역난방공사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6,707	69,878	△226,524
	주당순이익(원)	10,943	6,035	△19,564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3,999	32,652	-
	(연결)현금배당성향(%)	34.70	46.70	-
	현금배당수익률(%)	5.30	3.80	-
	주당현금배당금(원)	3,800	2,820	-
(주)강원랜드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54,534	437,541	297,237
	주당순이익(원)	2,242	2,159	1,46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00,712	200,712	182,465
	(연결)현금배당성향(%)	44.16	45.87	61.39
	현금배당수익률(%)	2.70	2.80	2.70
	주당현금배당금(원)	990	990	900

기관	구분	'16	'17	'18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7,796	21,222	12,937
	주당순이익(원)	468	558	34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185	8,370	5,326
	(연결)현금배당성향(%)	23.50	39.40	41.20
	현금배당수익률(%)	0.46	0.92	0.66
	주당현금배당금(원)	110	220	140
한전KPS(주)	주당액면가액(원)	200	200	2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88,283	135,959	161,331
	주당순이익(원)	1,962	3,021	3,58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0,600	66,150	80,550
	(연결)현금배당성향(%)	34.70	48.70	49.90
	현금배당수익률(%)	1.20	3.60	5.20
	주당현금배당금(원)	680	1,470	1,790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4,342	80,539	77,616
	주당순이익(원)	1,849	1,302	1,25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61,856	45,155	43,917
	(연결)현금배당성향(%)	54.10	56.10	56.60
	현금배당수익률(%)	4.70	2.10	2.30
	주당현금배당금(원)	1,000	730	710
중소기업은행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164,601	1,508,528	1,764,278
	주당순이익(원)	1,647	2,178	2,531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315,817	405,956	410,107
	(연결)현금배당성향(%)	27.12	26.91	25.73
	현금배당수익률(%)	3.60	3.70	4.60
	주당현금배당금(원)	480(480)	617(617)	690(690)

주: () 안은 우선주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8.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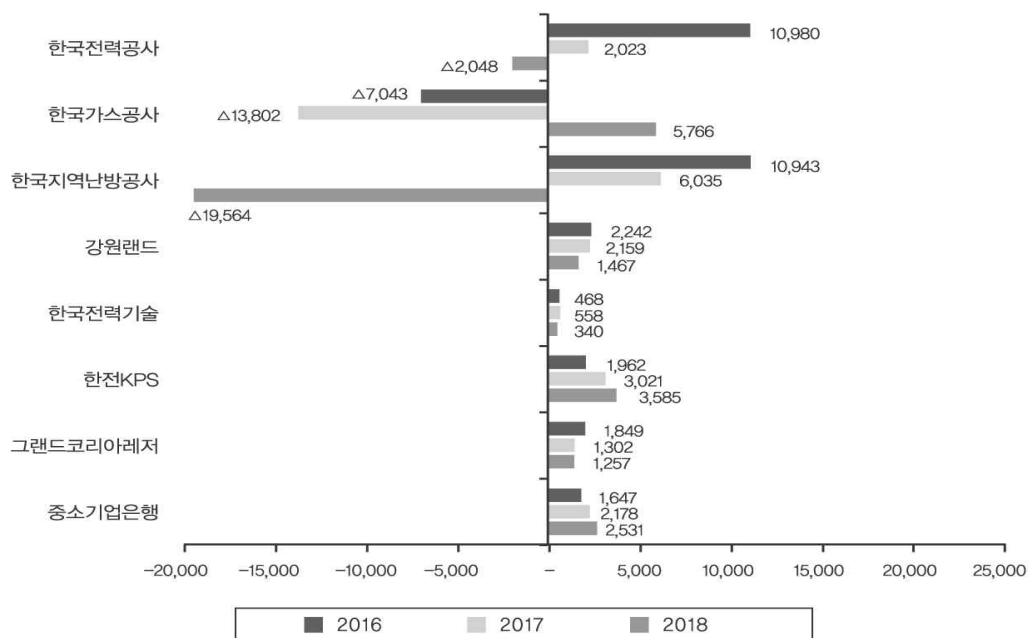
〈그림 Ⅲ-7〉 상장 공공기관의 현금배당수익률 변동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8〉 상장 공공기관의 주당 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 매출액과 총포괄손익을 중심으로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7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전년대비 35.6%의 증가율을 보임.
 -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비율로 감소한 기관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 전년대비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장 공공기관 중 2016년부터 매출액이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기관은 한전KPS(주) 1개 기관임.
 - 다만,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였음.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는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총포괄손익은 감소함.
 - 이와 반대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총포괄손익은 증가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년대비 총포괄손익의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표 III-27〉 상장 공공기관의 손익현황(2016~2018년)

(단위: 백만원, %)

기관	구분	'16	'17	'18	전년대비 증감률(%)	
					'17	'18
한국전력공사	매출액	60,190,384	59,814,862	60,627,610	△0.6	1.4
	영업이익	12,001,599	4,953,152	△208,001	△58.7	△104.2
	당기순이익	7,148,327	1,441,394	△1,174,498	△79.8	△181.5
	지배지분순이익	7,048,581	1,298,720	△1,314,567	△81.6	△201.2
	총포괄손익	7,146,025	1,346,678	△1,281,423	△81.2	△195.2
한국가스공사	매출액	21,108,116	22,172,168	26,185,038	5.0	18.1
	영업이익	998,214	1,035,163	1,276,859	3.7	23.3
	당기순이익	△612,478	△1,191,735	526,745	△94.6	△144.2
	지배지분순이익	△613,005	△1,205,110	509,350	△96.6	△142.3
	총포괄손익	△699,561	△1,544,709	407,688	△120.8	△126.4
한국지역난방공사	매출액	1,719,867	1,834,422	2,487,331	6.7	35.6
	영업이익	161,656	119,796	14,521	△25.9	△87.9
	당기순이익	126,707	69,878	△226,524	△44.9	△424.2
	지배지분순이익	-	-	△226,524	-	-
	총포괄손익	125,264	68,729	△234,718	△45.1	△4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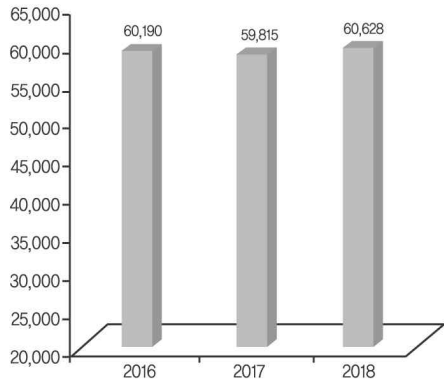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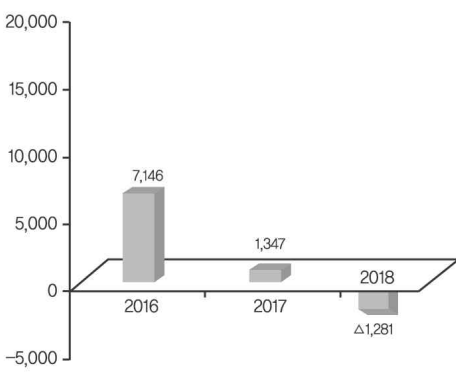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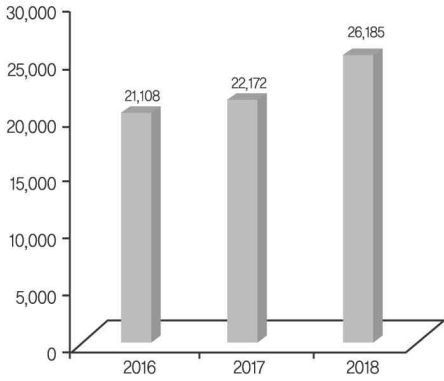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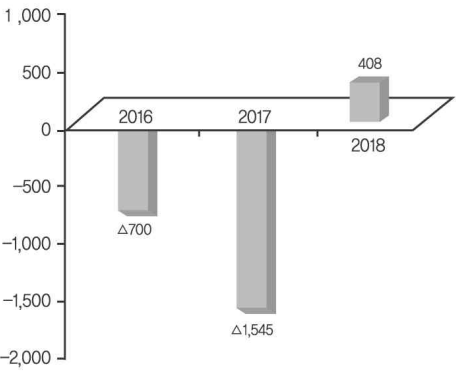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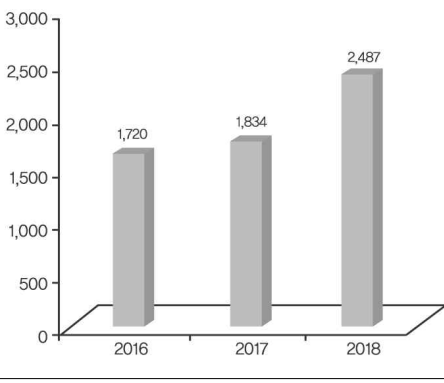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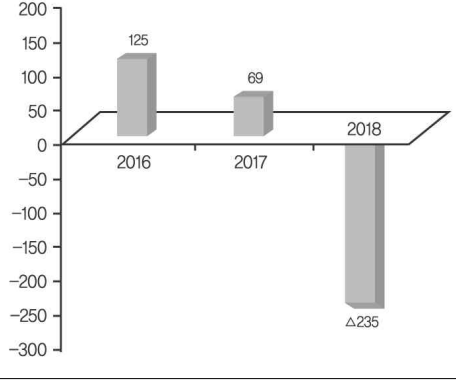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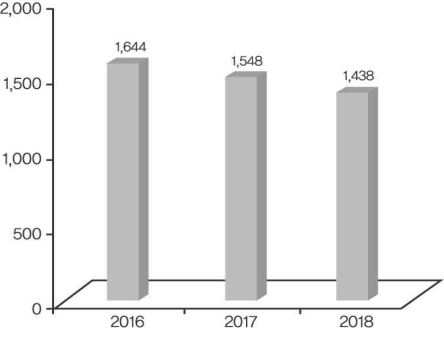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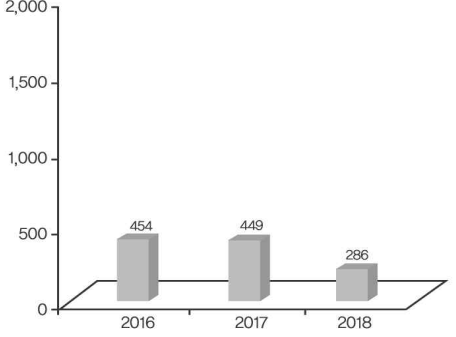
기관	구분	'16	'17	'18	전년대비 증감률(%)	
					'17	'18
(주)강원랜드	매출액	1,643,597	1,547,772	1,438,059	△5.8	△7.1
	영업이익	618,616	530,897	430,700	△14.2	△18.9
	당기순이익	454,534	437,541	297,237	△3.7	△32.1
	지배지분순이익	454,590	437,615	297,326	△3.7	△32.1
	총포괄순이익	453,657	449,220	286,295	△1.0	△36.3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매출액	506,102	490,193	433,701	△3.1	△11.5
	영업이익	5,946	18,054	21,499	203.6	19.1
	당기순이익	17,796	21,222	12,937	19.3	△39.0
	총포괄순이익	12,743	39,297	12,718	208.4	△67.6
한전KPS(주)	매출액	1,223,106	1,236,779	1,242,452	1.1	0.5
	영업이익	105,762	164,053	191,519	55.1	16.7
	당기순이익	88,283	135,959	161,331	54.0	18.7
	지배지분순이익	88,283	135,959	161,331	54.0	18.7
	총포괄순이익	79,553	145,908	145,212	83.4	△0.5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매출액	548,230	501,296	480,339	△8.6	△4.2
	영업이익	151,183	108,169	105,058	△28.5	△2.9
	당기순이익	114,343	80,539	77,741	△29.6	△3.5
	지배지분순이익	-	-	77,741	-	-
	총포괄순이익	113,889	75,182	75,189	△34.0	0.0
중소기업은행	매출액	17,844,349	19,326,542	17,871,430	8.3	△7.5
	영업이익	1,532,591	2,028,323	2,396,435	32.3	18.1
	당기순이익	1,164,601	1,508,528	1,764,278	29.5	17.0
	지배지분순이익	1,157,536	1,501,454	1,754,243	29.7	16.8
	총포괄순이익	1,083,342	1,502,934	1,711,329	38.7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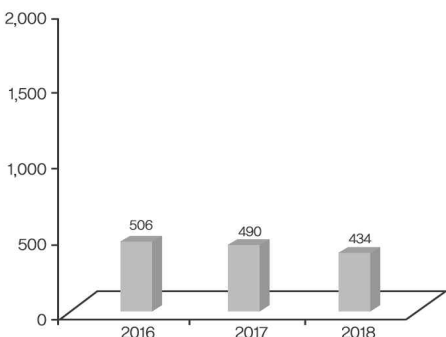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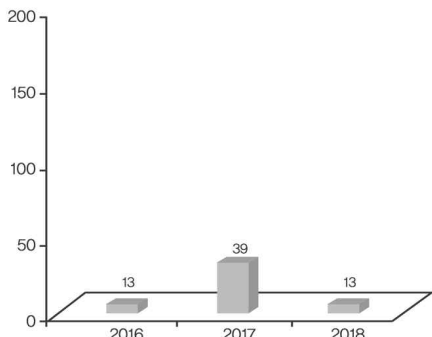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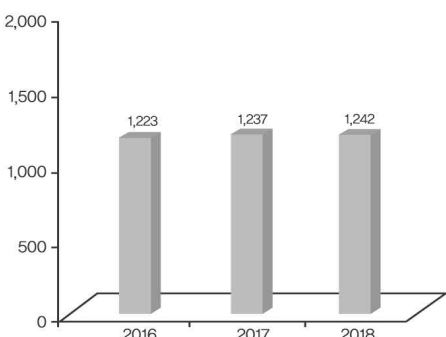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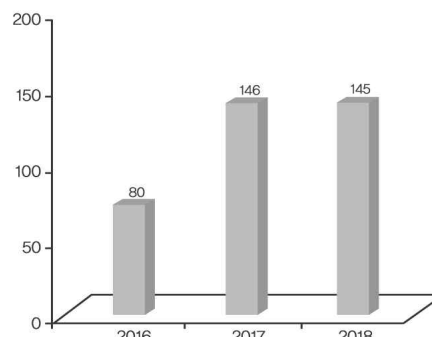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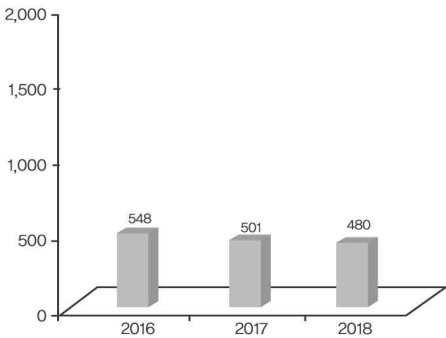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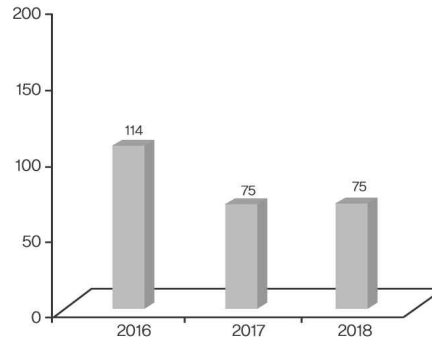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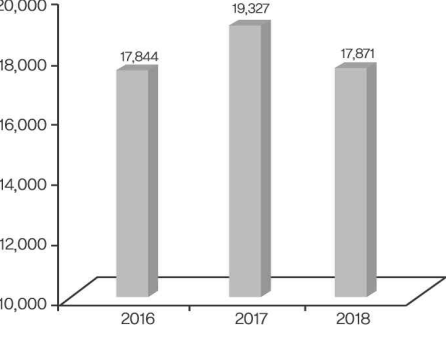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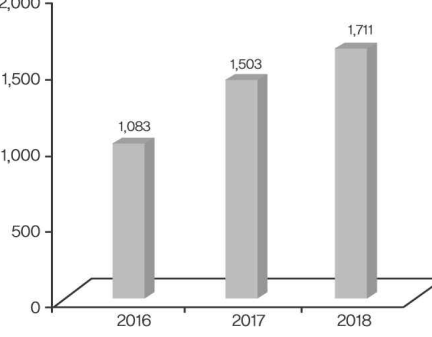
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 12월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지역난방플러스(주), 지역난방안전(주) 등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도 결산부터 연결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음. 동 표는 2017년도까지 별도손익계산서의 정보를 참고하고 2018년도 결산부터 연결손익계산서의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함(2018년도 결산서상 2개 자회사의 10일치 결산내용이 자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28〉 상장 공공기관의 매출액 및 총포괄손익 변화 추이(2016~2018년)

(단위: 백만원)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60,190</td></tr><tr><td>2017</td><td>59,815</td></tr><tr><td>2018</td><td>60,628</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60,190	2017	59,815	2018	60,628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7,146</td></tr><tr><td>2017</td><td>1,347</td></tr><tr><td>2018</td><td>△1,281</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7,146	2017	1,347	2018	△1,281
연도	매출액																	
2016	60,190																	
2017	59,815																	
2018	60,628																	
연도	총포괄손익																	
2016	7,146																	
2017	1,347																	
2018	△1,281																	
한국가스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21,108</td></tr><tr><td>2017</td><td>22,172</td></tr><tr><td>2018</td><td>26,185</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21,108	2017	22,172	2018	26,185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700</td></tr><tr><td>2017</td><td>△1,545</td></tr><tr><td>2018</td><td>408</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700	2017	△1,545	2018	408
연도	매출액																	
2016	21,108																	
2017	22,172																	
2018	26,185																	
연도	총포괄손익																	
2016	△700																	
2017	△1,545																	
2018	408																	
한국 지역난방공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1,720</td></tr><tr><td>2017</td><td>1,834</td></tr><tr><td>2018</td><td>2,487</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1,720	2017	1,834	2018	2,487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125</td></tr><tr><td>2017</td><td>69</td></tr><tr><td>2018</td><td>△235</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25	2017	69	2018	△235
연도	매출액																	
2016	1,720																	
2017	1,834																	
2018	2,487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25																	
2017	69																	
2018	△235																	
(주)강원랜드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1,644</td></tr><tr><td>2017</td><td>1,548</td></tr><tr><td>2018</td><td>1,438</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1,644	2017	1,548	2018	1,438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454</td></tr><tr><td>2017</td><td>449</td></tr><tr><td>2018</td><td>286</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454	2017	449	2018	286
연도	매출액																	
2016	1,644																	
2017	1,548																	
2018	1,438																	
연도	총포괄손익																	
2016	454																	
2017	449																	
2018	286																	

기관	매출액	총포괄손익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506</td></tr><tr><td>2017</td><td>490</td></tr><tr><td>2018</td><td>434</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506	2017	490	2018	434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13</td></tr><tr><td>2017</td><td>39</td></tr><tr><td>2018</td><td>13</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3	2017	39	2018	13
연도	매출액																	
2016	506																	
2017	490																	
2018	434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3																	
2017	39																	
2018	13																	
한전KPS(주)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1,223</td></tr><tr><td>2017</td><td>1,237</td></tr><tr><td>2018</td><td>1,242</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1,223	2017	1,237	2018	1,242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80</td></tr><tr><td>2017</td><td>146</td></tr><tr><td>2018</td><td>145</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80	2017	146	2018	145
연도	매출액																	
2016	1,223																	
2017	1,237																	
2018	1,242																	
연도	총포괄손익																	
2016	80																	
2017	146																	
2018	145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548</td></tr><tr><td>2017</td><td>501</td></tr><tr><td>2018</td><td>480</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548	2017	501	2018	480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114</td></tr><tr><td>2017</td><td>75</td></tr><tr><td>2018</td><td>75</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14	2017	75	2018	75
연도	매출액																	
2016	548																	
2017	501																	
2018	480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14																	
2017	75																	
2018	75																	
중소기업은행	 <table><tr><th>연도</th><th>매출액</th></tr><tr><td>2016</td><td>17,844</td></tr><tr><td>2017</td><td>19,327</td></tr><tr><td>2018</td><td>17,871</td></tr></table>	연도	매출액	2016	17,844	2017	19,327	2018	17,871	 <table><tr><th>연도</th><th>총포괄손익</th></tr><tr><td>2016</td><td>1,083</td></tr><tr><td>2017</td><td>1,503</td></tr><tr><td>2018</td><td>1,711</td></tr></table>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083	2017	1,503	2018	1,711
연도	매출액																	
2016	17,844																	
2017	19,327																	
2018	17,871																	
연도	총포괄손익																	
2016	1,083																	
2017	1,503																	
2018	1,7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보고서(2018)를 참고하여 작성

□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표 Ⅲ-29>와 같음.

<표 Ⅲ-29> 상장 공공기관의 주요 재무 비율(2016~2018년)

(단위: %, %p)

기관	지표		'16	'17	'18	증감(%p)	
						'17	'18
한국 전력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5	2.2	1.9	0.7	△0.3
		유형자산증가율	3.1	3.5	1.2	0.4	△2.3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2.1	△0.6	1.4	△2.7	2
		순이익증가율	△46.7	△79.8	△181.5	△33.1	△101.7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19.9	8.3	△0.3	△11.6	△8.6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11.9	2.41	△1.94	△9.49	△4.35
		총자본순이익률	4.0	0.8	△0.6	△3.2	△1.4
		자기자본순이익률	10.2	1.8	△1.9	△8.4	△3.7
	안정성	유동비율	79.7	81.7	90.4	2	8.7
		부채비율	143.44	149.15	160.57	5.71	11.42
		자기자본비율	41.1	40.1	38.4	△1	△1.7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684.68	276.78	△11.13	△407.9	△287.91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27,125,750	21,213,145	15,940,192	-	-
		부가가치율	45.1	35.5	26.3	△9.6	△9.2
		노동소득분배율	19.2	25.3	33.6	6.1	8.3
		총자본투자효율	15.4	11.8	8.7	△3.6	△3.1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82.4	81.98	85.28	△0.42	3.3
		총자본회전율	0.3	0.3	0.3	0	0
한국 가스공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6	△7.25	6.87	△1.65	14.12
		유형자산증가율	△1.56	△5.07	0.17	△3.51	5.24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18.98	5.04	18.1	24.02	13.06
		순이익증가율	△309.75	94.58	△144.2	404.33	△238.78

기관	지표		'16	'17	'18	증감(%p)	
						'17	'18
한국 가스공사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4.73	4.66	4.88	△0.07	0.22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9	△5.37	2.01	△2.47	7.38
		총자본순이익률	△1.49	△3.09	1.37	△1.6	4.46
		자기자본순이익률	△6.31	△14.03	6.36	△7.72	20.39
	안정성	유동비율	155.82	115.05	100.54	△40.77	△14.51
		부채비율	322.69	356.24	367.05	33.55	10.81
		자기자본비율	23.66	20.46	21.41	△3.2	0.95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1.19	1.25	1.63	0.06	0.38
	생산성	부가가치액 (백만원)	2,323,464	1,987,956	3,918,713	-	-
		부가가치율	11.01	8.97	14.97	△2.04	6
		노동소득분배율	19.51	25.96	13.8	6.45	△12.16
		총자본투자효율	5.64	5.15	10.2	△0.49	5.05
		설비투자효율	10.2	8.72	17.49	△1.48	8.77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222.82	272.37	308.13	49.55	35.76
		총자본회전율	0.51	0.57	0.68	0.06	0.11
한국 지역난방 공사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14.1	6.7	35.6	20.8	28.9
		영업이익증가율	△23	△25.9	△87.9	△2.9	△62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7.37	3.81	△9.1	△3.56	△12.91
	안정성	부채비율	184.40	212.70	262.66	28.3	49.96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5.28	100.26	159.43	4.98	59.17
(주)강원랜드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7.81	5.19	1.09	△2.62	△4.1
		유형자산증가율	△2.8	△1.35	1.24	1.45	2.59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3.81	△5.83	△7.09	△9.64	△1.26
		순이익증가율	2.92	△3.74	△32.07	△6.66	△28.33

기관	지표		'16	'17	'18	증감(%)	
						'17	'18
(주)강원랜드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37.64	34.3	29.95	△3.34	△4.35
		영업이익(매출액) 순이익률	27.65	28.27	20.67	0.62	△7.6
		총자본수익률	11.85	10.72	7.06	△1.13	△3.66
		자기자본(지배지분) 순이익률	14.55	12.96	8.39	△1.59	△4.57
	안정성	유동비율	251.71	317.65	276.57	65.94	△41.08
		부채비율	22.33	19.55	17.97	△2.78	△1.58
		자기자본비율	81.75	83.65	84.77	1.9	1.12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1,048,077	1,018,201	865,017	-	-
		부가가치율	63.77	65.78	60.15	2.01	△5.63
		노동소득분배율	26.12	27.63	33.41	1.51	5.78
		총자본투자효율	26.34	24.94	20.55	△1.4	△4.39
		설비투자효율	82.96	82.42	69.36	△0.54	△13.06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52.16	45.83	40.09	△6.33	△5.74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8.02	△3.11	1.22	4.91	4.33
		유형자산증가율	△2.88	△4.19	△4.35	△1.31	△0.16
		매출액증가율	△23.05	△3.13	△11.52	19.92	△8.39
		순이익증가율	△42.68	19.25	△39.04	61.93	△58.29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1.18	3.68	4.96	2.5	1.28
		매출액순이익률	3.52	4.33	2.98	0.81	△1.35
		총자본순이익률	2.17	2.74	1.69	0.57	△1.05
		자기자본순이익률	4.24	4.83	2.82	0.59	△2.01
	안정성	유동비율	94.45	116.08	113.28	21.63	△2.8
		부채비율	86.43	66.76	67.21	△19.67	0.45
		자기자본비율	53.64	59.96	59.8	6.32	△0.16
		영업이익대비이자 보상비율	553.09	8,801.02	2,938.45	8,247.93	△5,862.57

기관	지표		'16	'17	'18	증감(%p)	
						'17	'18
한국 전력기술 주식회사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215,895	222,031	220,182	-	-
		부가가치율	42.67	45.29	50.77	2.62	5.48
		노동소득분배율	77.22	74.3	77.89	△2.92	3.59
		총자본투자효율	26.3	28.67	28.71	2.37	0.04
		설비투자효율	64.94	69.12	71.6	4.18	2.48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19.93	107.26	94	△12.67	△13.26
한전 KPS(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5.7	9.8	6.7	4.1	△3.1
		자기자본증가율	0.5	14.6	8.7	14.1	△5.9
		매출액 증가율	3.7	1.1	0.5	△2.6	△0.6
		순이익 증가율	△48.0	54.0	18.7	102	△35.3
	수익성	영업이익률	8.6	13.3	15.4	4.7	2.1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7.2	10.99	12.98	3.79	1.99
		총자산순이익률	8.3	11.9	13	3.6	1.1
		자기자본이익률	11.2	16	17.1	4.8	1.1
	안정성	유동비율	211.4	226.1	235.3	14.7	9.2
		부채비율	38.33	32.59	30.16	△5.74	△2.43
		당좌비율	210.8	225.5	234.8	14.7	9.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54.87	136.65	126.25	△18.22	△10.4
		총자산회전율	1.2	1.1	1	△0.1	△0.1
		매출채권회전율	9.5	9.1	9	△0.4	△0.1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2.25	0.24	4.63	△12.01	4.39
		유형자산증가율	26.49	△5.76	△7.85	△32.25	△2.09
		영업수익(매출액) 증가율	8.42	△8.56	△4.18	△16.98	4.38
		순이익증가율	24.65	△29.56	△3.47	△54.21	26.09

기관	지표		'16	'17	'18	증감(%)	
						'17	'18
그랜드코리아 레저(주)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영업이익률	27.58	21.58	21.87	△6	0.29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20.86	16.07	16.18	△4.79	0.11
		총자본순이익률	16.56	11.02	10.38	△5.54	△0.64
		자기자본순이익률	23.46	15.33	14.21	△8.13	△1.12
	안정성	유동비율	300	334	270	34	△64
		부채비율	40.77	37.56	36.24	△3.21	△1.32
		자기자본비율	71.04	72.69	73.40	1.65	0.71
	생산성	부가가치액(백만원)	323,246	299,099	284,607	-	-
		부가가치율	58.96	59.67	59.25	0.71	△0.42
		노동소득분배율	39.81	46.94	45.96	7.13	△0.98
		총자본투자효율	46.82	40.91	38.01	△5.91	△2.9
		설비투자효율	370.36	315.03	320.92	△55.33	5.89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105.69	94.22	85.46	△11.47	△8.76
중소기업 은행	수익성	영업수익(매출액) 순이익률	6.53	7.81	9.87	1.28	2.06
		총자산순이익률	0.47	0.57	0.63	0.1	0.06
		자기자본이익률	6.53	7.97	8.72	1.44	0.75
	안정성	부채비율	1,323.20	1,284.07	1,272.46	△39.13	△11.61
		BIS비율	13.13	14.20	14.50	1.07	0.3
	활동성	자기자본회전율	98.87	97.6	84.72	△1.27	△12.88

주: 기업의 활동성 지표 중 자기자본회전율은 알리오시스템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관의 결산서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알리오에서 작성한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회전율 = (순매출액/자본총계)×1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2019. 4. 30. 기준)과 8개 상장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결산서(2018), 사업보고서(2018) 및 IR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기관 결산서 및 IR 등을 통해 주요 재무비율지표에 대한 변동 원인 및 추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도 전력수요 증가와 해외사업 수익 감소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함.¹²⁴⁾
 -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은 신고리 4~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설비투자 등으로 유형자산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개선됨.
 - 매출액은 1.4% 증가한 반면, 연료비는 21.6%, 전력구입비는 28.3%가 증가하여 순손익이 181.5% 감소하였음.
 -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도 당기 순이익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액 증가로 인해 2017년 대비 생산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의 감소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은 감소하였음.¹²⁵⁾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대비 35.6% 상승하였으나, 연료비 상승 및 열 요금 동결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87.9% 감소하였음.
 - 영업이익 산출 시 국제유가 30.5% 상승, CHP LNG가격 14.5% 상승 및 백석역 사고 관련 충당부채 273억원을 반영함.¹²⁶⁾

2. 인력현황¹²⁷⁾

가. 임직원 수 현황

- 2018년 기준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정원 기준)¹²⁸⁾는 약 38만 3천여 명(무기계약직 5.1만명 포함)으로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약 64만 9천여 명의 58.9%에 해당하는 규모임.

124) 한국전력공사, 『KEPCO 투자 설명자료』, 2019. 4. 및 『결산서(2018)』, 2019. 3. 참고

125)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8)』, 2019. 3. 참고

126) 한국지역난방공사, 『IR(2018 사업연도 경영실적)』 참고

127)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및 알리오시스템 유관항목 참고

128)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상임임원,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및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포함)에 대한 총 정원

- 2018년도 국가행정공무원 정원 대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약 4.7%p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년(2%p 이내 증가)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임.

〈표 Ⅲ-30〉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국가행정공무원 현황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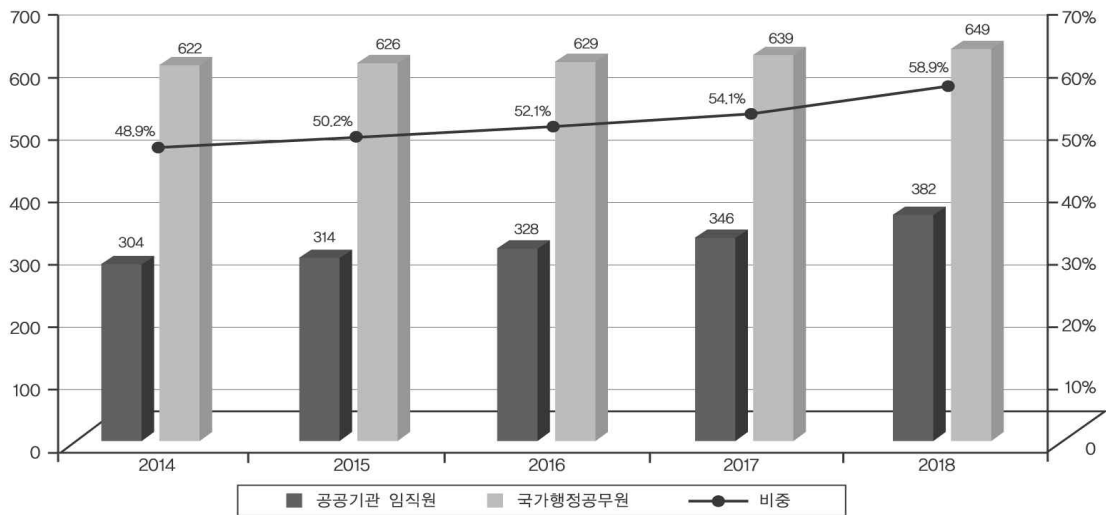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공공기관(a)	305	315	328	346	383	36	10.5%
국가행정공무원(b)	622	626	629	639	649	10	1.6%
비중(a/b)	48.9	50.2	52.1	54.1	58.9	4.7*	

주: *는 %p단위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 (2019. 4. 30.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9〉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임직원 수 및 국가행정공무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 (2019. 4. 30. 기준) 및 나라지표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6)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필수분야 신규 증원과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전년에 비해 36,460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017년 5.5%보다 5.0%p 상향된 10.5% 수준임.
- 2018년 증원 인력 중 2.4만명(무기직 1.7만명, 일반직 0.7만명)이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에 해당함.

- 그 외에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3.7천명)¹²⁹⁾, SOC 분야(2.0천명)¹³⁰⁾ 및 고용복지 분야(1.6천명) 등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루어짐.

□ 최근 5년간 모든 유형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및 현원이 꾸준히 증가함.

- 준정부기관 유형과 기타공공기관 유형은 임직원 정원 및 현원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이 10%를 상회함.
 - 2018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임직원 정원이 전년대비 3,860명 증가하여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15.6%)을 보였으며, 유형 내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근로복지공단(1,607명)이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8.8%)임.
 - 2018년 기타공공기관의 정원은 전년대비 15,788명 증가¹³¹⁾하였으며 증원인력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부산대학교병원(1,218명)이고 기타공공기관 중 증원 규모 상위 10개 기관에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7개 대학병원¹³²⁾이 포함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임직원 정원이 전년대비 12.7% 증가¹³³⁾한 84,574명이며, 증원인력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164명)임.
- 공기업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임직원 정원 및 현원 모두 전년대비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임.
 - 시장형 공기업은 전년대비 정원 증가율이 3.3%로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현원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2.6% 수준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12.3%p 낮은 수준임.
 - 준시장형 공기업의 정원 증가율은 7.4%로 시장형 공기업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여전히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¹³⁴⁾임.

129)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응급·감염관리센터 신설, 호스피스 사업 등을 사유로 경북대학교병원 565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50명, 충남대학교병원 303명 등이 증원

130) SOC 분야에서는 철도기관사 확충, 철도차량 정비, 구조물·특수교량 점검, 주거복지사업 등을 사유로 한국철도공사 568명, 한국토지주택공사 356명, 한국도로공사 154명 등이 증원

131) 전년대비 13.8% 증가

132) 부산대학교병원(1,218명), 경북대학교병원(721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695명, 서울대학교병원 분원), 강원대학교병원(466명), 충남대학교병원(439.6명), 전남대학교병원(363.5명), 제주대학교병원(312명) 등이 포함

133) 전년대비 9,538명 증가

134) 준시장형 공기업의 정원 증가율은 공기업을 제외한 유형 중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2.7%)보다도 5.3%p 낮은 수준임

〈표 Ⅲ-3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304,582 (285,377)	314,748 (295,219)	328,480 (308,112)	346,412 (324,359)	382,872 (359,029)	36,460 (34,670)	10.5 (10.7)
공기업	119,668 (115,072)	122,444 (117,068)	126,912 (121,292)	132,541 (127,015)	139,814 (133,891)	7,273 (6,876)	5.5 (5.4)
· 시장형	55,648 (53,447)	57,151 (55,315)	59,888 (57,709)	62,097 (59,996)	64,138 (61,553)	2,041 (1,557)	3.3 (2.6)
· 준시장형	64,020 (61,625)	65,293 (61,754)	67,024 (63,583)	70,444 (67,019)	75,676 (72,338)	5,232 (5,319)	7.4 (7.9)
준정부기관	85,997 (80,919)	88,299 (83,812)	93,263 (88,124)	99,820 (93,622)	113,219 (106,186)	13,399 (12,564)	13.4 (13.4)
· 기금관리형	21,471 (20,250)	21,879 (20,584)	22,801 (21,480)	24,784 (22,828)	28,644 (26,781)	3,860 (3,953)	15.6 (17.3)
· 위탁집행형	64,526 (60,669)	66,420 (63,228)	70,462 (66,644)	75,036 (70,794)	84,574 (79,405)	9,538 (8,611)	12.7 (12.2)
기타공공기관	98,917 (89,387)	104,005 (94,338)	108,305 (98,696)	114,051 (103,722)	129,839 (118,952)	15,788 (15,230)	13.8 (14.7)

주: 1. 괄호 안 수치는 현원 기준

2. 현원의 경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직원 현황」(2019. 4. 30. 기준)

- 2018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87,104명(41개 기관)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68,160명(25개 기관), 교육부 41,341명(23개 기관) 순으로 나타남.
- 임직원 수 증가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5,081명 증원),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4,745명 증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4,583명 증원) 순임.

〈표 III-3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임직원 수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수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2,541	2,648	2,908	2,971	3,188	217	7.3
교육부	23	31,116	32,953	34,497	36,260	41,341	5,081	1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23,106	23,998	24,741	25,312	30,056	4,745	18.7
외교부	3	579	597	608	662	727	65	9.8
통일부	2	70	72	78	83	208	125	150.6
법무부	3	1,017	1,124	1,158	1,155	1,249	94	8.1
국방부	3	510	546	562	609	633	24	3.9
행정안전부	3	1,025	1,108	1,122	1,314	1,527	213	16.2
문화체육관광부	32	7,372	7,705	7,624	8,659	9,313	654	7.6
농림축산식품부	11	9,209	9,421	9,810	10,158	12,557	2,399	23.6
산업통상자원부	41	75,285	77,809	81,343	84,357	87,104	2,747	3.3
보건복지부	27	29,339	30,046	32,147	34,315	38,286	3,971	11.6
환경부	11	9,408	9,808	10,299	10,930	13,363	2,433	22.3
고용노동부	11	11,959	12,159	12,757	14,170	17,539	3,369	23.8
여성가족부	5	467	615	720	760	996	236	31.0
국토교통부	25	57,383	57,787	59,470	63,577	68,160	4,583	7.2
해양수산부	18	2,680	2,992	3,309	3,449	4,093	644	18.7
중소벤처기업부	12	3,095	3,546	3,675	3,887	4,638	751	19.3
국무조정실	27	3,321	3,469	3,623	3,676	4,568	892	24.3
방송통신위원회	2	286	391	420	425	530	105	24.7
원자력안전위원회	3	559	611	685	685	733	48	7.0
금융위원회	8	19,989	20,685	21,383	22,341	22,996	655	2.9
공정거래위원회	2	431	449	485	515	544	29	5.6
국가보훈처	3	4,819	4,878	5,074	5,367	6,548	1,181	22.0
인사혁신처	1	531	531	550	576	655	79	13.7
식품의약품안전처	4	118	167	191	468	505	37	7.9
관세청	1	50	50	50	50	50	0	0.0
방위사업청	2	3,358	3,440	3,665	3,719	4,258	539	14.5
경찰청	1	2,526	2,534	2,595	2,609	2,934	325	12.5

구 분	기관수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소방청	1	189	204	213	226	271	45	19.9
문화재청	1	250	250	345	335	376	41	12.2
산림청	3	138	144	339	579	715	136	23.5
농촌진흥청	1	225	225	228	292	292	0	0.0
특허청	6	1,354	1,509	1,525	1,632	1,628	△4	△0.2
기상청	3	277	277	281	291	293	2	0.7
합 계	362	304,582	314,748	328,480	346,412	382,872	36,460	10.5

주: 2019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2019년 1월 지정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수 반올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4. 30.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임직원 수(정원 기준)의 증감을 기관 단위로 살펴보면, 총 83개 기관(신규 출범 기관 제외¹³⁵⁾)에서 전년대비 100명 이상의 인력이 증원된 반면, 12개 기관에서 2017년 대비 2018년 임직원 수가 감소함.

○ 전년대비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83개 기관으로 총 29,454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2018년 전체 정규 인력증원 규모(36,460명)의 약 80.8%를 차지함.

- 가장 큰 규모로 인력이 증원된 기관은 한국마사회로 전년대비 1,967명이 증원되어 2018년 임직원 수가 2017년 1,143명에서 2018년 3,110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정규직이었던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인함.
- 한국마사회에 이어 전년대비 정원이 가장 크게 증원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년대비 1,607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인력 증원에 영향을 받은 것임.

○ 반면, 전년대비 임직원 정원이 감소한 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3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직원 정원이 가장 크게 감소한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2018년 정원이 전년대비 184명이 감소한 1,717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말 단기 일자리로 채용된 체육시설 현장조사원의 계약만료로 인한 것임.

135) 2019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각각 2017년 12월과 2018년 7월에 신규 출범한 기관이므로 전년대비 인력증원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음

- 대한석탄공사의 2018년 임직원 수 정원은 전년대비 116명이 감소한 1,135명으로 이는 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생산량을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 감원임.
- 한전KPS(주)는 화력물량 감소로 인한 인력 감축과 임금피크제로 인해 전년대비 51명 감소하여 임직원수가 6,249명으로 줄어듦.

〈표 Ⅲ-33〉 2018년 인력증원 100명 이상인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한국마사회	준시장형 공기업	1,967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211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0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7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48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196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218	기초과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9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164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187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48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85
국립공원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964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83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860	한국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81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기타공공기관	8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타공공기관	179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21	한국장애인개발원	기타공공기관	17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695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177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652	한전KDN	준시장형 공기업	171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58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69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491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471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64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강원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66	울산과학기술원	기타공공기관	161
한국수자원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44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57
충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40	한국개발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51
한국환경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4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49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422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관	149
국방과학연구소	기타공공기관	390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386	한국화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44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376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4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69	한국원자력의학원	기타공공기관	140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6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40
한국공항공사	시장형 공기업	35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타공공기관	124
국립생태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3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22
도로교통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325	한국수출입은행	기타공공기관	121
제주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1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9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타공공기관	119
한국체육산업개발(주)	기타공공기관	286	한국고용정보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1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타공공기관	27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14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268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13
코레일네트웍스(주)	기타공공기관	26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타공공기관	111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254	한국전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10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48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9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기관명	유형	증원 규모
중소기업은행	기타공공기관	245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8
대한적십자사	기타공공기관	238	기술보증기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6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23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3
예술의전당	기타공공기관	23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02
국립중앙의료원	기타공공기관	235	한국에너지공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102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	233			

주: 1. 2018년 인력증원 규모는 2017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8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34〉 2018년 인력 감원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기관명	유형	감원 규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8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기타공공기관	1
대한석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타공공기관	1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51	한국디자인진흥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준시장형 공기업	10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기타공공기관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타공공기관	6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기타공공기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타공공기관	1

주: 2018년 인력감원 규모는 2017년 임직원 정원 대비 2018년 임직원 정원 차이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수」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신규채용 현황

- 2018년 공공기관은 보건·안전·R&D 등을 중심으로 2017년도 대비 11,263명(49.8%) 증가한 33,900명을 신규로 채용함.
- 2018년 신규채용 인력 중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0.7만 명)을 제외한 순 신규채용 규모는 2.7만 명으로 전년대비 0.5만 명(23.2%) 증가함.

〈표 Ⅲ-35〉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단위: 만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신규채용	1.8	1.9	2.1	2.3	3.4	1.1	49.8
순신규채용	1.8	1.9	2.1	2.2	2.7	0.5	23.2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 연도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신규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모든 기관 유형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2018년 신규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공공기관이 65.7%(전년대비 5,893명 증가)로 가장 높고 시장형 공기업이 14.8%(전년대비 542명 증가)로 가장 낮은 수준임.
- 2018년까지 증가 추세가 계속 유지되기는 하나 2015~2017년까지는 신규채용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¹³⁶⁾이었다가 2018년에 대폭 상승¹³⁷⁾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따른 것임.

136) 2015년 10.6%, 2016년 8.7%, 2017년 7.5%

137) 2017년 대비 42.3%p 상승

〈표 III-36〉 최근 5년간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7,509	19,373	21,059	22,637	33,900	11,263	49.8
공기업	4,937	5,823	5,991	6,805	9,070	2,265	33.3
· 시장형	3,061	3,662	3,665	3,666	4,208	542	14.8
· 준시장형	1,876	2,162	2,325	3,139	4,862	1,723	54.9
준정부기관	4,963	4,942	6,166	6,868	9,973	3,105	45.2
· 기금관리형	1,268	1,003	1,132	1,804	2,687	883	48.9
· 위탁집행형	3,696	3,939	5,034	5,065	7,286	2,221	43.8
기타공공기관	7,609	8,608	8,903	8,963	14,856	5,893	65.7

주: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 채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37>과 같음.

- 2018년 신규채용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부로 산하 공공기관에서 7,752명의 신규채용이 발생함.
 - 2018년 신규채용 규모가 큰 부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7,752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5,819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4,78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2,946명) 순임.
- 전년대비 신규채용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3,32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1,742명),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1,664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1,237명) 순으로 신규채용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신규채용이 크게 발생한 부처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년대비 인력 증원 규모가 큰 부처라는 점임.
 - 35개 부처 중 9개 부처¹³⁸⁾는 소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감소(전년대비 141명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38) 금융위원회(△141명), 특허청(△30명), 농촌진흥청(△20명), 관세청(△11명), 국방부(△8명), 기상청(△7명), 인사혁신처(△5명), 통일부(△2명), 산림청(△1명)

〈표 Ⅲ-37〉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기관 수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46	212	285	133	227	94	70.7
교육부	23	3,497	3,641	4,379	4,423	7,752	3,329	7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156	1,162	1,390	1,205	2,946	1,742	144.6
외교부	3	37	31	31	61	88	27	44.6
통일부	2	6	16	12	8	6	△2	△25.0
법무부	3	83	62	68	55	93	38	69.7
국방부	3	26	39	32	29	21	△8	△27.6
행정안전부	3	42	70	37	85	352	267	314.1
문화체육관광부	32	292	353	387	340	470	130	38.4
농림축산식품부	11	405	407	332	651	662	11	1.7
산업통상자원부	41	4,076	5,132	4,851	4,583	5,819	1,237	27.0
보건복지부	27	2,187	1,972	2,697	3,131	3,353	223	7.1
환경부	11	531	571	669	688	894	206	30.0
고용노동부	11	797	732	831	1,292	2,154	862	66.7
여성가족부	5	66	101	60	55	61	6	10.9
국토교통부	25	1,766	1,584	2,352	3,118	4,782	1,664	53.4
해양수산부	18	204	460	271	241	339	98	40.8
중소벤처기업부	12	167	480	294	276	529	253	91.7
국무조정실	27	336	328	303	236	629	393	166.5
방송통신위원회	2	5	55	55	33	35	2	6.1
원자력안전위원회	3	39	85	84	18	53	35	193.1
금융위원회	8	673	910	596	1,020	879	△141	△13.8
공정거래위원회	2	43	46	45	50	64	14	28.0
국가보훈처	3	476	367	314	262	832	570	217.6
인사혁신처	1	34	28	37	55	50	△5	△8.3
식품의약품안전처	4	20	46	36	28	69	41	146.4
관세청	1	5	10	3	14	3	△11	△78.6
방위사업청	2	205	177	150	146	374	228	155.9
경찰청	1	66	44	116	81	81	0	0.0
소방청	1	12	31	25	18	25	7	38.9
문화재청	1	28	13	7	11	24	13	118.2
산림청	3	7	14	129	166	165	△1	△0.6
농촌진흥청	1	15	12	20	29	8	△21	△72.4
특허청	6	38	141	136	68	38	△30	△44.4
기상청	3	26	44	27	33	26	△7	△21.4
합 계	362	17,509	19,373	21,059	22,637	33,900	11,263	49.8%

주: 2019년 4월 30일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2019년 1월 지정 기준)과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에 신규채용이 100명 이상 이루어진 기관은 30개이며 이 중 상위 10개 기관의 총 신규채용 규모(12,301명)가 전체 신규채용(33,900명)의 약 36.3%를 차지함.
- 신규채용이 많이 이루어진 10개 기관은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2018년 임직원 수 증원이 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 분야, SOC 분야 및 고용복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38〉 2018년 신규채용 규모 상위 10개 기관

(단위: 명)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기관명	유형	신규 채용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85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915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829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822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786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5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85	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767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08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기타공공기관	68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채용」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산대학교병원 등 29개 기관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대비 1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부산대학교병원은 기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대거 발생하여 2017년(514명)보다 1,315명 증가한 1,829명을 채용하여 공공기관 중 신규채용 증가율(255.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신규채용 규모(2,185명)가 가장 큰 기관일 뿐만 아니라 부산대학교병원에 이어 2017년 대비 신규채용 증가율(106.1%)이 높은 기관임.
- 이는 2017년 말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해 강릉선이 개통되면서 노선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인력이 늘었고, 근로자의 퇴직이 늘어 추가 채용이 발생했기 때문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년대비 562명 증가한 815명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이 중 일부는 간호조직 인력 등급 상향으로 인한 정원 추가로 인한 것임.

-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보다 532명 증가(전년대비 222.1% 증가)한 1,385명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인력의 신규 채용이 늘어남에 기인함.

〈표 Ⅲ-39〉 2018년 신규채용 100명 이상 증가한 기관(2018년 기준)

(단위: 명, %)

기관명	유형	'17 신규채용 (A)	'18 신규채용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부산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514	1,829	1,315	255.8
한국철도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060	2,185	1,125	106.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53	815	562	222.1
근로복지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853	1,385	532	62.4
경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363	822	459	126.4
경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70	915	445	94.7
충북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98	584	386	194.9
강원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178	502	324	182.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4	343	269	363.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부설기관)	430	689	259	60.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0	232	222	2220.0
국방과학연구소	기타공공기관	111	331	220	197.8
한국가스공사	시장형 공기업	152	370	218	14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64	277	213	332.8
한국전력공사	시장형 공기업	1,574	1,786	212	13.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1	226	205	976.2
한전KPS(주)	준시장형 공기업	284	482	198	69.7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78	365	187	105.1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4	261	177	210.7
국민연금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322	478	156	48.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공공기관	22	163	141	640.9

기관명	유형	'17 신규채용 (A)	'18 신규채용 (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타공공기관	46	183	137	297.8
(주)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	143	274	131	91.6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기타공공기관	204	327	123	60.3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81	204	123	151.9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장형 공기업	103	222	119	115.5
전남대학교병원	기타공공기관	440	556	116	26.4
주택관리공단(주)	기타공공기관	171	282	111	64.9
한국전기연구원	기타공공기관	17	124	107	629.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	167	103	160.2

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부설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 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를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에 따라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결과 채용 실적이 크게 개선됨.

- 매년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청년 등 사회형평적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채용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함.
-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에 대한 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함.
 - 장애인 채용은 전년대비 82.8% 증가한 669명으로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짐.
 -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여성의 전년대비 채용규모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54.8%와 56.3%로 나타남.
- 청년(43.4%) 및 이전지역인재(35.4%)에 대한 채용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Ⅲ-40〉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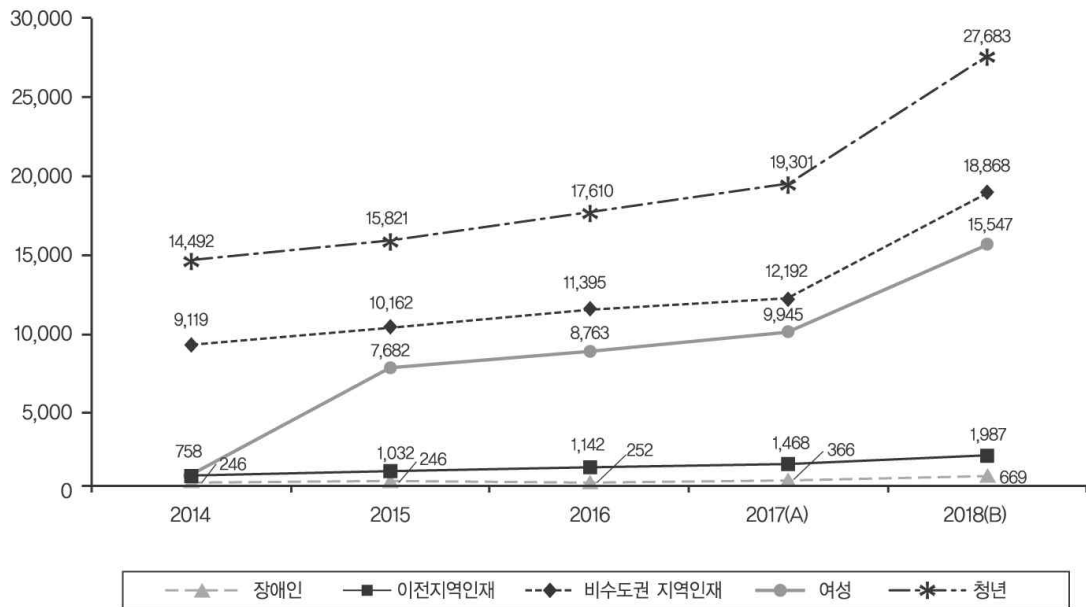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 장애인	246	246	252	366	669	303	82.8
· 이전지역인재	756	1032	1,142	1,468	1,987	519	35.4
· 비수도권 지역인재	9,119	10,162	11,395	12,192	18,868	6,676	54.8
· 여성	748	7,682	8,763	9,945	15,547	5,602	56.3
· 청년	14,492	15,821	17,610	19,301	27,683	8,382	43.4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그림 Ⅲ-10〉 최근 5년간 사회형평적 채용 추이

(단위: 명)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현황¹³⁹⁾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여 공공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함.

139)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참고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¹⁴⁰⁾에게 청년 미취업자(연령기준 :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함.
- 2018년 기준 청년의무고용 적용 대상기관은 447개이며 이 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308개이며 지방공기업은 139개임.
- 정부는 청년 신규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2018년 청년의무고용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신규고용비율과 의무이행기관비율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청년의무고용 적용 대상기관(447개)의 2018년 총 정원(37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5,676명)의 비율은 6.9%임.
-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323개소)에서 2.1%p 상승하여 82.1%(367개)이며, 미이행 기관은 80개소(17.9%)로 나타남.
- 미이행의 주된 이유는 청년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인한 것임.

〈표 III-41〉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단위: %)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청년신규고용비율	3.0	3.3	3.5	4.8	4.8	5.9	5.9	6.9
의무이행기관비율	42.3	48.1	51.3	72.1	70.1	80.0	80.0	82.1

주: 청년의무고용 적용대상인 공운법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체 실적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청년 신규고용 및 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2>와 <표 III-43>과 같음.

- 2018년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고용률 및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전체 대상기관의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임.
- 청년 신규고용율의 경우, 전체 대상기관은 6.9%이고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7.2%임.

14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

-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전체 대상기관은 82.1%이고 공운법상 공공기관은 82.8%임.
-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고용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¹⁴¹⁾하는 반면, 청년의무고용 이행기관 비율은 2017년 다소 감소했다 2018년에 2016년 수준을 회복¹⁴²⁾함.
-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청년 신규고용율은 기타공공기관 유형이 가장 높고 청년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준정부기관 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청년 신규고용율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대상기관 실적¹⁴³⁾과 공운법상 공공기관 실적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인 반면, 공기업 유형은 전체 대상기관 실적이나 다른 공공기관 유형의 실적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임.
- 청년의무고용 이행기관 비율의 경우, 준정부기관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이행기관 비율이 80% 미만으로 전체 대상기관 실적¹⁴⁴⁾이나 공운법상 공공기관 실적보다 낮은 수준임.

〈표 III-42〉 청년 신규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 분	2016			2017			2018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B) (B/A)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B) (B/A)	기관 수	정원 (A)	청년 고용(B) (B/A)
합 계	409	326,774	19,236 (5.9)	404	322,123	18,937 (5.9)	447	373,416	25,676 (6.9)
공운법상 공공기관	279	281,993	16,326 (5.8)	276	290,800	17,358 (6.0)	308	320,994	23,225 (7.2)
공기업	30	105,371	4,646 (4.4)	33	120,468	6,152 (5.1)	35	131,016	7,555 (5.8)
준정부기관	85	80,074	4,761 (5.9)	86	85,219	5,274 (6.2)	92	94,602	7,803 (8.3)
기타공공기관 (30인 이상)	164	96,548	6,919 (7.2)	157	85,113	5,932 (7.0)	181	95,376	7,867 (8.3)
지방공기업	130	44,781	2,910 (6.5)	128	31,323	1,579 (5.0)	139	52,422	2,451 (4.7)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141) 2016년 5.8% → 2017년 6.0%(0.2%p 증가) → 2018년 7.2%(1.2%p 증가)

142) 2016년 82.8% → 2017년 77.5%(5.3%p 감소) → 2018년 82.8%(5.3%p 증가)

143) 2016년 5.9% → 2017년 5.9% → 2018년 6.9%

144) 2016년 80.0% → 2017년 80.0% → 2018년 82.1%

〈표 III-43〉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6				2017				2018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기관 수	청년 고용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없음				없음				없음
합 계	409	327 (80.0)	82 (20.0)	25	404	323 (80.0)	81 (20.0)	15	447	367 (82.1)	80 (17.9)	19
공운법상 공공기관	279	231 (82.8)	48 (17.2)	15	276	214 (77.5)	62 (22.5)	14	308	255 (82.8)	53 (17.2)	11
공기업	30	23 (76.7)	7 (23.3)	2	33	29 (87.9)	4 (12.1)	1	35	29 (82.9)	6 (17.1)	2
준정부기관	85	79 (92.9)	6 (7.1)	1	86	75 (87.2)	11 (12.8)	0	92	88 (95.7)	4 (4.3)	0
기타공공기관 (30인 이상)	164	129 (78.7)	35 (21.3)	12	157	110 (70.1)	47 (29.9)	13	181	138 (76.2)	43 (23.8)	9
지방공기업	130	96 (73.8)	34 (26.2)	10	128	109 (85.2)	19 (14.8)	1	139	112 (80.6)	27 (19.4)	8

자료: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라.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실적

-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2017. 10월)」에 따라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추진되면서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명(기관별 계획 17만 5천명 및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정함.
-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동 정책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 이어 공공기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전환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정규직 고용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 특히 2018년 공공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8,928명(26.4%) 감소한 24,931명임.
- 공기업 비정규직은 전년대비 1,655명(31.0%)이 감소한 반면 준정부기관 비정규직은 51명(1.1%)이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비정규직 수는 16,353명으로 전년대비 7,325명(△30.9%)이 감소함.

〈표 Ⅲ-44〉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44,124	42,674	37,251	33,860	24,931	△8,928	△26.4
공기업	11,907	11,638	7,191	5,337	3,683	△1,655	△31.0
준정부기관	8,198	7,222	5,845	4,844	4,896	51	1.1
기타공공기관	24,019	23,814	24,215	23,678	16,353	△7,325	△30.9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30.

- 2018년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46,183명으로 전년대비 18,743명(68.3%)이 증가하였으며, 신규채용은 10,836명으로 전년대비 무려 555.0%나 증가함.
- 2018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준정부기관(75.2%), 공기업(74.8%), 기타공공기관(61.5%) 순으로 높음.
- 한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임.

〈표 Ⅲ-45〉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현황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8,659	21,883	23,395	27,440	46,183	18,743	68.3
공기업	2,559	2,902	3,077	4,590	8,022	3,432	74.8
· 시장형	118	120	122	161	320	159	98.8
· 준시장형	2,441	2,782	2,955	4,429	7,702	3,273	73.9
준정부기관	5,956	7,334	7,863	9,153	16,034	6,881	75.2
· 기금관리형	1,274	1,312	1,590	1,708	3,947	2,239	131.1
· 위탁집행형	4,682	6,022	6,273	7,445	12,087	4,642	62.4
기타공공기관	10,144	11,647	12,455	13,697	22,127	8,430	61.5

주: 1. 현원 기준

2. 소수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2. 임직원수」 항목의 공시내용(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46〉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1,011	1,959	1,761	1,654	10,836	9,182	555.0
공기업	99	319	87	77	1,780	1,704	2227.2
· 시장형	8	0	11	4	10	6	166.7
· 준시장형	91	319	76	73	1,770	1,698	2333.4
준정부기관	465	414	762	610	3,473	2,863	469.0
· 기금관리형	207	62	330	99	450	351	354.0
· 위탁집행형	258	352	432	511	3,023	2,512	491.3
기타공공기관	447	1,226	912	968	5,583	4,615	477.0

주: 전년대비 증감률 수치 산출시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4. 신규 채용」 항목의 공시내용(2019. 4. 30. 기준) 참고

3. 재무현황¹⁴⁵⁾

가. 총평

- 공공기관 자산규모는 829.3조원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인프라 확충 등 투자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8.2조원이 증가하였음.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설비(신고리원전 4~6호기 등) 및 송배전설비 투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서울-세종, 함양-울산 등) 건설투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2013년 말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201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이래 2017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증가로 전환됨.
 - 2018년 부채 규모는 504.2조원으로 2017년 496.1조원 대비 약 8.1조원이 증가함.
 - 부채규모의 증가는 공기업 부채(전년대비 7.1조원 증가, 2.0% 증가)와 기타공공기관 부채(전년대비 1.1조원 증가, 7.6% 증가)가 증가한데 기인함.

145)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참고

〈표 Ⅲ-47〉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4	'15	전년비 증감 (증가율)	'16	전년비 증감 (증가율)	'17	전년비 증감 (증가율)	'18	전년비 증감 (증가율)
◇ 부채	519.1	504.7	△14.4 (△2.8)	500.5	△4.2 (△0.8)	496.1	△4.4 (△0.9)	504.2	8.1 (1.6)
· 공기업	377.4	365.3	△12.1 (△3.2)	363.0	△2.3 (△0.6)	364.1	1.1 (0.3)	371.2	7.1 (2.0)
· 준정부기관	130.0	125.4	△4.6 (△3.6)	123.4	△2.0 (△1.6)	118.5	△4.9 (△4.0)	118.5	0.0 (0.0)
· 기타공공기관	11.7	14.0	2.3 (19.3)	14.0	0.0 (0.5)	13.5	△0.5 (△3.7)	14.6	1.1 (7.6)
◇ 자본	258.6	276.5	17.9 (6.9)	299.4	22.9 (8.3)	315.0	15.6 (5.2)	325.1	10.1 (3.2)
· 공기업	183.9	190.3	6.4 (3.5)	200.0	9.7 (5.1)	204.9	4.9 (2.5)	208.1	3.2 (1.5)
· 준정부기관	57.1	68.0	10.9 (19.1)	78.3	10.3 (15.2)	87.4	9.1 (11.7)	89.6	2.2 (2.5)
· 기타공공기관	17.7	18.3	0.6 (3.2)	21.1	2.8 (15.7)	22.6	1.5 (7.0)	27.4	4.8 (21.0)
◇ 자산	777.8	781.2	3.4 (0.4)	799.9	18.7 (2.4)	811.1	11.2 (1.4)	829.3	18.2 (2.2)
· 공기업	561.2	555.6	△5.6 (△1.0)	563.0	7.4 (1.3)	569.0	6.0 (1.1)	579.3	10.3 (1.8)
· 준정부기관	187.1	193.4	6.3 (3.3)	201.7	8.3 (4.3)	205.9	4.2 (2.1)	208.1	2.2 (1.1)
· 기타공공기관	29.4	32.2	2.8 (9.6)	35.2	3.0 (9.1)	36.2	1.0 (2.8)	41.9	5.7 (16.0)

주: 1.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4~2018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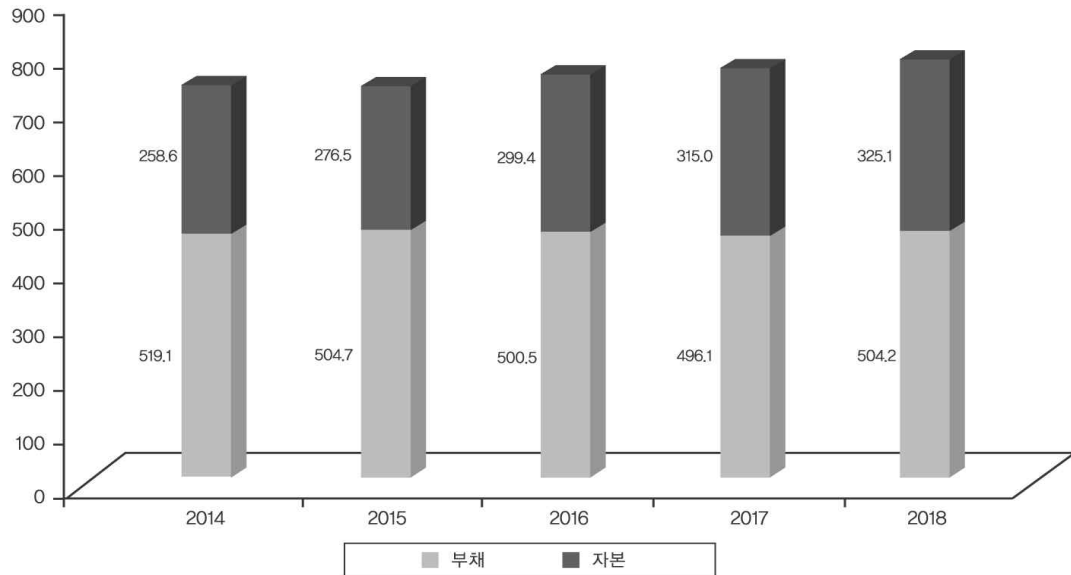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4.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1〉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자본 및 부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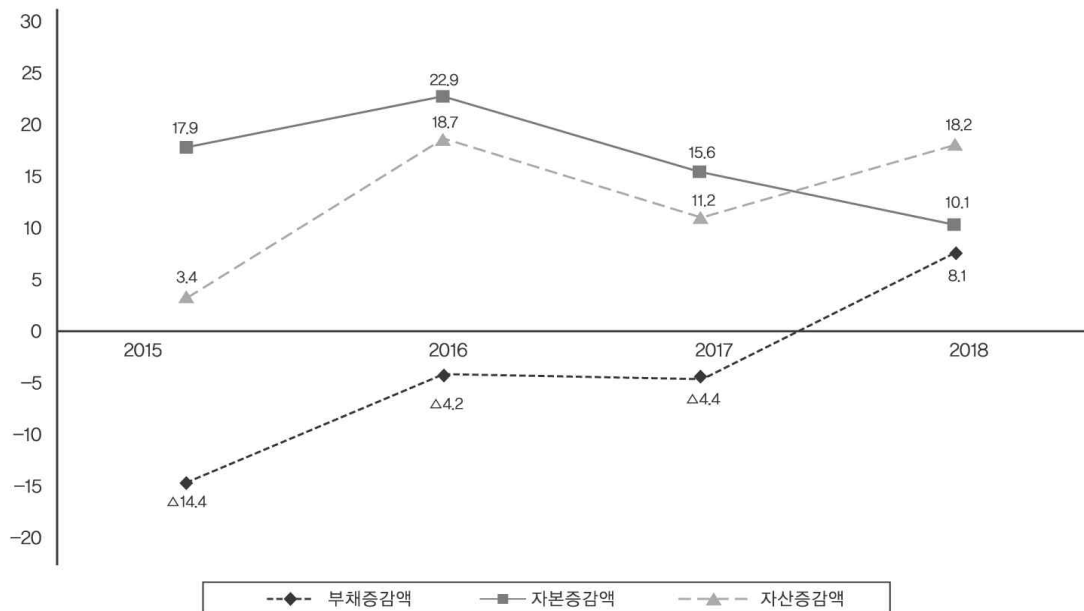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2〉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나. 부채 현황

- 2014년 이후 매년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504.2조원으로 전년대비 8.1조원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 부채 증가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연료비 상승 및 탈원전 영향으로 인해 전력 구입비용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 5.33조원의 부채가 증가하였음.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공급 설비투자 및 유가·환율변동에 따른 원료비 미수금으로 인한 차입금이 증가하여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2.19조원 증가하였음.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건설 투자 누계액이 증가하고, 정부출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부채가 증가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음.
- 준정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건강보험 보장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공운법 제39조의2 및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9개 기관¹⁴⁶⁾의 부채규모는 479.0조원으로 전년대비 6.7조원 증가하였으나, 부채비율은 166.8%로 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음.
- 이는 작년에 수립된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2018년 전망치인 480.8조원보다 약 1.8조원 개선된 실적임.
-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¹⁴⁷⁾하여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냄.

146)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철도시설공단(한전 자회사를 포함한 18개 기관은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도 해당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강원랜드

147) GDP대비 비중(%): ('09) 29 ('12~'13) 36 ('14) 35 ('15) 32 ('16) 30 ('17) 29 ('18) 28

〈표 III-48〉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14	'15	전년비 증감	'16	전년비 증감	'17	전년비 증감	'18	전년비 증감
◇ 부채	519.1 (201)	504.7 (183)	△14.4 (△18)	500.5 (167)	△4.2 (△16)	496.1 (157)	△4.4 (△10)	504.2 (155)	8.1 (△2)
공기업	377.4 (205)	365.3 (192)	△12.1 (△13)	363.0 (182)	△2.3 (△10)	364.1 (178)	1.1 (△4)	371.2 (178)	7.1 (0)
· 시장형	177.1 (187)	172.7 (167)	△4.4 (△20)	169.7 (158)	△3.0 (△9)	172.2 (163)	2.5 (5)	180.4 (176)	8.2 (13)
· 준시장형	200.2 (225)	192.6 (222)	△7.6 (△3)	193.3 (209)	0.7 (△13)	191.9 (194)	△1.4 (△15)	190.8 (181)	△1.1 (△13)
준정부기관	130.0 (228)	125.4 (185)	△4.6 (△43)	123.4 (158)	△2.0 (△27)	118.5 (136)	△4.9 (△22)	118.5 (132)	0.0 (△4)
· 기금관리형	79.2 (260)	71.3 (199)	△7.9 (△61)	68.7 (157)	△2.6 (△42)	63.3 (121)	△5.4 (△36)	60.3 (104)	△3.0 (△17)
· 위탁집행형	50.9 (191)	54.1 (168)	3.2 (△23)	54.8 (159)	0.7 (△9)	55.2 (157)	0.4 (△2)	58.3 (185)	3.1 (28)
기타공공기관	11.7 (66)	14.0 (76)	2.3 (10)	14.0 (66)	0.1 (△10)	13.5 (60)	△0.5 (△6)	14.6 (53)	1.1 (△7)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9개)	497.1 (214)	480.4 (193)	△16.7 (△21)	476.1 (177)	△4.3 (△16)	472.3 (168)	△3.8 (△9)	479.0 (167)	6.7 (△1)

주: 1. ()는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4~2018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3.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 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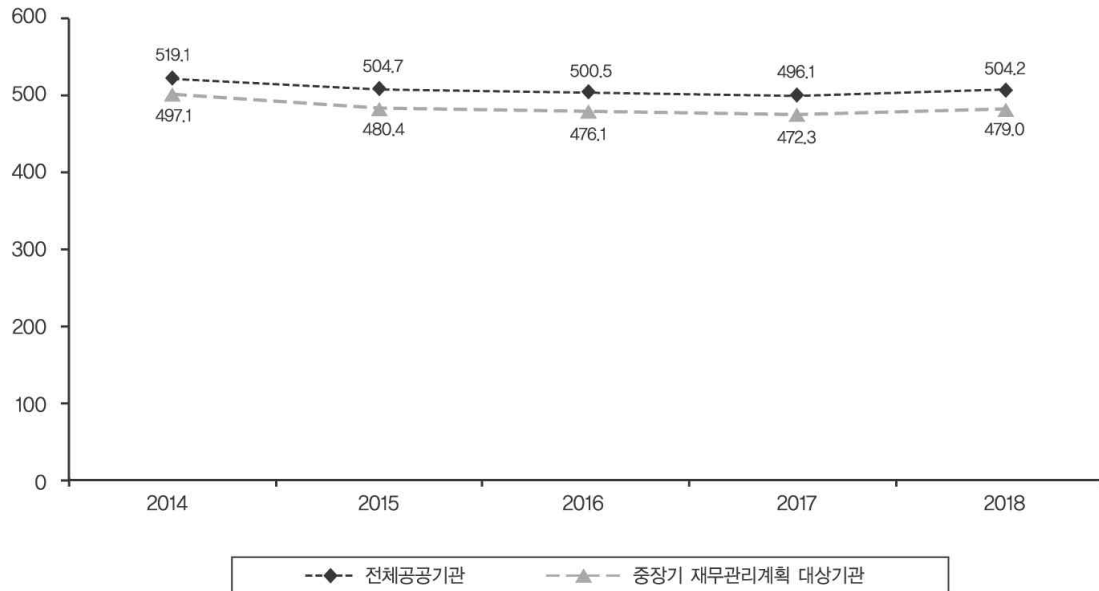
4. 소수점 반올림과 증감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수차이 조정을 일부 거침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18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3〉 최근 5년간 부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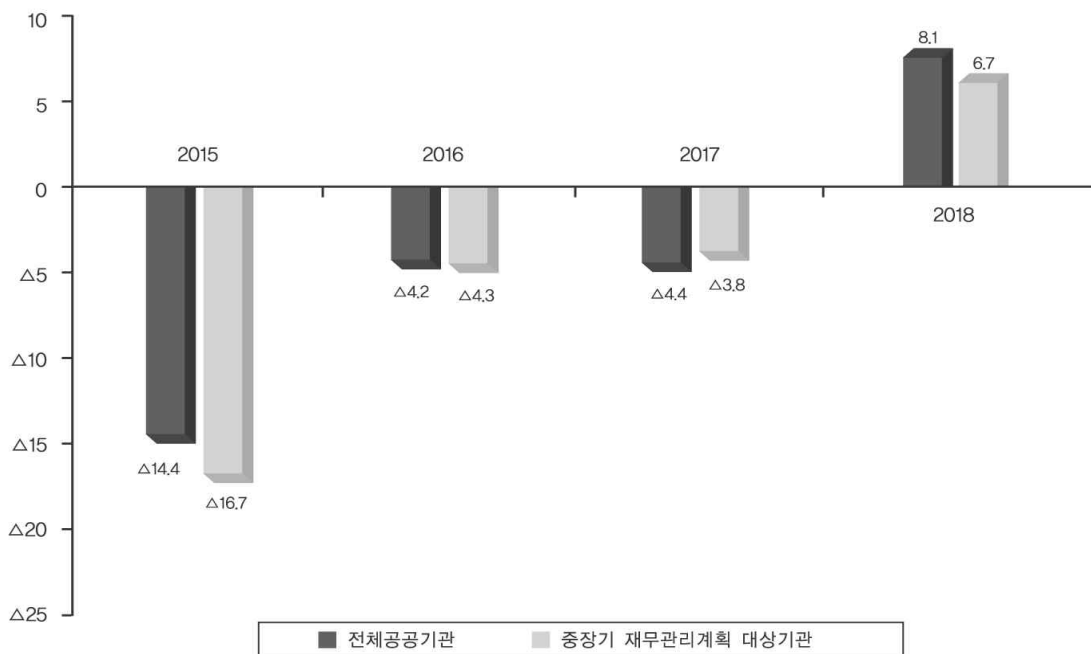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14〉 최근 4년간 부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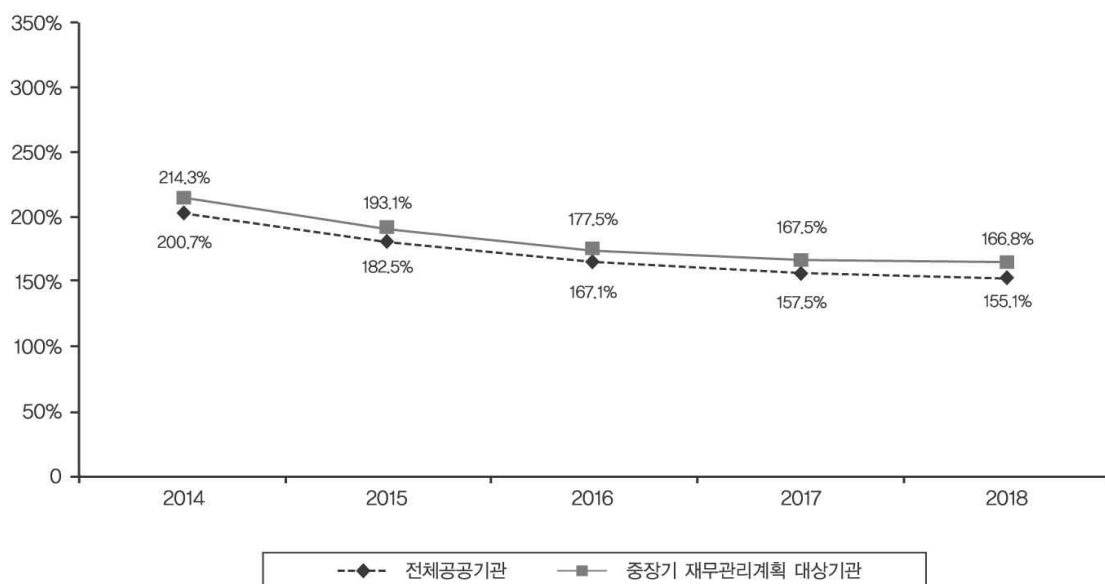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¹⁴⁸⁾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6년 연속 감소세¹⁴⁹⁾를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4%p 감소한 155.1%로 나타남.
-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증가¹⁵⁰⁾하였음에도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공공기관 자본이 325.1조원으로 전년대비 10.1조원 증가한데 기인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인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역시 2015년에 200%를 하회한 193.1%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에는 167.5%, 2018년에는 166.8%로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III-15〉 최근 5년간 부채비율 추이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48>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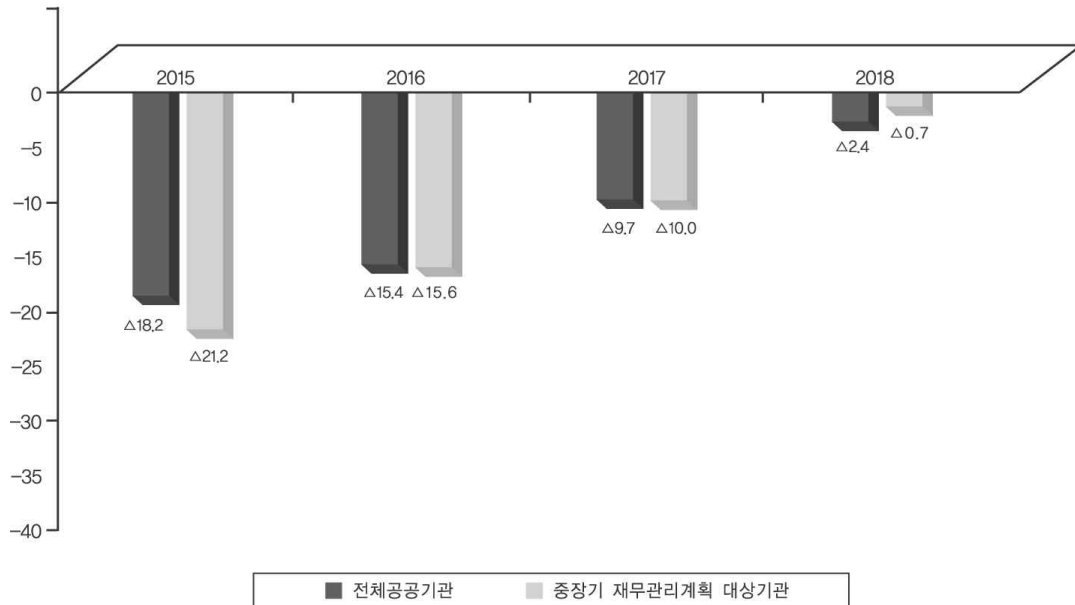
148) 부채비율: 부채/자본

149) 부채비율(%): ('12) 220 ('13) 217 ('14) 201 ('15) 183 ('16) 167 ('17) 158 ('18) 155

150) 2017년 496.1조원 → 2018년 504.2조원(8.1조원)

〈그림 Ⅲ-16〉 최근 4년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p)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Ⅲ-48>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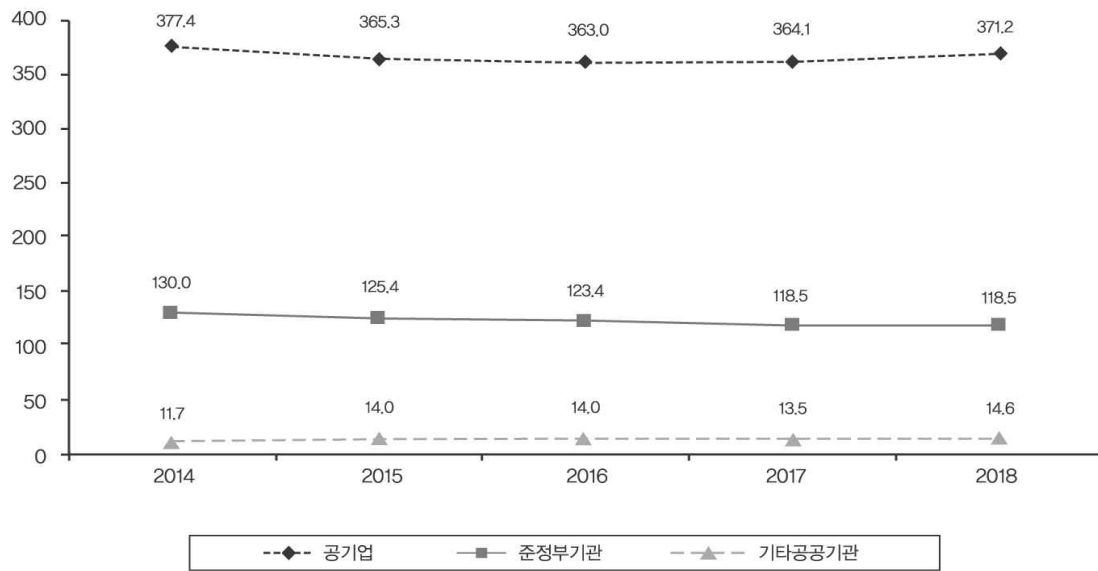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일정 기간 유사한 모습을 보이다 2017년 추세가 달라지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
- 2014년~2016년 사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부채를 감축 하였으나 2017년부터 공기업은 부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준정부기관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8년 감소 추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부채 감축 규모면에서 보면,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액(8.1조원)의 대부분이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기인함.
 - 공기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7.1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시장형 공기업¹⁵¹⁾의 부채 증가로 인한 것임.
 -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금관리형에 속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상호저축은행 구조 조정에 투입된 자금지원 회수 등으로 인한 부채 감축이 두드러진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여, 전체 준정부기관의 부채규모는 큰 변화가 없음.

151) 한국전력공사(5.3조), 한국가스공사(2.2조), 한국광물자원공사(0.5조), 한국석유공사(0.3조)

- 부채증가율의 경우 공기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준정부기관은 하락세를 유지 중이고 기타공공기관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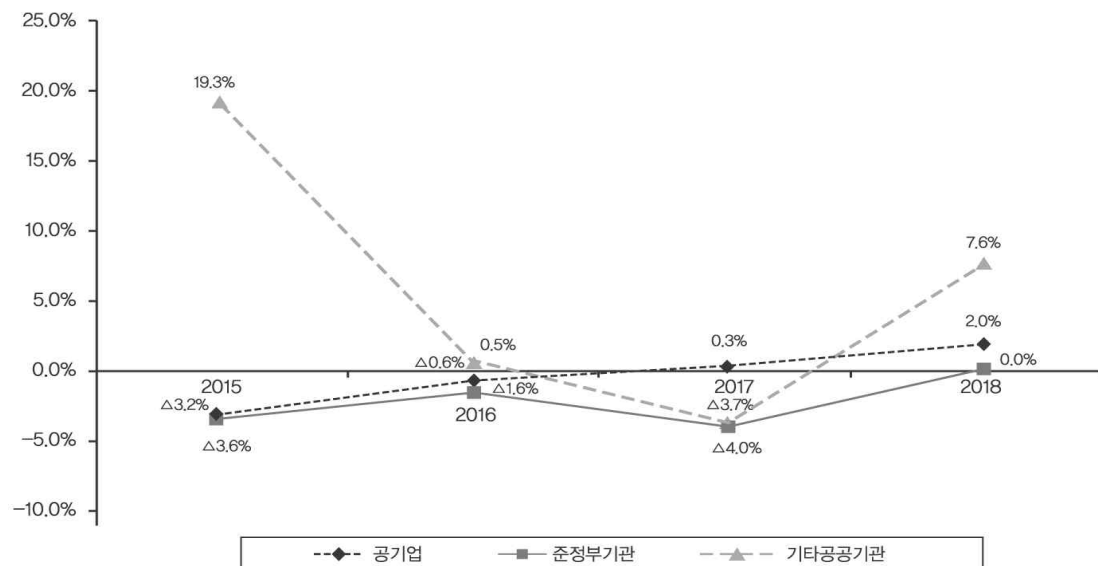
〈그림 III-17〉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현황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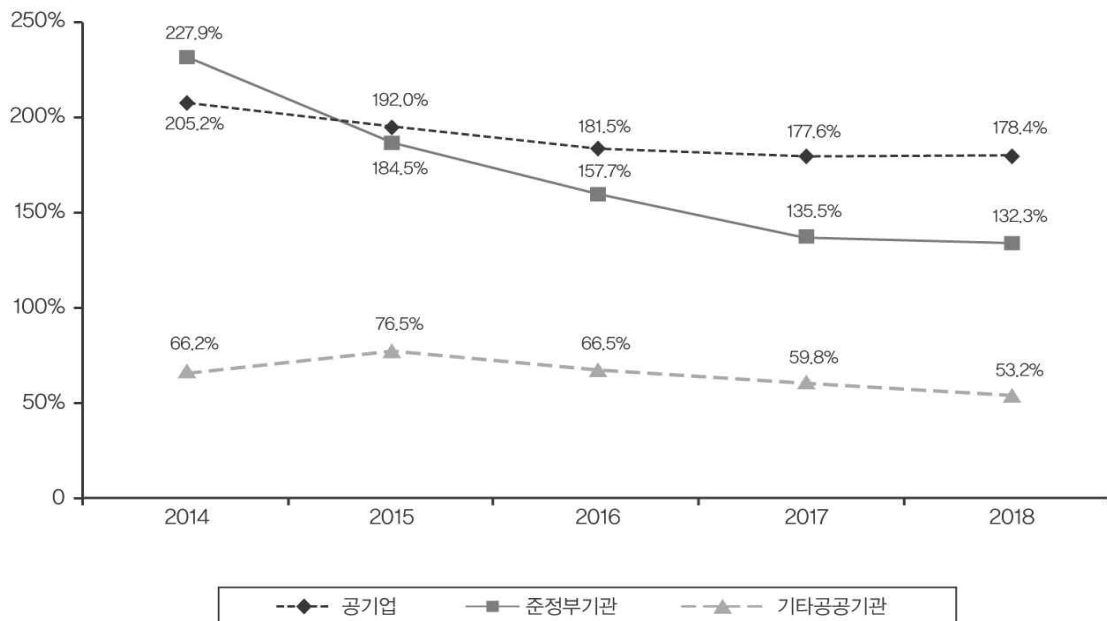
〈그림 III-18〉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4년 이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기타공공기관은 2016년에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8년까지 유지 중임.
-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다소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는 반면 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부채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2016년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¹⁵²⁾를 유지하여 2018년 부채비율이 53.2%로 나타남.

〈그림 Ⅲ-19〉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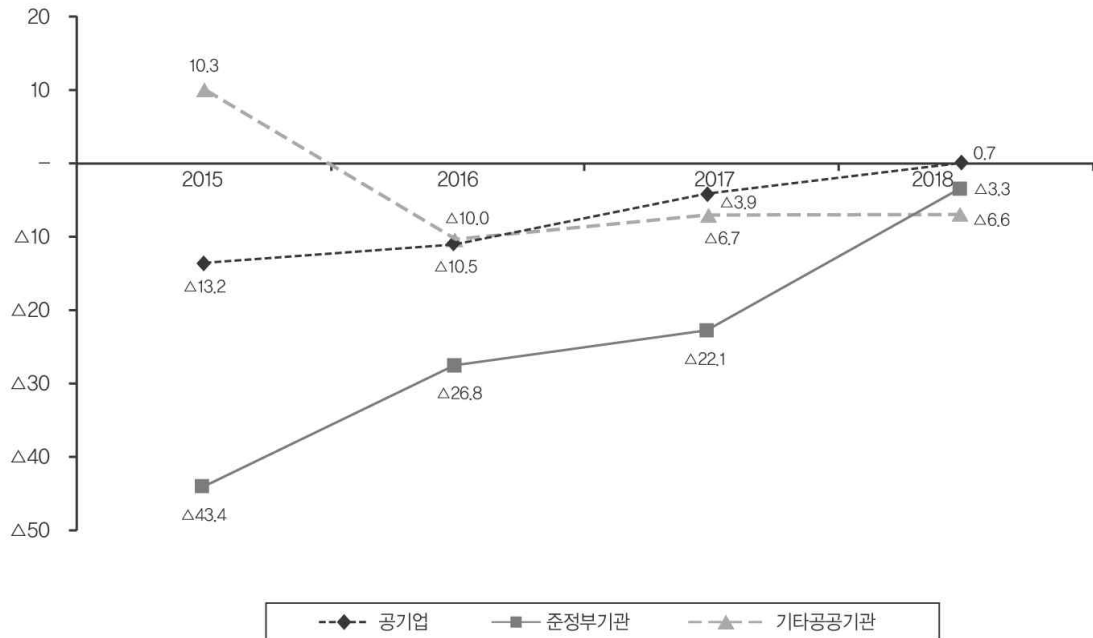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Ⅲ-48>의 부채비율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52) 2017년 전년대비 6.7%p 감소, 2018년 전년대비 6.6%p 감소

〈그림 III-20〉 공공기관 유형별 부채비율 증감 추이

(단위: %p)



주: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표 III-48>의 부채비율 증감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가 약 198.2조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약 182.1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나타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39%와 36%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전년대비 약 8.4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 규모가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전년대비 약 4.2조원 감소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급증한 것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함¹⁵³⁾에 기인함.
 -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 감소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채 감축 실적이 크게 작용함.

153) 한국전력공사(5.3조), 한국가스공사(2.2조)

〈표 Ⅲ-49〉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1,480	1,298	1,324	1,378	1,456	78	5.7
교육부	23	157,350	176,918	178,506	174,705	172,144	△2,561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33,450	35,971	34,871	31,487	27,936	△3,551	△11.3
외교부	3	865	1,710	1,215	1,043	1,248	205	19.6
통일부	2	34	31	30	30	34	4	13.5
법무부	3	407	464	481	638	693	55	8.6
국방부	3	275	254	309	310	274	△36	△11.6
행정안전부	3	195	232	318	438	468	31	7.0
문화체육관광부	32	20,738	21,604	23,580	21,478	24,376	2,898	13.5
농림축산식품부	11	84,462	90,870	93,280	99,151	101,120	1,969	2.0
산업통상자원부	41	1,799,462	1,752,068	1,719,340	1,737,558	1,821,201	83,643	4.8
보건복지부	27	86,749	88,954	97,374	96,850	132,470	35,620	36.8
환경부	11	151,296	148,993	152,232	151,820	155,543	3,723	2.5
고용노동부	11	7,027	7,481	7,442	7,904	9,238	1,334	16.9
여성가족부	5	69	50	69	66	87	21	31.2
국토교통부	25	2,055,874	1,999,768	2,009,803	2,006,509	1,982,797	△23,712	△1.2
해양수산부	18	34,586	34,569	34,542	34,353	42,006	7,653	22.3
중소벤처기업부	12	168,851	163,952	163,367	165,865	174,394	8,529	5.1
국무조정실	27	4,503	5,171	4,890	4,066	3,934	△132	△3.2
방송통신위원회	2	3,855	3,886	3,587	2,713	2,370	△343	△12.7
원자력안전위원회	3	468	570	494	421	509	88	21.0
금융위원회	8	497,642	429,557	394,043	343,432	301,876	△41,556	△12.1
공정거래위원회	2	55	111	86	77	92	15	18.8
국가보훈처	3	1,477	1,193	1,185	753	877	124	16.4
인사혁신처	1	71,820	71,546	73,309	68,052	73,759	5,707	8.4
식품의약품안전처	4	8	34	59	150	197	47	31.3
관세청	1	3	2	4	3	3	0	2.4
방위사업청	2	6,481	7,036	7,301	7,861	9,441	1,580	20.1
경찰청	1	572	1,284	267	247	444	197	79.8
소방청	1	77	132	147	152	118	△34	△22.5
문화재청	1	135	138	116	107	82	△25	△23.6
산림청	3	3	1	138	41	64	23	56.3
농촌진흥청	1	57	66	56	79	137	58	73.0
특허청	6	955	926	872	850	844	△6	△0.7
기상청	3	65	56	64	82	59	△23	△28.8
합 계	362	5,191,344	5,046,897	5,004,700	4,960,670	5,042,291	81,621	1.6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 가능
 3. 2019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2019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기준 부채 규모 상위 10개 기관은 2017년 부채 상위 10개¹⁵⁴⁾ 기관과 동일하며 일부 순위변동만 있음.

○ 10개 기관 모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이며 이 중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에너지 및 SOC 분야 공기업에 해당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제외한 9개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인 동시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른 부채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해당함.

〈표 III-50〉 2018년도 부채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조원, %, %p)

순위	기관명	2017년	2018년(A)	증감액	증감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전망치 (B)	전망치 대비 초과감축 (B-A)
1	한국토지주택공사	130.9 (306)	128.1 (283)	△2.8 (△23)	△2.2 (-)	128.1 (286)	0.00 (3)
2	한국전력공사	108.8 (149)	114.2 (161)	5.4 (12)	4.9 (-)	117.3 (165)	3.15 (4)
3	한국가스공사	29.0 (356)	31.2 (367)	2.2 (11)	7.6 (-)	29.4 (352)	△1.75 (△15)
4	한국도로공사	27.5 (82)	28.1 (81)	0.6 (△1)	2.3 (-)	28.2 (81)	0.08 (0)
5	한국철도시설공단	20.1	20.0	△0.1	△0.8	20.8	0.82
6	예금보험공사	23.3	17.9	△5.4	△23.0	18.2	0.28
7	한국석유공사	17.1 (718)	17.5 (2,287)	0.4 (1,569)	2.0 (-)	17.4 (1,282)	△0.12 (△1,005)
8	한국철도공사	14.9 (298)	15.6 (237)	0.7 (△61)	4.5 (-)	15.5 (233)	△0.1 (△4)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7 (634)	15.5 (584)	0.8 (△50)	5.3 (-)	15.0 (586)	△0.46 (2)
10	한국수자원공사	13.6 (188)	14.0 (180)	0.4 (△8)	2.8 (-)	14.3 (183)	0.24 (3)

주: 1. ()는 부채비율(=부채/자본)임

2.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3.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자본금·기본재산이 0인 기관으로 부채비율 산출 불가능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여타기관과 부채비율 일괄 비교 곤란

5.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계산하는데 일부 오차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54) 2017년도 부채 상위10기관의 순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예금보험공사, 6.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철도공사,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 한국수자원공사

다. 자산 현황

-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8년 공공기관 자산 총액은 829.3조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18.2조원)하였음.
- 공공기관 자산 규모 증가 추이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전년대비 10.3조원 증가)과 준정부기관(전년대비 2.2조원 증가), 기타공공기관(전년대비 5.7조원 증가) 모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의 자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유일하게 자산규모가 감소함.

〈표 III-51〉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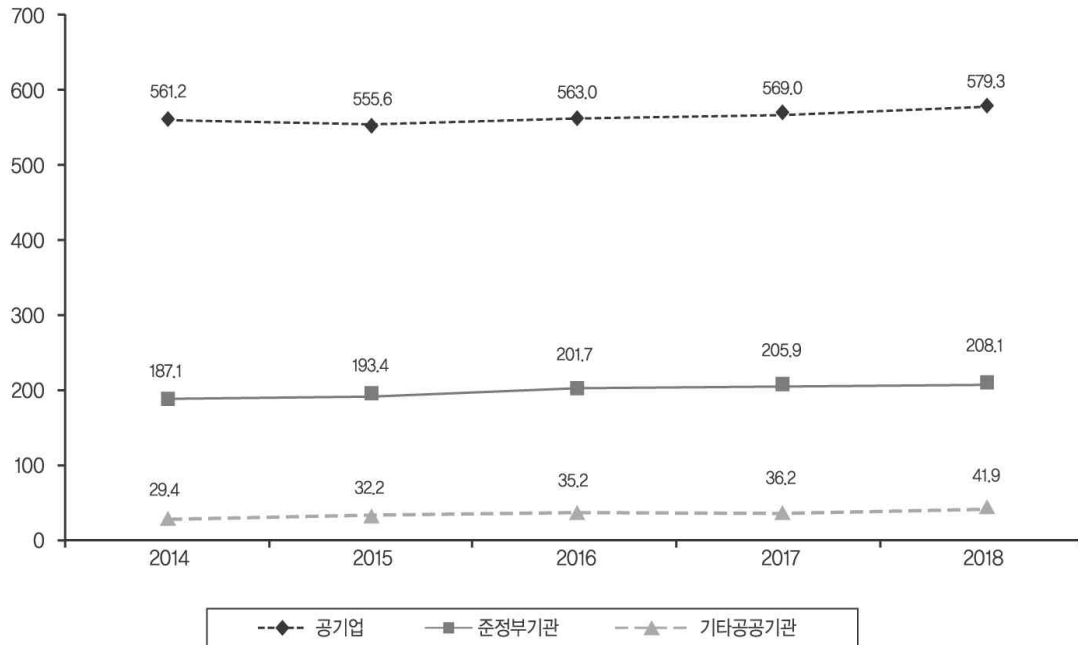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777.8	781.2	799.9	811.1	829.3	18.2	2.2
공기업	561.2	555.6	563.0	569.0	579.3	10.3	1.8
· 시장형	271.9	276.2	277.3	278.0	283.0	5.0	1.8
· 준시장형	289.3	279.4	285.7	291.0	296.3	5.3	1.8
준정부기관	187.1	193.4	201.7	205.9	208.1	2.2	1.1
· 기금관리형	109.6	107.1	112.5	115.5	118.4	2.9	2.5
· 위탁집행형	77.5	86.3	89.2	90.4	89.7	△0.7	△0.7
기타공공기관	29.4	32.2	35.2	36.2	41.9	5.7	16.0

주: 소수점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액의 합과 합계가 일부 오차 발생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1〉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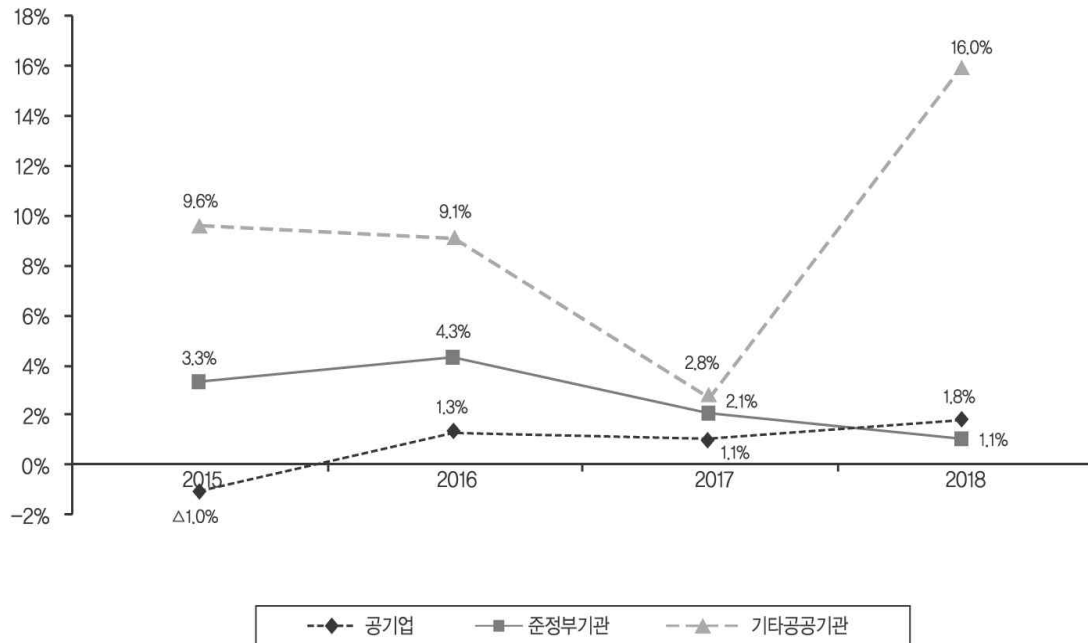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유형별로 자산증가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모든 유형의 자산증가율이 2016년보다 하락하였고, 2018년 들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증가율이 반등한 반면 준정부기관은 하락세를 유지함.
- 2015~2018년 사이 공기업의 자산증가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공기업 중 19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증가하여 1.8%의 자산증가율을 기록함.
- 준정부기관은 자산증가율이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7년에는 2.1%, 2018년에는 1.1%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2017년 자산증가율이 2.8%로 상당히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 대폭 상승하여 16.0%를 기록함.

〈그림 Ⅲ-22〉 공공기관 유형별 자산 증가율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공공기관 자산 현황을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가 약 305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자산이 약 269.8조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함.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37%, 33%로 총 70%에 육박함.
- 자산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전년대비 약 5.8조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전년대비 약 0.4조원 감소하였음.

〈표 III-52〉 최근 5년간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자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기관 수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획재정부	4	6,507	6,205	6,367	6,644	6,869	225	3.4
교육부	23	342,172	365,591	377,151	393,275	396,352	3,077	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	106,016	114,183	122,548	124,540	123,660	△880	△0.7
외교부	3	2,631	3,306	2,931	2,941	3,205	264	9.0
통일부	2	123	135	112	108	118	10	9.0
법무부	3	2,013	2,075	2,130	2,185	2,217	32	1.5
국방부	3	555	556	595	607	848	241	39.7
행정안전부	3	433	494	746	969	990	21	2.2
문화체육관광부	32	75,890	76,657	79,440	79,078	88,996	9,918	12.5
농림축산식품부	11	129,703	138,434	143,164	149,955	149,012	△943	△0.6
산업통상자원부	41	2,629,327	2,661,437	2,660,306	2,652,306	2,698,203	45,897	1.7
보건복지부	27	288,410	343,341	369,302	373,186	368,891	△4,295	△1.2
환경부	11	274,762	214,927	222,097	227,337	236,681	9,344	4.1
고용노동부	11	17,637	18,192	18,464	18,638	20,415	1,777	9.5
여성가족부	5	199	187	197	191	189	△2	△1.4
국토교통부	25	2,869,044	2,853,014	2,924,357	2,992,601	3,050,222	57,621	1.9
해양수산부	18	119,847	121,233	122,692	124,616	156,352	31,736	25.5
중소벤처기업부	12	212,618	210,713	210,701	219,956	228,754	8,798	4.0
국무조정실	27	8,749	9,703	9,751	9,437	9,392	△45	△0.5
방송통신위원회	2	7,273	7,342	6,961	5,964	5,518	△446	△7.5
원자력안전위원회	3	1,066	1,182	1,069	964	1,057	93	9.7
금융위원회	8	497,309	472,967	506,736	512,302	524,901	12,599	2.5
공정거래위원회	2	911	909	831	752	717	△35	△4.6
국가보훈처	3	4,148	4,090	4,137	4,013	4,173	160	4.0
인사혁신처	1	157,092	159,089	176,520	177,557	182,138	4,581	2.6
식품의약품안전처	4	21	49	75	167	212	45	27.2
관세청	1	18	19	24	28	33	5	18.3
방위사업청	2	16,861	18,720	21,226	22,313	24,514	2,202	9.9
경찰청	1	2,748	3,535	3,365	3,214	3,209	△5	△0.2
소방청	1	818	967	1,113	1,257	1,337	80	6.4
문화재청	1	164	170	150	146	125	△21	△14.5
산림청	3	15	14	1,171	768	772	4	0.6
농촌진흥청	1	196	215	236	190	212	22	11.5
특허청	6	2,170	2,166	2,153	2,241	2,475	234	10.4
기상청	3	121	113	118	127	107	△20	△16.1
합 계	362	7,777,566	7,811,928	7,998,935	8,110,573	8,292,867	182,294	2.2

주: 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 및 기금계정(직접관리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 산출. 다만,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소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금융위원회 소관)은 산출대상에서 제외

2.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합계, 증감액, 증감률에 오차 발생가능

3. 2019년 4월말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한 339개 공공기관(2019년 1월 지정 기준) 및 그 부설기관(23개 기관)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공공기관 자산 상위 10개 기관을 살펴보면, 2017년도 자산규모 상위 10개 기관¹⁵⁵⁾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관 모두 부채 상위 10개 기관에 포함됨.
-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석유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제외한 6개 기관이 전년대비 자산이 증가함.
 - 전체 공공기관 중 자산 증가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약 3.5조원), 한국가스공사(약 2.6조원)이며, 자산 감소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석유공사(약 1.7조원)임.

〈표 Ⅲ-53〉 2018년도 자산 규모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기관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1	한국전력공사	1,817,889	1,852,491	34,602	1.9
2	한국토지주택공사	1,736,829	1,733,331	△3,498	△0.2
3	한국도로공사	610,897	629,212	18,315	3.0
4	한국가스공사	371,394	396,897	25,503	6.9
5	국민건강보험공단	346,016	341,244	△4,772	△1.4
6	한국수자원공사	198,783	221,168	22,385	11.3
7	예금보험공사	208,673	217,968	9,295	4.5
8	한국철도공사	192,103	192,565	462	0.2
9	한국석유공사	203,127	186,496	△16,631	△8.2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82,663	182,643	△20	△0.0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6. 요약재무상태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4. 손익현황¹⁵⁶⁾

- 최근 공공기관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5.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실현하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늘리며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공공서비스 확대에 인하여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하였음.

155) 2018년도 자산규모 상위기관과 순위 동일

156)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보도자료, 2019. 5. 21. 등 참고

-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6년 15.4조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대비 8.2조원이 감소한 7.2조원을 기록하고 2018년에 다시 6.5조원이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이 0.7조원으로 하락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당기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당기순이익이 전년도(2017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하였고, 그 중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1조원 감소하며, 전년대비 두 배 이상의 손실을 기록함.
-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8년도 약 1조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 감소(전년대비 4.4조원, 559%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타공공기관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표 III- 54〉 최근 5년간 당기순손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4	'15	전년비 증감	'16	전년비 증감	'17	전년비 증감	'18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11.4	12.5	1.1	15.4	2.9	7.2	△8.2	0.7	△6.5 (△90.5)
공기업	4.3	4.9	0.6	9.0	4.1	4.2	△4.8	2.0	△2.2 (△52.3)
· 시장형	2.7	8.8	6.1	6.3	△2.5	1.0	△5.3	△1.1	△2.1 (△209.3)
· 준시장형	1.6	△3.9	△5.5	2.8	6.7	3.2	0.4	3.1	△0.1 (△2.9)
준정부기관	7.4	7.9	0.5	6.4	△1.5	3.2	△3.2	△1.0	△4.2 (△131.1)
· 기금관리형	0.7	2.2	1.5	3.1	0.9	2.4	△0.7	2.7	0.3 (11.8)
· 위탁집행형	6.7	5.7	△1.0	3.3	△2.4	0.8	△2.5	△3.6	△4.4 (△558.8)
기타공공기관	△0.3	△0.3	0.0	0.0	0.3	△0.1	△0.1	△0.3	△0.2 (△127.7)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38개)	11.1	12.2	1.1	14.8	2.6	6.9	△7.9	0.7	△6.2 (△89.4)

주: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14~2018년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료 작성

2.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관 고유계정을 대상으로 금액 산출

3. 공무원연금, 신보 등 일부 공공기관은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산출되지 아니하여 상기 수치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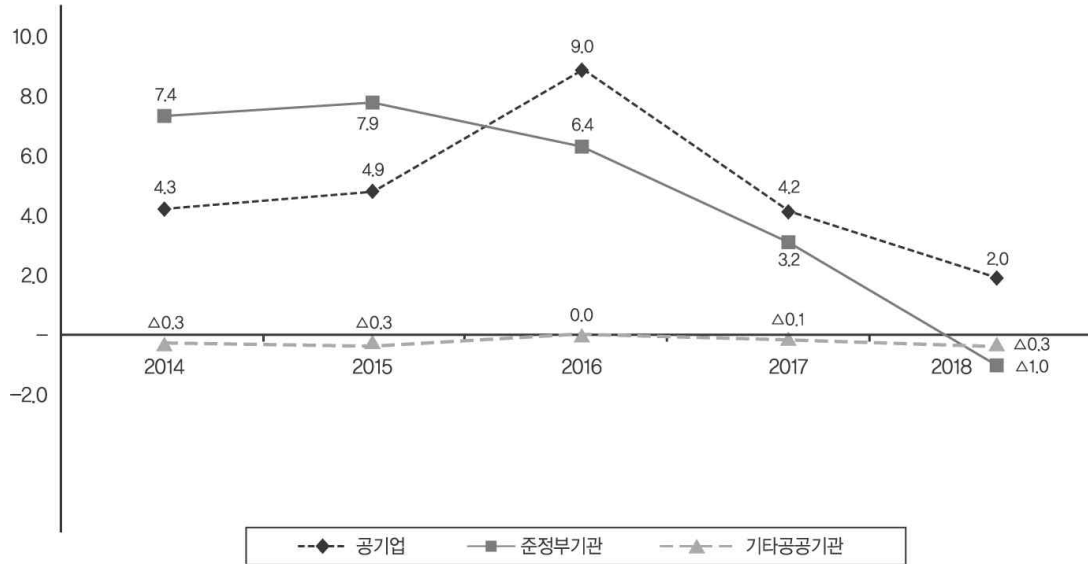
4. 소수점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증감액 및 증감률 오차 발생가능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2018년(39개)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7.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3〉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유형별 당기순손익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7.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에 순이익을 실현한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2017년 대상기관¹⁵⁷⁾과 차이를 보임.
 - 2017년에 순이익 1, 2위였던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상에서 제외됨.
 - 2018년에 신규 편입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각각 8위와 10위에 해당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중 2018년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실현한 기관 이기는 하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대비 약 25.5% 감소함.
 - 당기순이익 상위 10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5개 기관¹⁵⁸⁾이 전년 대비 2018년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7년에 당기순손실 1위 기관이었으나, 2018년 당기순이익이 1.7조원 증가하면서 전체 공공기관 중 당기순이익 상위 5위를 기록함.

- 2018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공공기관 역시 2017년 대상기관과 차이를 보임.

157)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158) 한국토지주택공사(△7,122억원), 예금보험공사(△1,185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527억원), (주)강원랜드(△1,403억원), 한국마사회(△399억원)

- 2017년 순이익 상위 1, 2위였던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에 순손실 상위 2위, 1위 기관으로 전환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항목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3.9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구입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1.2조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함.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상위 3, 4, 5위를 유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석탄공사는 순위가 2위, 6위에서 8위, 9위로 변동함.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3개 기관이 2018년에 신규로 편입됨.
- 2017년에 순손실이 발생한 상위 10개 기관¹⁵⁹⁾ 중 한국가스공사는 수익이 대폭 개선되어 순이익 상위 5위를 기록하였고, 근로복지공단, 경상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4개 기관은 상위 10개 기관에서 제외됨.
 - 이 중 경상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기관은 2018년에 흑자를 실현함.

〈표 III- 55〉 2018년도 당기순이익·순손실 상위기관 현황

(단위: 억원, %)

순 위	기관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순이익	1 한국토지주택공사	27,889	20,767	△7,122	△25.5
	2 예금보험공사	20,983	19,798	△1,185	△5.6
	3 인천국제공항공사	11,168	11,209	41	0.4
	4 한국주택금융공사	3,124	6,226	3,102	99.3
	5 한국가스공사	△11,917	5,267	17,184	△144.2
	6 주택도시보증공사	5,655	5,128	△527	△9.3
	7 (주)강원랜드	4,375	2,972	△1,403	△32.1
	8 한국수자원공사	1,849	2,402	553	29.9
	9 한국마사회	2,227	1,828	△399	△17.9
	10 한국철도시설공단	1,215	1,652	437	35.9

159)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대한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경상대학교병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순 위	기관명	2017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순손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3,685	△38,954	△42,639	△1,157.0
	2 한국전력공사	14,414	△11,745	△26,159	△181.5
	3 한국석유공사	△7,368	△11,595	△4,227	57.4
	4 한국광물자원공사	△4,106	△6,861	△2,755	67.1
	5 서민금융진흥원	△3,139	△3,360	△221	7.0
	6 한국지역난방공사	699	△2,265	△2,964	△424.2
	7 한국해양진흥공사	-	△1,955	-	-
	8 대한석탄공사	△799	△823	△24	3.1
	9 한국농어촌공사	277	△617	△894	△322.7
	10 한국장학재단	514	△479	△993	△193.2

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설립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17. 요약손익계산서(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9. 2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5월 정부는 38개 출자기관 중 올해 배당이 결정된 21개 출자기관의 배당금 1조 4,382억원을 수납하여 확정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3,679억원(△20.4%) 감소하여, 평균 배당성장¹⁶⁰⁾도 2.5%p 낮아짐.¹⁶¹⁾
- 38개 정부출자기관 중 당기순손실 발생기관¹⁶²⁾, 이월결손 보전 기관¹⁶³⁾ 등 17개 기관은 제외함.
- 2018년 정부 배당수입이 감소한 것은 출자기관의 기업구조조정, 혁신성장투자, 환경안전투자,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5조원 규모의 배당금을 조정한 결과임.
- 출자기관이 납부한 배당금은 일반회계에 6,696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에 7,685억원이 각각 세입·수입으로 처리됨.

160) 평균 배당성장(배당금÷당기순이익, %) : ('15) 24.38 → ('16) 30.25 → ('17) 31.98 → ('18) 34.98 → ('19) 32.48(△2.5%p)

161) 기획재정부,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보도자료, 2019. 5. 21.

16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관광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16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표 III-56〉 38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배당			'19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2,304	2,377	4,681	1,556	1,769	3,325
2	중소기업은행	2,067	-	2,067	1,872	-	1,872
3	한국산업은행	1,348	123	1,471	1,328	120	1,449
4	한국주택금융공사	520	51	572	518	47	565
5	한국수출입은행	389	6	395	409	7	415
6	한국가스공사	-	-	-	282	46	328
7	한국항공공사	351	328	679	178	166	344
8	한국도로공사	2	386	388	1	259	260
9	부산항만공사	221	-	221	143	-	143
10	한국자산관리공사	91	-	91	145	-	145
11	울산항만공사	115	0.1	115	95	0.1	95
12	인천항만공사	35	15	50	41	15	56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	43	-	43
14	한국조폐공사	41	-	41	37	-	37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3	-	23	29	-	29
16	한국감정원	19	-	19	18	-	18
17	한국방송공사	46	-	46	-	-	-
18	한국농어촌공사	94	-	94	-	-	-
19	한국전력공사	923	-	923	-	-	-
20	한국관광공사	23	-	23	-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9	11	20	-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	-	-
27	서울신문사	-	-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기관명		'18년 배당			'19년 배당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 기금	소계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	-	-
31	인천국제공항공사	-	4,725	4,725	-	3,755	3,755
32	주택도시보증공사	-	1,025	1,025	-	1,229	1,229
33	한국투자공사	-	267	267	-	262	262
34	대한송유관공사	-	11	11	-	10	10
35	88관광개발주식회사	-	0.1	0.1	-	0.5	0.5
36	한국지역난방공사	-	113	113	-	-	-
37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8	대한석탄공사	-	-	-	-	-	-
합 계		8,622 (19개)	9,438 (15개)	18,060 (25개)	6,696 (16개)	7,685 (14개)	14,382 (21개)

자료: 기획재정부,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보도자료, 2019. 5. 21.

5. 보수수준¹⁶⁴⁾

가. 직원 평균보수 수준

- 2018년 전체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¹⁶⁵⁾의 평균보수는 약 6,798만원 수준으로 유형별 평균보수 수준은 공기업(약 7,842만원), 기타공공기관(약 6,743만원), 준정부기관(약 6,540만원) 순임.¹⁶⁶⁾

164)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및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9. 4. 30. 기준) 참고

165)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함

166) 직원 평균보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상시종업원 전체에게 지급된 총보수지급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값임 (여기서 상시종업원은 각월 급여지급일 현재 급여 지급대상 정규직원 수의 연간 합계를 12월로 나눈 인원임). 기관별 직원 평균보수는 알리오시스템 공시항목 중 「6. 직원 평균보수 및 신입사원 초임 현황-1.직원 평균보수」 항목에 공시된 「1인당 평균 보수액」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함. 알리오시스템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성과상여금 등의 세부항목으로 지급된 총 금액으로 산출

- 공기업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약 7,842만원)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보다 높음.
 - 시장형 공기업의 직원 평균보수(약 8,256만원)는 2018년 전체 기관 유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1,458만원, 준정부기관보다 약 1,716만원, 기타공공기관보다 약 1,513만원 정도 높은 수준임.
- 준정부기관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6,540만원)는 3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258만원 정도 낮으며 기타공공기관 대비 약 203만원 적음.
 -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정규직 직원 평균보수는 약 6,331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467만원 낮은 수준임.

〈표 III-57〉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현황(정규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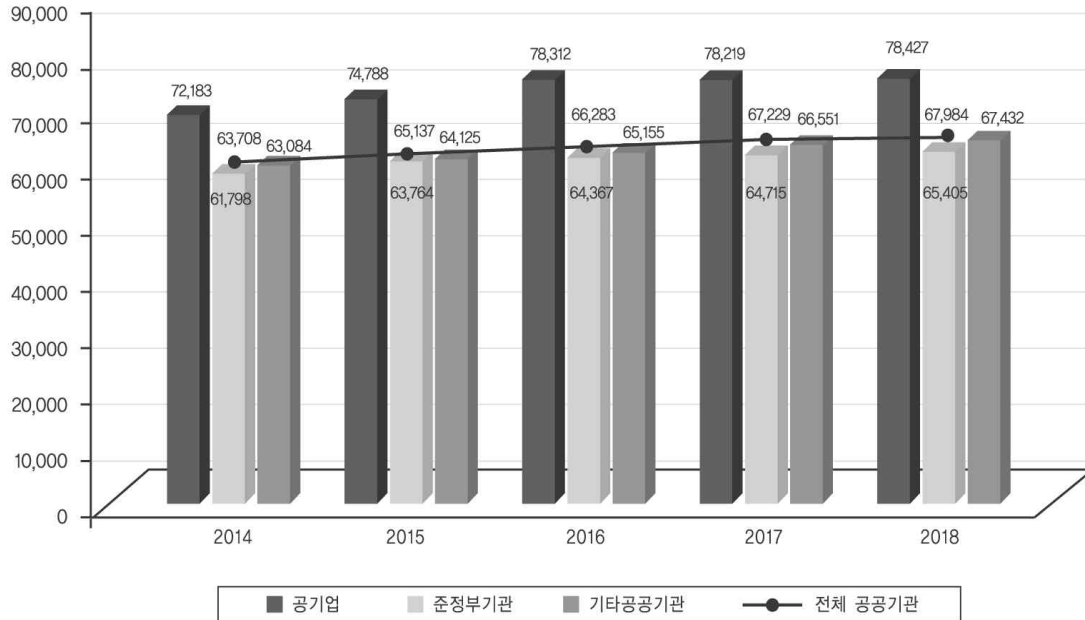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63,708	65,137	66,283	67,229	67,984	755	1.1
공기업	72,183	74,788	78,312	78,219	78,427	208	0.3
· 시장형	74,807	76,701	81,191	81,823	82,565	742	0.9
· 준시장형	70,084	73,257	76,008	75,336	75,116	△219	△0.3
준정부기관	61,798	63,764	64,367	64,715	65,405	690	1.1
· 기금관리형	71,681	74,889	76,975	77,239	77,834	595	0.8
· 위탁집행형	60,001	61,793	62,214	62,602	63,308	706	1.1
기타공공기관	63,084	64,125	65,155	66,551	67,432	881	1.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19. 4. 30. 기준)

〈그림 III-24〉 최근 5년간 직원 평균보수 추이(정규직 기준)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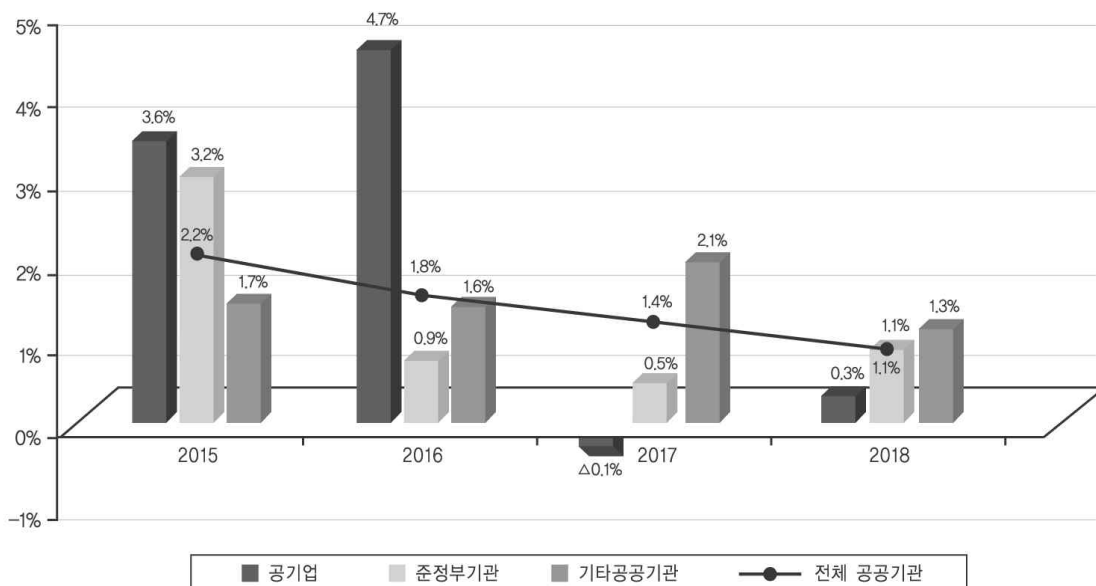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 공공기관 전체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1.1%(약 75만원) 상승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준시장형 공기업¹⁶⁷⁾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직원 평균보수가 전년대비 0.8~1.3% 수준으로 증가함.
- 전년대비 직원 평균보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년대비 1.3%(약 88만원) 증가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전체 유형 중 2018년 직원 평균보수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상승 수준은 1.1%(약 70만원)로 시장형 공기업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다른 유형과 달리 준시장형 공기업은 전년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약 22만원, △0.3%)한 것으로 나타남.
 - 준시장형 공기업 중 10개 기관¹⁶⁷⁾이 전년대비 정규직 직원의 평균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감소율이 5%이상인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전KDN, 한전KPS(주) 등 3개 기관임.

167)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전력 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 3개 기관 모두 2018년 실시된 2017년 경영실적평가를 최초 수검한 기관¹⁶⁸⁾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경영평가 성과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대부분 유형에서 직원 평균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은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¹⁶⁹⁾임.
- 준시장형 공기업은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직원 평균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2015년부터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 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기타공공기관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며 최근 2년간은 상승률도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¹⁷⁰⁾
- 공공기관 유형별 직원 평균보수 인상률과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¹⁷¹⁾을 비교해보면, 모든 유형이 지침상의 상한선(2.6%)을 준수함.

〈그림 III-25〉 최근 4년간 직원 평균보수 증가율 추이(정규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직원 평균보수」(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168) 2017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2018년부터 경영실적평가 수검

169) 2016년 7,601만원 → 2017년 7,534만원(△67만원) → 2018년 7,512만원(△22만원)

170)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보도자료, 2016.12.8. 참고

171) 201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2018년도 총인건비 예산 편성 시 201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2.6%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함.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2016년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직원의 1인당 평균 임금 수준과 해당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기관법, 과기출연기관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포함)과 부처 직할 연구기관은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나. 상임임원 연봉 수준¹⁷²⁾

- 공공기관 상임임원(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의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¹⁷³⁾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관련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음.
 - 임원 보수지침은 상임임원의 기본연봉 책정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적용함.
 - 기관장의 기본연봉은 매년 정무직 공무원 중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며 기관장의 기본연봉이 해당연도 차관의 연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설정하고 이하인 경우는 매년 차관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하도록 함.
 -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기본연봉은 기관장 기본연봉의 100분의 80을 상한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는 기관장 연봉의 100분의 80과 동액으로 하고 100분의 80이하인 경우는 매년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에 따라 기본연봉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부터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 중 5개 금융분야 기관¹⁷⁴⁾은 공공기관 혁신지침 제5조(보수) 제2항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용하여 상임임원의 보수를 책정하여야 함.
- 2018년 기관장(상임),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의 평균연봉 수준을 살펴 보면, <표 III-58>과 같음.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약 1억 6,888만원 수준임.
 -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약 1억 9,429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2,541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172)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된 「5. 임원연봉」과 주요통계 중 '임원 평균연봉' 자료를 활용함. 알리오시스템상 상임임원에 대한 연봉은 연도말 결산기준으로 상임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총보수액을 의미하며 총보수액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하여 산출

173) 2018.3월 공공기관 관련 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임원 보수지침의 적용범위를 공공기관 전체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제한

174)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 시장형 공기업(약 2억 655만원)이 준시장형 공기업(약 1억 8,450만원)간 기관장 평균연봉이 약 2,205만원 높은 수준임.
- 시장형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음.
- 준정부기관 기관장 평균연봉은 약 1억 7,590만원으로 공기업보다는 1,839만원 낮으나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는 약 702만원 높은 수준임.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2억 1,834만원)은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데, 공공기관 전체 평균보다 약 4,946만원 높은 편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균연봉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1억 6,839만원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 평균연봉(약 1억 6,151만원)은 공공기관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체 평균보다 737만원 낮음.
- 기타공공기관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공기업보다 약 3,278만원 낮은 수준이고 준정부기관보다 약 1,439만원 정도 낮은 수준임.

〈표 III-58〉 최근 5년간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기 관 장	전체 평균	151,483	159,910	165,798	165,775	168,883	3,108	1.9
	공기업	166,069	185,932	201,881	190,474	194,299	3,825	2.0
	준정부기관	155,388	167,297	173,661	172,264	175,909	3,645	2.1
	기타공공기관	147,002	151,903	155,885	158,564	161,519	2,955	1.9
상 임 이 사	전체 평균	126,997	135,821	140,169	142,030	145,680	3,650	2.6
	공기업	128,544	140,334	152,330	148,924	150,216	1,292	0.9
	준정부기관	127,134	138,534	142,868	142,669	146,590	3,921	2.7
	기타공공기관	125,673	129,838	129,509	136,831	141,858	5,027	3.7
상 임 감 사	전체 평균	134,734	144,770	150,658	150,021	154,684	4,663	3.1
	공기업	129,677	141,778	154,010	152,083	152,848	765	0.5
	준정부기관	139,655	152,715	158,071	152,989	161,084	8,095	5.3
	기타공공기관	134,446	140,574	142,502	146,246	151,075	4,829	3.3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

□ 최근 5년간의 상임임원 평균연봉 현황은 <그림 III-26>, <그림 III-27>, <그림 III-28>과 같음.

- 상임이사가 최근 5년 내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2017년에만 소폭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함.
- 기관장 평균연봉의 경우, 2017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음.
 -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은 최근 5년 동안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8년에는 다른 유형의 기관장 평균연봉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382만원)가 인상되었으나 2016년 수준(약 2억 188만원)에는 이르지 못함.
 -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17년 소폭 하락했지만 2018년에 2017년 하락 폭을 이상을 만회하여 2018년 기관장 평균연봉이 2016년(1억 7,366만원)보다 높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2014년 이후 기관장 평균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상률은 2015~2017년 사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으나 2018년에 다시 인상률이 상승¹⁷⁵⁾함.
- 상임이사 평균연봉의 최근 5년간 추이는 기관장 평균연봉과 유사한 모습으로 평균연봉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5년부터 다소 둔화되던 평균연봉 인상률이 2018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의 평균연봉은 정부정책의 영향¹⁷⁶⁾으로 2014년 큰 폭으로 하락 이후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7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2014년 모든 유형의 상임이사 평균연봉이 급감하면서 기관 유형별 평균연봉 격차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이후 인상률 차이로 인해 유형간 격차가 이전보다 심화되어 2016년에는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격차가 약 2,282만원 수준까지 이룸.
 - 공공기관 유형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격차는 2017년부터 완화되어 2018에는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간 격차가 836만원 수준까지 개선됨.
 -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상임이사 평균연봉 상승폭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2018년 기준 평균연봉 인상률이 3.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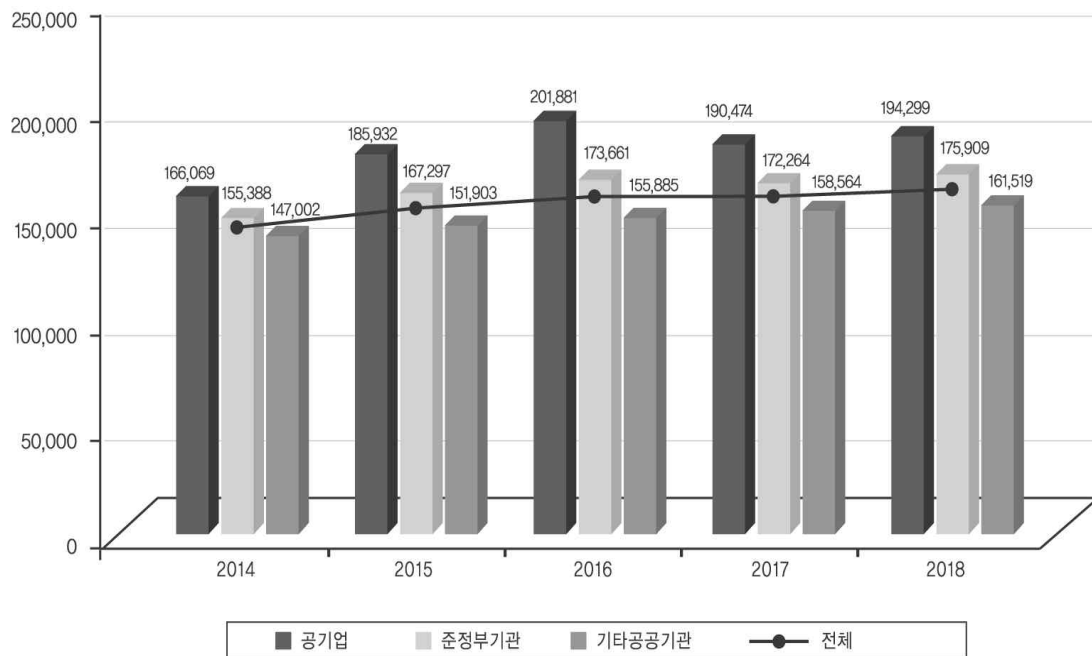
175) 2015년 7.7% → 2016년 3.8%(△3.9%p) → 2017년 1.7%(△2.1%p) → 2018년 1.9%(0.2%p)

176)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임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개정하고,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개정된 보수지침에 따라 상임임원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할 것을 명문화

- 전체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경우,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2017년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 크게 상승하여 2016년 수준을 상회¹⁷⁷⁾하고 다른 상임임원에 비해 높은 평균연봉 인상율(2018년 기준 3.1%)을 기록함.
- 기관장이나 상임이사와 달리 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은 최근 5년간 준정부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대비 809만원(5.3%)이 상승하면서 전체 유형 중 전년대비 인상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상임감사 평균연봉의 5년 추이를 보면 다른 상임임원에 비해 유형 간 격차가 적은 편이나 2018년에 준정부기관 상임감사 평균연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유형별 상임감사 평균연봉 격차가 다소 커짐.

〈그림 III-26〉 최근 5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추이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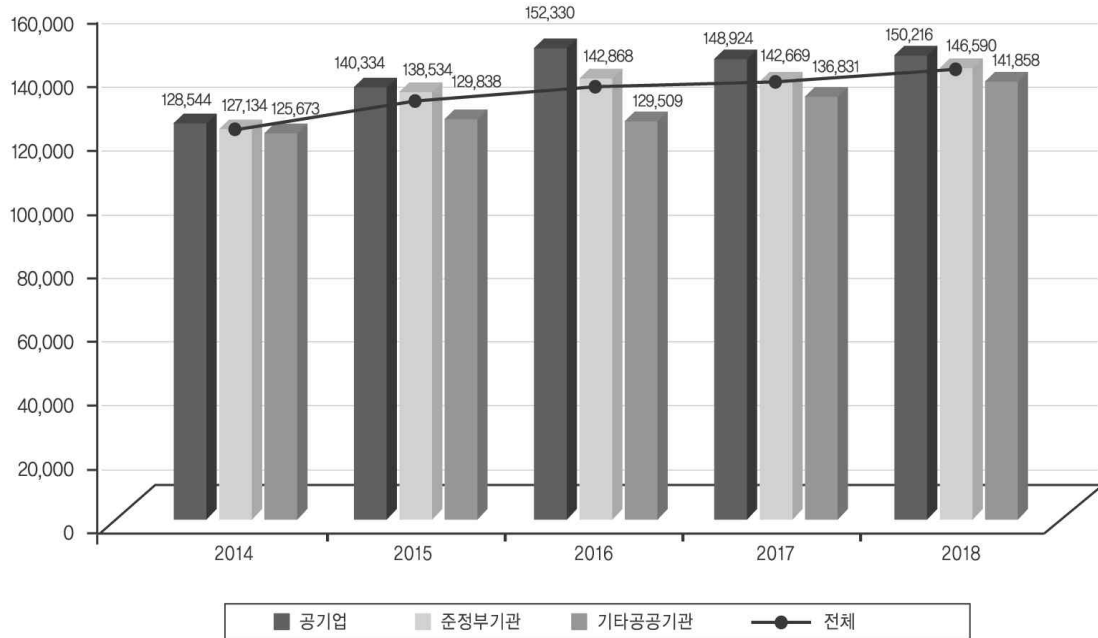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177) 2014년 1억 3,473만원 → 2015년 1억 4,477만원(1,004만원) → 2016년 1억 5,066만원(589만원) → 2017년 1억 5,002만원(△64만원) → 2018년 1억 5,468만원(466만원)

〈그림 Ⅲ-27〉 최근 5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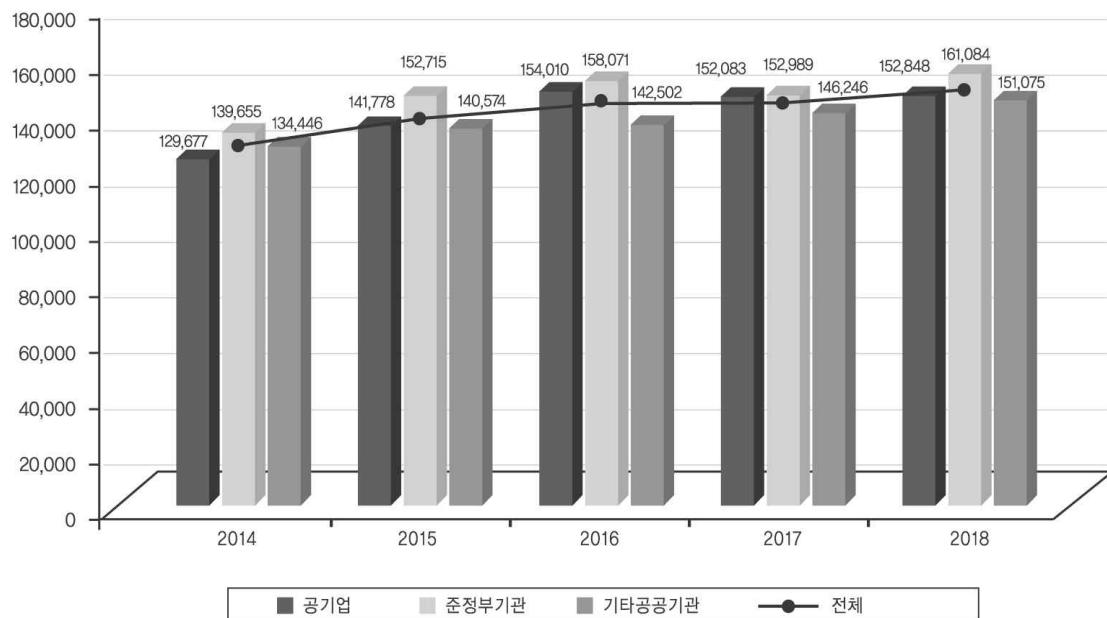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28〉 최근 5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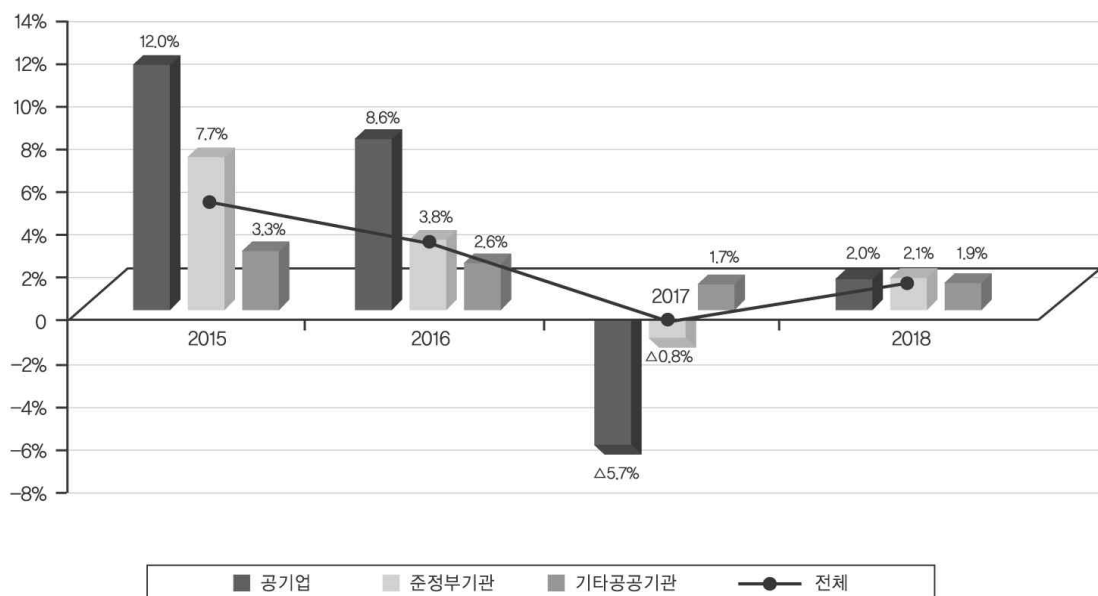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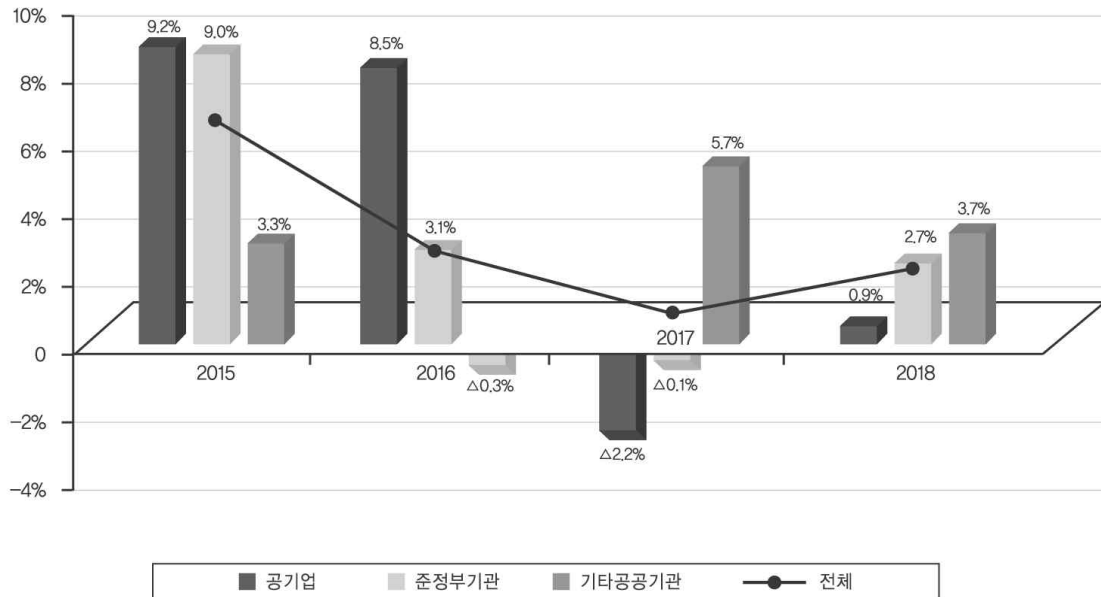
- 상임임원 평균연봉 수준의 변화를 전년대비 증감률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III-29>, <그림 III-30>, <그림 III-31>과 같음.
- 전반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회계연도는 2015년임.
 - 2017년까지는 평균연봉 증가 추세(증가율)가 둔화되는 모습이다가 2018년에 다시 평균연봉 증가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2017년에 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의 평균연봉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다 2018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회복됨.
 - 전년대비 상임임원 평균연봉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높았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임원 유형에 따라 다른 추세를 보임.

<그림 III-29> 최근 4년간 기관장(상임) 평균연봉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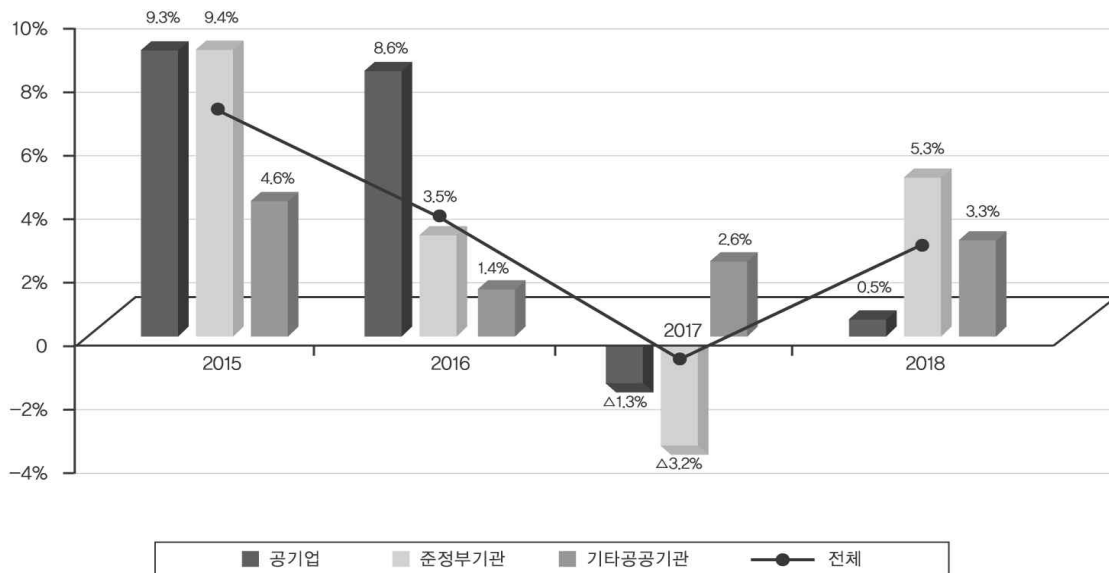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0〉 최근 4년간 상임이사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31〉 최근 4년간 상임감사 평균연봉 증감률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임원 평균연봉」(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다. 복리후생비 수준

- 2018년 중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에게 지급된 무상지급 형태의 복리후생비 총 규모는 약 8,955억원임.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2018년 임직원 수가 전년대비 10.5%(36,460명) 증가함에 따라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도 전년대비 9.5%(776억원)이 증가함.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이 4,273억원, 준정부기관이 1,928억원,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이 2,754억원 수준임.
 - 전체 공공기관의 총 복리후생비 중 각 유형별 복리후생비 비중을 살펴보면, 공기업이 47.7%, 기타공공기관이 30.7%, 준정부기관이 21.5%를 차지함.
 -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는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의 영향을 받음.
 - 2018년 정원 기준 공공기관 유형별 임직원 수 규모를 비교하면, 공기업(139,814명), 기타공공기관(129,839명), 준정부기관(113,219명) 순임.
 - 이는 유형별 복리후생비 지급규모와 동일한 모습으로 복리후생비가 임직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59〉 최근 5년간 기관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7,467	7,849	8,073	8,179	8,955	776	9.5
공기업	3,264	3,724	3,765	3,784	4,273	489	12.9
· 시장형	1,586	2,034	2,107	2,133	2,303	170	8.0
· 준시장형	1,679	1,690	1,658	1,651	1,970	319	19.3
준정부기관	1,806	1,811	1,848	1,830	1,928	98	5.4
· 기금관리형	511	515	527	542	584	42	7.7
· 위탁집행형	1,295	1,296	1,321	1,288	1,344	56	4.3
기타공공기관	2,397	2,315	2,460	2,565	2,754	18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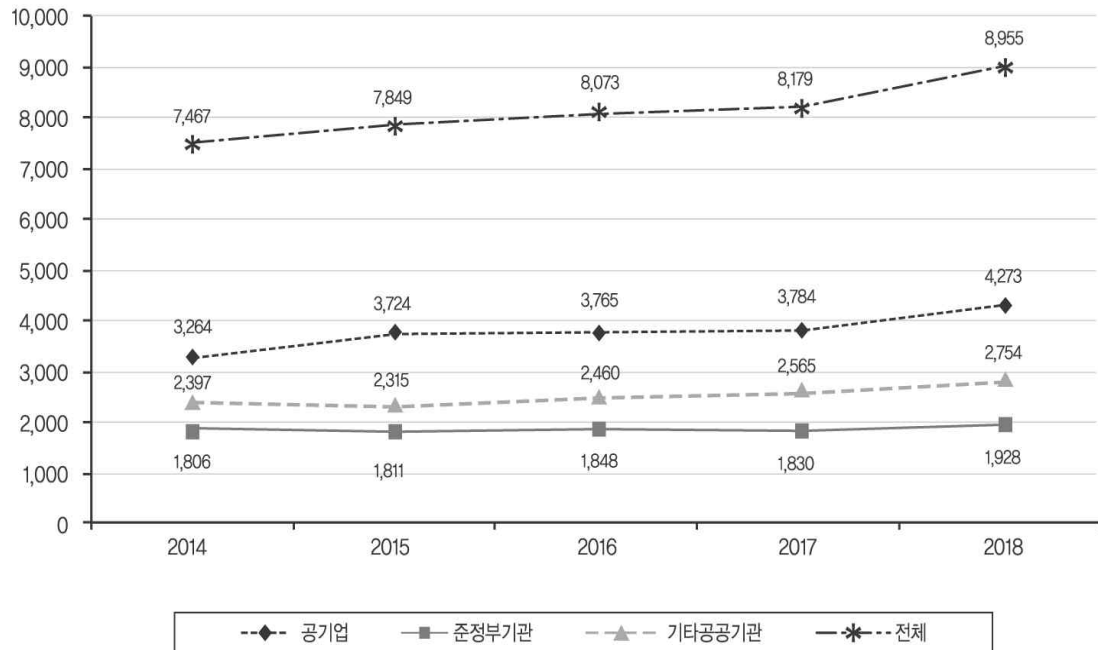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19. 4. 30. 기준)

- 최근 5년간 무상지급된 복리후생비 총액 추이 <그림 Ⅲ-32>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임.
- 2013년 12월 시행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추진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은 2014년 대폭 감소하였으나(약 7,467억원),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약 8,955억원으로 크게 상승함(전년대비 9.5% 증가).
 - 전체 복리후생비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남.
 - 2018년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의 복리후생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증가(전년대비 19.3%)하여 전체 복리후생비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
 - 공공기관 유형별로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지원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공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인 반면 준정부기관은 2017년 소폭 감소했다 2018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지원 규모 수준이나 증가율 모두 높은 수준이며 전체 공공기관의 추이와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준정부기관의 경우, 복리후생비 무상지급액 규모의 변화가 3개 유형 중 가장 미미한 편이며 다른 유형과 달리 2017년에 지원 규모가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무상지급 규모는 2015년에 소폭 감소한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189억원 증가함.
 - 2014년 대비 2018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은 19.9%이며 유형별 증가율은 공기업 30.9%, 준정부기관 6.8%, 기타공공기관 14.9%로 나타남.
 -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4년 3,264억원에서 2018년 4,273억원으로 약 30.9% 증가(1,009억원)하였으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의 증가율(19.9%)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특히 시장형 공기업¹⁷⁸⁾의 증가율은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45.2%에 이름.
 - 반면 기타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위탁집행은 준정부기관은 2014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이 3.8%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4.3%)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178) 2014년 1,586억원 → 2018년 2,303억원(717억원 증가)

〈그림 III-32〉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현황(무상지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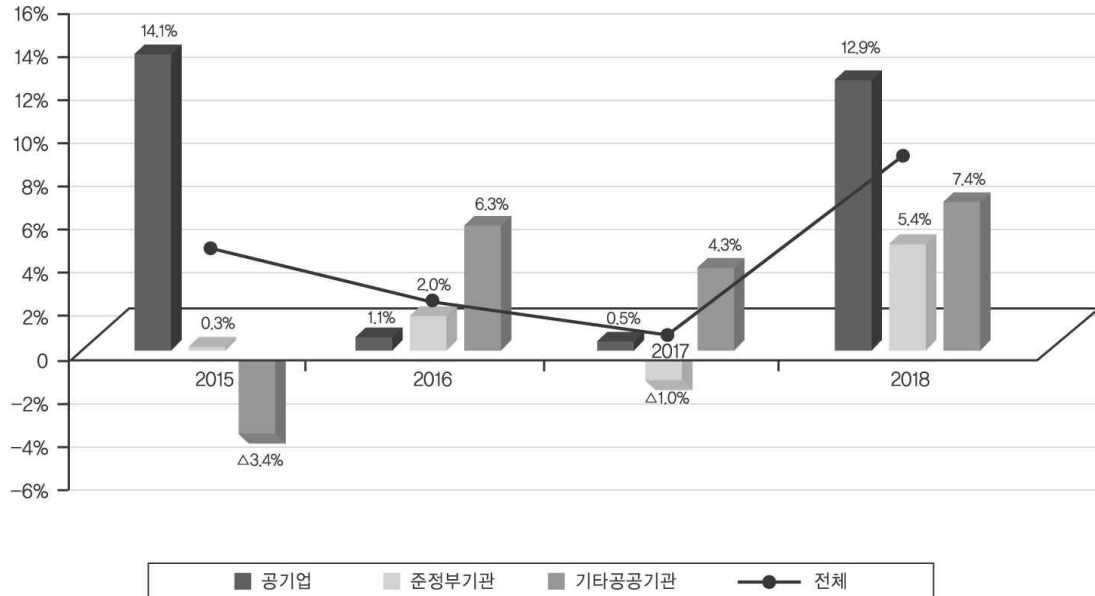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8년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
- 공기업의 경우, 증가율 자체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은 하나 다른 유형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고 2018년(12.9%)에는 2015년 증가율(14.1%)에 미치지지는 못하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최근 4년간 각각 한차례씩(준정부기관 2017년, 기타공공기관 2015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Ⅲ-33〉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 증감률 추이(무상지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복리후생비 지원 규모」(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보육비, 문화여가비, 행사지원비, 의료비, 선택적복지, 학자금 등 주요 복리후생비 항목별 지급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표 Ⅲ-60>과 같음.
- 2018년 보육비는 2014년 대비 크게 증가(323억원, 125.7%)하였으며, 2017년과 대비해서도 크게 증가(84억원, 17.0%)함.
 -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문화여가비는 2014년과 대비할 때 증가(66억원, 23.3%)하였으나, 전년도와 대비하면 소폭 증가(9억원, 2.8%)한 모습임.
 - 이는 정부휴가 권장정책에 따른 문화활동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행사지원비는 2016년 소폭 감소이후 꾸준히 오르며, 2014년 대비 28.5%, 2017년 대비 3.6%씩 상승함.
- 의료비는 2014년에 대비할 때 조금 감소하였으며(△2억원, △0.2%), 2013년 이래 2015년에 한차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 선택적 복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규모가 큰 복리후생 항목으로 2018년 규모는 3,242억원임.

- 2017년에는 지원 규모가 다소 감소되는 모습이지만 2018년에는 306억원이 증가하여 10.4%의 증가율을 보임.
- 학자금은 2014년 대비해서 증가(67억원, 7.1%)한 모습이며, 2017년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함(△19억원, △1.9%).

〈표 III-60〉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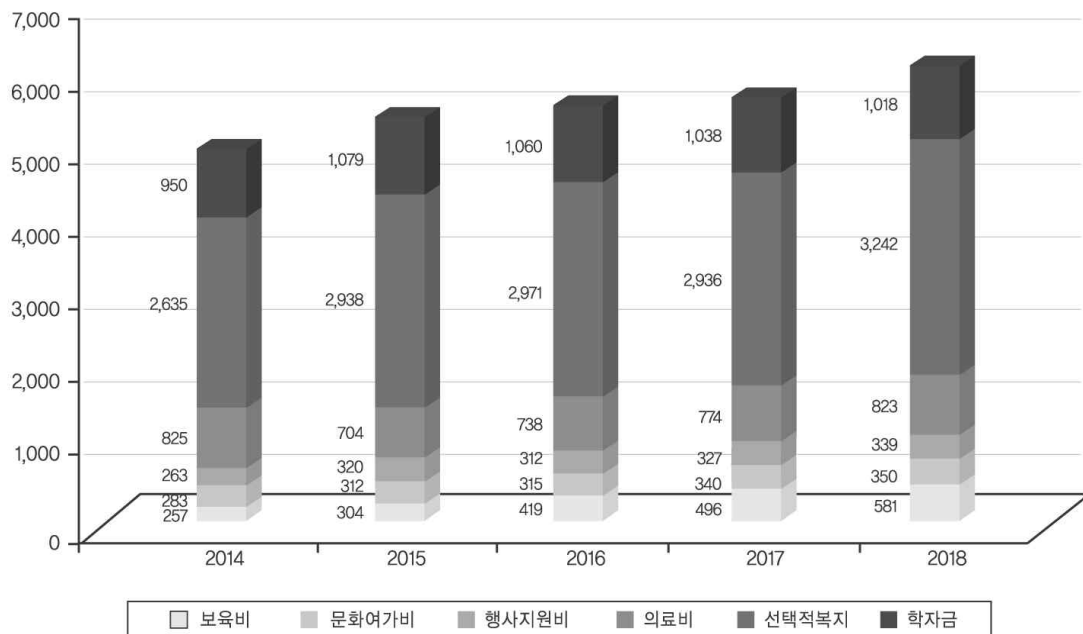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14	'15	'16	'17	'18	'14년 대비		'17년 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보 육 비	257	304	419	496	581	323	125.7	84	17.0
문화여가비	283	312	315	340	350	66	23.3	9	2.8
행사지원비	263	320	312	327	339	75	28.5	11	3.6
의 료 비	825	704	738	774	823	△2	△0.2	48	6.3
선택적복지	2,635	2,938	2,971	2,936	3,242	606	23.0	306	10.4
학 자 금	950	1,079	1,060	1,038	1,018	67	7.1	△19	△1.9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 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4〉 최근 5년간 복리후생비 주요항목 추이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통계다운로드」에 게시된 복리후생비 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는 2014년 822억원으로 급감한 이후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 큰 폭으로 하락함(△722억원, △22.7%).
-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학자금 무상지원 등을 폐지토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15년에는 경영실적의 호전과 2015년 예산편성지침상 직원 1인당 기금누적액 상한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가 증가함.
 - 2018년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총액 2,460억원에서 공기업 출연금은 약 1,718억원으로 전체의 69.8%를 차지하며, 2017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18년에 대폭 감소함(△936억원, △35.3%).
 - 2018년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감소한 것은 시장형 공기업에서 1,390억원의 감소(△58.8%)가 발생한데 기인함.
 - 준정부기관의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125억원)는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37.4% 정도(약 34억원) 증가함.
 - 기타공공기관은 전체의 25.1% 수준인 618억원 수준이며 전년대비 41.1% 정도(약 180억원) 증가함.

〈표 Ⅲ-61〉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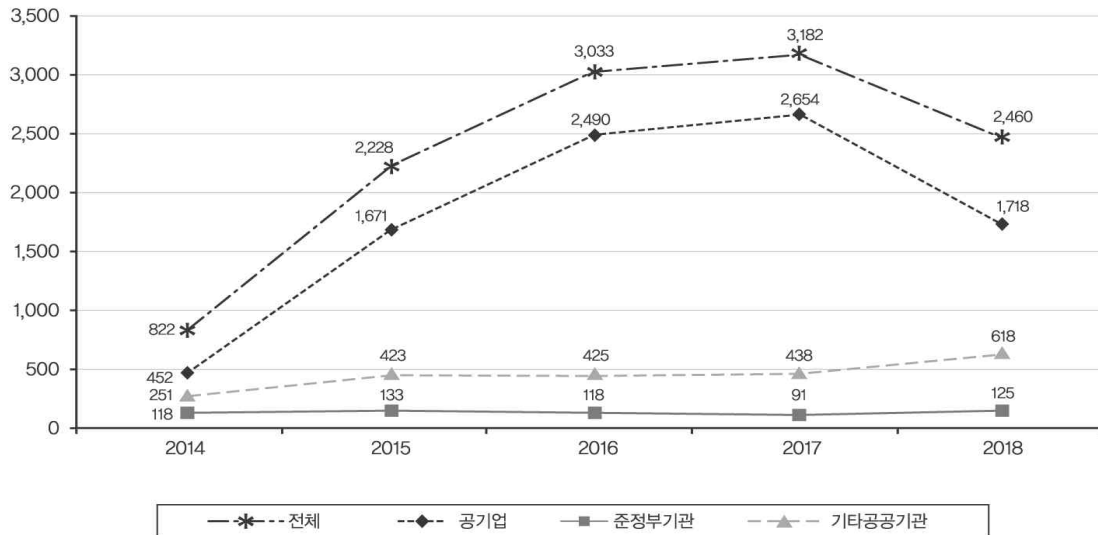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14	'15	'16	'17(A)	'18(B)	증감 (B-A)	전년대비 증감률
합 계	822	2,228	3,033	3,182	2,460	△722	△22.7
공기업	452	1,671	2,490	2,654	1,718	△936	△35.3
· 시장형	212	1,291	2,243	2,363	973	△1,390	△58.8
· 준시장형	241	380	247	291	745	454	156.0
준정부기관	118	133	118	91	125	34	37.4
· 기금관리형	54	72	45	33	42	9	27.3
· 위탁집행형	65	60	73	58	83	25	43.1
기타공공기관	251	423	425	438	618	180	41.1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2019. 4. 30. 기준)

〈그림 III-35〉 최근 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주요통계(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6. 외부 평가결과

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¹⁷⁹⁾

1) 기관 평가제도 개요

□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운법 제48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실적평가(이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함.¹⁸⁰⁾

○ 경영실적평가는 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외부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1984년에 최초 실시되어 35년째

179)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2017. 12. 28.,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7. 11.,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9.,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2019. 3. 9.,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 기관별 우수사례 배포」, 보도자료, 2019. 7. 26.,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보도자료, 2018. 12. 12.,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등 참고

180) 공운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기관장평가(공공기관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2018년도부터 평가부터 기관평가에 통합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별도로 다루지 않음

시행중인 대표적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중 하나임.

- 경영실적평가는 매년 3~6월 사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경영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음.
 -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기관 경영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주무부처 주관 하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¹⁸¹⁾
 -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
 - 경영평가단은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며, 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18년(2017년도 평가)부터 경영평가단을 공기업 평가단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함.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체계, 평가유형,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대상연도 개시 전에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사전에 정하고 있음.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에 대한 조치를 시행함.
 - 성과급 지급률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함.
 - A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음.
 - D등급 이하인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해 해임 건의 등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경상경비예산이 삭감(0.5~1%p 이내)될 수 있으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여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함.
-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공운법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2019.3~6월)하고, 그 최종결과와 후속조치를 2019년 6월 20일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¹⁸²⁾
- 2019년 실시한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을 기준으로 하여 1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18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준용하여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의무는 없음

182) 공운법 제48조 제7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 2019년 평가단은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는 경영평가단 98명 외에 감사평가단 10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평가단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평가단의 대표성을 제고함.
 - 2018년도 평가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분야 전문가를 위촉함.¹⁸³⁾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분야 전문가를 확충하였음.
 -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임기를 합리적으로 제한(3년 이상 연임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특정위원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기관의 로비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평가위원이 임기 중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수주 등으로 해촉 된 경우, 향후 5년간 경영평가단 참여를 제한함.
 -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는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을 추구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을 운영하였음.
 - 2018년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던 ‘참관단’을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민 참관단’으로 확대하여 운영함.¹⁸⁴⁾
-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관평가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를 대상으로 총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됨.
 - 공기업은 2개 유형(공기업 I, 공기업 II),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함.
 - 2018년도 평가 대상기관 중 최초로 기관평가를 수검한 기관은 5개 이고, 그 중 공기업에서 위탁집행 유형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1개 기관임.
 - 2018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주)강원랜드는 공기업2 유형으로 평가받았으며,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개 기관은 강소형 유형으로 평가받음.

183)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관련 주무부처, 시민단체 추천 인사 위촉

184)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2019. 3. 9.

-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도 평가까지 공기업2 유형으로 평가받았으나, 2018년도 평가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평가유형이 변경됨.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유형이 변경된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도 기관평가에서 공기업2 유형으로 평가 받았으며,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5개 기관은 2018년도 기관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019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에스알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된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18년도 기관 평가를 받지 않음.¹⁸⁵⁾

185)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표 III-62〉 2018년도 기관평가 대상기관(128개)

유 형		평가대상기관
공 기 업 (35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5개)	<u>(주)강원랜드</u>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 정 부 기 관 (93개)	기금 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집행형 (3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43개)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u>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u> , 영화진흥위원회,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u>한국산림복지진흥원</u>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u>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u>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u>한국재정정보원</u>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 1. 신규 평가 대상기관(5개)은 이탤릭체 및 밑줄로 표시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물자원공단(구. 한국수산물자원관리공단)은 기관명이 변경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9. p. 10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사회적 가치, 공공성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2017. 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경영실적평가의 평가지표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등 2개 범주, 20여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⁸⁶⁾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서는 비계량지표의 비중을 52%로 높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간 평가체계 및 지표를 차별화하였음.
 -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지표체계를 유형별로 달리하여 ‘경영관리:주요사업’ 배점을 공기업(55:45), 준정부(45:55)로 차별화함.¹⁸⁷⁾
 - 사회적 가치를 기존 지표체계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배점이 대폭 확대되었음.¹⁸⁸⁾¹⁸⁹⁾
 - 경영관리 범주에서 사회적 가치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등 5대 지표로 구성되며, 일자리 가점은 종전의 가점 방식이 아닌 평가지표체계에 반영하여 일원화하였음.¹⁹⁰⁾
 - 주요사업 지표에서 사회적 가치는 기관 고유사업 수행과정에서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하였으며, 공기업은 경영관리를 중심으로, 준정부기관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함.
 -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는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의 세부평가 내용에서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 고려여부’를 추가하였음.¹⁹¹⁾
 -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함.
 - 2018년도 경영평가편람에 ‘혁신노력 및 성과(3점)’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혁신성장 가점(2점)’을 부여함.¹⁹²⁾
 - 주요사업 성과평가에서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을 평가함.

186)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는 <부록 7> 참고

18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2017. 12. 28.

188)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189) 안전, 일자리 창출 및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이 공기업은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은 20점에서 28점으로 대폭 확대되었음

190)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을 10점 가점항목으로 평가한 바 있음

191)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7. 11.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9.을 참고하여 작성

192) 기획재정부,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2019. 3. 9.

-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는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 간 과열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 제도를 적용하였음.
- 2016년도 경영실적평가까지는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한 상대평가 결과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으나, 2017년도 평가부터는 종합 및 범주별 등급 산정 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각각 50%씩 병행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함.
- 상대평가의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었어도 다른 기관에 비해 개선이 낮으면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함.¹⁹³⁾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통해 각각 산출된 종합점수와 범주별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6개 등급(탁월(S)/우수(A)/양호(B)/보통(C)/미흡(D)/아주미흡(E))으로 기관의 등급을 산출함.

2)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이하 ‘기관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남.
 -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B등급 이상의 상위등급은 확대되었고, 하위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임.
-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이 A등급(우수)은 20개 기관, B등급(양호)은 51개 기관, C등급(보통)은 40개 기관, D등급(미흡)은 16개 기관, E등급(아주미흡)은 1개 기관임.
 - 2017년도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개 기관, 그리고 강소형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임.

193)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집」, 2019. 7. 26. 참고

- 공기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준정부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11개 기관은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 기관평가에서도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함.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2016년도부터 3년 연속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임.
- 이외 9개 기관은 2017년도보다 경영성치가 개선되어 평가등급이 상승함.
- 종합등급 E등급인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등 1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2016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기관평가에서 E등급을 받음.

〈표 Ⅲ-63〉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연도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공기업		2017	35	0	5	13	11	4	2
		2018	35	0	6	15	9	4	1
준 정 부 기 관	·위탁집행/ ·기금관리	2017	48	0	8	18	16	3	3
		2018	50	0	9	17	18	6	0
	·강소형	2017	40	0	4	14	17	2	3
		2018	43	0	5	19	13	6	0
	전 체		2017	123 (100%)	0 (0.0%)	17 (13.8%)	45 (36.6%)	44 (35.8%)	9 (7.3%)
2018			128 (100%)	0 (0.0%)	20 (15.6%)	51 (39.8%)	40 (31.3%)	16 (12.5%)	1 (0.8%)
‘15~’17 평균			119 (100%)	0 (0.0%)	18 (14.8%)	49 (40.8%)	37 (31.3%)	10 (8.7%)	5 (4.5%)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절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는 <표 Ⅲ-72>에 제시
 2. 등급구간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설정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4〉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상대평가)

등급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50개)	강소형(43개)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6)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입업진흥원 (5)
B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7)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C	(주)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9)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송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8)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6)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
E	대한석탄공사 (1)	-	-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종합 평가결과와는 <표 III-73> 제시)

2.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의 준정부기관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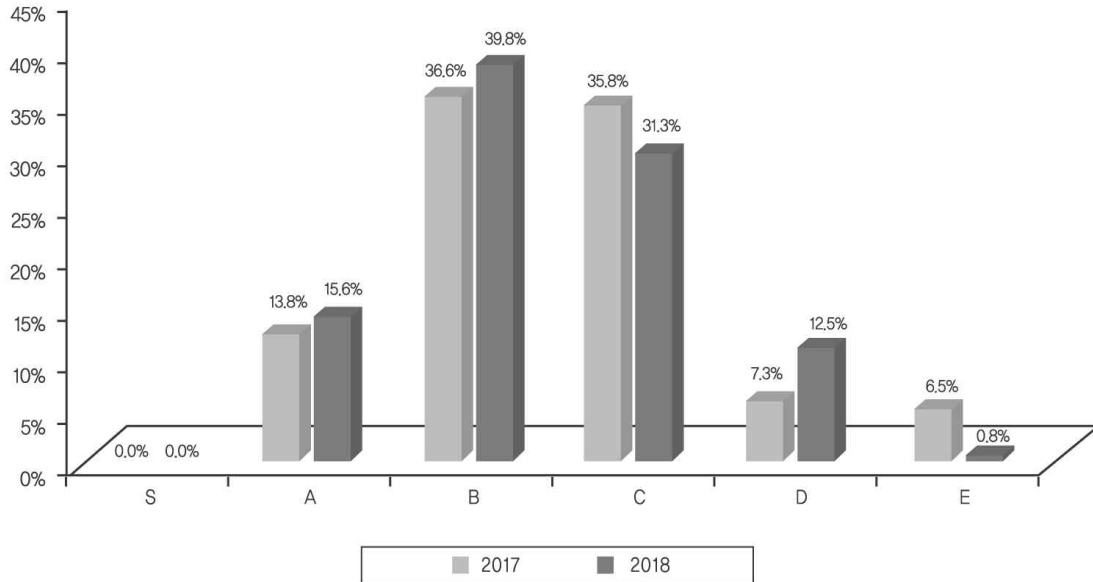
-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¹⁹⁴⁾를 2017년도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20개(15.6%)이고, D등급 이하인 기관은 17개(13.3%)임.
 - 2017년도 대비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은 증가하고, D등급 이하인 기관의 비중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종합등급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이 2017년도 평가에서는 50.4%였으나, 2018년도 평가에서는 55.4%로 5%p 증가함.
 - 종합등급 D등급 이하인 기관의 비중이 2017년도 평가에서는 13.8%이고, 2018년도 평가에서는 13.3%로 유사함.
 - 다만 종합등급 E등급인 비중이 2017년도 평가결과에서는 6.5%였으나, 2018년도 평가에서는 기관수가 크게 감소(8개→1개)하면서 E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5.7%p 감소하여 0.8%가 됨.
 - 지난 3년간 평균적인 기관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등급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종합등급이 D등급인 기관과 E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증가함.
 - 종합등급이 C등급 이상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년간 평균과 유사하며,¹⁹⁵⁾ D등급 이하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3.3%로 지난 3년간 평균과 유사함.¹⁹⁶⁾
 - 종합등급이 D등급과 E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지난 3년간 평균에서는 D등급이 E등급보다 4.2%p크게 나타났으나, 2018년도에는 두 등급 간 격차가 11.7%p로 크게 증가함.

194)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195) (3년 평균) 86.9%, (2018년도) 86.7%

196) (3년 평균) 13.2%, (2018년도)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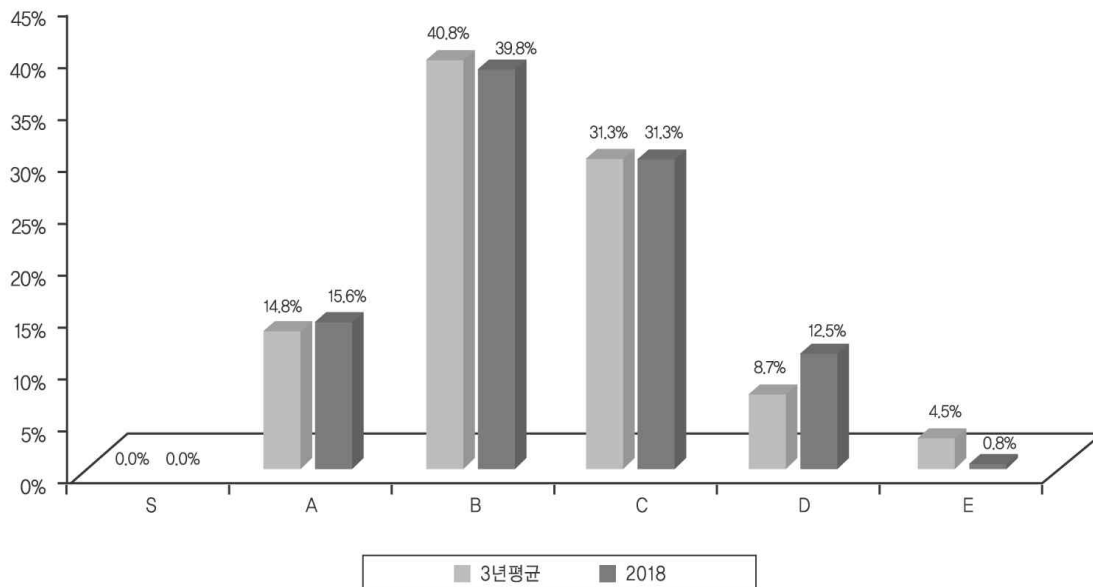
〈그림 III-36〉 전년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7〉 최근 3년 평균 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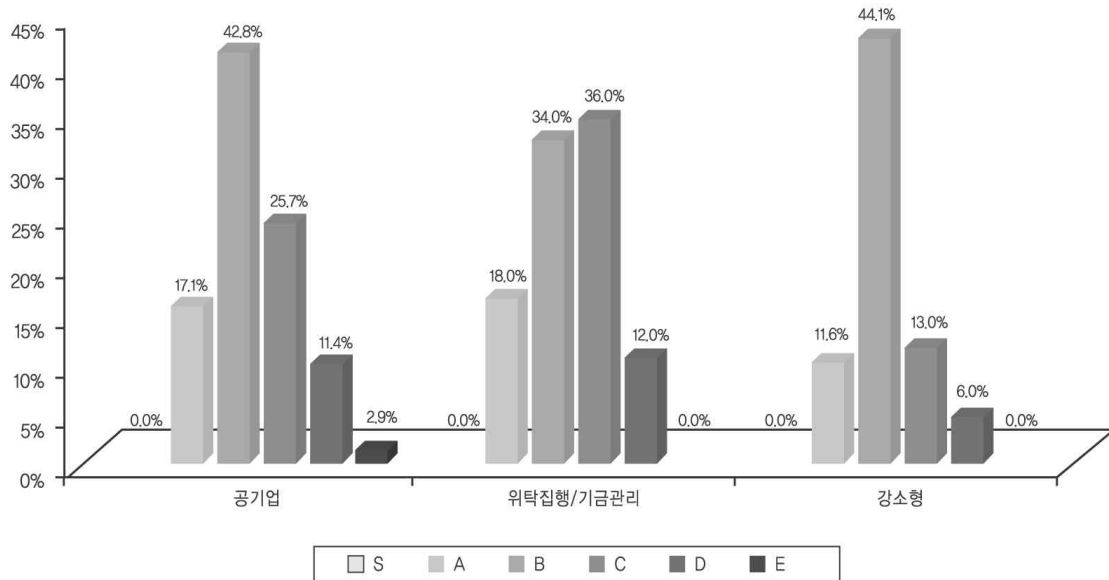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3년평균은 2015년부터 2017년도의 평가결과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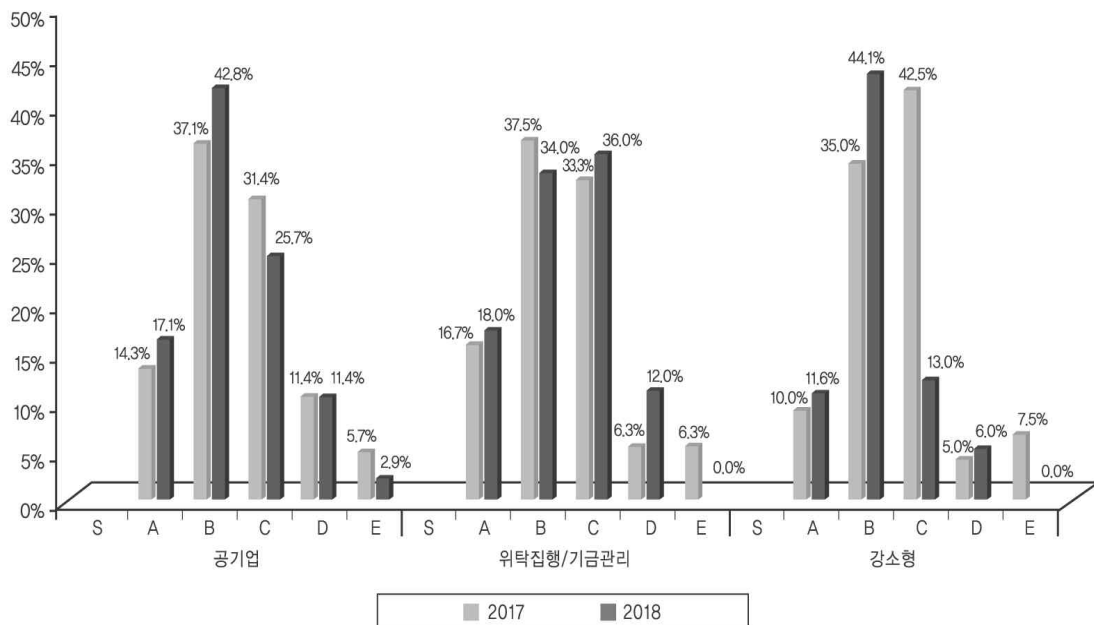
- 평가유형별 기관 평가결과의 상대평가 종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공기업 유형과 강소형 유형에서는 B등급 분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에서는 C등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평가유형별 종합등급 분포는 모두 상이한 모습을 보임.
- 공기업 유형은 종합등급이 B등급인 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해당 기관이 없는 S등급을 제외하면 E등급인 기관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공기업 유형 및 강소형 유형과 다르게 C등급이 3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B등급이 차지하는 비중(34.0%)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
 - 강소형은 B등급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유형과 동일하나, A등급과 C등급의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낮게 나타남.
- D등급 이하의 비중이 가장 작은 유형은 강소형 유형이며, 공기업 유형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D등급 이하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남.
- 전년대비 종합등급의 변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A등급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D이하 등급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 공기업 유형은 2017년도 평가보다 A등급과 B등급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C등급과 E등급의 비중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2018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과 C등급 비중간의 격차가 커짐.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C등급 이상에서는 비중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D등급의 비중은 증가하고, E등급의 비중은 감소하여 D등급과 E등급의 비중의 격차가 2017년도 0%p에서 12%p로 크게 증가함.
 - 강소형 유형은 B등급의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C등급과 E등급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

〈그림 III-38〉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III-41>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39〉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상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 2017년도 및 2018년도 기관평가를 모두 수검한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대비 평가등급 변동을 살펴본 결과,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관이 39개 기관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함.
- 전년대비 평가등급이 개선된 기관 중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4개 기관은 경영실적이 2단계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8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¹⁹⁷⁾
 - 한국동서발전(주)은 3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7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평가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한 기관은 총 26개 기관이며, 전년도보다 평가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없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5개 기관은 지난 3년간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¹⁹⁸⁾

〈표 III-65〉 전년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요약(상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123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평가등급 상승	39 (31.7%)	35	4
평가등급 유지	58 (47.2%)	-	-
평가등급 하락	26 (21.1%)	26	-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 (주)강원랜드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은 2017년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197)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은 2년 연속 평가등급이 상승하여 2018년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음

198)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6년도 A등급에서 2018년도 D등급으로 하락하였고, 한국관광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3개 기관은 2016년도 A등급에서 2018년도 C등급으로 하락,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은 2016년도 B등급에서 2018년도 D등급으로 하락함

〈표 III-66〉 전년대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 변동 현황(상대평가)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39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전KDN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급 유지 (58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우체국금융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등급 하락 (26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2. 2018년 공공기관 지정결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된 (주)강원랜드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제정정보원은 2017년도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 상대등급을 기준으로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표 III-67>, <표 III-68>과 같이 나타남.

〈표 III-67〉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기획재정부	2	-	-	1	-	1	-
교육부	3	-	-	1	1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2	2	5	1	-
외교부	1	-	-	-	1	-	-
행정안전부	1	-	-	-	1	-	-
문화체육관광부	9	-	-	2	4	3	-
농림축산식품부	6	-	-	4	-	2	-
산업통상자원부	32	-	6	10	11	4	1
보건복지부	7	-	2	5	-	-	-
환경부	5	-	1	1	2	1	-
고용노동부	5	-	1	1	3	-	-
여성가족부	2	-	-	1	1	-	-
국토교통부	13	-	3	7	3	-	-
해양수산부	9	-	1	4	3	1	-
중소벤처기업부	4	-	1	2	-	1	-
방송통신위원회	2	-	-	1	1	-	-
원자력안전위원회	1	-	-	-	1	-	-
금융위원회	4	-	1	3	-	-	-
공정거래위원회	1	-	-	1	-	-	-
국가보훈처	2	-	-	1	1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	1	-	-	-
인사혁신처	1	-	-	1	-	-	-
경찰청	1	-	-	1	-	-	-
소방청	1	-	-	-	1	-	-
산림청	2	-	1	1	-	-	-
농촌진흥청	1	-	1	-	-	-	-
특허청	1	-	-	-	1	-	-
기상청	1	-	-	-	-	1	-
합 계	128	0	20	51	40	16	1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68〉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 등급 현황(상대평가)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2개)	(B등급) 한국조폐공사 (D등급)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3개)	(B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D등급) 한국장학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A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B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C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D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외교부 (1개)	(C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C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9개)	(B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C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D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6개)	(B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D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부 (32개)	(A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중부발전(주) (B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C등급)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D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E등급) 대한석탄공사
보건복지부 (7개)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B등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5개)	(A등급) 한국수자원공사 (B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C등급)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D등급) 한국환경공단

주무부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5개)	(A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등급) 근로복지공단 (C등급)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여성가족부 (2개)	(B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C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국토교통부 (13개)	(A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B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C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양수산부 (9개)	(A등급) 인천항만공사 (B등급)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C등급)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 (D등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4개)	(A등급) 기술보증기금 (B등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D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송통신위원회 (2개)	(B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C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C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4개)	(A등급) 신용보증기금 (B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정거래위원회 (1개)	(B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2개)	(B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C등급) 독립기념관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B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혁신처 (1개)	(B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 (1개)	(B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C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2개)	(A등급) 한국임업진흥원 (B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촌진흥청 (1개)	(A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1개)	(C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1개)	(D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상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위탁집행 유형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소형 유형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S등급을 받았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위탁집행 유형의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이 S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4개 기관이 두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6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임.
 - 대한석탄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E등급을 받음.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한전KPS(주)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C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았고, (주)강원랜드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아, 범주 간 등급차이가 2단계이상으로 나타남.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 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 기관¹⁹⁹⁾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 기관²⁰⁰⁾임.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5개 기관임.
 - 한국관광공사는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등급을 받았고, (재)우체국물류지원단은 주요사업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받음.

199)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7개 기관에는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됨

200)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5개 기관에는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해당됨

- 강소형유형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음.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7개 기관임.
 - 범주 간 등급이 2단계 이상 차이나는 기관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9개 기관임.
 - 한국디자인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C로 평가받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경영관리 범주에서 B등급을 받았으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E등급을 받아 종합등급은 D등급으로 평가 받음.

〈표 III-69〉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6)
B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15)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14)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15)
C	(주)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전KPS(주) (9)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9)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4)	(주)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해양환경관리공단 (5)	대한석탄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3)
E	대한석탄공사 (1)	대한석탄공사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전KPS(주) (2)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절대평가 결과는 <표 III-74>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70〉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국민건강보험공단 (1)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2)
A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9)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7)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
C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8)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15)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5)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6)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7)
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2)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상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절대평가 결과는 <표 III-75>에 제시)

2.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71〉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상대·절대평가, 강소형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입업진흥원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입업진흥원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7)
B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국립생태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8)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입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16)
C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독립기념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1)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5)
D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	국제방송교류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7)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2)
E	-	한국재정정보원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

주: 강소형 유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
 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 2017년도 경영평가부터 기관 실적만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정하는 절대평가 등급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8년도 평가에서도 상대평가 뿐 아니라 절대평가도 실시하였음.
- 대다수 기관의 득점 수준이 전년보다 상승하여 절대평가 등급이 상향하였음.²⁰¹⁾
 - 총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절대평가 등급이 A등급(우수)은 14개 기관, B등급(양호)은 57개 기관, C등급(보통)은 44개 기관, D등급(미흡)은 13개 기관이고, S등급(탁월)과 E등급(아주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음.
 - 절대평가 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과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5개 기관임.
 - 강소형유형은 상대평가와 별도로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하며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A등급임.
 - 2018년도 평가결과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모두 A등급인 기관은 14개 기관이고, 절대평가 종합등급이 A등급인 기관은 모두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받음.²⁰²⁾
 - 절대평가 등급이 D등급인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전KPS(주) 등 4개 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기관, 강소형 유형의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임.
 - 이 중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2개 기관은 상대평가 종합등급도 D등급을 받음.
 - 2018년도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절대평가 종합등급에서 C등급을 받음.

201)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집」, 2019. 7. 26. 참고

202) 2018년도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 종합등급에서는 A등급을 받지 못한 기관은 공기업 유형의 한국남부발전(주), 인천항만공사 등 2개 기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 기관이며, 이 기관들은 2018년도 절대평가 결과 B등급(양호)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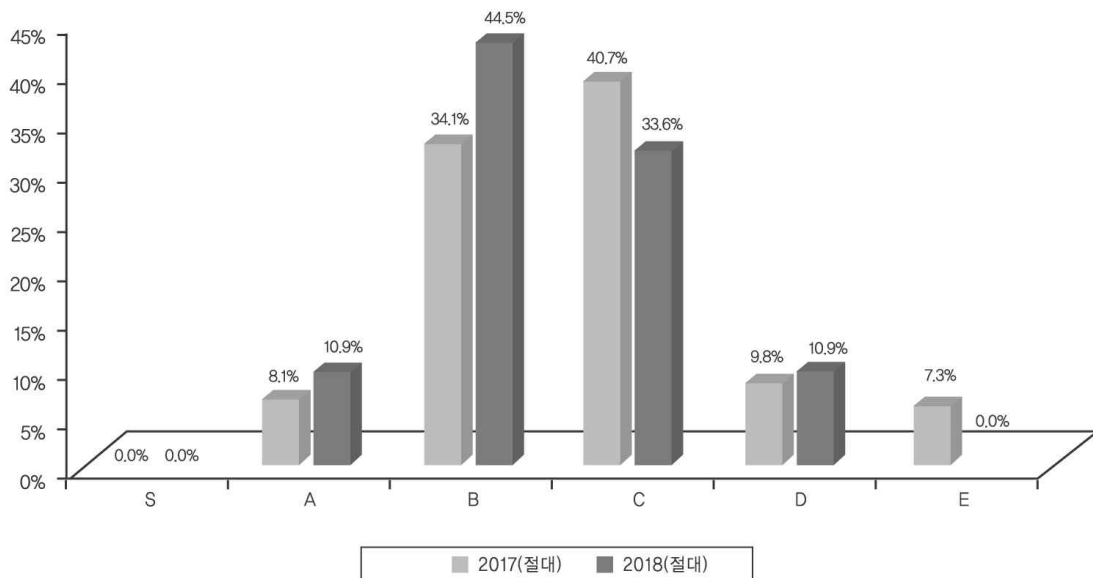
〈표 III-72〉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상대·절대평가)

(단위: 개)

구 분	구분	S (탁월)	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계
공기업	상대	0	6	15	9	4	1	35
	절대	0	4	17	10	4	0	
준정부 기관	·위탁집행/ ·기금관리	상대	0	9	17	18	6	50
		절대	0	5	21	20	4	
	·강소형	상대·절대	0	5	19	13	6	43
전 체	상대	0	20 (15.6%)	51 (39.8%)	40 (31.3%)	16 (12.5%)	1 (0.8%)	128 (100%)
	절대	0	14 (10.9%)	57 (44.5%)	43 (33.6%)	14 (10.9%)	0 (0%)	

주: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2019. 8.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0〉 전년대비 평가유형별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분포 비교(절대평가)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2019. 8.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73〉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종합등급별 기관 현황(절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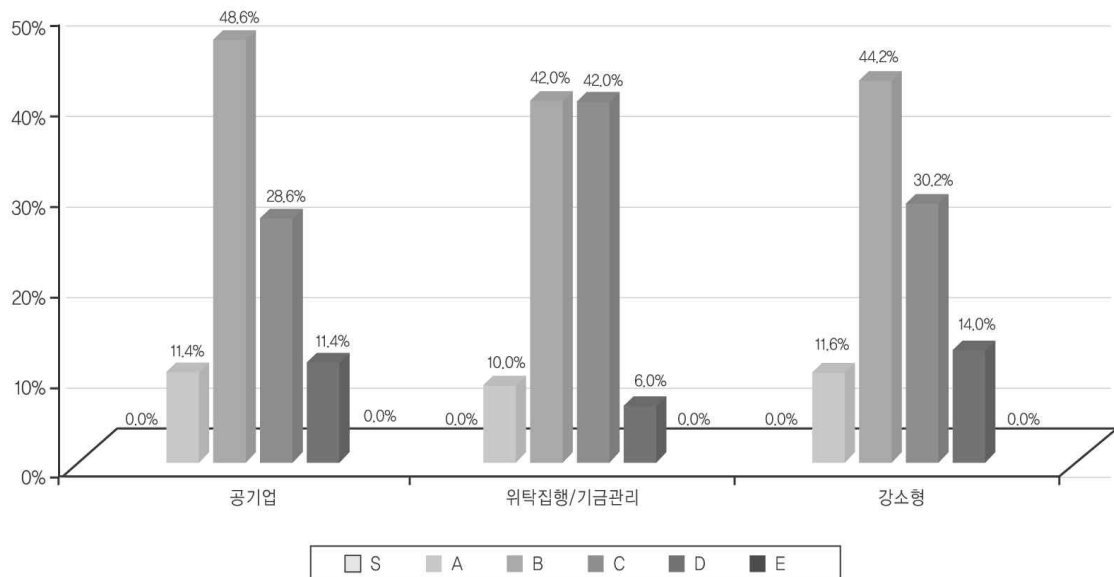
등급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50개)	강소형(43개)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입업진흥원 (5)
B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요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2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C	(주)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0)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송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21)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3)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전KPS(주)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3)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
E	-	-	-

주: 1. 준정부기관(50개)은 기금관리·위탁집행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의미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64>에 제시)
 3.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 2019. 8.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 평가유형별 기관 절대평가 결과의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기업 유형,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강소형 유형의 분포가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세 유형 모두 절대평가 B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C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S등급과 E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0%임.
 - 다만,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은 B등급인 기관의 비중과 C등급인 기관의 비중이 각 각 42%로 동일함.
 - 공기업 유형의 경우 B등급의 비중이 4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C등급과의 차이가 20%p로 큰 차이를 보임.
 - 강소형유형의 경우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동일하게 B등급의 비중이 가장 크고, A등급의 비중이 가장 낮음.

〈그림 III-41〉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평가유형별 등급 분포(절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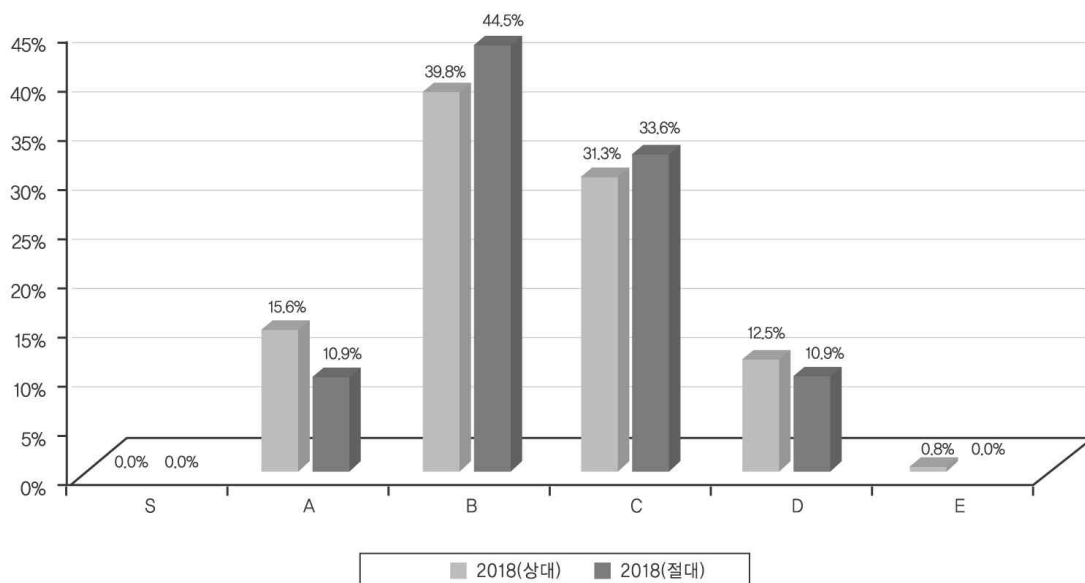
주: 1.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의 유형별 등급 분포는 <그림 III-38>에 제시)

2. 강소형은 지표체계 변동으로 인해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아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가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 기관의 상대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결과의 평가등급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평가결과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관의 비중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모두 55.5%로 동일하게 나타남.
 - 다만 절대평가보다 상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비중이 4.7%p 높게 나타남.
- 평가결과 등급이 D등급 이하인 기관의 비중은 상대평가 결과가 절대평가 결과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그림 Ⅲ-42〉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등급별 분포(상대·절대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 범주별 절대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강소형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고,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의 사회보장정보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음.
- 공기업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모두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개 기관이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 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와 주요사업 범주 절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두 범주에서 모두 D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2개 기관임.
 -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중 경영관리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2개 기관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A등급을 받은 기관도 없으며,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은 19개²⁰³⁾ 임.
 - 경영관리 범주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5개 기관이고,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D등급과 E등급 기관이 없음.
 - 강소형 유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범주별 평가등급 결과가 동일함.²⁰⁴⁾

203) 절대평가 주요사업 범주에서 A등급을 받은 19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임

204) 강소형의 상대·절대평가 등급 결과는 <표 III-71>에 제시

〈표 III-74〉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공기업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
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4)	인천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9)
B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17)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11)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DN(주) 해양환경관리공단 (19)
C	(주)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10)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해양환경관리공단 (18)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지역난방공사 (3)
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전KPS(주) (4)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전KPS(주) (4)
E	-	-	-

주: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69>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75〉 2018년도 기관 평가결과 현황(절대평가,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S	-	-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2)
A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9)
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21)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6)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3)

등급	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
C	국립공원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22)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6)
D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3)	근로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17)	-
E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5)	-

주: 1. 준정부기관 중 위탁집행·기금관리 유형인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함

2. 기관 평가결과 중 절대평가의 종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상대평가 등급결과는 <표 III-70>에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및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을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로 부진기관 인사조치, 성과급 차등 지급, 부진기관 경영개선 점검 및 차년도 예산 반영 조치를 시행함.²⁰⁵⁾
- 상대평가 종합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인사조치의 대상이 됨.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고, 당해연도 D등급의 받은 기관의 장은 경고조치의 대상이 됨.
 - 2018년도 평가에서 해임건의 대상은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을 받은 1개 기관의 장이나, 해당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도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음.²⁰⁶⁾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시행함.²⁰⁷⁾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종합등급과 범주별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5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함.²⁰⁸⁾
- 성과급 지급 기준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50으로 반영하여 지급함.²⁰⁹⁾
 - 성과급 지급률은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 부채규모,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재무예산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의 하향 조정이 가능하나, 대상기관(10개)의 '재무예산 운영·성과' 평가가 모두 보통(C등급) 이상이므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²¹⁰⁾
-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함.

205)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206)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E등급이나, 재임기간 요건을 미달하여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대한석탄공사임

207) 상대평가 종합등급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한전 KPS(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16개 기관이고, 이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임

208) 성과급 지급률이 0%인 기관은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임

209) 성과급 지급률은 (상대 50%) 종합등급 25%-경영관리 12.5%-주요사업 12.5%, (절대 50%) 종합등급 25%-경영관리12.5%-주요사업 12.5%를 반영

210)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6. 20.

- 구체적인 사항은 「20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예정임.
- 2018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표 Ⅲ-76>, <표 Ⅲ-77>과 같음.

〈표 Ⅲ-76〉 2018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공기업)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250%이내				
	총 합	상대	62.5	50	37.5	25	-
		절대	62.5	50	37.5	25	-
	경영관리	상대	31.25	25	18.75	12.5	-
		절대	31.25	25	18.75	12.5	-
	주요사업	상대	31.25	25	18.75	12.5	-
		절대	31.25	25	18.75	12.5	-
종전 투자기관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300%이내				
	총 합	상대	75	60	45	30	-
		절대	75	60	45	30	-
	경영관리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주요사업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기관장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120%이내				
	총 합	상대	30	24	18	12	-
		절대	30	24	18	12	-
	경영관리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주요사업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
상임이사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100%이내				
	총 합	상대	25	20	15	10	-
		절대	25	20	15	10	-
	경영관리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주요사업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77〉 2018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준정부기관)

(단위: %)

구 분			S	A	B	C	D~E
직원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100%이내				
	총 합	상대	25	20	15	10	-
		절대	25	20	15	10	
	경영관리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주요사업	상대	12.5	10	7.5	5	-
		절대	12.5	10	7.5	5	
중전 투자기관 직원 ¹⁾	지급한도		월기본급의 300% 이내				
	총 합	상대	75	60	45	30	-
		절대	75	60	45	30	-
	경영관리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주요사업	상대	37.5	30	22.5	15	-
		절대	37.5	30	22.5	15	-
기관장 상임이사	지급한도		기본연봉의 60%이내				
	총 합	상대	15	12	9	6	-
		절대	15	12	9	6	
	경영관리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주요사업	상대	7.5	6	4.5	3	-
		절대	7.5	6	4.5	3	

주: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중전의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20.를 참고하여 작성

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²¹¹⁾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고객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경영평가를 보완하고자 실시되고 있음.
 - 고객만족도 조사는 199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후 추진함.
 - 도입 당시에는 구(舊) 정부투자기관(현, 공기업이 대부분)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구(舊) 정부산하기관으로, 2005년에 각 부처 자율혁신기관(현, 기타공공기관이 대부분)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확대됨.
 - 2011년도부터는 직접고객 외에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 체감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2018년도부터는 ‘사회적 가치 기여도 조사’로 대체됨.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07년부터 공운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과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제3항에 근거해 실시됨.
 - 또한 공운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Ⅲ-78〉 공운법 제13조

제13조(고객현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①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기본 임무 2.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바람직한 서비스의 수준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처리, 시정 절차 및 배상 등의 책임 4.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등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현장을 제정하여 공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고객현장의 제정·공표, 고객만족도 조사의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1)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시자료(2019. 4. 30. 기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및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참고

- 고객만족도 조사는 주관기관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와 '주무부처 주관 조사'로 구분되어 시행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 및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2018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는 245개 기관이 대상임.²¹²⁾
 - '주무부처 주관조사'는 기타공공기관 중 국민생활과 밀접성이 낮거나 기관 규모가 작아 통합조사의 실익이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18년 주무부처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은 73개임.²¹³⁾
 - 출연연구기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 등이 주무부처 주관조사의 대상이 됨.
 - 2018년에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9개)도 예산확보 등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주무부처 주관조사를 수검하게 됨.
 - 공공기관 중 주된 고객이 중앙행정기관이거나 불특정 외국인 또는 모회사 등으로 고객 형성이 미흡한 기관(20개)은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전력공사가 모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6개 발전자회사(공기업), 특수한 고객이 주된 고객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등이 해당됨.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는 2015년부터 기능별로 그룹을 구분하여 그룹 내 상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2017년 조사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그룹과 기타 공공기관 9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2016년까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5개 그룹과 기타공공기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의 상향 평준화 문제 개선을 위해 2017년 기능중심으로 조사그룹을 개편하였으며 2018년에도 이를 유지함.
 - 기능과 주요사업에 따라 그룹을 세분화하여 동일 그룹 내 기관 간 동질성을 제고함으로써 상대평가를 강화함.
 - 조사대상 공공기관 그룹 분류는 아래의 <표 III-79>와 같으며 공공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를 실시(S-A-B-C등급)하고 있음.
 - 그룹별로 S-A-B-C 등급을 1:4:4:1의 비율로 부여하고 있음.

212) 2018년 공공기관 기준임(2019년 공공기관 기준 242개)

213) 2018년 공공기관 기준임(2019년 공공기관 기준 70개)

〈표 III-79〉 고객만족도 조사그룹 분류

기관유형	조사그룹		기관유형	조사그룹		
공기업 · 준정부 기관	고용·복지		기타 공공 기관	산업		
	문화	관광		의료		
		관광·예술·언론		교육·연구		
	교육			SOC		
	금융			공공안전		
	에너지			문화	관광	
	SOC				체육·언론·예술	
	공공안전			복지		
	산업			금융		
	연구			-		

주: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3.28.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015년부터 PCSI 2.0 모델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지수는 서비스 품질,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함.
- PCSI 2.0 모델은 종전 PCSI 모델을 개선한 것으로 두 모델을 비교하면 <표 III-80>과 같음.
- PCSI 지수는 서비스품질과 사회적 책임, 불일치의 3가지 선행요인과 만족도 측정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반영함.
- 개인이 고객인 경우 서비스 환경 품질에 대해 조사하며, 법인이 고객인 경우 관계여건품질에 대해 조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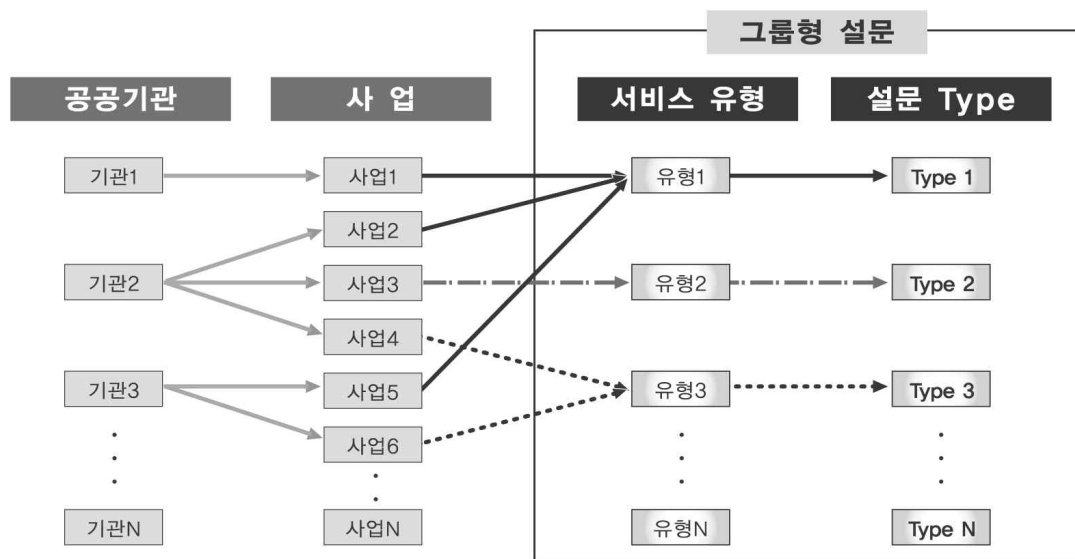
〈표 III-80〉 PCSI 모델과 PCSI 2.0 모델 비교

구 분		PCSI	PCSI 2.0	
서비스품질 모형	서비스상품 품질	편익성	본원적 문제해결	
		전문성	서비스 효익성	
		혁신성	서비스 완결성	
	서비스전달 품질	지원성	인적상호작용	
		공감성	커뮤니케이션	
		대응성	고객케어	
	서비스환경 품질	공통	개인고객용	법인고객용
		쾌적성	물리적 환경	협력
		편리성	제도/절차/시스템환경	상호호혜
		심미성	인적자원 역량환경	관계 동등성
	사회품질	청렴성	-	
		공익성	-	
		안정성	-	
사회적책임 모형	사회적책임	-	정책타당성	
		-	지속가능성	
		-	윤리성	
서비스 비교평가 모형	불일치	-	기대 대비 비교	
		-	이상점 대비 비교	
		-	다른 기관 대비 비교	
고객만족 모형	전반적 만족	절대적 만족	-	
		상대적 만족	인지적 만족	욕구 충족
		감정적 만족		체감 만족
	요소만족	서비스 상품만족	감정적 만족	긍정적 감정
		서비스 전달만족		부정적 감정
		서비스 환경만족	-	
	사회적만족	사회적 책임만족	-	
성과모형	기관성과	신뢰	신뢰	
		지지		
		인식전환		
	사회성과	국민행복	국민행복	
		국가발전		

자료: 기획재정부,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6. 7. 1.

- 2017년까지는 전체 기관이 공통 설문문항을 적용하여 조사하여 왔으나, 2018년 조사부터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을 다양화 함.
- 기존 설문지는 기관 설문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조사 대상 기관별, 사업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2018년 조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이용동기(자발·비자발), 서비스형태(유형·무형), 이용목적(과정지향·결과지향) 등에 따라 8종류로 세분화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응답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그림 III-43〉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개편안(2018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 기획재정부는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일괄 발표하고, 알리오시스템²¹⁴⁾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경영실적평가의 국민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국민소통 지표로 전체 100점에서 1점을 반영하고 있음.

214)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공개

- 2017년까지 전체 100점에서 2점 반영되던 것을 2018년부터 1점 반영으로 변경함.
- 기타공공기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국민평가(고객만족도) 지표로 반영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에 따라 지표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

2)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1>과 같음.
 - 2019년 기준 339개 공공기관 중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총 312개 기관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18개와 기타공공기관이 194개 등이 이에 해당함.
 - 2019년 공공기관(339개) 중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18년도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242개 기관²¹⁵⁾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함.
 - 25개 공기업, 91개 준정부기관, 그리고 126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주무부처 주관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70개 기관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함.
 - 1개 공기업과 1개 준정부기관, 68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2019년 공공기관(339개) 중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관은 총 27개 기관임.
 -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기관 중 20개 기관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신규로 지정된 7개 기관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지 않음.

215)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2018. 8. 24.)에 기재된 수검기관은 245개 기관이나 이 중 3개 기관((재)정동극장,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이 2019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2019년 공공기관 기준 분석대상은 242개임

〈표 Ⅲ-81〉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조사 미수검 기관 현황					조사 수검 기관 현황		
			합계	조사 제외	조사 유예	신규 지정	수시 지정	합계	기재부 통합조사	주무부처 조사
공 기 업	시장형	16	6	6	0	0	0	10	10	0
	준시장형	20	4	4	0	0	0	16	15	1
	소 계	36	10	10	0	0	0	26	25	1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4	1	1	0	0	0	13	13	0
	위탁집행형	79	0	0	0	0	0	79	78	1
	소 계	93	1	1	0	0	0	92	91	1
기타공공기관		210	16	9	0	7	0	194	126	68
전 체		339	27 (100%)	20 (74.1%)	0 (0.0%)	7 (25.9%)	0 (0.0%)	312 (100%)	242 (77.6%)	70 (22.4%)

주: 1.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39개)을 대상으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미수검 사유와 조사 주관기관 현황을 정리

2.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하였으나 2019년에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6개 기관(주식회사 인천항 보안공사,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정동극장, IOM이민정책연구원, 별정 우체국영금관리단)은 분석대상(312개)에서 제외

3. 공공기관 유형은 2019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따라서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10개 기관은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수검 당시 공공기관 유형(2018년 기준)과 2019년 유형이 다름

- 인천항만공사(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기타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
-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4. 신규지정 및 수시지정은 2019년 중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기관별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2019년 공공기관 기준으로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을 조사 주관기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Ⅲ-82>와 같음.

○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 중 9개 기관은 2017년 까지는 주무부처 주관 조사 대상이었으나 2018년도 조사부터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로 편입됨.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립부산과학관,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보건협회 등이 이에 해당함.

-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312개 기관 중 공운법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 수검하는 기관은 3개 기관임.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 수검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공영홈쇼핑 등 3개 기관으로 모두 2018년 신규지정 된 공공기관임.

〈표 III-82〉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2019. 1월 기준)

구분	기관명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2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 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구분	기관명
기획 재정부 주관 통합 조사 (242개)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주)공영홈쇼핑,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태권도진흥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국상하수도협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잡월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보건협회
주무 부처 주관 조사 (70개)	(공기업) 주식회사 에스알 (준정부기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88관광개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전직교육원, 국토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구분	기관명
주무 부처 주관 조사 (70개)	산업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외동포재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조사 미수검 기관 (27개)	(공기업)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세종학당,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투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u>국가생명윤리정책원</u> , <u>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u> , <u>새만금개발공사</u> , <u>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u> , <u>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u> , <u>한국해양진흥공사</u> , <u>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u>

주: 1.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39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19년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함

2. 밀줄 처리된 기관은 2019년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3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II-83>과 같음.

- 2018년 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되어 2018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로 수검한 3개 기관 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주)공영홈쇼핑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미흡' 수준임.
- 두 기관과 마찬가지로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최초 수검한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는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수준으로 두 기관에 비해 1단계 높음.

〈표 III-83〉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별 분포

구분	기관명
우수 (67개)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암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예술의전당, 재외동포재단, 주택관리공단(주),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양호 (128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구분	기관명
양호 (128개)	사회보장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해양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동북아역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업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은행,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잡월드,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통 (78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분	기관명
보통 (78개)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식진흥원, 88관광개발(주),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전직교육원, 기초과학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u>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u>,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식품안전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충북대학교병원,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환경보건협회
미흡 (38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건설근로자공제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영화진흥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공영홈쇼핑,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한의학진흥원

주: 1.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관기관별 조사에서 측정된 고객만족도 등급을 기재

2.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집한 3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19년 신규지정기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유예된 기관은 불포함)

3. 밑줄 처리된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 최초 수집기관(3개)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별 기관 분포 현황은 다음의 <표 III-84>와 같으며, 전반적으로 '양호' 수준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41.03%, 128개)이 가장 큼.
- '우수' 및 '양호' 수준인 기관이 전체의 62.8%(196개)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최하위 수준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체 312개 기관 중 38개 기관으로 12.2%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3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며 '미흡'인 기관의 84.2%를 차지함.
 - '미흡'인 기관 중 공기업은 1개 기관((주)강원랜드)이며 준정부기관은 5개 기관(국제방송교류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임.
 - 공기업 유형은 고객만족도가 '우수' 등급인 기관이 많아 다른 두 유형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은 26개 공기업 중 '우수' 등급인 기관이 11개(42.3%)이고 '양호' 등급인 기관도 11개(42.3%)로 '양호' 이상인 기관이 전체의 84.6%를 차지함.
 - 고객만족도 등급이 '보통' 등급인 기관은 3개 기관이며 '미흡' 등급인 기관은 (주)강원랜드 1개 기관임.
 -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준정부기관은 92개 기관이며 이 중 64개 기관(69.6%)이 '양호' 수준 이상임.
 - '우수'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24개로 전체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호' 등급인 준정부기관은 40개로 전체의 43.5%를 차지함.
 -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양호' 등급인 기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3개 기관(25.0%)이 '보통' 수준이며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은 5개 기관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함.
 -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대부분의 기관(206개, 66.0%)이 '양호'와 '보통' 등급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상위 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은 68개로 21.8%, 최하위 등급인 공공기관은 38개로 12.2%를 차지함.

〈표 Ⅲ-84〉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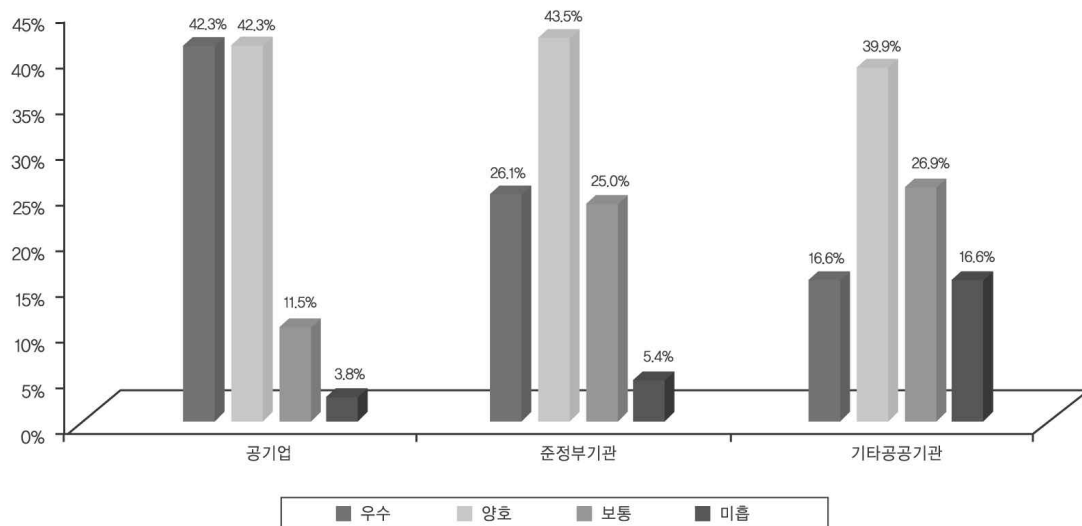
구 분			조사대상	고객만족도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공 기 업	시장형	16	10	4	4	1	1
	준시장형	20	16	7	7	2	0
	소 계	36	26	11	11	3	1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4	13	6	4	3	0
	위탁집행형	79	79	18	36	20	5
	소 계	93	92	24	40	23	5
기타공공기관		210	194	33	77	52	32
합 계		339	312 (100%)	68 (21.8%)	128 (41.0%)	78 (25.0%)	38 (12.2%)

주: 1.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339개)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 유형은 2019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12개)은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4〉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등급 분포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내용(2019. 4. 30.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2017년도 고객만족도 수준과 2018년도 수준을 비교해보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기관이 64.2%(192개)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고객만족도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III-85>).
-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한 기관 중 공기업은 14개, 준정부기관은 66개, 기타 공공기관은 112개임.
 - 고객만족도 수준이 2017년도에 비해 개선된 기관은 44개로 분석대상기관(299개)의 14.7%를 차지함.
 - 1개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및 31개 기타공공기관이 전년도보다 고객만족도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고객만족도 등급이 개선된 44개 기관 중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단계 상승하였으며 한국천문연구원은 3단계 상승함
 - 이외 42개 기관은 고객만족도 등급이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함.
 - 2017년도에 비해 고객만족도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63개로 전체의 21.1%를 차지함.
 - 10개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및 42개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그랜드코리아레저(주)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17년 '우수'에서 2018년 '보통'으로, 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 '양호'에서 2018년 '미흡'으로 2단계 하락함.
 -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등급 변동 현황 및 내역은 <표 III-85>, <표 III-86>, <표 III-87>과 같음.

〈표 Ⅲ-85〉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비교

구 분			2018년도 조사대상기관	2017년도 대비 등급 개선수준			
				분석 대상기관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6	10	10	0	6	4
	준시장형	20	16	15	1	8	6
	소 계	36	26	25	1	14	10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형	14	13	13	1	10	2
	위탁집행형	79	79	76	11	56	9
	소 계	93	92	89	12	66	11
기타공공기관		210	194	185	31	112	42
전 체		339	312	299 (100%)	44 (14.7%)	192 (64.2%)	63 (21.1%)

주: 1. 기관 유형은 2019년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함

2. 조사대상기관(312개)은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부처가 실시한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분석대상기관(299개)은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2018년~2019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86〉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290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44 (14.7%)	42	1	1
등급 유지	192 (64.2%)	-	-	-
등급 하락	63 (21.1%)	60	3	-

주: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18년~2019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87〉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수준 등급 변동 내역

구분	기관명
등급 상승 (44개)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중소기업연구원,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방전직교육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병원, 식품안전정보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충남대학교병원, 코레일관광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급 유지 (192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준정부기관)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독립기념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산물자원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재)APEC기후센터,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식진흥원, (주)위터웨이플러스, 88관광개발(주),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국토연구원, 노사발전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구분	기관명
등급 유지 (192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업연구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외동포재단, 전북대학교병원, 전쟁기념사업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유통센터,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통일연구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향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급 하락 (63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아시아문화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은행,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로지스(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한의학진흥원, 환경보건협회

주: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모두 수집한 기관을 기준으로 분석
(2018년~2019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등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고객만족도 수준과 더불어 그룹 내 상대등급을 모두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도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및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88>과 <표 III-89>와 같음.
- 조사대상 기관을 기관의 유형과 핵심기능에 따라 그룹화하고, 조사한 결과를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S-A-B-C 등급으로 구분(1:4:4:1의 비율)하여 발표함.
 - 대부분의 그룹에서는 A와 B등급에 분포한 공공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S등급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기타공공기관의 문화(관람) 유형으로 3개 기관이 S등급에 해당하며 A등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그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SOC 유형으로 10개 기관이 A등급에 해당함.
 - C등급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그룹은 기타공공기관의 교육·연구 유형으로 4개 기관이 C등급에 해당됨.

〈표 Ⅲ-88〉 2018년도 기획재정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분포

(단위: 개)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 ¹⁾	S	A	B	C	분석 대상 ²⁾	상승 (▲)	유지 (-)	하락 (▼)
공기 업 · 준 정 부 기 관	고용·복지	10	1	6	2	1	10	3	7	0
	문화	관람	9	2	4	2	8	1	6	1
		관광·예술·언론	8	1	2	4	7	2	4	1
	교육	10	0	5	5	0	10	1	9	0
	금융	11	1	6	3	1	11	2	6	3
	에너지	8	0	7	1	0	8	2	5	1
	SOC	13		10	2	1	13	1	6	6
	공공안전	17	2	5	10	0	16	4	10	2
	산업	19	1	9	9	0	19	3	11	5
	연구	12	0	7	4	1	11	3	8	0
	소 계	117	8	61	42	6	113	22	72	19
기 타 공 공 기 관	산업	19	1	8	7	3	14	5	8	1
	의료	19	2	8	9	0	19	4	10	5
	교육·연구	19	0	6	9	4	17	5	12	0
	SOC	10	2	5	2	1	10	2	6	2
	공공안전	18	0	9	7	2	16	3	11	2
	문화	관람	15	3	5	7	14	4	6	4
		체육·예술·언론	9	1	3	4	9	2	5	2
	복지	8	0	2	4	2	8	0	6	2
	금융	8	1	4	2	1	8	1	6	1
	소 계	125	10	50	51	14	115	26	70	19
전 체		242 (100%)	18 (7.4%)	111 (45.9%)	93 (38.4%)	20 (8.3%)	228 (100%)	48 (21.1%)	142 (62.3%)	38 (16.7%)

- 주: 1. 조사대상기관은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 분석대상기관은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모두 기획재정부 통합조사를 수검한 기관임
 (2019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과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3.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대상기관 중 2019년에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그룹별 상대등급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당시의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
 -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및 (재)한국보육진흥원(이상 201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2018년 기준)으로 분류
 -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상 2019년 기타공공기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018년 기준)으로 분류
 -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상 2019년 기타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8년 기준)으로 분류
 4.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및 (재)정동극장(2018년 기준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이나 2019년 지정해제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중 그룹별 상대등급의 전년대비 개선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년대비 상대등급 개선기관의 비중이 높은 그룹은 기타공공기관의 산업 서비스 유형과 교육·연구 유형으로 각 5개 기관의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상승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고용·복지 서비스 유형도 유형 전체 기관의 30.0%인 3개 기관의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상승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교육서비스 유형은 유형 전체의 90.0%인 9개 기관이 전년도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유형과 금융서비스 유형도 각 6개 기관(75.0%)이 전년등급을 유지하여 상대등급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년대비 상대등급 하락이 크게 발생한 그룹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SOC서비스 유형으로 유형 전체의 46.4%인 6개 기관의 상대등급이 전년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89〉 전년대비 2018년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변동 현황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228개)	변동폭		
		1단계	2단계	3단계
등급 상승	48 (21.1%)	39	8	1
등급 유지	142 (62.3%)	-	-	-
등급 하락	38 (16.7%)	37	1	-

주: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모두 수검한 기관임
(2019년 신규지정기관 및 지정해제기관, 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은 불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90〉 2018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그룹별 상대등급 현황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관 (117개)	(S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A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C등급) 한국고용정보원
	(S등급) 국립공원공단, 한국마사회 (A등급)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B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아시아문화원 (C등급) (주)강원랜드
	(S등급) 한국관광공사 (A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B등급) 시청자미디어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C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A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B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S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A등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B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C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A등급)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B등급) 한국석유공사
	(A등급)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B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C등급) 한국도로공사
	(S등급) 도로교통공단, 한국석유관리원 (A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B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관 (117개)	산업 (19개)	(S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A등급)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B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연구 (12개)	(A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B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C등급) 한국재정정보원
기 타 공 공 기 관 (125개)	산업 (19개)	(S등급) 한국저작권보호원 (A등급)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재)한식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B등급)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창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등급)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19개)	(S등급)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A등급)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B등급)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교육·연구 (19개)	(A등급) (재)APEC기후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B등급) (재)중소기업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장애인개발원 (C등급) 광주과학기술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구 분		고객만족도 상대등급
기 타 공 공 기 관 (125개)	공공안전 (18개)	(A등급)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B등급) 식품안전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환경보건협회 (C등급)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화(관람) (15개)	(S등급)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예술의전당 (A등급)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잡월드 (B등급) ㈜위터웨이플러스,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쟁기념사업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재단
	문화(체육· 예술·언론) (9개)	(S등급) 대한장애인체육회 (A등급) 한국문화번역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B등급)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법인 국악방송,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C등급) 대한체육회
	SOC(10개)	(S등급) 코레일네트웍스(주) (A등급)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B등급)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C등급) 코레일로지스(주)
	복지(8개)	(A등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B등급)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C등급)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금융(8개)	(S등급) 한국예탁결제원 (A등급) 중소기업은행,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B등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C등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주: 1. 기획재정부 주관의 2018년도 고객만족도 통합조사를 수집한 2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조사 대상기관 중 2019년에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그룹별 상대등급인 점을 고려하여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당시의 공공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
 -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및 (재)한국보육진흥원(이상 2019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2018년 기준)으로 분류
 -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상 2019년 기타공공기관)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018년 기준)으로 분류
 -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상 2019년 기타공공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18년 기준)으로 분류
 3.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및 (재)정동극장(2018년 기준 기타공공기관)은 2018년 기획재정부 주관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집한 기관이나 2019년 지정해제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항목의 공시자료(2019. 4. 30.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

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²¹⁶⁾

1)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에 근거하여 청렴도 조사를 실시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기능,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권한을 가짐.
 - 청렴도는 각 기관의 주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설문조사와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하며,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출함.
 - 설문조사는 전화조사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를 병행하며 평가자가 조사 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정책 고객은 방문조사를 병행함.
 - 종합청렴도 점수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함.
- 청렴도 모형을 도입한 2002년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8년에 '내부청렴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 제도를 전면 개편함.²¹⁷⁾
 - 2012년도부터는 측정모형을 전면 개편하여 기관의 정책업무를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를 청렴도의 정식지표로 반영²¹⁸⁾하고 있으며 전문가·업무관계자(중앙행정, 상급 또는 산하기관, 시민단체, 이익단체), 지역주민(광역), 학부모(교육청)를 평가자에 포함시킴.

216)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 2018. 12. 20.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 참고

217)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8.10. p. 260

218) 정책고객평가는 정책고객 평가자의 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 I 유형(3,000명 이상)과 II 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에 한하여 적용

- 기관별 부패현황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종합청렴도 산출 시 감점요소로 반영함.
 - 기존의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 항목은 간소화하여 비중을 축소한 대신, 새로운 부패유형과 간접부패경험도 측정 가능하도록 관련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부패지수 평가를 강화함.²¹⁹⁾
 - 호의적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측정명부 조작·오기·대리 응답 등 명부관련 저해행위에 대해서 감점을 신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는 대상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함.²²⁰⁾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의 측정 대상이 됨.
 - 공운법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측정기관 대상 중 공직유관단체 유형으로 분류 됨.²²¹⁾
 -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의료기관 성격의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의 대상이 됨.
 - 공운법상 공공기관인 공공의료기관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10개 국립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3개 치과병원, 개별 법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및 원자력병원이 포함됨.
 - 마지막으로, 공운법상 공공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기관은 ‘국·공립 대학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법인형태의 기관(7개), 국립대학교(39개), 공립대학교(1개)가 포함됨.
 - 법인형태의 기관 7개 중에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

219) 외부청렴도 3개 항목, 내부청렴도 3개 항목, 정책고객평가 7개 관련항목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투명성·책임성 지수 항목은 8개 → 4개로 축소하여 부패위험지수로 통합하고 비중을 축소

220)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8. 6.,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8. 8. 및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8. 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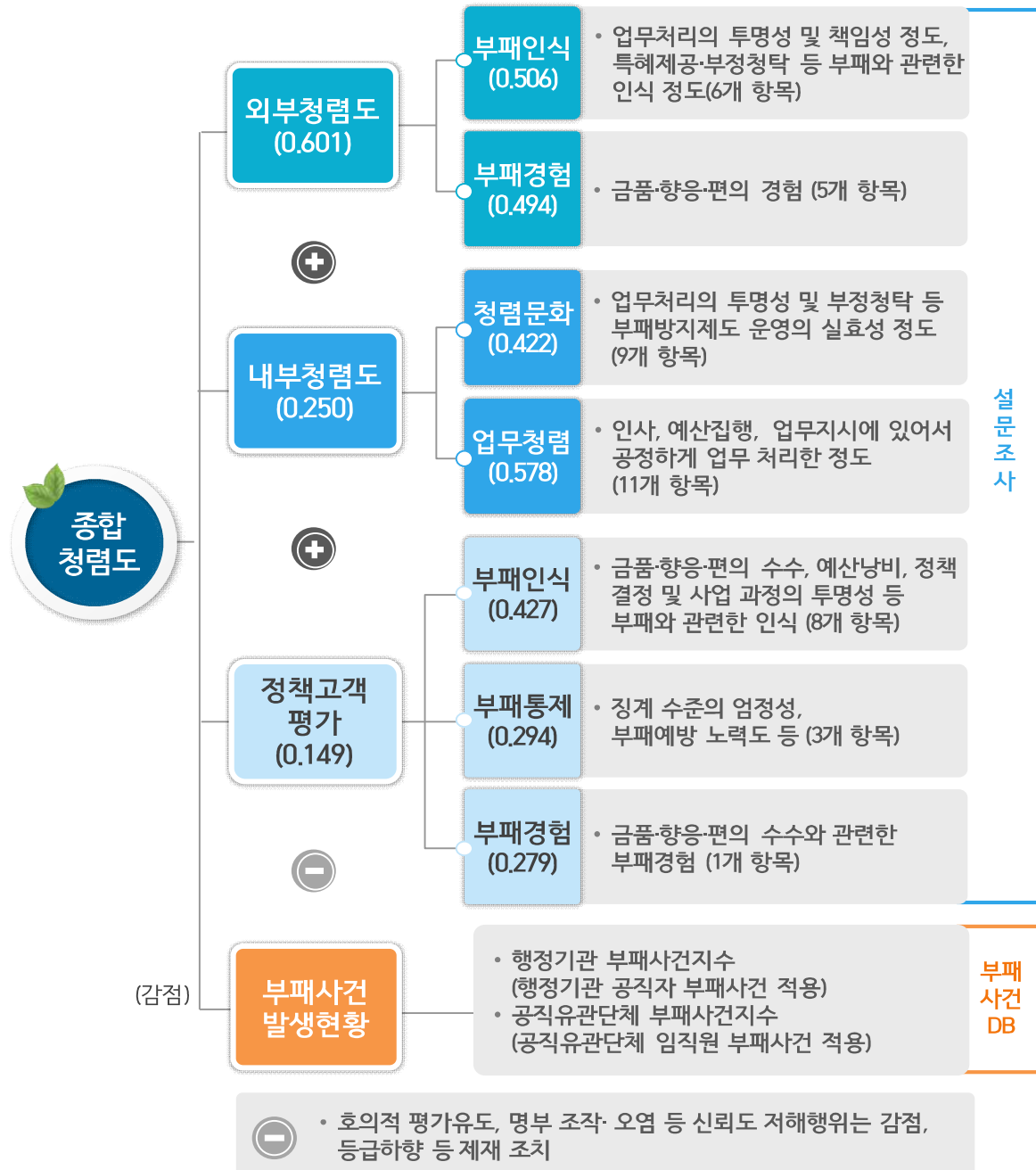
221) 공공기관 측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산출 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함.
- 2018년도 청렴도 조사는 2012년에 개편된 측정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아래 사항을 보다 보완·개선하여 청렴도를 측정함.²²²⁾
 - 채용비리 등 부패사건 발생 공직유관단체를 측정대상에 추가²²³⁾하고, 국민 안전 등 국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 기관 중점업무, 2018년도 신규측정기관의 부패취약업무 등 신규 측정업무를 발굴함.
 - 응답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을 간소화·정교화하여 설문 문항 및 측정항목을 조정하고, 부패경험 문항의 설문을 개선함.
 -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부패관련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외부 면접위원도 정책고객평가의 설문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부패수준 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갑질 관행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문항을 신설함.
 -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다른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종전의 점수와 등급을 함께 발표하던 방식에서 등급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결과발표 방식을 개선함.

222)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8. 6. 및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 12. 참고

223) 채용비리 점검결과(2018. 1) 수사의뢰, 징계요구가 있었던 기관 중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37개 기관 추가 측정

〈그림 Ⅲ-45〉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주: 1. 종합청렴도 모형의 외부·내부 청렴도는 각 설문조사 결과를 의미
 2.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를 가중합산
 3.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와 내부청렴도(0.237)를 가중합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8. 12.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를 활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각각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점수와 등급(5등급 체계)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나 측정점수는 기관별 업무성격과 측정대상업무가 상이하므로 이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매년 조사대상에 변동이 있어 전체, 유형별 평균을 활용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를 통해 자세한 분석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018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 2019년 공공기관(339개) 중 2018년도 청렴도 조사를 수검한 기관은 35개 공기업, 81개 준정부기관 및 73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189개 기관임.²²⁴⁾
 - 189개 기관 중 167개 기관은 앞서 살펴본 <그림 III-45>의 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이외 22개 기관은 별도 측정모형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함.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 원자력의학원) 등 17개 기관은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²²⁵⁾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5개 기관은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별도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함.²²⁶⁾
 - 공기업의 경우 36개 기관 중 35개 기관이, 준정부기관은 총 93개 기관 중 81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총 210개 기관 중에서 73개 기관이 청렴도 조사를 수검함.
 - 공기업의 경우, 2019년 신규지정 된 주식회사 에스알²²⁷⁾을 제외한 35개 기관이 전부 청렴도 검사를 수검한 것으로 나타남.

224)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에 따름

225)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

226)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 2018. 12. 20.

227)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

- 2018년도 청렴도 조사에 신규 포함된 공공기관은 18개 기관으로 채용비리 수사의뢰 기관 등을 추가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함.
-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가 있었던 기관 중 기관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추가한 결과,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7개 기관이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됨.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대상에는 채용비리로 징계요구가 있었던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이 신규 조사대상으로 포함됨.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작년 측정대상기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유효표본수 부족으로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지 못한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18년도 조사에서는 종합청렴도를 산출하였음.

〈표 III-91〉 2018년도 신규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구분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단체)	(준정부기관)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보건협회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
국·공립 대학 청렴도 조사	(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 청렴도 측정결과는 유형 내 등급으로 발표되며 2018년도 청렴도조사를 수검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수검하는 공공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구분되어 조사를 수검하게 됨.
 - 여기서 공직유관단체는 다시 연구원과 기관규모(정원)에 따른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청렴도는 유형 내 상대등급으로 부여됨.²²⁸⁾

228) 공직유관단체 I 유형(3,000명 이상), II 유형(1,000명 이상~3,000명 미만), III유형(400명 이상~1,000명 미만), IV유형(200명 이상~400명 미만), V 유형(200명 미만)

- 그동안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 간 지나친 경쟁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18년도부터는 청렴도 점수는 발표하지 않음.
- 다만 기관별 점수와 세부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로 제공하여 청렴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함.

〈표 III-92〉 2018년도 청렴도 조사대상 공공기관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 단체)	I (21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II (33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주) (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III (33개)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IV (37개)	(공기업)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구분	유형	해당 공공기관명
공공 기관 청렴도 조사 (공직유관 단체)	IV (37개)	(준정부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체육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투자공사, 환경보전협회
	V (20개)	(공기업)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23개)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공공 의료 기관 청렴도 조사 ²²⁹⁾	국립 대학 병원 등 (16개)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원 (1개)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국·공립 대학 청렴도 조사	대학교 (4개)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교대· 폴리텍 대학 (1개)	(기타공공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18점 상승하였으며, 이중 공운법상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공직유관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가 8.4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가 7.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모든 측정영역의 평균점수가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에 비해 정책고객평가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크게 상승함.
 - 2018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전년에 비해 0.22점 상승하였고, 내부청렴도는 7.72점으로 전년대비 0.06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는 7.61점으로 전년대비 0.32점 상승함.
 -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외부청렴도(8.69점)와 정책고객평가(8.04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으나, 내부청렴도에서는 평균점수(7.72점) 보다는 높지만, 기초자치단체(7.63점)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7.77점을 받음.
- 2018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중에서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189개 기관²³⁰⁾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²³¹⁾
- 종합청렴도가 3등급인 기관이 73개로 2018년도 조사 수검기관(189개) 중 38.6%를 차지함.
 - 모든 유형에서 종합청렴도가 중간 수준인 3등급에 분포한 기관수가 가장 많음.
 -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인 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수검하고 있는 공기업(8.6%)과 준정부기관(6.2%)보다 기타공공기관(20.5%)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최상위 등급(1등급)인 기관은 4개 기관으로 공기업 3개와 준정부기관 1개가 포함되며,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1등급 기관이 없었음.
 - 공기업 중 최상위 등급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전년대비 모두 1등급이 상승함.

229) 2017년 조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대학병원, 치과병원, 기타, 의료원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2018년도 조사에서는 대상기관은 동일하나 대분류를 기존 대학병원, 치과병원, 기타병원을 합하여 '국립병원 등'으로 명명하고, 그 외를 의료원이라 명명하여, 해당 분류를 2018년도 발표내용에 맞게 수정함

230)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1차 결과(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결과)에서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감점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산출함

231) 종합청렴도 등급 판정은 조사 대상기관 유형별로 다른 등급구간을 적용하는데, 종합청렴도 등급구간은 유형별로 유형내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함(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임)

-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대비 1등급이 상승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음.
- 반면 최하위 등급(5등급)인 기관은 23개 기관으로 3개의 공기업, 5개의 준정부기관과 15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함.
- 공기업 중에서는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주)강원랜드는 조사를 처음 수검한 2017년 이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수준(5등급)을 유지함.
- 종합청렴도가 5등급인 준정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으로 이 중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환경공단은 2년 연속 등급이 하락함.
- 최하위 등급인 기타공공기관은 총 15개 기관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며, 이 중 부산대학교병원은 3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유지함.

〈표 Ⅲ-93〉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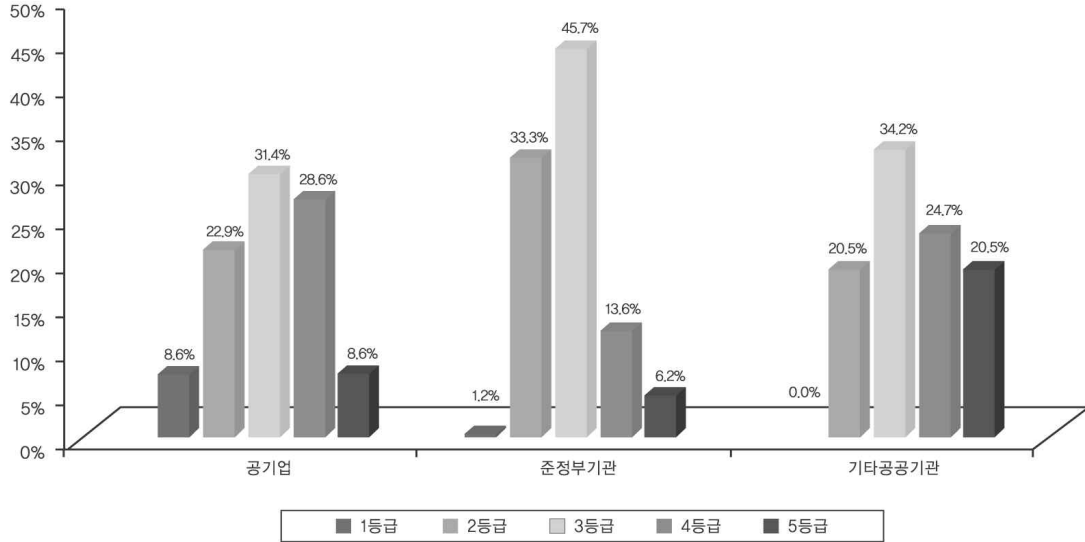
구 분		종합청렴도 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조사 대상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공 기 업	시장형 (16)	16	1	4	5	4	2	16	3	7	6
	준시장형 (20)	19	2	4	6	6	1	19	7	5	7
	소 계 (36)	35	3	8	11	10	3	35	10	12	13
준 정 부 기 관	기금관리 (14)	13	0	6	4	3	0	13	3	5	5
	위탁집행 (79)	68	1	21	33	8	5	64	25	21	18
	소 계 (93)	81	1	27	37	11	5	77	28	26	23
기타공공기관 (210)		73	0	15	25	18	15	58	10	31	17
전 체 (339)		189 (100%)	4 (2%)	50 (26%)	73 (39%)	39 (21%)	23 (12%)	170 (100%)	48 (28%)	69 (41%)	53 (31%)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작성

2.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검하고 점수 결과를 공개한 17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46〉 2018년도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표 III-94〉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구분	기관명
1등급 (4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정부기관)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50개)	(공기업)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공공기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부법무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구분	기관명
3등급 (73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KPS(주)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기술품질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화진흥위원회, 제주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39개)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공공기관)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노사발전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경보건협회
5등급 (23개)	(공기업)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준정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체육회, 부산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부처별로 공공기관 등급 분포와 등급 개선수준을 살펴보면
<표 III- 95>, <표 III- 96>과 같음.

<표 III-95>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분포 및 전년대비 개선 수준

(단위: 개)

구 분	종합청렴도등급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			
	소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분석 대상	상승 (▲)	유지 (-)	하락 (▼)
기획재정부	4	0	3	0	0	1	3	0	2	1
교육부	18	0	2	4	8	4	16	3	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	0	10	14	4	6	34	9	18	7
외교부	1	0	0	1	0	0	1	1	0	0
행정안전부	1	0	1	0	0	0	1	1	0	0
문화체육관광부	8	0	3	3	0	2	8	4	3	1
농림축산식품부	6	0	3	2	1	0	6	4	2	0
산업통상자원부	34	1	11	14	6	2	34	12	9	13
보건복지부	12	1	2	5	3	1	10	2	7	1
환경부	7	0	0	2	3	2	5	0	1	4
고용노동부	7	0	2	2	3	0	5	0	3	2
여성가족부	2	0	0	2	0	0	2	0	2	0
국토교통부	14	1	4	5	4	0	13	5	5	3
해양수산부	10	0	1	5	1	3	9	1	1	7
중소벤처기업부	5	0	2	1	1	1	3	1	1	1
국무조정실	3	0	0	2	1	0	1	0	1	0
방송통신위원회	1	1	0	0	0	0	1	1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1	0	0	1	0	0	1	0	1	0
금융위원회	7	0	3	2	1	1	7	1	3	3
공정거래위원회	1	0	0	0	1	0	1	0	1	0
국가보훈처	1	0	1	0	0	0	1	1	0	0
인사혁신처	1	0	0	1	0	0	1	0	0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0	0	1	0	0	1	0	1	0
경찰청	1	0	0	1	0	0	1	1	0	0
소방청	1	0	0	0	1	0	1	0	0	1
방위사업청	2	0	1	1	0	0	2	1	1	0
농촌진흥청	1	0	0	1	0	0	1	0	0	1
기상청	1	0	0	1	0	0	1	0	0	1
산림청	1	0	0	1	0	0	0	0	0	0
법무부	2	0	1	0	1	0	0	0	0	0
특허청	1	0	0	1	0	0	0	0	0	0
전 체	189	4	50	73	39	23	170	48	69	53

주: 1. 공공기관이 수집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전년대비 등급 개선수준은 2019년 1월 지정된 공공기관 중 2017년 및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을 모두 수집하고 결과를 공개한 17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3.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수집기관이 없는 부처는 제외하고 작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표 Ⅲ-96〉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도 종합청렴도 등급 현황

주무부처	기관명
기획재정부 (4개)	(2등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5등급)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 (18개)	(2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3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4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5등급) 한국장학재단,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4개)	(2등급)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4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한의학연구원 (5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외교부 (1개)	(3등급) 한국국제협력단
행정안전부 (1개)	(2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화체육관광부 (8개)	(2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3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5등급)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6개)	(2등급)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3등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4등급) 한국마사회

주무부처	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34개)	(1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 (2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3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전KPS(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4등급)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등급)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보건복지부 (12개)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2등급)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등급) 국립암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5등급) 국립중앙의료원
환경부 (7개)	(3등급)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4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보건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고용노동부 (7개)	(2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3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4등급)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성가족부 (2개)	(3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교통부 (14개)	(1등급) 한국감정원 (2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3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무부처	기관명
해양수산부 (10개)	(2등급) 인천항만공사 (3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4등급) 해양환경공단 (5등급)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 (5개)	(2등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유통센터 (3등급) 한국벤처투자 (4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5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무조정실 (3개)	(3등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등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방송통신위원회 (1개)	(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안전위원회 (1개)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 (7개)	(2등급)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3등급)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4등급) 신용보증기금 (5등급) 중소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 (1개)	(4등급) 한국소비자원
국가보훈처 (1개)	(2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인사혁신처 (1개)	(3등급) 공무원연금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1개)	(3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1개)	(3등급)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4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방위사업청 (2개)	(2등급) 국방과학연구소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농촌진흥청 (1개)	(3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주무부처	기관명
기상청 (1개)	(3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청 (1개)	(3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법무부 (2개)	(2등급) 정부법무공단 (4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특허청 (1개)	(3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 1. 공공기관이 수검한 청렴도 조사 종류(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조사, 국·공립대학 청렴도 조사 등)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사에서 측정된 청렴도 등급을 기재

2. 정부 부처 중 청렴도 조사 대상이 없는 부처는 제외

3. () 안은 부처별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대상 중 등급을 공개한 기관수를 의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및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답보」, 보도자료, 2018. 12. 20.를 참고하여 작성

라.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²³²⁾

1) 통합공시제도 개요

□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은 공운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그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시스템’)에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함.

○ 2019년 9월 현재 경영 공시 의무 대상인 339개 공공기관과 23개 부설기관은 최근 5년간 경영정보를 알리오시스템에 공시 중임.

□ 2019년 9월 현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통합공시기준’)」 제4조에 의거하여 5개 대항목 하위에 총 42개 항목에 대해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통합공시 항목 42개 중 3개 항목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음.²³³⁾

○ 통합공시기준 <별표2>에 따라 별점을 부과하기 위해 통합공시 매뉴얼에서 통합 공시 항목별(42개)로 하위단위를 세항목과 세세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요

232)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3. 28.,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9. 3.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3. 28. 등을 참고

233)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3개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임

도를 고려하여 각각 주요항목과 기타항목으로 분류함.

□ 통합공시기준은 2007년 제정된 이래로 매년 개정되어 왔음.

- 2016년에는 공운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2016. 9. 23. 시행)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임원성별현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 수당의 항목별 공시, 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항목을 추가함.²³⁴⁾
- 2017년 2월에는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세부공시기준 5개²³⁵⁾를 추가하여 2017년도 정기공시부터 반영함.²³⁶⁾
- 2018년 2월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³⁷⁾
 - 성별 임금현황,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채용단계별 상세정보에 대한 세부공시기준을 추가함.
 - 공공기관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장·단기 차입금 현황 갱신주기를 현행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함.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요약대차대조표 (또는 요약재무상태표)' 항목 명칭을 '요약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2018년 3월에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³⁸⁾
 - 이사회 회의록 중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되 공개하지 않는 사항은 회의록의 일부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함.
 - 공시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도록 함.
 - 대항목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VI)'을 삭제하고 하위 2개 항목을 정비하는 등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개정함.
- 공운법 개정 시행(2018. 9. 27. 시행)²³⁹⁾에 앞서 2018년 8월에는 통합공시 항목별

23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2016. 9. 22.

235) 유연근무제 성별 실시 인원수, 육아휴직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출산휴가 제도현황 및 성별 사용자수, 유산·사산휴가 제도현황 및 사용자수,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현황

236)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7. 2. 9.

23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2. 22.

23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3. 8.

239) 공운법 개정사항(2018. 3. 27. 일부 개정) 중 통합공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항목에 최근 5년간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등에 취업한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제11조 제1항 제5호)

- 경영공시사항에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일반국민이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통합공시기준을 개정함.²⁴⁰⁾

- '투자 및 출자현황' 항목에 공시하던 출자회사 정보 중 퇴직 임원에 한해 공시하던 채용정보를 인사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퇴직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시하도록 함.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시하도록 함.
- 2019년 3월에는 공운법 개정(2018. 12. 31 개정, 2019. 7. 1 시행) 및 「공공기관 안전 강화종합대책」에 따라 안전 분야 공시 확대 등을 위해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을 정비함.²⁴¹⁾
- 공공기관의 자발적 안전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분야 공시 항목(사망자수 및 재해통계,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신설함.
 - 그 외에 직원의 성별 임금현황은 이미 공시 중이나 임원의 성별 임금현황도 공시하기로 함.²⁴²⁾
 - 또한,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주기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퇴직직원 취업현황,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공시주기를 수사에서 정기로 변경함.

개선 정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항 제15호 신설)

24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8. 24.

24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9. 3. 28.

242) 공운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개정

〈표 III-97〉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분(2019. 9월 기준)

(단위: 개)

구 분	항목별 하위 단위수준			공시주기(91개 세항목 기준)		
	항목	세항목	세세항목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항목	기타항목	
	42	91	120	30	35	26
I. 일반현황	1	1	1	-	1	-
II. 기관운영	14	43	68	18	17	8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4	30	33	12	12	6
IV. 대내외평가	7	9	9	-	4	5
V. 공지사향(정보센터)	6	8	9	-	1	7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9. 3.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I-98〉 공공기관 통합공시항목 구성(2019. 9월 기준)

공공기관 운영 일반현황(13개)	재무정보(14개)
일반현황, 임직원수, 임원현황, 신규채용 및 유연근무 현황,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기관장 업무추진비, 임원 국외출장 내역, 노동조합 관련현황, 내부규정, 징계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현황, 주요사업, 투자집행내역, 자본금 및 주주현황, 장단기 차입금 현황, 투자 및 출자현황, 연간 출연 및 증여, 경영부담 비용추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2개 주요기관 상세부채정보, 납세정보 현황, 감사보고서
복리후생(2개)	기타정보(13개)
복리후생비,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국회 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이사회회의록 및 내부감사결과, 경영혁신사례, 임직원 채용정보, 계약정보, 연구보고서, 안전관리 현황, 기타정보공개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9. 3.을 참고하여 작성

〈표 Ⅲ-99〉 공운법 제11조 제1항의 주요 공시사항과 유관 통합공시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대항목	공시항목명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1호
II.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제3호
	3. 임원현황	제3호
	4. 신규채용 현황 및 유연근무 현황	제3호, 제16호
	5. 임원연봉	제3호, 제4호
	6. 직원 평균보수	제4호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제16호
	8. 복리후생비	제4호
	9. 그 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제4호, 제16호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제16호
	11. 노동조합 관련현황	제16호
	12. 내부규정	제9호
	13. 징계현황	제13호
	14. 소송 및 법률자문 현황	제14호
	15.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현황	제16호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6. 요약 재무상태표	제2호
	17.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제2호
	18. 수입·지출현황	제1호, 제2호, 제4호
	19. 주요사업	제16호
	20. 투자집행내역	제16호
	21. 자본금 및 주주현황	제2호
	22. 장단기 차입금현황	제2호
	23. 투자 및 출자현황	제5호
	24. 연간 출연 및 증여	제16호
	25. 경영부담 비용추계	제16호
	2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15호
	27.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정보	제16호
	28. 납세정보 현황	제16호
IV. 대내외평가	29. 감사보고서	제2호
	30. 국회 지적사항	제12호
	31.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제12호, 제11호
	32.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8호

대항목	구 분	관련 공운법 조항 (제11조 제1항 각 호)
	공시항목명	
	33. 경영평가 지적사항	제8호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6호
	35.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제7호
	36.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제9호, 제10호
V. 공지사항	37. 경영혁신사례	제16호
	38. 임직원 채용정보	제16호
	39. 계약정보(기관별 용역 등 수의계약 정보)	제16호
	40. 연구보고서	제16호
	41. 안전관리 현황	제16호
	42. 기타정보공개	제16호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9. 3.을 참고하여 작성

□ 기획재정부는 통합공시기준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에 따라 공시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함.

- 통합공시점검은 2006년에 알리오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점검수준을 강화해 옴.
 - 2013년도 정기공시부터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채, 복리후생, 수시공시 등 관련항목에서 경영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는지 여부를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기 시작함.
 - 2014년도에는 통합공시 실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별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도에 해당 점검 체계 및 별점 체계 등을 개선한 바 있음.
 - 2016년도에는 처벌위주의 점검 체계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우수공시기관 선정근거를 명문화하고 우수공시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²⁴³⁾
 - 2017년도에는 우수공시기관의 선정기준²⁴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교육 실시, 정부-공공기관 공시담당자 간 Q&A코너 개설, 공시 미흡기관 현장 컨설팅 실시 등 공시품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함.

243) 2015년에는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명문화 된 근거 규정은 없었으나, 우수공시기관은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244) ('16년) 무별점기관 → ('17년) 무별점기관이면서 최근 3년간('15~'17년)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

- 2018년도에는 2017년 14개에서 18개로 점검항목을 확대하고 연 2회 점검으로 공시오류 즉시 수정을 위해 노력함.

□ 통합공시기준 제13조(불성실공시 별점부과)에 따라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항목의 중요도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별점을 달리 부과할 수 있음.

- 중과실은 공시 오류로 인해 해당 항목의 의미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며, 경과실은 공시항목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기재 오류를 의미함.
- 수치입력의 오류, 특별한 사유가 없는 미공시 등은 중과실이며 단순한 계산의 실수, 첨부파일 오류나 매뉴얼이 모호한 경우 해석상 오류 등은 경과실 사례로 볼 수 있음.
- 별점을 부과할 때 항목에 따라 과점 단위를 구분하여 정기공시항목은 세항목별 과점, 세세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세항목별 과점을 부과하고 수시공시항목은 사유발생 또는 공시 회수별로 과점함.

〈표 III-100〉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별점 부과 체계

항 목	미공시·허위공시		지연 공시	공시 변경
	고의·중과실	경과실		
주요항목	5점	3점	1점~2.5점	(정기) 0.5점 (수시) 0.1점
기타항목	3점	1.5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 통합공시기준 제14조(불성실공시 사후조치 등)에 따라 점검결과 별점이 부과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점정도에 따라 정기공시 후 1년 이내에 사후조치로 ‘기관주의’ 조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실시함.
- 연간 누적별점이 20점을 초과한 기관의 경우 ‘기관주의’ 조치의 대상이 됨.
- 연간 누적별점이 40점을 초과한 기관이거나 2년 연속 별점 20점을 초과하고 전년 대비 별점이 증가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기관과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불성실 공시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 또한, ‘불성실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내역이 3개월간 게시되며 관련자 인사조치 요청을 받게 됨.

- 이 외에도 사후조치로 무벌점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점검결과를 반영함.
- 해당연도 무벌점 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벌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알리오시스템에 해당 기관 명단을 공개함.
- 3년 연속 무벌점 기관의 경우 차기 점검 1회에 한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통합공시 점검결과를 경영평가 계량지표로 반영함.
 - 점검결과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1점)
 -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함.

2)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 2018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335개 기관²⁴⁵⁾을 대상으로 2018년도 통합공시점검을 실시함.
 -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노무법인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함.
 - 공공기관의 공시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하반기 2회에 나누어 점검을 실시함.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신규채용, 임직원 채용정보는 상하반기 모두 점검함.
 - 2018년 기준 40개의 통합공시 항목 중 기관운영·재무 관련 18개 항목²⁴⁶⁾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 (상반기) 복리후생비,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신규채용, 휴가·휴직제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징계현황, 임직원 채용정보, 계약정보 등 10개 항목
 - (하반기) 신규채용, 투자 및 출자현황, 노동조합 관련현황, 소송 및 법률자문, 수입·지출 현황, 자본금 및 주주현황, 납세정보, 임직원 채용정보 등 8개 항목
- 통합공시점검이 최초 실시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벌점 현황과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표 III-101>과 같음.
 - 2013년 통합공시점검이 처음 실시된 이래 2017년까지 평균벌점과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통합공시 점검

245) 2018년 338개 기관 중 3년 연속 무벌점 기관(2개)과 청산완료 기관(1개) 제외함

246) 통합공시 점검항목은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국민적 관심 측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함

- 제도가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수공시기관 또한 2014년 3개였던 것이 2017년 22개까지 증가하여 통합공시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과 관리 노력이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도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우수공시기관이 대폭 늘어났지만 평균별점과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우수공시기관 발표 및 3년 연속 무별점 기관에 대한 공시점검 유예(1회) 등의 인센티브 조치로 인해 우수공시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2018년부터 통합공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채용 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채용정보 관련 공시항목(신규채용, 임직원 채용정보)에 대한 중점 점검(연 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균별점 수준은 종전보다 높아짐.
 - 기관별 별점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 등 사후조치 대상기관도 2016년 수준으로 늘어남.

〈표 III-101〉 공공기관 통합공시 별점 현황(2013~2018년)

(단위: 개, 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타
점검 대상	295	296	311	319	329	335	35	92	208
평균 별점	113.1	21.3	10.8	9.5	7.4	8.5	2.2	4.3	11.4
우수공시기관	-	3	16	18	22	35	7	19	9
사후조치대상	295 (100%)	151 (50.2%)	43 (13.8%)	26 (8.2%)	20 (6.0%)	27 (8.0%)	0 (0%)	2 (0.6%)	25 (7.4%)
기관주의	2	129	35	23	17	20	0	2	18
불성실공시기관	293	22	8	3	3	7	0	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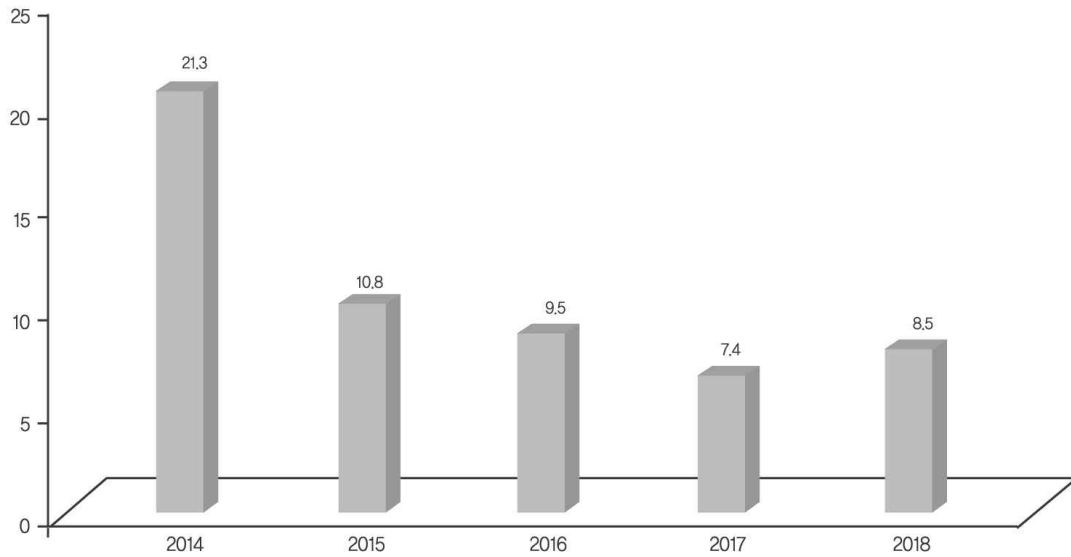
주: 1. 2014년도 기관주의 및 불성실공시기관의 수는 2014년 당시 별점 기준으로 지정된 사후조치 대상기관이 아닌 2015년도에 개정된 별점 기준을 적용한 결과임

2. 공공기관 유형은 해당연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구분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7〉 공공기관 통합공시 평균 벌점(2014~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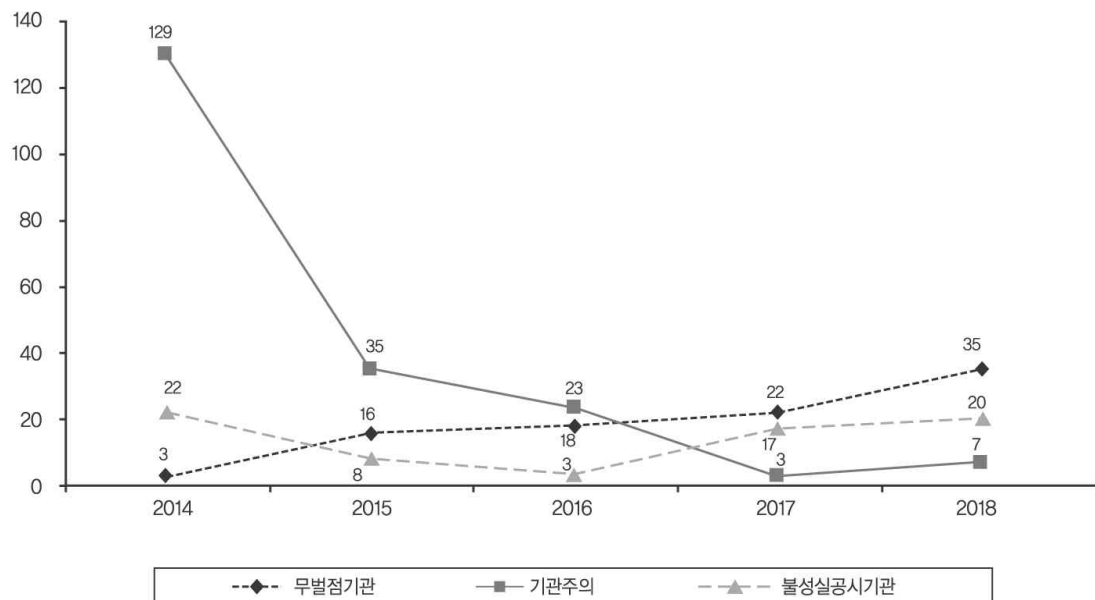
(단위: 점)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Ⅲ-48〉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2014~2018년)

(단위: 개)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은 개선(별점 감소)된 반면,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별점이 증가함.

- 공기업은 지속적 학습효과와 공시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통해 평균별점이 2017년 3.4점²⁴⁷⁾에서 2018년 2.2점으로 개선됨.
- 준정부기관은 채용정보 점검 강화로 별점이 2017년 4.1점²⁴⁸⁾에서 2018년 4.3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8년 전체 평균별점(8.5점) 보다는 낮은 수준임.
- 기타공공기관 역시 채용정보 관련 별점이 증가하여 평균별점이 2017년 9.6점²⁴⁹⁾에서 2018년 11.4점으로 증가함.

□ 점검 항목별로는 임직원·신규채용·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항목의 지적 건수가 1,002건으로 수입·지출, 법인세 등 재무정보 항목(248건)보다 많은 편임.

- 이는 기관운영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수시공시 항목(채용정보 등)이 다수 포함된 데에 주로 기인함.

□ 2018년도 통합공시점검에서는 총 3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²⁵⁰⁾으로 선정됨.

- 7개 공기업, 19개 준정부기관, 9개 기타공공기관 등이 2018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됨(<표 III-102>).
- 우수공시기관은 알리오시스템에 기관 명단을 게시함.
- 우수공시기관 중 최근 3년(2016~2018년) 연속으로 무별점을 달성한 한국서부발전(주),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7개 기관은 2019년도 통합공시 점검대상에서 제외됨.
- 2018년 우수공시기관은 2019년 통합공시점검 제외 시 무별점기관으로 간주함.

□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불성실공시기관²⁵¹⁾은 7개 기관으로 전년대비 4개 기관이 증가함.

- 대한적십자사, 제주대학교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서울

247)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8. 10. p.286

248)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8. 10. p.286

249)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8. 10. p.286

250) 최근 3년 연속 무별점기관 또는 2018년 무별점기관 중 최근 3년간 별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기관을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251) 2018년 누적 별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연간 별점이 20점을 초과하고 전년대비 증가한 기관을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

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전쟁기념사업회가 이에 해당하며 모두 기타공공기관임(<표 III-102>).

- 불성실공시기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채용정보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실시됨에 따라 수시인력 채용이 빈번한 의료기관 등에서 채용 단계별 기재사항 누락 등 단순오류가 적발되어 채용정보 관련 별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불성실공시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에 불성실공시 지정내역을 3개월간 게시하여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표 III-102〉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구 분	기관유형	기관명	후속조치
우수 공시기관 (35개)	공기업 (7개)	한국서부발전(주),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알리오시스템 게시 ▪ '19년 통합공시점검 제외(3년 연속 무별점)
	준정부 기관 (19개)	국민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기타 공공기관 (9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불성실 공시기관 (7개)	기타 공공기관 (7개)	대한적십자사, 제주대학교병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전쟁기념사업회	▪ 개선계획서 제출 ▪ 인사조치 ▪ 알리오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주: 1. 공공기관 유형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유형인 준정부기관에 포함

2. 밑줄 친 기관(7개)은 3년 연속 무별점기관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구간별 기관 분포는 <표 III-103>과 같이 나타남.

○ 2018년도 점검대상인 335개 기관 중 별점 0점인 기관은 46개(13.7%)이고 사후조치 대상이 되는 별점 20점 초과²⁵²⁾ 기관은 27개(8.1%)임.

- 전체 공공기관의 62.7%(210개)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함.

○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별점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남.

- 공기업은 별점 0점 초과~10점 이하 구간에 71.4%(25개)가 분포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별점 0점인 경우가 28.6%(10개)이고 별점 10점 초과 기관은 없음.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과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이나 공기업과 달리 별점 10점 초과 기관이 8.8%(8개) 존재함.

- 기타공공기관은 별점 10점 초과~20점 이하인 기관이 22.1%(46개), 별점 20점 초과인 기관이 12.0%(25개)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높은 별점 구간의 기관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별점 20점을 초과한 27개 기관 중 25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103>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 10점이하	10점초과~ 20점이하	20점초과~ 30점이하	30점초과~ 40점이하	40점초과
공기업	35 (100)	10 (28.6)	25 (71.4)	0 (0)	0 (0)	0 (0)	0 (0)
준정부기관	92 (100)	24 (26.1)	60 (65.2)	6 (6.5)	2 (2.2)	0 (0)	0 (0)
기타공공기관	208 (100)	12 (5.8)	125 (60.1)	46 (22.1)	16 (7.7)	3 (1.4)	6 (2.9)
합계	335 (100)	46 (13.7)	210 (62.7)	52 (15.5)	18 (5.4)	3 (0.9)	6 (1.8)

주: 1. 괄호에 비중 표시

2. 2년간 별점이 20점을 연속 초과하여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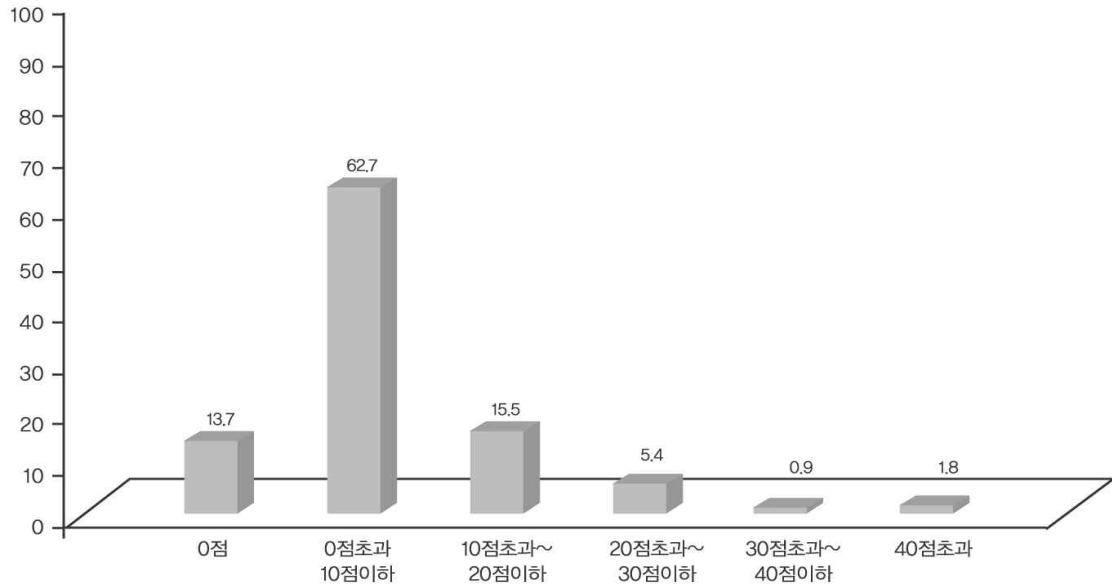
3. 공공기관 유형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 2019년 공공기관 지정 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8년 유형인 준정부기관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8. 1. 27. 및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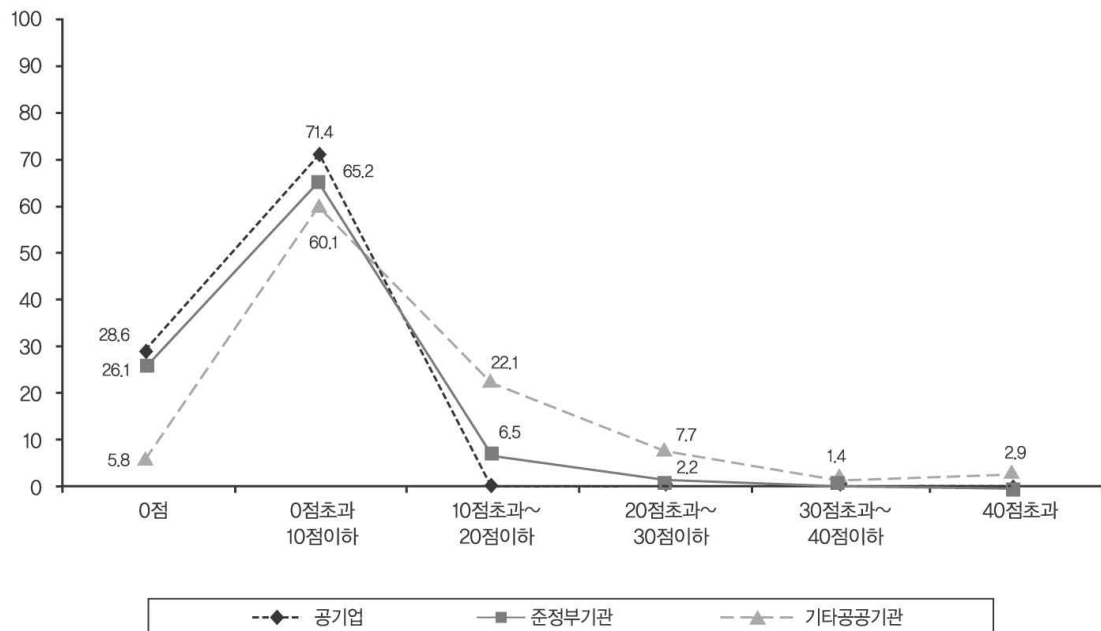
〈그림 III-49〉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전체 기관)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I-50〉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현황(유형별)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별점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104>와 같음.

<표 III-104> 주무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별점 분포

(단위: 개)

구 분	소계	0점	0점초과~ 10점이하	10점초과~ 20점이하	20점초과~ 30점이하	30점초과~ 40점이하	40점초과
기획재정부	4	0	3	1	0	0	0
교육부	22	2	10	5	3	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1	35	5	1	2	2
외교부	3	0	2	1	0	0	0
통일부	2	0	1	1	0	0	0
법무부	4	0	2	1	1	0	0
국방부	3	0	1	0	2	0	0
행정안전부	3	0	1	1	1	0	0
문화체육관광부	33	2	20	9	2	0	0
농림축산식품부	10	0	7	2	1	0	0
산업통상자원부	41	14	23	3	1	0	0
보건복지부	21	6	11	2	1	0	1
환경부	10	0	7	2	1	0	0
고용노동부	11	1	8	1	0	0	1
여성가족부	5	1	4	0	0	0	0
국토교통부	23	3	15	4	1	0	0
해양수산부	17	2	12	2	1	0	0
중소벤처기업부	12	1	7	4	0	0	0
국무조정실	24	4	17	1	1	1	0
방송통신위원회	2	0	2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3	0	3	0	0	0	0
금융위원회	8	4	4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2	2	0	0	0	0	0
인사혁신처	1	1	0	0	0	0	0
국가보훈처	3	1	0	2	0	0	0
관세청	1	0	1	0	0	0	0
방위사업청	2	0	2	0	0	0	0
문화재청	1	0	1	0	0	0	0
산림청	3	0	1	2	0	0	0
농촌진흥청	1	0	1	0	0	0	0
특허청	5	1	4	0	0	0	0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1	2	1	0	0
기상청	3	0	2	1	0	0	0
경찰청	1	0	1	0	0	0	0
소방청	1	0	1	0	0	0	0
합 계	335	46	210	52	18	3	6

자료: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8. 1. 27. 및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를 참고하여 작성

-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체 통합공시점검 대상기관 335개 중 48개 기관이 전년에 비해 후속조치 수준이 개선되었고 34개 기관은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되었음.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대비 1단계 개선된 기관은 46개로 사후조치대상이 아니다가 우수공시기관이 된 경우가 29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전년대비 후속조치 수준이 2단계 이상 개선된 기관은 2개임.
 - 기타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17년도에는 불성실공시기관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²⁵³⁾에 해당하지 않음.
 - 후속조치 수준이 전년대비 1단계 악화된 기관은 29개로 사후조치대상이 아니다가 기관주의를 받은 경우가 15개 기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2017년도에는 전년대비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이 없었으나 2018년도에는 5개 기관이 존재함.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5개 기관은 2017년도에는 사후조치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도에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됨.
 - 후속조치 수준이 악화된 기관은 대부분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함.

〈표 III-105〉 2018년도 통합공시 점검결과 전년대비 변동 현황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48개)	1단계 개선 (46개)	[사후조치대상아님 → 우수공시기관(29개)] (공기업:5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정부기관:1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송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타공공기관)(8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기관주의 → 사후조치대상아님(16개)] (공기업:1개) (주)강원랜드

253)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구 분	기관명
개선된 기관 (48개)	1단계 개선 (46개) (기타공공기관:15개)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대한체육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세종학당재단, 전남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행정연구원
	[불성실공시기관→기관주의(1개)] (기타공공기관:1개)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단계 개선 (2개) [불성실공시기관→사후조치대상아님(2개)] (기타공공기관:2개) 동북아역사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악화된 기관 (34개)	1단계 악화 (29개) [우수공시기관→사후조치대상아님(12개)] (준정부기관:2개)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기타공공기관:10개) (재)중소기업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사후조치대상아님→기관주의(15개)] (기타공공기관:15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강원대학교병원, 광주과학기술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방전직교육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기초과학연구원, 부산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환경보건협회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2개)] (기타공공기관:2개)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2단계 악화 (5개) [사후조치대상아님→불성실공시기관(5개)] (기타공공기관:5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병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원자력의학원

주: 공공기관 유형은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및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3.28.를 참고하여 작성

참고문헌

- (주)강원랜드, 『결산서(2018)』, 2019. 3.
- _____, 『사업보고서(2018)』, 2019. 4.
- 고용노동부, 「2016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7. 5. 26.
- _____,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2017. 10. 25.
- _____,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 5천명」, 보도자료, 2019. 1. 25.
- _____,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대책」, 보도자료, 2019. 2. 20.
- _____,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6.3%(1단계) 달성, 민간위탁 분야에도 고용안정 추진」, 보도자료, 2019. 2. 27.
- _____,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보도자료, 2019. 2. 28.
- _____,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처우개선되고 만족도 올라가」, 보도자료, 2019. 5. 16.
- _____, 「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보도자료, 2019. 7. 24.
-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설명회 자료집」, 2019. 7. 26.
- 관계부처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2017. 7. 20.
- _____,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보도자료, 2019. 2. 20.
- _____,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보도자료, 2019. 3. 19.
-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 2018. 3.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8. 6.
- _____,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8. 8.
- _____,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2018. 8.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8. 12.
- _____, 「2018년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 2018. 12. 20.
- _____, 「2018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 2018. 12. 20.
- _____, 「국·공립대 청렴도 상승, 공공의료기관은 담보」, 보도자료, 2018. 12. 20.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이전공공기관 함께 뚝다」, 보도자료, 2019. 4. 5.

_____, 「'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9. 7. 2.

_____,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19개 종전부동산 새주인 찾는다」, 보도자료, 2019. 7.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결산서(2018)』, 2019. 3.

_____, 『사업보고서(2018)』, 2019. 4.

기획재정부,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2. 9. 26.

_____,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보도자료, 2013. 12. 11.

_____,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4. 9. 22.

_____,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5. 9. 16.

_____,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보도자료, 2016. 7. 1.

_____, 「2016~202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6. 9. 2.

_____,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2016. 9. 22.

_____,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보도자료, 2016. 12. 8.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 확정 및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보도자료, 2017. 2. 9.

_____,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7. 8. 30.

_____, 「탄력정원제를 활용한 공공기관 일자리나누기 지원방안」, 보도자료, 2017. 9. 21.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7. 11.

_____,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보도자료, 2017. 12. 8.

_____,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자료, 2017. 12. 28.

_____,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7. 12. 8.

_____,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8. 1. 12.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8. 1. 31.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2. 22.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자료, 2018. 3. 8.

_____,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개정)」, 2018. 3. 8.

- _____,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개정)」, 2018. 3. 8.
- _____,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개정)」, 2018. 3. 8.
- _____,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실시」, 보도자료, 2018. 3. 21.
-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3. 21.
- _____,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 6. 19.
- _____,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지원방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7. 11.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안)」, 2018. 8. 24.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_____,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8. 24.
- _____,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18. 8. 31.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9.
- _____, 「공공기관 혁신포털(알리오플러스: www.alioplus.go.kr) 개통」, 보도자료, 2018. 11. 28.
- _____, 「공공기관 혁신포털 구축계획」,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11. 28.
- _____,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보도자료, 2018. 12. 12.
- _____,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관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8. 12. 14.
- _____, 「주요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 보도자료, 2018. 12. 18.
- _____,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수정)」, 2018. 12. 27.
- _____,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9. 1. 30.
- _____,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9. 1. 30.
- _____, 「공공기관 혁신지침」, 2019. 1.
- _____, 『2019 나라살림 개요』, 2019. 1.

- _____,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보도자료, 2019. 2. 13.
- _____,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개선과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2. 27.
- _____,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2019. 3. 9.
- _____, 『2019 기금현황』, 2019. 3. 19
- _____, 「2018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 3. 28.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 _____,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9. 3. 28.
- _____,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3. 28.
- _____,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전자문서 작성지침」, 2019. 3.
- _____, 「2018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 공시기간 대폭 증가」, 보도자료, 2019. 3. 28.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보도자료, 2019. 4. 30.
- _____,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9. 4.
- _____, 「'19년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1조 4,382억원 수납 확정」, 보도자료, 2019. 5. 21.
- _____, 「'19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4.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9. 6. 20.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전자료, 2019. 6. 20.
- _____,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 기관별 우수사례 배포」, 보도자료, 2019. 7. 26.
- _____, 『2018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 _____, 『2018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019. 8.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7. 10.
- _____, 『2018 공공기관 현황 편람』, 2018. 10.

중소기업은행, 『사업보고서(2018)』, 2019. 4.

한국가스공사, 『결산서(2018)』, 2019. 3.

_____, 『감사보고서(2018)』, 2019. 4.

한국전력공사, 『결산서(2018)』, 2019. 3.

_____, 『사업보고서(2018)』, 2019. 4.

_____, 「KEPCO 투자 설명자료」, 2019. 4.

한국전력기술(주), 『결산서(2018)』, 2019. 3.

_____, 『사업보고서(2018)』, 2019. 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업보고서(2018)』, 2019. 3.

한전KPS(주), 『사업보고서(2018)』, 2019. 4.

(주)강원랜드, <http://kangwonland.high1.com>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http://innocity.molit.go.kr/v2/>

그랜드코리아레저, <http://www.grandkorea.com>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시스템), <http://www.alio.go.kr>

중소기업은행, <http://www.ibk.c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전력공사, <http://home.kepco.co.kr>

한국전력기술(주), <http://www.kepco-enc.com>

한국지역난방공사, <http://www.kdhc.co.kr>

한전KPS(주), <http://www.kps.c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부 록



- 부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 부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
- 부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 부록 4. 2019년 기금 현황
- 부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
-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
- 부록 7.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
- 부록 8.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

부 록 1 주무부처별 공공기관 현황(339개, 2019.9월 현재)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4)	위탁집행형(79)	
기획재정부 (4)		한국조폐공사 (1)		한국재정정보원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교육부 (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부설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1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5)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부설기관: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부설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0)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부설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기관: 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설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기관: 녹색기술센터), 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기관: 재료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기관: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기관: 세계김치연구소),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4)	위탁집행형(79)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35)
외교부 (3)				한국국제협력단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
통일부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
법무부 (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국방부 (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3)
행정안전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2)
문화체육관광부 (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4) 재단법인 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5)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4)	위탁집행형(79)	
농림축산식품부 (11)		한국마사회 (1)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5)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5)
산업통상자원부 (41)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12)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5)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12)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10)
보건복지부 (25)			국민연금공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설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8)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6)
환경부 (11)		한국수자원공사 (1)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4)	(주)위터웨이플러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건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6)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4)	위탁집행형(79)	
고용노동부 (11)			근로복지공단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6)
여성가족부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국토교통부 (25)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6)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10)
해양수산부 (16)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3)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기관: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7)
중소벤처기업부 (12)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7)
국무조정실 (24)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부설기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교육개발원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4)	위탁집행형(79)	
국무조정실 (2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설기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방송통신위원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시청자미디어재단 (1)	
원자력안전위원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
금융위원회 (8)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4)
공정거래위원회 (2)				한국소비자원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
국가보훈처 (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88관광개발(주) (1)
인사혁신처 (1)			공무원연금공단 (1)		
식품의약품안전처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
관세청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1)

주무부처	공기업(36)		준정부기관(93)		기타공공기관(210)
	시장형(16)	준시장형(20)	기금관리형(14)	위탁집행형(79)	
방위사업청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2)
경찰청 (1)				도로교통공단 (1)	
소방청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문화재청 (1)					한국문화재단 (1)
산업청 (3)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한국수목원관리원 (1)
농촌진흥청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특허청 (5)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4)
기상청 (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

부 록 2 공공기관 일반현황(2019.9월 기준)

1] 공기업(36개)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시장형 공기업(16개)						
(주)강원랜드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998.06.29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폐광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함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kangwonland.high1. com
부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4.01.16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라·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 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www.busanpa.com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9.02.01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www.airport.kr
인천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5.07.11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 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www.icpa.or.kr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가스공사법	1983.08.18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편익과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www.kogas.or.kr
한국공항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	2002.03.02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www.airport.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1967.06.05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 산업의 육상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www.kores.or.kr
한국남동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www.koenergy.kr
한국남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 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4층, 30~35층	www.kospo.co.kr
한국동서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www.ewp.co.kr
한국서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www.iwest.co.kr
한국석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석유공사법	1979.03.03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www.knoc.co.kr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친환경, 고품질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우 수기술의 공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경쟁력과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www.khnp.co.kr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한국전력공사법	1961.07.01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www.kepco.co.kr
한국중부발전(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舊)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2001.04.02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www.komipo.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1985.11.01	효율적인 집단에너지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www.kdnc.co.kr

[2] 준시장형 공기업(20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및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1993.05.27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 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www.kogas-tech.co.kr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카지노 영업허가	2005.09.06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증대, 한 국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이익금의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주 가치의 극대화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 회적 책임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www.grandkorea.com
대한석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석탄공사법	1950.11.01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 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 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 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	www.kocoal.or.kr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11.08.19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라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여수항과 광 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 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	해양 수산부	항만공사법	2007.07.05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라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울산항을 경 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울산항마린센터	www.u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국토 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2002.05.15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 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 지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www.jdcenter.com
주식회사 에스알	국토 교통부	상법 및 철도사업법 제5조	2013.12.27	이용자의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 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www.srail.co.kr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 교통부	주택도시보증법 제16조	2015.07.01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 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보증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 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www.khug.or.kr
한국감정원	국토 교통부	한국감정원법	1969.04.25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www.kab.co.kr
한국도로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1969.02.15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 달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www.ex.co.kr
한국마사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마사회법	1949.09.29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을 통하여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www.kra.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2012.05.23	광고판매 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통신 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목 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www.kobaco.co.kr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법	1967.11.16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 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www.kwater.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75.10.01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 (울곡동)	www.kepco-enc.com
한국조폐공사	기획 재정부	한국조폐공사법	1951.10.01	은행권·주화·주민등록증·여권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공공보안제품의 제조 및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www.komsco.com
한국철도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공사법	2005.01.01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www.kora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09.10.0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www.lh.or.kr
한전KDN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92.01.23	전력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통합(SI) 및 시스템운영(SM) 사업 수행,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행, 지능형 전력망 (Smart-Grid) 관련 사업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61	www.kdn.com
한전KPS(주)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4.04.01	발전설비 정비기술 전문화를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www.kps.co.kr
해양환경공단	해양 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2008.01.21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및 해양오염방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녹색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www.koem.or.kr

② 준정부기관(93개, 부설기관 4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4개)						
공무원연금공단	인사 혁신처	공무원연금법 제1조 및 제4조	1982.02.01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 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 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www.geps.or.kr
국민연금공단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제24조	1987.09.18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1995.05.0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 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 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www.kcomwel.or.kr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1989.04.01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 기술사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 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www.kibo.or.k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조	1974.01.1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사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 를 지급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 고자 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www.tp.or.kr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	1989.04.20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www.ksp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1976.06.01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www.kodit.co.kr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1996.06.01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www.kdic.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979.01.17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www.kosmes.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제37조	1992.07.07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 (서린동)	www.ksure.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28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읽기문화 확산 및 신문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www.kpf.or.kr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	2009.01.0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www.korad.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962.04.06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정리 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지원,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amc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4.03.01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통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1229-1) 부산국제금융센터	www.hf.go.kr

[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79개, 부설기관 4개)

(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66.04.30	우체국 금융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체국예금보험 사업의 향상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1 (영등포동 4가)	www.posid.or.kr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80.08.26	안전신속정확한 우편물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76	www.pola.or.kr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30.12.03	우편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우정문화를 창달함으로써 우정사업 발전과 국민문화생활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영등포동 7가)	www.pos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2000.07.0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반곡동)	www.hira.or.kr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1987.07.01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반곡동)	www.knp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생태원	환경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10.28	생태와 생태계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www.nie.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2000.07.01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보건 및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www.nhis.or.kr
(부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62조	2000.03.03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www.nhimc.or.kr
(부설) 서울요양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3조 및 제37조	2014.11.1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 기관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 590길 50 (세곡동 520번지)	www.서울요양원.kr
국제방송교류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민법 제32조	1996.04.10	방송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우호 친선 도모하고, 방송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지원해 방송영상광고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선양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www.arirang.com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제16조	2002.12.30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신기술 심사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 발전·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www.kai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농림수산물교육 문화정보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	2012.05.23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 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 의 안전정보 제고 등을 효율적으로 추 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www.epis.or.kr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2009.10.0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 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지 원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45 (빛가람동 352-1)	www.ipet.re.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3조	2009.09.07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자 함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송학동 381)	www.fac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962.06.21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 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3	www.kotra.or.kr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도로교통법 120조	1954.02.12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 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 (반곡동)	www.koroad.or.kr
독립기념관	국가 보훈처	독립기념관법	1986.08.20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 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민족정 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 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www.i815.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2009.12.07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지원 및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www.ssi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2014.01.01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2~3, 11층	www.semas.or.kr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 제90조의2	2015.05.15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국가 미디 어 사업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www.kcmf.or.kr
아시아문화원	문화체육 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015.10.01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국립아시아문화전당)	www.aci-k.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2005.09.01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과 공공 기술 사업화 실현으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www.innopolis.or.kr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 관리원	국토 교통부	민법 제32조	1997.12.23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및 성능평가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 건설기계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 유지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www.kcesi.or.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	2009.08.24	정보통신산업의 효율적 지원과 진흥기 반 조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www.nip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014.03.31	국가 SW정책 중앙연구소로서 SW를 활 용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 하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A동 4층	www.spri.kr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2002.01.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 관리 및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정보화를 촉진 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TBC센터 6,7,8,10층	www.tipa.or.kr
창업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 2019.10.24. 시행 예정	2019.10.24. * 출범 예정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촉진시켜 창업기업 성 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 5층	www.kised.or.kr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법 제36조	2001.07.27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ekape.or.kr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1974.01.11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 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www.kgs.or.k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	2014.07.29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www.khealt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2006.03.31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www.keis.or.kr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	1967.12.2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02 삼릉빌딩	www.kofac.re.kr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법	1962.06.26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kto.visitkorea.or.kr
한국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6.06.01	광해방지사업과 석탄산업 지원사업 및 지역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광산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 (반곡동)	www.mireco.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999.04.22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제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KERIS 빌딩	www.keris.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1981.07.0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www.kotsa.or.kr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04.01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www.koica.g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 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2조	1977.07.0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 수행을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www.lx.or.kr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	2009.12.30.	기상산업의 진흥 발전,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로 2가, 충정빌딩)	www.kmiti.or.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2005.12.27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평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www.kordi.or.kr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1967.12.01	농수산식품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수급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빛가람동)	www.at.or.kr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0.01.01	환경친화적인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www.ekr.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1970.05.19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www.kidp.or.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법 제66조	1972.07.21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통신전파의 진흥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 확대와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	www.kc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07.04.04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oh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999.02.06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작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www.khidi.or.kr
한국보육진흥원	보건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8조	2009.12.23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 지원을 통한 영유아와 부모, 보육교직원 등 수요자의 만족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5,6층	www.kcpi.or.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1981.11.0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지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반곡동)	www.bohun.or.kr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2016.04.18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둔산동 아너스빌)	www.fowi.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2009.05.04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2-7, 12-14, 16-17, 21층	www.kiat.or.kr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	2009.05.04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침단로 8길 32	www.keit.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1997.01.10	산업단지의 조성 및 산업의 집적을 활 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www.kicox.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1987.12.09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힘쓰 도록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www.kosha.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982.03.18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통해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 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교동)	www.hrdkorea.or.kr
한국석유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1983.11.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 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www.kpetro.or.kr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1977.06.01	소방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 원하여 소방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제품 및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 성과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대국민 소방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www.kfi.or.kr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제33조	1987.07.01	소비자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자 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www.kca.g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2010.11.18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www.fira.or.kr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55조	2016.07.01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www.koelsa.or.kr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1995.04.19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이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통해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www.kistec.or.k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7.02.13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과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www.haccp.or.kr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	1980.07.04	에너지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산업육성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www.energy.or.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 제13조	2009.05.04	에너지기술개발 및 에너지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www.ketep.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	2009.06.26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 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학술 및 과 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www.nrf.re.kr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한국연구재단 정관 제18조의3	2014.04.01	ICT R&D 기획 및 전략수립,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기술사업화 등 전 주기 지원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및 산 업진흥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www.iitp.kr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09.07.23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제 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www.kisa.or.kr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2012.01.26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 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www.kofp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 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1990.09.01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구미동)	www.kead.or.kr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05.07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고등교육 장학지원 제 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사회 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신암동)	www.kosaf.go.kr
한국재정정보원	기획 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2016.07.0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 영·관리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 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남대문로 5가)	www.kpfi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사업법 제74조	1974.06.07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11	www.kesco.or.kr
한국전력거래소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사업법 제35조	2001.04.02	전력시장의 공정한 운영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www.kpx.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1987.01.30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서비스 확충,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조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행복 실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www.nia.or.kr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 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4.01.0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www.kr.or.kr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	1993.02.15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	www.kyci.or.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2010.08.18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2, 5층	www.kywa.or.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2009.05.01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www.kocca.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2012.12.21	R&D 창출, R&D 활용 등 R&D 주기에 대한 고도의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연계(IP-R&D) 사업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8층	www.kista.re.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9.07.01.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www.komsa.or.kr
한국해양수산업연구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업연구원법	1998.01.01	해양수산업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도모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67 (동삼동)	www.seaman.or.kr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법	2010.01.01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www.keco.or.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09.04.08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www.keiti.re.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2005.11.1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www.kimst.re.kr

③ 기타공공기관(210개, 부설기관 19개 별도)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사)남북교류협력 지원협회	통일부	민법 제32조	2007.05.18	정부 위탁업무 수행 및 정책건의, 남북교류 협력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고려대연각센터빌딩 601호	www.sonosa.or.kr
(재)APEC기후센터	기상청	민법 제32조	2005.06.09	아태지역의 기후변화 및 변동의 파급 효 과를 경감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상기후 감시 및 최적의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아태지역 의 변형 실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www.apcc21.org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청	민법 제32조	2010.01.22	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연구조사 정보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 전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www.origin.or.kr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6.01.12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57길 (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www.gokams.or.kr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00.11.23	우정사업조직에 속한 부동산의 효율적 관 리·운영으로 우정자산의 적극적 활용 및 가치향상을 도모, 우정시설의 최적화와 국민의 우체국 이용편의 및 우정 사업 중 사자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2(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 4층	www.poma.or.kr
(재)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행정 안전부	민법 제32조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2014.06.03	일제강제동원 피해·희생자 추모사업 및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조사·연 구 등 피해구제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603호	www.ilje.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민법 제32조	2004.07.01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경제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가길 77	www.kosbi.re.kr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산업통상자원부	민법 제32조	2007.04.02	스마트그리드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0층	www.smartgrid.or.kr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상청	민법 제32조	2011.02.15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수치예보기술과 응용기술을 개발·보급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현업용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고 기상재해 경감과 사회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35, 파크스퀘어 4층	www.kiaps.org
(재)한식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민법 제3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 2	2010.03.10	한식, 식문화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27 aT센터 601호	www.hansik.or.kr
(주)워터웨이플러스	환경부	상법	2011.04.26	벚길경관유지관리, 마리나 운영, 강문화관 운영·관리 및 관광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옥로 270번길 74	www.waterway.or.kr
(주)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부	상법	1993.12.06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선진건설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울곡동 790)	www.korcm.co.kr
88관광개발(주)	국가보훈처	상법 및 보훈기금법 제7조 6항	1987.07.30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소요되는 보훈기금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설립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169(청덕동)	www.88countryclub.co.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	2003.06.27	효율적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수입식용축산물 검역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양축농가의 소득 증대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www.lhca.or.kr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1997.05.07	치의학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www.gwnudh.or.kr
강원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0.05.18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www.knuh.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 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1997.12.09	퇴직공제사업,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사업 등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14층	www.cwma.or.kr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2013.12.23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www.grac.or.kr
경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07.02.10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www.knuh.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6.06.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치의학 및 치의학 관련 학문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www.knudh.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경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87.02.2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	www.gnuh.co.kr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05.07.01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4,8,9층	www.nrc.re.kr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2012.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을 지원하여 과학기술 진흥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 27길 2	www.compa.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1.05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부문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5,6,7층, 연구지원동 3층	www.stepi.re.kr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광주과학기술원법	1993.11.1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인재 양성, 국책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국내외 산학연과의 공동연구 및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www.gist.ac.kr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14.06.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5,6,7층	www.nst.re.kr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복지부	민법 제32조	2011.12.27	생명윤리 정책에 관한 전문적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의생명과학 및 그 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연구,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3, DB 다동빌딩 5층	www.nibp.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의2	2011.02.25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기업가관들의 활동 지원을 추진함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www.foodpolis.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19조	2008.02.15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www.nile.or.kr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7.23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전사·교육함으로써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www.sciencecenter. or.kr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6.03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2길 137	www.nnibr.re.kr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013.06.24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대로 6길 20	www.dnsm.or.kr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2004.07.20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박물관문화예술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www.cfnmk.or.kr
국립부산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2015.07.13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창달,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동남권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www.sciport.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립암센터	보건 복지부	암관리법 제27조	2000.03.22	암관리법에 따라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23	www.ncc.re.kr
국립중앙의료원	보건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0.04.0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www.nmc.or.kr
국립해양박물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법 제3조	2012.07.09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 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www.knmm.or.kr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 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5.04.20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 자원의 보전 및 해양수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101번길 75	www.mabik.re.kr
국방과학연구소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1970.08.06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고 만군기술협력사업과 민간장비의 시험평가 지원 사업을 수행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www.add.re.kr
국방기술품질원	방위 사업청	방위사업법 제32조	2006.01.02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기술기획, 연구와 기술 정보의 확보, 유통, 관리, 품질보증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 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함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www.dtaq.re.kr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2015.01.0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 83(창곡동)	www.moti.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9조의2	2012.02.22	미국캐나다 및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사 및 증명서 발급으로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식물의 검역 및 방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받은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업무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제903호	www.ipab.or.kr
국토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10.04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www.krihs.re.kr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무 조정실	국토연구원 정관 제28조	2007.06.15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공공적 가치 구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www.auri.re.kr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11.11.21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및 기초과학 기반 순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5(도룡동 3-1)	www.ibs.re.kr
(부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기초과학연구원 정관 제37조의2	2005.10.01	전문적인 수학연구를 통해 수학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수학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70	www.nims.re.kr
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	민법 제32조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07.04.05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발전 도모,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 업무의 전문적 수행,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www.nos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63조의2	2004.05.19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발전 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2층	www.apfs.kr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2004.09.07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www.dgist.ac.kr
(부설) 한국뇌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뇌연구촉진법 제17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2011.12.14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 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 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 조체제를 유자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61	www.kbri.re.kr
대구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4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단지 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 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www.dgmif.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2.29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문제를 조사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 에 이바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p.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법률구조법 제8조	1987.09.0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 사 변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26	www.kla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2005.11.25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및 사도 지부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선수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국제스포츠 교류활동을 통한 국제 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1층	www.koreanpc.kr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905.10.27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 정신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고자 함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www.redcross.or.kr
대한체육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1920.07.13	체육운동 범국민화로 국민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하며 올림픽즘의 원칙과 가치 확산, 스포츠를 통한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올림픽컨벤션)센터	www.sports.or.kr
동북아역사재단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6.09.22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지속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본관	www.nahf.or.kr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행정 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01.11.12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www.kdemo.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산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56.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www.pnuh.or.kr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2011.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www.pnudh.co.kr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010.09.2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5-14층	www.koreahana.or.kr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중소벤처 기업부	민법 제32조	1998.01.09	산학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plus.auri.go.kr
산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1.07	국내외의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www.kiet.re.kr
새만금개발공사	국토 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	2018.09.21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sdco.or.kr/
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 5층	www.kinf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1978.07.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h.org
(부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제3조 및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4조	2003.04.15	서울대학교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www.snubh.org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2004.09.01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www.snudh.org
세종학당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	2012.10.24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1, 12층	www.ksif.or.kr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0.07.22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	www.slc.or.kr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67조	2009.06.25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 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식품안전관리 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36, 5층(원남동, 보령빌딩)	www.foodinfo.or.kr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2000.08.07	16개 신용보증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도모, 재보증업무 및 개인에 의한 신용보증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대전센터 12~15층(월평동)	www.koreg.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6.09.01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 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의 향상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www.keei.re.kr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1999.06.07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 급분류함으로써 영상물의 공공성과 윤리 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 3층	www.kmrb.or.kr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1973.04.03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산학캠퍼스 13,14층	www.kofic.or.kr
예술의전당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987.01.07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의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공간의 운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www.sac.or.kr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보건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010.12.15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 하고 국내 의료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www.kbiohealth.kr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울산과학기술원법	2007.09.13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 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유니스트길 50	www.unist.ac.kr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33조	2000.01.01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www.hanilmed.net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국악방송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0.02.14	방송을 통해 국악 및 한국전통문화예술을 국민에 홍보·보급 교육함으로써 국악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전통문화예술의 발전 및 지역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12 7, 10~12층	www.gugakfm.co.k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0.10.26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통합, 환자안전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 제고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유자증진함	서울특별시 국회대로 76길 10, 10층	www.koiha.or.kr
재단법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008.02.19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제고 및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www.debc.or.kr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7.01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7, 3층	kptb.kr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2006.12.26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에너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홍보,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혼로 152	www.koref.or.kr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013.01.04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활성화 및 제도·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양성·활용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층 309호	www.wiset.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보건 복지부	민법 제32조	2017.04.01	뇌사 또는 사망자의 송고한 기증 정신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증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의학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공단충정로사옥 5층	www.kodal458.kr
재외동포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법	1997.10.30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유대감 유지와 거주국의 모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okf.or.kr
전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3.03.27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www.cnuh.com
전략물자관리원	산업통상 자원부	대외무역법 제29조	2007.06.05	전략물자의 수출입업무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6층	www.kosti.or.kr
전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4.07.04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www.cuh.co.kr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	1989.01.31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www.warmemo.or.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4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www.kisdi.re.kr
정부법무공단	법무부	정부법무공단법	2008.02.15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www.kgls.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제주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001.11.01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 및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사업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www.jejunuh.co.kr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부	상법	2015.03.05	중소기업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문화와 국민경제 건인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 (상암동)	www.gongyoung.kr
주택관리공단(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2항	1998.09.28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 및 임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56(충무공동 82-2번지)	www.kohom.co.kr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1995.12.2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와 운영, 도·소매, 홍보·전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목동)	www.sbdc.or.kr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1961.08.01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50번지)	www.ibk.co.kr
충남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72.07.01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www.cnuh.co.kr
충북대학교병원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1991.07.20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www.cbnuh.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코레일관광개발(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8.11	철도 인프라와 민간관광 전문경영 노하우 접목을 통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으로 철 도 부가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www.korailtravel.com
코레일네트웍스(주)	국토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09.21	철도인프라를 활용한 부대수익 창출 및 사업다각화로 철도 경영개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9(한강로 2가 391) 용산푸르지오써밋 13층, 14층	www.korailnetworks. com
코레일로지스(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3.12.31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등 국가물류장애 발생 시 적극적 대응 조치를 통한 물류대 란 최소화 및 철도수송의 약점인 일관수 송 (Door-to-Door) 서비스 구축으로 고객 편의 및 철도수송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www.koraillogis.com
코레일유통(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12.02	철도 역사 구내영업과 광고사업의 체계적인 개발운영을 통해 철도고객의 니즈 충족 및 한국철도공사 수익경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www.korailretail.com
코레일테크(주)	국토 교통부	상법 및 (舊)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2004.12.09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KTX차 량 등 정비 외주화 위탁업무 수행으로 철 도공사 인력효율화와 경영개선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76	www.korailtech.kr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005.07.01	태권도원 조성·운영 및 태권도 진흥에 기 여함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태권도원	www.tpf.or.kr
통일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2.02	민주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 지원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www.kinu.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고용 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1998.02.05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 기능장 등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www.kopo.ac.kr
한국개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3.11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re.kr
(부설) KDI국제정책대학원	국무 조정실	한국개발연구원 정관 제4조	1997.12.05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개발 및 공공 정책 분야의 고급 국제 전문인력 양성과 개발정책교육 관련 연구와 자문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www.kdischool.ac.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 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및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015.01.0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지원으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역량 강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4-6층	www.kihf.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6.11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www.kict.re.kr
한국고전번역원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법	2007.11.23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85	www.itkc.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10.04.01	창의적인 공예문화와 디자인문화의 확산 과 진흥을 통하여 한국 공예 및 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www.kcdf.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2007.12.03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를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 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 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www.kofair.or.kr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1999.02.01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에 관한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F&B빌딩 4~6층	www.kistep.re.kr
(부설)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제3조	2007.11.01	과학기술인력의 자기계발과 변화혁신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조사연구를 통해 국가R&D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4길 45	www.kird.re.kr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02.10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창조적 원천기 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www.kist.re.kr
(부설) 녹색기술센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3.02.01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 간 연계·협력 등의 지원을 목 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7층	www.gtck.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1971.02.16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중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kaist.ac.kr
(부설) 고등과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및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3조	1996.10.01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세계적 수준의 기초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과학 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www.kias.re.kr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2004.05.0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기업의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www.nnfc.re.kr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및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한국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	1990.09.07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 조기 발굴 및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체계적 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www.ksa.hs.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2.01.01	국가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www.kist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2.08.30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하로 7	www.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8.01.0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교하로 8	www.kice.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교통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08.25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www.koti.re.kr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법	1987.03.02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www.kida.re.kr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1991.12.30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www.kf.or.kr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06.08.18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재능빌딩 6~8층	www.kofih.org
한국기계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기계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www.kimm.re.kr
(부설) 재료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계연구원 정관 제32조의2	2007.04.27	소재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신뢰성평가, 시험평가 등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상남동 66번지)	www.kims.re.kr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2조의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및 제26조	1991.11.02	고급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이론과 현장실기 및 학습조직화 능력을 겸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인력개발담당자 및 실천공학기술자의 양성」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충절로 1600	www.koreatech.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8.01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 학 진흥을 위한 연구 시설·장비 및 분석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연구지원 및 공 동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kbsi.re.kr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05.10.01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www.nfri.re.kr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003.12.23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www.kanc.re.kr
한국노동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8.05.09	노동관계 제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분 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 동문제에 관한 국민 일반의 인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www.kl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8.04.01	농림경제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관한 중 합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 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www.krei.re.kr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민법 제32조	1993.02.04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혁신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2 부영빌딩 7~8층	www.kdata.or.kr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2013.08.2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 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예방 및 치유 재활 사업과 활동을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8층	www.kcgp.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41조	2010.06.24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 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www.kiria.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학진흥법 제13조	1996.05.06	체계적인 한국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및 홍보·교류를 통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발전 및 세계화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12길 32(삼성동)	www.litkorea.or.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2002.12.04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추진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www.kcti.re.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2005.02.03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1~12층	www.arte.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2005.08.26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www.arko.or.kr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제9조	1980.04.01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보존하고, 전통생활문화를 창조적으로 계발하여 이를 보급·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민족 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삼성동)	www.chf.or.kr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 관광부	민법 제32조	2002.12.23	문화관련 공공기관의 문화정보화 촉진과 문화정보의 지식화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적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축 및 문화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www.kcisa.kr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제288조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84.01.2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삼동)	www.newseoulgolf.co.kr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2조	1994.12.26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www.kipa.org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953.03.05.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방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2로 40 산학연유치지원센터 3층	www.koreha.or.kr
한국법제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0.07.30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 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 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www.klri.re.kr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 기업부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	2005.06.29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 빌딩	www.k-vic.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1.07.01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연구분석 하고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사 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www.kihasa.re.kr
(부설) 육아정책연구소	국무 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4조의2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5조의2	2005.09.30	국가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 관련 연구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합 리적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가 육아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www.kicce.re.kr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	2008.12.23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 성·유효성 및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과 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여 국민건강 향 상에 기여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재원 투자의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www.nec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보건 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1992.04.20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www.kuksiwon.or.kr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989.12.04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www.kasfo.or.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보건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952.02.15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협조·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net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2010.12.31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새마을금고빌딩(6~8층)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1966.04.13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0 (충무공동)	www.ktl.re.kr
한국산업은행	금융 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1954.04.01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www.kdb.co.kr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부	수도법 제56조	2002.01.21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여 공공복리 증진, 물산업 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4(대림동 651-5)	www.kww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5.02.01	생명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공공인 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생명과학기술, 산업 발전 및 국가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5	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기술 분야의 산업원천 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및 성 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www.kitech.re.kr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의2	2009.05.04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분석·평가, 기술지 원 및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세 라믹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1	www.kicet.re.kr
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	2017.05.17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위해 기후 및 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문수로 2160-53	www.kiam.or.kr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환경부	민법 제32조	2017.12.20	건전한 물 순환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 급, 물관련 재해 피해 최소화 등에 필요 한 정확하고 공정한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분석·제공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을 목적으로 함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1103~1105호),12층	www.kihs.re.kr
한국수출입은행	기획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1976.07.01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 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www.koreaexim.go. kr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7.12.31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창출, 성 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www.kfr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김치산업진흥법 제13조 및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0.01.01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국내 김치산업을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성장동 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기여함	광주광역시 남구 김치로 86(임암동)	www.wikim.re.kr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여성 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003.03.05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 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 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의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igepe.or.kr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 수산부	어촌어항법 제57조	1994.03.30	어촌 및 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 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12층	www.fipa.or.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7.09.07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www.kier.re.kr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산업통상 자원부	민법 제32조	1992.03.25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 보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에너지 문화를 진흥시킴으로써 사회의 공익에 이 바지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418	www.keia.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가족부	민법 제32조	2009.04.03.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을 근절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 성인권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www.stop.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3.04.21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 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www.kwd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체육 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1974.01.18.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 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 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www.koreafilm.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제8조	2012.11.19	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 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 2층	www.kawf.kr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1974.12.6	증권등의 발행 및 유통 원활화 등 종합증 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함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www.ksd.or.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	원자력안전 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1990.02.14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 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www.kins.re.kr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2012.10.26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 도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사업 및 국 제협력을 기획, 관리하여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	www.kofons.or.kr
한국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59.02.03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학술의 진보, 에너지 확보 및 원자력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www.kaeri.re.kr
한국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	1963.12.17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 무와 암 진료, 국가적인 방사선비상 진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www.kirams.re.kr
(분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2조의2	2010.07.16	정부의 과학기술진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확 대와 핵심연구기능의 지방분산 정책시행 방사능 재난시 현장 비상진료기능 및 원 전의 사회적 수용성 확대에 기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www.dirams.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6조	2006.06.30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34	www.kinac.re.kr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42조	2012.05.18	국내외 신개발 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기술지원 등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305호	www.nids.or.kr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012.04.08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www.k-medi.or.kr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3	2012.01.06	의약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허가 정보·품목신고정보 등 의약품 등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에 기여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 5층	www.drugsafe.or.kr
한국잡월드	고용 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2	2011.11.03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지원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koreajobworld.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1989.04.28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www.koddi.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22조2	2016.09.30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 심의, 저작권 침해실태조사 및 저작권보호기술 연구 등의 수행을 통하여 저작권산업 발전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www.kcopa.or.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법 제112조	2009.07.23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5 층	www.copyright.or.kr
한국전기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29	전력·전기 관련 연구개발,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가 전력·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www.keri.re.kr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산업통상 자원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30조	2011.09.19	전력 및 원자력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실무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여 세계적인 에너지변화 흐름에 앞장서며,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를 육성하여 한국 원전의 해외수출에 이바지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91	www.kings.ac.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12.30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의 연구개발,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www.etri.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2.07.15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www.kipf.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2015.12.04	지식재산보호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식재산보호지원 및 국내 산업발전과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www.koipa.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51조	2005.12.09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www.kiip.re.kr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48.09.13	국내외 육상·해저 지질조사, 지하자원의 탐사·개발·활용,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www.kigam.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9.10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반곡동)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krivet.re.kr
한국천문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4.09.13	천문·우주과학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 천문·우주과학의 국가적 발전을 달성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776	www.kasi.re.kr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6.03.02	철도, 대중교통, 물류 등 공공교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함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월암동)	www.krr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6.17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개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 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www.nypi.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문화체육 관광부	상법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관 제55조	1990.07.25	88 서울올림픽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 관리, 복합문화 및 레저 공간 제공으로 국민건강과 행복 증진, 다양한 수익사업 운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역도경기장	www.ksponco.or.kr
한국출판문화산업 진흥원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	2012.07.27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 로 지원·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 식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www.kpipa.or.kr
한국투자공사	기획 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2005.07.01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 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 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7,18,19층	www.kic.kr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청	민법 제32조	1995.07.07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 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 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 5층(둔산동, KDB빌딩)	www.kipi.or.kr
(부설) 특허정보진흥센터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정관 제35조	2011.07.15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국내외 지식 재산권 및 특허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조사분석제공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기술발전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www.pipc.or.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5.12.24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 대표 기관으로서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www.kriss.re.kr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민법 제32조	1978.06.30	한국문화의 심층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 국학을 진흥하고, 나아가 미래 한국의 좌 표를 탐구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www.aks.ac.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한의학진흥원	보건 복지부	한의학육성법 제13조	2019.06.12	한의학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학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경상북도 경산시 화랑로 94 (갑제동)	www.nikom.or.kr
한국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4.08.06	한의학 이론 및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체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www.kiom.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10.10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 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www.kari.re.kr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 수산부	항로표지법 제41조	2018.7.18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즈니스센터 601호~ 603호	www.katon.or.kr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2.07.01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www.kiost.ac.kr
(부설) 극지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04.04.16	남북극이 갖는 정치·경제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극지활동의 확대와 국제수준의 극지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	www.kopri.re.kr
(부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4조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관 제46조	2013.10.28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원천기술 개발, 응용 및 실용화 연구 등 중합연구역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www.kriso.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7.04.18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조사·연구 하고,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보급함으로써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 관련 국가의 정책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www.kmi.re.kr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 수산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2006.01.31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 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5호 (호서대벤처타워)	www.khra.kr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2018.07.05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 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씨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www.kobc.or.kr
한국행정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1.09.27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행정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수집·관리·지원 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www.kipa.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89.03.16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 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www.kic.re.kr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76.09.02	화학 및 관련 융·복합 기술분야의 연구·개발 과 공공인프라 서비스를 통해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RICT.re.kr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1조의2	2012.01.01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업현장 지원 등 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www.kitox.re.kr

기관명	주무부처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소재지	홈페이지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무 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93.01.29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함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 8층~11층	www.kei.re.kr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상법	1982.11.11	고품질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를 생산·공 급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자립에 이바지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www.knfc.co.kr
항공안전기술원	국토 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법	2013.04.19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 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 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www.kiast.or.kr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1978.10.06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 육·홍보 및 생태복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www.epa.or.kr

부 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2019.9월 기준)²⁵⁴⁾

① 부산 혁신도시(11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남부발전(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3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개)	-
· 기타공공기관	6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개)	-

② 대구 혁신도시(9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2개)	-
· 준정부기관	6개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6개)	-
· 기타공공기관	1개	한국사학진흥재단 (1개)	-

254) 2019년 9월 현재 108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107개 기관이 이전대상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2018년 10월 이후 2019년 9월 사이 이전을 완료한 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2019년 1월 완료, 한국에너지공단 - 2019년 2월 완료)은 이탤릭으로 표시

③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13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3개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3개)	-
· 준정부기관	8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8개)	-
· 기타공공기관	2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개)	-

④ 울산 혁신도시(7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4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4개)	-
· 기타공공기관	1개	에너지경제연구원 (1개)	-

⑤ 강원 혁신도시(10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7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개)	-
· 기타공공기관	1개	대한적십자사 (1개)	-

⑥ 충북 혁신도시(10개 기관)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6개	<u>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u> <u>한국보건산업진흥원</u>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개)	-
· 기타공공기관	4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개)

* 밑줄 친 기관은 충북 지역(오송)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⑦ 충남 혁신도시(2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u>한국서부발전(주)</u> <u>한국중부발전(주)</u> (2개)	-
· 준정부기관	-	-	-
· 기타공공기관	-	-	-

* 밑줄 친 기관은 충남 지역(태안, 보령)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⑧ 전북 혁신도시(6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4개	국민연금공단 <u>농업기술실용화재단</u>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4개)	-
· 기타공공기관	2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개)	-

* 밑줄 친 기관은 전북 지역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㉑ 경북 혁신도시(8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3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3개)	-
· 준정부기관	2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2개)	-
· 기타공공기관	3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개)	-

* 밑줄 친 기관은 경북 지역(경주)으로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임

㉒ 경남 혁신도시(10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2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
· 준정부기관	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3개)	-
· 기타공공기관	5개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5개)	-

㉓ 제주 혁신도시(3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1개	공무원연금공단 (1개)	-
· 기타공공기관	2개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2개)	-

12 세종특별자치시(19개 기관, 이전 완료)

구분	이전 대상	이전완료	미완료
· 공기업	-	-	-
· 준정부기관	3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3개)	-
· 기타공공기관	16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6개)	-

부록 4 2019년 기금 현황(67개 기금)²⁵⁵⁾
1 사회보험성 기금(6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78조	1995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제73조	1960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법 제101조	1988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37조	1960년	국방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1974년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2002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55)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기금현황』, 2019.3.19. 참고(<부록 5>과 <부록 6>에 동일하게 적용)

② 금융성 기금(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1989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4조	1972년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	1985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법 제30조	196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1994년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1976년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2003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1987년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③ 사업성 기금(48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1992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1972년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국유재산관리기금	국유재산법 제26조의2	2011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991년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2017년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1996년	국방부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1993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3조	2002년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1991년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1966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200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1981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	1986년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	2010년	문화재청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	2000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	2011년	법무부	법무부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1981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28조	2016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1989년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 촉진기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7조의2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	2011년	환경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물발전기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6조	1999년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수산물발전기금 사무국)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1967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1996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2002년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1996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진흥법 제17조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	1995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1998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1	2017년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004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식품 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	1991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사업법 제48조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	2005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198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978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본법 제53조	1989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축산법 제43조	197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0조	1999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4 제정성 기금(5개)

기금명	설치근거	설치 연도	주무부처	관리방식	
				직접관리	위탁관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1994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 1항	2003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복권기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1조	2004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양곡증권정리기금	양곡관리법 제25조	1994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	1967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부 록 5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중 공공기관 관리 35개 기금 현황²⁵⁶⁾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²⁵⁷⁾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공단	-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공단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	-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256) 2019년 9월 현재 「국가재정법」 제5조 및 [별표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총 67개로 이 중 35개 기금을 30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음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²⁵⁷⁾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법	한국무역보험공사	-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신용보증기금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진흥재단	-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위원회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공사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진흥법	-	한국연구재단

기금명	소관부처	기금설치 근거법령	기금 직접관리기관	기금 위탁관리기관 ²⁵⁷⁾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진흥법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한국언론진흥재단

257) 기금의 관리·운용주체인 소관부처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임

부록 6 공공기관 관리 기금별 개요²⁵⁸⁾

1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73조 ○ 목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			
(2)설치연도	1960년	(3)운용개시연도	1960년	
(4)주무부처	인사혁신처	(5)관리주체	공무원연금공단	
(6)구성재원 (제65조 및 제73조)	○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금: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제65조(비용부담금의 원칙) 등 -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 보수예산 및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0%를 각각 징수하며, 부족분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금으로 충당 * '15년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19년까지 단계적 인상('16년 8.0%)			
(7)기금의 용도 (제73조)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74조)	○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재정자금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 기타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Tel: 064-802-205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258)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기금현황(2019. 3. 19)』 내용 중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는 35개 기금에 대한 개요부분을 발췌함

②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목적: 과학기술 진흥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의 효율적 지원			
(2)설치연도	1992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22조제2항)	○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 * 복권수익금: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중 12.583%			
(7)기금의 용도 (제22조제3항)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 지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5조(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채신관서, 기타 금융회사에의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기반과(Tel: 02-2110-259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기금관리(Tel: 042-869-6021)		
		인력규모: 7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615	615	61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③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연금법 제101조 ○ 목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			
(2)설치연도	1988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보건복지부	(5)관리주체	보건복지부	
(6)조성재원 (제101조)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7)기금의 용도 (제46조, 제50조, 제102조)	○ 국민연금급여 지급(국민연금법 제50조) ○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국민연금법 제46조) ○ 기금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국민연금법 제102조)			
(8)여유자금 운용범위	1. 기금운용의 목표수익률과 허용범위기준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군별 배분비율 및 기대수익률 등을 설정 2. 기금운용자산군: 주식, 채권 및 기타금융상품, 대체투자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Tel: 044-202-3605)		
	위탁관리	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예산조직부(Tel: 063-713-5132)		
		인력규모: 7,055명(본부 1,106명, 일선기관 5,949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55,854	59,242	71,29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 목적: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 그 밖의 경비 지원		
(2)설치연도	1972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구성재원 (제20조제2항)	가.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제22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 관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22조)	가. 국민체육진흥계정(국민체육진흥공단 직접 관리) ○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광고나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려금 및 생활 보조금의 지원 ○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 ○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 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 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위탁 관리)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제2항 -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센터 운영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폴 등				
(9)회계방식	○ 국민체육진흥계정 : 복식부기 방식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국가회계				
(10)기금관리방식	국민체육 진흥계정	직접 관리	부서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금운용팀(Tel : 02-410-1314)		
	사행산업 중독예방 치유계정	위탁 관리	기관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Tel : 02-740-9014)		
			인력규모: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⑤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 목적: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 증진			
(2)설치연도	2011년	(3)운용개시연도	2012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6)조성재원 (제26조의3)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유재산법 제26조의 4에 따른 차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은 제외)와 관련된 수입금 -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제57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5)	○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제26조의6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위탁료 등의 지출 ○ 제42조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 제57조에 따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연기금투자권에 예치 ○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Tel: 044-215-525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Tel: 051-794-4881 ~ 4885)		
		인력규모: 16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893	2,111	2,48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⑥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 목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2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한국국제교류재단	
(6)조성재원 (제14조)	○ 제14조(기금의 재원)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6조)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친선의 증진			
(8)여유자금 운용범위	1. 적립 기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운용 2. 운용 기금: 환금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국제교류재단 대외협력부(Tel: 064-804-1033)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7 국제질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목적: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성			
(2)설치연도	2017년	(3)운용개시연도	2017년	
(4)주무부처	외교부	(5)관리주체	외교부	
(6)조성재원 (제3조)	○ 정부의 출연금 ○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근거) ○ 기금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4조)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말한다) 및 민간단체 지원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8조)	○ 금융기관에의 예탁 ○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외교부 다자협력인도지원과 (Tel: 02-2100-8453)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질병퇴치기금실 (Tel: 031-740-0592)		
		인력규모: 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65	150	34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⑧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 ○ 목적: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93년	(3)운용개시연도	1994년	
(4)주무부처	고용노동부	(5)관리주체	근로복지공단	
(6)조성재원 (제88조)	○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수익금 * 복권수입금의 35% 중 5.310% ± 20% 가감 조정 ○ 보증료, 구상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1조)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 융자 또는 지원 ○ 저소득근로자의 보증부담 해소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지원 ○ 퇴직연금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투자물에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근로복지공단 기획조정본부 조직예산부 (Tel: 052-704-7778)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⑨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			
(2)설치연도	1991년	(3)운용개시연도	1991년	
(4)주무부처	통일부	(5)관리주체	통일부	
(6)조성재원 (제4조)	○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설치)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금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8조)	○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 국공채, 통안증권 ○ 신용등급 AAA 이상의 은행채 ○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연기금투자폴로 한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Tel: 02-2100-574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Tel: 02-3779-6643)		
		인력규모: 43명(본부 42명, 일선기관 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2,279	2,270	2,25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Ⅹ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 목적: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촉진 및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 도모			
(2)설치연도	1966년	(3)운용개시연도	1968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55조)	○ 제5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57조)	○ 제57조(기금의 용도)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및 보관·관리와 가공 3.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4.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제60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Tel: 044-201-222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재무관리처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10명(본사 1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216	1,373	1,417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Ⅱ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 목적: 거대재해로 인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를 국가가 재보험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2)설치연도	2005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22조)	○ 제22조(기금의 조성) 1. 법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 재보험금지급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여유자금 운용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제1금융기관 및 연기금 투자폴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Tel: 044-201-1796)		
	위탁관리	기관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Tel: 02-3775-6716)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657	604	575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Ⅻ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 목적: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산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공급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32조)	○ 법 제3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33조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관리부담금 납입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성된 재산의 매각대금,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7. 기금운용수익금 8. 기금을 투입하여 발생한 해외농업개발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4조)	○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 농지의 매매·매입사업, 장기임대차사업, 교환·분리·합병사업, 재개발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법 제34조(기금의 용도)제3항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다른 기금으로 예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Tel: 044-201-173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Tel: 061-338-5931)		
		인력규모: 13명(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 1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604	1,713	1,76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	-	-

13 대외경제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 목적: 개도국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2)설치연도	1986년	(3)운용개시연도	1987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기획재정부	
(6)구성재원 (제4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1. 정부출연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4.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7조)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재원) 1~4.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등 5. 한국수출입은행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8)여유자금 운용범위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3. 은행에의 예치 또는 단기 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Tel: 044-215-8773)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Tel: 02-6255-5351)		
		인력규모: 163명 (본부 113명, 사무소 25명, 파견, 연수, 휴직 등 2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5,383	16,176	18,00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14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 목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2)설치연도	1973년	(3)운용개시연도	1973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조성재원 (제17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항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품 설치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8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 교류 4.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5.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제1금융권 예치 ○ 연기금투자펀드 예치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el: 061-900-229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Ⅷ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8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 목적: 방사성폐기물관리에 필요한 자원 확보														
(2)설치연도	2009년	(3)운용개시연도	200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구성재원 (제29조)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납입금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30조)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기금의 조성과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8)여유자금 운용범위	<table><tr><td colspan="2">구분</td><td>투자 가능 자산군</td></tr><tr><td rowspan="2">단기자금</td><td>현금성</td><td>MMF, MMDA</td></tr><tr><td>유동성</td><td>CD, CP, 정기예금, RP, 연기금투자상품 혼합형상품(단기매치형)</td></tr><tr><td colspan="2">중장기자금</td><td>CD, 정기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연기금투자상품의 혼합형 상품</td></tr></table>				구분		투자 가능 자산군	단기자금	현금성	MMF, MMDA	유동성	CD, CP, 정기예금, RP, 연기금투자상품 혼합형상품(단기매치형)	중장기자금		CD, 정기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연기금투자상품의 혼합형 상품
구분		투자 가능 자산군													
단기자금	현금성	MMF, MMDA													
	유동성	CD, CP, 정기예금, RP, 연기금투자상품 혼합형상품(단기매치형)													
중장기자금		CD, 정기예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연기금투자상품의 혼합형 상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Tel: 044-203-534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금관리센터 (Tel: 02-6456-8510)													
		인력규모: 10명(본부 10명, 일선기관 -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666	1,591	1,470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16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 목적: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2)설치연도	2000년 ²⁵⁹⁾	(3)운용개시연도	2000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6)구성재원 (제25조제5항)	○ 통신 주파수 할당 대가의 일부(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배분) ○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26조)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예탁 ○ 연기금투자폴에의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Tel: 02-2110-2961)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Tel: 02-2110-137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인력규모: 25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 ²⁶⁰⁾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3,611	3,868	4,161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	-	-

259) 2000년 1월 기금설치 이후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

260) 기금 징수운용관리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기금관리비를 의미

㉞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2 ○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2)설치연도	1974년	(3)운용개시연도	1975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6)조성재원 (제53조의2)	○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설치 ○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7)기금의 용도 (제4조)	○ 부담금의 징수 ○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 자산의 운용 ○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 유가증권의 매입 ○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그 밖에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투자전략팀 (Tel: 02-769-409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18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 ○ 목적: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리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학 교육진흥에 이바지 하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함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90년	
(4)주무부처	교육부	(5)관리주체	한국사학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18조)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통화금융기관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사학진흥재단 자산운용팀 (Tel: 053-770-2550)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 ○ 목적: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조성재원 (제37조의4, 제37조의5)	○ 산업기술개발사업 등에 따른 기술료 ○ 오존층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가산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정부 또는 정부외의 출연금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37조의4, 제37조의5)	○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협력사업의 지원 ○ 산업기술의 사업화 지원 또는 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또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탁 ○ 정부의 주관 또는 감독 하에 운용되는 연기금투자품 ○ 자금의 안정성·유동성이 높고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금융상품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Tel: 044-203-4517)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금관리팀(Tel: 02-6009-4330)		
		인력규모: 9명(본부 9명, 일선기관(부담금관리) 별도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263	1,210	1,199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목적: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15년	(3)운용개시연도	2015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부	
(6)조성재원 (제20조)	○ 법 제20조(재원의 조성)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1조)	○ 법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소상공인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Tel: 042-481-4565, 4361)		
	위탁관리	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42-363-7100)		
		인력규모: 7명(본부 7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㉔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 목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의 진흥			
(2)설치연도	2010년	(3)운용개시연도	2010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한국언론진흥재단	
(6)조성재원 (제34조제2항)	○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4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1항)	○ 신문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제35조 1항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지원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에 원칙)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예산팀(Tel: 02-2001-771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목적: 영화예술의 질적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			
(2)설치연도	2007년	(3)운용개시연도	2007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영화진흥위원회	
(6)조성재원 (제24조)	○ 정부의 출연금(제24조 1항)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제24조 2항) ○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제24조 3항)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24조 4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제24조 5항)			
(7)기금의 용도 (제25조)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제25조 1항) ○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제25조 2항) ○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25조 3항) ○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제25조 4항)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 지방채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매입			
(9)회계방식	○ 기업회계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영화진흥위원회 기획예산팀 (Tel: 051-720-4837)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㉓-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한국연구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1996년	(3)운용개시연도	1997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17조제3항)	○ 원자력진흥법 제17조 제3항 1.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발전용원자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 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 2.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동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한 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기금의 용도 (제19조)	○ 원자력진흥법 제19조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22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매입 2. 금융회사 등에 예치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Tel: 02-2110-2454)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연구재단 재정기금실(Tel: 042-869-6024)		
		인력규모: 3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80	156	106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목적: 원자력안전법 제1조에 따른 안전규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모되는 재원을 확보			
(2)설치연도	2016년	(3)운용개시연도	2016년	
(4)주무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5)관리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6)조성재원 (제111조의4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1항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7)기금의 용도 (제111조의4 제2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제2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확정금리형 상품 ○ MMF, MMDA, RP, CD 등 ○ 연기금 투자폴 ○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Tel: 02-397-7385)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원자력안전재단(Tel: 031-626-9735)		
		인력규모: 6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1,283	1,543	1,55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2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3조 ○ 목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확보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4년	
(4)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	(5)관리주체	농림축산식품부	
(6)조성재원 (제14조제3항)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4조 제3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수입이익금, 기금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에 따른 전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5조 1.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3.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6조 및 제27조 - 여유자금은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법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Tel: 044-201-172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Tel: 061-931-1120)		
		인력규모: 5명(본부 5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441	455	842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㉔ 전력산업기반기금 (한국전력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전기사업법 제48조 ○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원 충당			
(2)설치연도	2001년	(3)운용개시연도	2001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산업통상자원부	
(6)조성재원 (제50조)	○ 부담금 및 가산금 * 부담금: 전기요금 × 3.7%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 기술료 등			
(7)기금의 용도 (제49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사업 ○ 전력수요관리사업 ○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 전기안전에 관한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에 예치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 연기금 투자폴 예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Tel: 044-203-5250)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Tel: 02-6007-0321)		
		인력규모: 41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6,086	5,766	6,334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㉔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 목적: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2)설치연도	2005년 ²⁶¹⁾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관리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조성재원 (제42조)	○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44조)	○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 정보통신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가 반환금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채신관서 포함)에의 위탁 ○ 공공자금관리기관에의 위탁 ○ 연기금투자폴에의 위탁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Tel: 02-2110-2961)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 (Tel: 061-350-1230)		
		인력규모: 12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 ²⁶²⁾ 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20,635	21,062	22,478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261) 1993년 1월 기금설치 이후, 1996년 1월부터 정보화촉진기금으로 개편하여 일반 및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운용해오다 2005년 1월부터 현재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함(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의 연구개발계정만 승계, 일반계정은 폐지)

262) 기금운용·관리기관 기금관리비 및 기금사업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등을 포함한 기금운영비를 의미

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 목적: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2)설치연도	1981년	(3)운용개시연도	1981년	
(4)주무부처	국토교통부	(5)관리주체	국토교통부	
(6)조성재원 (제5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 자체재원: 대출금 회수, 이자수입 등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주택법」 제75조 등 - 차입금: 국민주택채권, 기타민간예수금(청약저축) 등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4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등 - 정부내부지출: 농특·공자기금 예수금, 복권기금전입금 등			
(7)기금의 용도 (제9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국민주택의 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 정비사업 용자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출자, 투자, 용자 - 예탁금·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차관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 현금성 및 유동성: 정기예금, CD, MMDA 등 - 중장기: 정기예금, Wrap, 연기금투자폴 등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Tel: 044-201-3339)		
	위탁관리	기관명: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Tel : 051-998-2213)		
		인력규모 : 163명(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사업본부 현원)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255,657	249,121	170,058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2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법률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목 적: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2)설치연도	1978년	(3)운용개시연도	197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조성재원 (제64조)	○ 법 제64조(기금의조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채권발행 조성자금 및 복권수익금, 공자기금 예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등			
(7)기금의 용도 (제67조)	○ 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1. 창업기업지원, 신성장기반 등 융자지출 2. 연수사업 등 경상지출 3. 전산시스템구축 등 자본지출 * 사용 용도는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요약시 위 내용과 같음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대기성 자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관리실 (Tel: 055-751-9431~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㉔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목적: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2004년	(3)운용개시연도	2005년	
(4)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5)관리주체	문화체육관광부	
(6)조성재원 (제13조제2항)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2항 - 정부의 출연금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7)기금의 용도 (제15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 -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및 연기금투자품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Tel: 044-203-3219)		
	위탁관리	기관명: 한국언론진흥재단(Tel: 02-2001-7821)		
		인력규모: 4 명(본부 4명, 일선기관 0명)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567	560	593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30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2)설치연도	1989년	(3)운용개시연도	1989년	
(4)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5)관리주체	기술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13조제1항)	○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8조)	○ 기술보증 ○ 기술평가 ○ 보증연계투자 ○ 구상권관리 ○ 기술·경영지도 등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치 ○ 연기금투자펀드 투자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기술보증기금 경영기획부(Tel: 051-606-7402) 자산운용실(Tel: 051-606-7566)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㉓ 무역보험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무역보험법 제30조 ○ 목적: 무역보험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2)설치연도	1969년	(3)운용개시연도	1969년	
(4)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	(5)관리주체	한국무역보험공사	
(6)조성재원 (제31조, 제35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보험료, 회수금, 이자, 기타 기금운용수익 및 공사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7)기금의 용도 (제35조제2항)	○ 보험금, 이자, 공사 운영경비 및 기타 기금 운용 필요경비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33조)	○ 금융기관에의 예입 ○ 국채·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 제2호,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기업회계기준, 국가회계기준 적용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획조정실 기금예산팀 (Tel: 02-399-577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목적: 민간투자사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적기확충과 국민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			
(2)설치연도	1994년	(3)운용개시연도	1995년	
(4)주무부처	기획재정부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조성재원 (제31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1조(기금의 조성)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기금의 용도 (제32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8조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포함)·사채·그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Tel: 053-430-447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33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2)설치연도	1976년	(3)운용개시연도	1976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신용보증기금	
(6)구성재원 (제6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 기업의 출연금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7)기금의 용도 (제23조)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유동화회사보증업무			
(8)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회사등에 예치 ○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Tel: 053-430-4109)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3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 ○ 목적: 금융구조조정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 부채 상환			
(2)설치연도	2003년	(3)운용개시연도	2003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예금보험공사	
(6)구성재원 (제26조의3)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1.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지원자금의 회수자금 4. 제30조의3에 의한 특별기여금,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등			
(7)기금의 용도 (제26조의3)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한한다.)의 정리			
(8)여유자금 운용범위	○ 예금자보호법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1. 국채·공채의 매입 및 예금보험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9)회계방식	○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부(Tel: 02-758-0161)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접관리)

(1)설치근거 및 목적	○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및 제59조의2 ○ 목적: 신용보증을 위한 주택금융활성화 및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			
(2)설치연도	1987년	(3)운용개시연도	1988년	
(4)주무부처	금융위원회	(5)관리주체	한국주택금융공사	
(6)구성재원 (제56조, 제59조의3)	1.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 2.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보증료 수입금,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3.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운용하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			
(7)기금의 용도 (제57조, 제59조의4)	○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8)여유자금 운용범위 (제58조, 제59조의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또는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4. 주식(출자증권 포함)·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9)회계방식	○ 국가회계기준			
(10)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Tel: 051-663-8495)		
	위탁관리	-		
(11)위탁관리시 관리비지급 방식	부서운영비지급 방식 (지급규모, 백만원)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대하·대출 금리차 지원방식 (대하: %, 대출: %)	'17실지급	'18실지급	'19계획
		-	-	-

부 록 7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체계²⁶³⁾²⁶⁴⁾²⁶⁵⁾²⁶⁶⁾
① 공기업 유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2	14	8
	- 일자리 창출	7	4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	3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업무효율	5		5
	4. 조직·인사·재무관리	9	6	3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	2	3 (1)
	- 삶의질 제고	1	1	
	5.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주요사업 (45)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6.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5	34	21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45	18	27
합 계		100	52	48

263)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2018. 9.

264) 평가지표체계는 평가유형(공기업,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강소형)에 따라 평가지표와 지표별 가중치가 다르게 구성됨.

265) 공운법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대상인 아닌 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결측 처리

266) 기관별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가점을 부여

②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상소형)의 지표 및 가중치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45)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2	8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6	5	1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삶의질 제고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45	31	14
주요사업 (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5	21	34
합 계		100	52	48

③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의 지표 및 가중치²⁶⁷⁾

범주	평가지표	계	비계량	계량
경영관리 (50)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6	
	- 전략기획	2	2	
	- 경영개선	2	2	
	- 리더십	2	2	
	2. 사회적 가치 구현	20	12	8
	- 일자리 창출	6	3	3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3	2	1
	- 안전 및 환경	3	2	1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5	2	3
	- 윤리경영	3	3	
	3. 조직·인사·재무관리	11	5	6
	- 조직·인사 일반	3	3	
	- 재무예산 운영·성과	2	1	1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5
	- 삶의질 제고	1	1	
	4. 보수 및 복리후생비	8	5	3
	- 보수 및 복리후생	3	3	
	- 총인건비관리	3		3
	- 노사관계	2	2	
	5. 혁신과 소통	5	3	2
	- 혁신노력 및 성과	3	3	
	- 국민소통	2		2
	소 계	50	31	19
주요사업 (50)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50	21	29
합 계		100	52	48

267)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3개 기관은 평가유형은 강소형 유형이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므로 기금관리형 유형의 평가지표체계를 적용

부 록 8

2018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 우수사례²⁶⁸⁾

1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역대최고 운송실적으로 글로벌 Big5 공항 도약!	인천항만공사,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다!
경영관리 ●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 사상최대 실적 달성 - 전락목표보다 2년 앞당겨 국제여객 6,768만명(5위), 국제화물 295만톤(3위), 환승객 800만명 돌파 - 국가 총 교역액의 30%를 담당하며 15년 연속 기록적 성장 ● 좋은 일자리 창출 선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핵심사업 기반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6,088명) 1만명 정규직 전환모델 수립 및 타기관 전파로 모범적 공공기관 역할 수행 ●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사고 ZERO! 무결점 공항 운영 - ICAO 미래항공 운항시스템 선제적 도입 및 스마트 항행시스템 구현 - 항공분야 최초 KOSHA/OHSAS 18001 취득을 통한 근로자 안전강화 <i>평타 비하인드 평타 일자리</i>	경영관리 ● 지원 일자리 창출 실적 두 배! ^{KT}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상 [일자리 창출] 특성화고-물류기업 매칭 지원 [일자리 질 개선] 근로환경 개선→장기재직 유도 ● 시민참여형 블라인드 채용 ^{KT} 공정채용분야 기획재정부장관상 [시민감사관] 분야별 전문가 채용 전 과정 참여→채용비리 원천차단 [블라인드채용] 탈스펙전형 및 블라인드면접→직무능력중심 채용 ● 인천항 환경보전 견인 ^{KT} 녹색경영 대통령상 수상 [대기관리] 항만 대기질 측정소, 선박용 전원공급시설 설치 [एको항만] 건설용 토사 반입품질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목표 348 실적 728 211.7%
주요사업 ● 국민행복 실현! 제2여객터미널 및 입국장면세점 성공적 오픈 - 제2여객터미널 성공적 오픈과 항공사 재배치, 출입국 서비스 혁신으로 공항이용여객의 편의 극대화 - 입국장 면세점 오픈으로 해외여행 중 국민불편 해소 ● 중동에 제2의 인천공항을 심다, 사상 최초 해외공항 위탁운영 - 사상최초, 최대규모(1,400억) 쿠웨이트공항 T4 위탁운영사업을 수주하여 글로벌 공항운영기업으로 도약 - 세계 유례없는 최단기(90일) 무결점 오픈 ● 최첨단 Smart 공항 100대 과제 실행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선도 - 홀백드랍 서비스(빈손으로 공항까지) 및 차세대 출국 모델(생체인식 등) 도입 - AI기반 IoT·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주요사업 ● 세계 최대 크루즈 접안 가능 인프라 완공 ^{KT} 해양관광 거점 도약 [국책사업 적기수행] 국민편의 증진 및 관광확대로 경기부양 기여 ● 항만+공항+CIQ+물류창고 상생협업 ^{KT} 전자상거래 허브항 도약 [유관기관 협업] 항만(대량운송)+공항(신속성) 장점 활용 및 CIQ, 글로벌 GDC 협업 → 물류비용 절감 및 통관·재고관리 신뢰성 ↑ ● POSMEG* ^{KT} 국내최초 에너지 자립형 항만 구축 [친환경 전력 공급] 접안선박 대기오염물질 제로화 * POSMEG : 항만형 자급자족 전력망

268) 기획재정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 및 기관별 우수사례 배포」, 보도자료, 2019. 7. 26.

한국남부발전(주),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경영관리

- **중대재해 Zero, 채용비리 Zero, 부패사건 Zero 달성**
 - CEO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천명, 안전실명제 도입 등 현장 안전문화 확산
 - 창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채용제도 개편하여 채용비리 완전 차단
 - 부패사건은 조직 전체의 일탈로 간주, 부패 무관용 원칙 정립
-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전환하여 제주도 쓰레기 대란 해소!**
 - 남부발전-제주도청-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및 행정지원 협업
 - 제주도 폐비닐 발생량의 30%(4,200톤) 재활용
- **불합격자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보듬채용 프로그램」 도입**
 - 남부발전 입사경험이 자산이 되는 지원자 중심 채용제도 운영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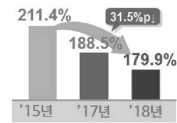
- **발전설비 신뢰도 및 석탄구매단가 2년 연속 최고 실적 달성**
 - 고장폐턴 분석 및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고장정지율 0.019% 달성(Global Best)
 - 빅데이터 기반 시장 예측 석탄구매로 업계 평균 대비 785억원 절감
- **선진 전력시장인 美 가스복합 사업에 중소기업 동반진출**
 - 기술력 인정, 동반 진출, 남부발전 신원도(AA) 활용, 국내 금융사 동반진출
- **지역주민 환대 속에서 남제주 건설사업 성공적 착공**
 -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담 사업 추진 등 지역민 숙원사업 지원
 - 소규모 공사 지역업체 별도발주(약 80억원)로 지역활성화에 앞장

※ 한국산 기자재 사용 조건으로 국내 중소기업 약 720억원 수익 창출

K-water, 국민과 함께 물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경영관리

- **공기업 1군 최초 정규직 전환 완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 '18.9.1부로 1,240명(정원의 25%) 일시 정규직 전환 완료
 - 業과 연계한 국민 체감형 일자리 1만개 창출(41% ↑)
- **정부 주관 재난 및 안전분야 평가 '3관왕' 달성**
 - K-water 고유의 리스크관리시스템(K-WM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안전관리로 중대 시설물 사고 및 단수 Zero 달성
- **요금 동결에도 자구노력으로 3년간 부채비율 32%p 개선**
 - 공기업 최저 민평금리(2.23%) 달성



주요사업

- **글로벌 Best! 세계 최고 수준의 물관리 역량 입증**
 - 광역상수도 유수를 100% 달성(5년 평균 99.8%)
 - K-water 물안전 시스템(K-WSP) UNESCO 국제표준 인정
- **물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상생의 물산업 생태계 조성**
 - 동반성장(기준) + 벤처창업(신규) + 혁신기술(신규) + 해외수출(신규)
 - 성과공유제 위주 + 스타트업 10배 확대 + Test-Bed 기술이전 + 해외수출 30배 확대
- **물관리 일원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성과 조기 창출**
 - 수량-수질 통합운영 → 한강 냄새물질 81% ↓, 낙동강 녹조 33% ↓
 - 최초 유역관리 사업 실시, 광역-지방 중북투자 방지(1,342억원)



한국중부발전(주),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친환경에너지 리더

경영관리

- **청렴하고 깨끗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
 -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공직유관단체 II 유형)
 - 글로벌스탠다드 청렴경영 대상 및 대한민국 윤리경영 대상 수상
-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기업**
 - 아이디어 발굴, 사내벤처 등 전사적 노력으로 일자리 13,445개 창출
 -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일자리창출-사회환원' 선순환 사이클을 일자리 모델 구축 → 발달장애인 마당구 기업 등 5개 법인 육성
-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4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요사업

- **대기오염물질 최대감축으로 국민생활 편의 증진**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2.1만톤 감축(정부승인 계획 대비 약 2배 초과)
 -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발전소 환경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 공감대 제고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발전소 구현**
 - 설비 고장예측·진단시스템 도입으로 여름철 안정적 전력생산(681건 사전정비)
 - 드론활용 화재감시, VR기반 모의 설비운전 및 재난안전체험장 등 안전한 발전소 구현
- **생활하수의 발전용수 활용으로 지역사회 가뭄극복 기여**
 - 지역 상수원 고갈(보령댐 '17.6 저수율 9%) 문제해결을 위한 지자체 협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경영관리

-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 대전환**
 - 주택사업 신규 투자 의사 결정시 공공성 지표 도입
 -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국제인증 획득, 공공기관 최초 소셜본드 발행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부문 최대수준인 18.5만명 고용창출
 - LH 희망상가·돌봄사원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선도
 - * 2년 연속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유공기관 표창
 - ※ 통영 폐조선소 복합개발 및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 **공적역할 지속수행을 위한 재무개선 및 노사협력 강화**
 - 역대 최저 이자부담부채 및 3년 연속 2조원대 당기순이익 달성
 - 청립 9년 만에 기존 3개 노조 통합으로 One-LH 구현



주요사업

- **집값 및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택지·주택 공급**
 - 전년대비 48% 증가한 임대주택 12.3만호 공급 및 신촌희망타운 첫 공급(위례·평택)으로 주거복지로드맵 충실한 이행
 - 역대 최대 규모 택지확보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 **혁신성장 및 지역균형발전 선도**
 - 판교2밸리 기업성장센터 준공
 -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창업지원센터)' 착수
 - 전국 최초로 서대구 노후 산업단지재생 공공복합지식산업센터 착공
- **스마트시티 구현 및 수출 본격화**
 -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ISO, BSI)' 획득(세종시)
 -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수출약정 체결로 해외 동반진출 기반 구축



② 준정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국민의 건강은 튼튼하게

경영관리

- 공공기관 최초, 4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최고의 청렴문화 선도
 - 부패방지 사책평가 1등급 달성: 종합(9.13점) · 외부(9.32점) · 내부(8.88점) 청렴도 전체 1등급
-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 636명 비정규직 전환 및 민간 14,035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주시 96억원 경제 효과
- 서비스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편의 증대
 - 2018년 정부혁신 100대 우수사례,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우수상,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등 수상

고객센터 인형 문인화인 간소화



건강보험증발급 제도 개선



외국인 전담민원센터 운영



주요사업

- 20년만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성공적 안착으로 형평부와 실현
 - 지역·직장가입자 격차 해소, 저소득층 부담완화(월평균 2.1만원 ↓), 고소득·고액재산가 적정부담(월평균 5.1만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77% (566만 명)	18% (133만 명)	5% (37만 명)
2.1만원	0.9% (13만 명)	12.8% (12만 명)
5.1만원	1.5만원	2.5만원

- 비급여의 급여화 등 혁신적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경감
 - 선택진료 폐지(5,535억원 ↓), 상급병실료(2,173억원 ↓), 초음파·MRI검사(3,947억원 ↓) 등 비급여의 급여 확대
- 24년만에 사라지다 없는 '생애주기 건강검진체계 완성'으로 건강수명 연장
 - 20~30대 미취업 청년 등 편입, 성·연령 고려한 검진항목, 주기 대대적 개편으로 검진 사각지대 해소
 - 건강수명의 최대 위협인 암(사망률 1위)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검진항목 확대·폐암 추가로 6대 암 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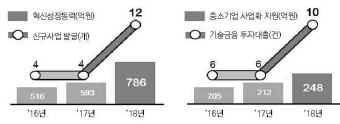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민체감형 R&D 추진 및 혁신성장동력 육성

경영관리

- 기관 경영혁신 내재화 및 대국민 R&D서비스 확대
 - 기관 혁신계획, 사회적 가치 실현전략, 민간 일자리 창출전략 등 3 경영전략체계 구축 및 이행
 -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 장려상(18.11.) 및 혁신정책 혁신상(18.12.) 수상
 - 지능형 방법서비스 등 협업 우수사례 선정(18.06.), 대국민 R&D성과 체험행사 활성화(18년 2,115명)
- 국민체감형 R&D 추진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미세먼지 저감, 건축물 내진·내화, 층간소음 개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체감형 R&D 적극 추진
 - 좋은 일자리 나눔행사, 청년고용 친화형 제도개선,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촉진(18년 13,776명)

주요사업

- 스마트시티 등 8대 혁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스마트시티 등 8대 혁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 마련
 -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발주(총 예산 1,130억원) 및 '18년 혁신성장동력 예산 지속 확대
-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확대 및 지역의 연구인프라 고도화
 -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 정책펀드, 기술마케팅 등 사업화 촉진(18년 누적 매출액 3,633억원 달성)
 - 전국 6개 권역별 지역거점 센터 구축, 전국 12개 대형 실험시설 건설 등 지역의 연구인프라 고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에 가치를 더하여 혁신성장을 선도!!

경영관리

- 새로운 미래, 기술보증기금의 가치체계 수립!

비전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

핵심가치

공정 Fairness

혁신 Innovation

협력 Together
- 기술과 사람, 국민 행복을 더하는 KIBO형 사회적가치 추진!
 - 금융소외기업 2.635원, 산업위기보조 0.25조원 지원으로 포용금융 선도
 - 분쟁, 소통→비정규직 달성, 역대 최대 110명 신입직원 채용
- 공공기관 협업 모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펀드 조성!
 - 기술보증기금 등 부산 8개 공공기관이 7.5억원 조성(5년간 50억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금융·비금융 동시 지원

주요사업

- 세상을 바꾸며 성장하는 착한 실험, 소셜벤처 지원!
 - 사회성과 혁신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 118개 소셜벤처기업에 685억원의 보증 지원
- AI기반으로 특허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KPAS-II 시스템 개발!
 - * 평가 소요시간 단축(10.7일 → 1분), 고객부담 평가료 35억원 절감
- 힘없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킴이, 기술보증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①기술신탁관리 + ②기술지킴이(임차시스템) + ③증거지킴이
 -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신기술 이전을 지원하여 공정한 기술거래 유도

BigData 처리
학습집합 구성

AI(딥러닝)
최적모델 도출

도출모델
검증

특허가치금액
자동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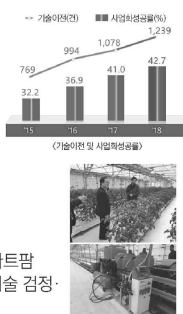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생명 기술사업화 선도로 포용성장 견인!

경영관리

-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 제고!
 - 농식품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콘테스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 벤처창업지원사업 201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국' 기반 조성
 - 기관설립 이후 10년간 산재 발생 ZERO 달성
 - 정보보호·보통준비도 평가 공공기관 최초 최고등급(AAA) 획득
 -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기계 사고 예방 기틀 마련
-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
 -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동반성장 지원으로 매출 확대
 -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유치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 기여
 - * 첨단농업 벤처창업 캠프,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사업

- 글로벌 수준 기술사업화 선도
 - 2년 연속 공공기관 최초·최대 기술이전 실적 달성
 - 사업화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42.7% 실현 및 농산업체 혁신 성장 지원 (미국 농무부 : 36.9%)
- 농식품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구축
 - 기술금융 투자지원액 누적 2,000억원 돌파
 - 창업기업 밀착지원으로 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 창업지원기업 매출액 221억원 달성!
- 첨단 농산업 혁신성장 견인
 - 농생명ICT검인증센터 설치(전북 익산), 한국형 스마트팜 해외수출 성공으로 국내 최초 미래형 스마트 농업기술 검정·실증체계 구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 외국인투자,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력 선도!

경영관리

- 끊임없이 혁신하는 글로벌 무역투자진흥기관
 - 시대 변화에 맞춰 新비전·핵심가치 설정, 전사적 혁신과제 실행
 - 민간 수출생태계 조성 세계무역진흥기구(WIPO) 혁신상 수상
- 해외 무역관망 및 기관 인프라 개방
 - 2021년까지 22개 해외 무역관망 보직 개방 확정('18년 5개소 외부전문가 영입 완료)
 - 우리 기업인이 해외무역관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전면 개방(열린무역관 123개소)
- 5년 연속 고객만족도(PCSI) 최고등급(S) 달성
 - 무료상담 고객 확대(전년대비 21.4% 증가) 등 고객 저변 확대
 - 지역특화사업 43% 증가, 지방조직 30명 증원 등 지방 협력생태계 강화



주요사업

- 사상 최대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 기여
 - (수출) 국가 수출 6천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 (외국인투자유치) 4년 연속 200억 달러 돌파
-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시대적 과제 해결 선도
 - 해외 취업 등 17,218개 글로벌 일자리 신규 창출
 - 창립 이래 최대 기관 채용 병행
- 사회적 경제기업 글로벌화 등 사회화까지 실현
 - 미국 유명디자인사 협업 '토탈 멘토링' 시행 ⇒ 신규 판로 개척
 - 사회적 경제기업 맞춤형 지원(154개사) ⇒ 수출 5.8배 증가



사회보장정보원 지능형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중심기관!

경영관리

-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혁신으로 기관 최대 업무효율화 달성
 - 머신러닝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복지지원율 역대 최고 달성
 - AI 기술을 활용한 연계정보 검증 지능화로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 머신러닝, GIS(지리정보)를 활용한 바우처 부정수급 예측력 향상
-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정보원!
 - 국내 최초 정보시스템 DBMS교체(외산→국산) 성공으로 중소기업 지원
 - 제3자 테스트 도입으로 중소협력사 역량 강화(복지부 적극행정상 수상)
 - 정보화 표준화 가이드 확산으로 SW사업 우수 발주기관 선정(과기부)
-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혁신 성장 구현
 - 「SSIS형 혁신과제 발굴모델」로 전 사업 과정에 국민 참여 기회 확대

주요사업

- 데이터에 온기를! 빅데이터로 찾아주는 따뜻한 국민 복지!
 - 사회취약계층 130,182명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 임가회심 아동 47,770명 발굴
 - 전가, 도시가스 등 요금감면서비스 대상자 발굴
 - 기초연금 수급자격 관리
 - 기초연금 61,570명 670억원 지원
 -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 서비스이용 20,545건 10.218억원
 - 민간 복지지원 연계상자 수급인원 12,509가구, 172억원
- 총합한 정보연계로 연간 1조 2,861억원 복지재정 누수 방지
 - 수급자 소득, 재산정보 주기적 조사로 9,389억원 누수 방지
 - 부정 수급 환수사례 분석을 통한 사전 차단으로 1,832억원 절감
 - 범부처 정보 연계, 지자체 변동/중복 알림 등으로 1,640억원 누수 방지



신용보증기금,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경영관리

- 핵심사업, 신규채용 등으로 2년 연속 2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 역량평가 신규 도입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
 - 주요 일자리 상품의 파격 Upgrade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지원, 일자리나누기 노력 등으로 신규채용 여력 확대
- 투명경영과 시스템적 조직관리로 공공부문 경영관리의 길라잡이
 - 3년 연속 경영공시 무벌점 우수기관 달성
 - 산업부 주관 「국가품질혁신상」 인재개발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
 - 일·생활 균형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 ICT 혁신기술을 활용한 양도담보물 관리업무 프로세스 혁신
 - IoT단말기를 통한 담보물의 무인 원격관리로 인력투입시간 연간 1,402시간 단축

주요사업

- 글로벌 성공의 디딤돌! 「해외진출기업 보증프로그램」 출시!
 - 글로벌 영토확장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자금조달 Two-Track으로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혈맥(血脈) 연결 선도!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부문 자금공급의 55% 담당
 - 사회적금융 표준평가모형 개발 및 오픈플랫폼 제공
- 복합·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전기업을 「성공창업」 견인!
 - 실패유형별 맞춤형 보증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재도전기업 325개의 재지원

1	「해외투자자금 보증프로그램」	2	「해외사업자금 보증프로그램」
	국외모집업의 해외현지법인 투자자금 지원		해외현지법인의 현지 자금지원 자금보증

1,052억원 공급

325개의 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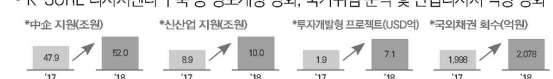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과 고객에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

경영관리

-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무역보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행
 - 채용비리 근절 등 윤리경영 강화로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달성(국무총리 표창)
 - 정규직 80명 전환 완료,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채용 실시, 일자리 특별보증 시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체계 개선으로 국정원 정보보안평가 4단계 상승
- 기재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A등급 달성
 - 시민참여혁신단 등 참여기반의 자율·상시 혁신체계 구축, 고객 친화적 제도·서비스 개선 확대
- 4년만의 당기순이익(1,596억원) 실현
 - 리스크관리 지속, 사고율 감축(0.488%→0.393%)을 통한 금전건전성 개선

주요사업

- 사상최대 52조원 무역보험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 5.1% 증가
 - 고객자문단 등 기업수요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혁신산업 집중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신산업 부문 무역보험 10조원 지원
- 투자개발·친환경·중소참여 해외프로젝트 주주경쟁력 강화
 -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USD 7.1억 금융제공, 해외 풍력발전 프로젝트 USD 1억 금융제공(최초)
 - Vendor Fair 개최로 기자재 중소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
- 전략적 리스크관리와 채권회수로 자립경영 토대 구축
 - 총액한도 설정, 특별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 강화, 국외채권 회수역량 강화로 2,078억원 회수
 - K-SURE 리서치센터 구축 등 정보개발 강화, 국가위험 분석 및 산업리서치 역량 강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체계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성과 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혁신의 동반자, 일자리 창출 기업의 파트너!
경영관리 ●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청년·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역대 최대 113명 신규채용 · '18년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률 44.4%(이전기관 평균 14.4%) ●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혁신 활동 · 공공기관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강소형 1위, 국무총리상) · 기재부 혁신 우선과제 선정(소형선박 조난신호 전달체계 혁신) · 기재부 우수 경영정보공시 기관 선정(강소형 1위) ● 노사화합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지역상생 · 신나는 일터 만들기 2·0·1·8을 통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 노사공동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활용(ICT창업지원센터 2개소, 특성화고 학생 실습장) 주요사업 ● 전파기술을 이용한 국민안전·안심사회 실현 노력 · 소형선박 휴대용 조난신호 발사장치 개발 · UHD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경보 체계 구축 · 영·유아, 어린이시설 전자파 안전안정성 평가(정부혁신 우수사례 정부 표창) ● 방송·스마트미디어 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 지원 · 29개 서비스 상용화 지원 및 62개 중소벤처 발굴 · 중소방송제작사 60개 창작공간·제작시설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우수성과 달성 · 기재부 기금운용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2년 연속 탁월 등급 획득 · 사업비 총인정수준 보관해지 선도적 시행(2018 전자문서대상 과기정통부장관상)	경영관리 ● KIAT,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선정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기관」!! · 「일자리 전략 로드맵 2020」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 · *신규일자리 13,900명 창출, 청년고용률 40.3%달성, 산업전문인력 취업률 74.1% 달성 ● 투명하고 신뢰를 통한 공적가치 향상 중심기관! 부패방지 유공 국무총리 표창!! · 부패방지 사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1등급),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 달성 ● 人·生·業 조직혁신! 인생-UP을 위한 일하는 환경의 쾌거정화 ·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워라벨 제도,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 주요사업 ● 혁신성장의 마중물, 규제 샌드박스 국내 최초 현장 적용!! · 신기술 아이디어를 현실로! 신산업 규제 혁신을 통한 신기술 시장 조성 · 규제 샌드박스 조기 입법지원 노력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위탁기관 역할 수행 ● 대기업의 기술을 나누는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적 상생·협력 모범프레임 제시 · 대기업 등 민간 참여를 연계한 국내 유일의 특허 소유권 무상양도 방식으로 상생·협력 서비스 추진 ● 산업·고용 위기극복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업지원 → 산업·고용 위기극복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공공이의 창출 · *위·대응지역으로 찾아가는 기업비즈니스 센터 운영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화성지원, 조선·자동차 특화인력 재취업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국민과 함께 에너지 저변을 확대하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사람중심경영을 통한 최고의 사업성과 달성!
경영관리 ● 채용을 넘어 복지까지, 일자리 창출도 획기적으로! · 비정규직 100% 전환에 이어 보수 및 복리·후생까지 개선 · 적극적 일자리 나누기로 정원 12%(73명)를 청년으로 채용 추진 · 소규모 태양광사업 신규도입으로 일자리 7,935개 창출 ● 국내 최초 신재생 안전체계 확립 등 국민보호! · 신재생 설비(38만) 안전체계 구축 및 태풍 등에 신속대응으로 재난안전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산업부) · 현장업무 외주화 Zero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사고 · 개인정보 유출 Zero 등 행안부 보안감사 최우수(96점) ● 중소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동반성장 실현! · 중소기업과 지역금융 연계한 E-Green 프로젝트, 기재부 우수과제 TOP3 선정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에 사회적 가치를 플러스하다! · 군산 등 9개 고용위기지역 대규모 태양광 추진(865억) · 울산 수소 실증단지 구축 등 수소경제 전환 선도 · 주민 수익 창출형 신재생 협동조합 추진(45개, 280억) · 북권기금 활용(97억) 복지시설에 태양광 설치(1천7개)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 바우처 사용률 90%(역대 최고 수준), 국내 최초 냉방 바우처 본격 시행 ·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등 안전복지로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 세계에서 통하는 KEA 연비센터 구축! · 연비센터 성적서로 북미 다절인증 최초 획득 (싼O페 등)	경영관리 ● 지속적 경영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정규직 전환(100% 완료)을 통한 공공 일자리 질 개선, 핵심 사업을 통한 직·간접 민간 일자리(607명) 창출 · 전사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60.3% UP)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2년 연속 A등급 달성 ●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6년 연속 획득 ● 지자체, 공공협업, 시민참여를 통한 경영혁신 · 공공기관·지자체, 시민참여혁신단 등 협업을 통한 경영혁신 과제 추진 (LH 내친구 플랫폼 등) 주요사업 ● 협업을 통한 우체국소핑 역대 최고 성과 달성 · 우체국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인 지원 확대 ● 공공·지자체 협업을 통한 우체국소핑 지역생산자 판로지원 ● 지역·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우편사업 성과 창출 · 우체국콜센터의 '독거노인 사랑잇기'를 통한 사회안전망구축 지원 확대 ('17년 214콜→'18년 1,727콜) ·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우정문화 확산(68.6% UP) · 생활정보홍보우편물 기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홍보 강화(20.2% UP)

한국임업진흥원, 국민 행복을 위한 임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경영관리

-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조화를 위한 CEO 주도 新비전·핵심가치 선포**
 - CEO 중심의 新 비전, 가치체계 내재화, 공유·활동 다각화로 KoFPI 핵심가치 및 경영전략 대·내외 확산
-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 정착 및 산림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 근로자 간담회 활성화 및 협의제 신속운영으로 정규직 전환율 100% 달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5년 연속 인증 유지('15~'20년)
 - 산림분야 창업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815명 창출
- **국민이 공감하는 임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공공혁신 선도**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우수기관(A등급) 달성
 - 자발적 혁신 문화 내재화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 기관 포상

주요사업

- **공공개발지에서 버려지는 폐목재 매각을 통한 국산 목재자금 및 사회적 경제가치 창출**
 - 폐목재의 맞춤형 매각 지원을 통한 국산 목재 8,225톤 유통 및 경제적 가치 9억원 창출
- **국민 안전을 위한 산지재배임산물 '청정숲푸드' 제도 활성화**
 - 임산물 안전성 관리 및 유통 확대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 **산림드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림보호분야 드론사업 활성화**
 - 산림분야 무인항공기 운용품셈 개발 등을 통한 산림드론 생태계 구축
 - 민간기업 협업을 통한 산악지형 맞춤형 드론 우수기술 발굴 및 개발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최고의 경영성과 달성!

경영관리

- **장애인의 안전한 일터 조성**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173개소)
 - 장애인교육생 재난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755명)
 - 중증장애인 자원인력(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안전교육 실시(2,946명)
-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판로지원(331개소, 1853억원)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판로·개발 지원(74개소, 90억원)
- **고객만족도 A등급 달성!**
 - 장애계와 밀착형 협력체계(Ever-with 공감소통) 구축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 정책 반영
 - SK그룹 등 대기업 맞춤형 채용서비스 제공 (모집대행-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전형)



주요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포용국가 구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확대 (전국 13개소)
 - 발달장애인 원스톱서비스 (School to Work)
- **중증·장년장애인 고용모델 창출**
 - 장애유형별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지원(2,588명)
 - 취업취약계층(발달, 장년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확대
-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지원**
 -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훈련 실시(600명)
 - 대기업집단 13개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27개소 지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1,274명)



연구총괄

- 변민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야별 집필진

- 소병욱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원)
- 오윤미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이주경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이 슬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임미화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정예슬 (공공기관연구센터 경영연구팀 선임연구원)
- 홍소정 (공공기관연구센터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이 진 (공공기관연구센터 인턴사원)

문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044-414-2306)

이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soe.kipf.re.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